

남북 간 사회격차 완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복지체제 구축 방안 연구

- 북한 주민의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조성은

민기채·김예슬·김유휘·주보혜·송철중·백종만·구인회·박희진

Vimut Vanitcharearnthum·Geoffrey M. Ducanes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연구책임자】

조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진】

민기채 한국고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예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김유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주보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송철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백종만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구인회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희진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

Vimut Vanitcharearnthum 태국 Chulalongkorn University 조교수

Geoffrey M. Ducanes 필리핀 Ateneo de Manila University 조교수

【외부조사연구진】

김효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현인해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연구보고서 2020-53

남북 간 사회격차 완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복지체제 구축 방안 연구

- 북한 주민의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발행일 2020년 12월

발행인 조흥식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제8-142호)

인쇄처 (주)현대아트컴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ISBN 978-89-6827-775-7 93330

발|간|사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남북관계는 긍정적인 사건과 부정적인 사건이 교차되면서, 그야말로 격변을 과정을 겪었다. 한때 한반도 평화가 눈앞에 다가온 듯 기대도 높았지만, 북미 관계의 냉각으로 많은 교류협력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방향만큼은 여전히 중요한 국정 목표이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이다. 특히 인권의 관점에서 볼 때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이 최소한 유지될 수 있으려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국제사회의 지원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앞으로 먼 미래를 생각할 때 북한 체제의 개혁·개방은 불가피하며 이를 통해 북한과 남한의 사회적 격차가 줄어들어야 통일이라는 헌법적 목표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가 장기적으로 남북간 사회적 격차 완화를 염두에 두고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탐색하고 이후 교류·협력 가능성과 정책 과제를 연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긍정적으로 발전하여 본 연구가 더 구체화되고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연구진의 견해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는 아님을 밝혀 두며, 이 연구결과가 향후 한반도 평화·번영의 길에 귀하게 쓰이길 바란다.

2020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6
제1부 평화복지체제의 이론과 사례 검토	
제2장 평화복지체제에 관한 개념적 논의	29
제1절 평화와 복지와의 관계	31
제2절 평화복지체제의 개념과 구성	37
제3장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빈곤과 불평등: 동독의 경험	49
제1절 동독의 빈곤과 사회부조	51
제2절 통일 후 동독 지역의 빈곤	59
제4장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빈곤과 불평등: 동남아시아 국가들 ...	77
제1절 동남아시아 국가에서의 빈곤	79
제2절 태국의 사례	89
제3절 필리핀의 사례	111

제2부 북한 주민의 생활실태

제5장 식생활과 건강	135
제1절 농업개혁과 식량생산	137
제2절 식생활 실태와 건강	145
제6장 의생활과 유행	157
제1절 경공업의 현대화·국산화	159
제2절 새로운 트렌드(trend)	167
제7장 주생활과 생활환경	175
제1절 주택건설 현황	177
제2절 생활환경 개선 실태	187
제8장 북한 주민 소비품목의 탐색	197
제1절 소비품목 탐색의 의의와 구성	199
제2절 북한 소비 품목 조사의 결과	210
제3절 북한 주민의 소비 품목 탐색	282
제9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305
제1절 연구의 주요 결과	307
제2절 정책적 시사점	313



참고문헌	323
부록	341
[부록 1] 제2부에 활용된 구술면접자 특성	341

표 목차

〈표 1-1〉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참여자의 기본 정보	24
〈표 1-2〉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참여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26
〈표 3-1〉 동독의 사회부조 지원 수급자 수 변화(1947~1989년)	52
〈표 3-2〉 동서독 소매가 비교(1989년)	58
〈표 3-3〉 동서독 생활수준 비교(1989년)	59
〈표 3-4〉 통일 전후 사회부조규정 변화	60
〈표 3-5〉 체제통합 과정에서 완충적 역할을 한 사회보장제도	64
〈표 3-6〉 통일 후 동서독 경제지표(1993년)	68
〈표 3-7〉 통일 후 동서독 빈곤율 추이	71
〈표 3-8〉 공적 이전을 통한 빈곤 위험 감소(공적 이전이 없을 경우의 가정과 비교)	72
〈표 3-9〉 2008년 이후 동서독 빈곤율과 구직자에 대한 기초보장(SGB II) 수급률	73
〈표 3-10〉 동서독 생계급여(Hilfe zum Lebensunterhalt) 수급자 추이	74
〈표 3-11〉 동서독 사회부조(SGB XIII) 급여별 세출(Bruttoausgabe) 현황	74
〈표 3-12〉 통일 후 동서독 불평등 지수(1993년)	75
〈표 3-13〉 동서독 생계급여(Hilfe zum Lebensunterhalt) 수급자 중 아동과 노인 비중	76
〈표 4-1〉 1960-2015년 동아시아 경제성장률	85
〈표 4-2〉 태국에서의 빈곤 측정	90
〈표 4-3〉 태국 빈곤선 (1976 바트/연간/1인당)과 빈곤율	92
〈표 4-4〉 빈곤 인구 비율 (총 인구의 %)	93
〈표 4-5〉 성별과 연령대에 따른 칼로리 요건 매개변수	94
〈표 4-6〉 유형, 연령, 성별, 지역 및 BMR 수준에 따른 하루 칼로리 요건	95
〈표 4-7〉 지역별 1인당 하루 필요 칼로리	96
〈표 4-8〉 빈곤선, 1988-2002 (바트/1인당/월별)	99
〈표 4-9〉 빈곤율 (전체 인구의 %)	99
〈표 4-10〉 2003년 일반적인 태국인에게 필요한 1인당 최소 칼로리 (일일, 그램)	100
〈표 4-11〉 2003년 일반적인 태국인에게 필요한 1인당 최소 단백질	101



〈표 4-12〉 지역 간 식료품 물가 지수	102
〈표 4-13〉 하위 20%에 해당하는 가구의 칼로리 및 단백질 비용	102
〈표 4-14〉 지방 및 지역 별 평균 식량 빈곤선(2002)	103
〈표 4-15〉 UNDP/TDRI 2004 빈곤선	105
〈표 4-16〉 2000-2019 지방 별 빈곤선	107
〈표 4-17〉 1988-2019 지니계수	108
〈표 4-18〉 1인당 소득의 일반 엔트로피 지수, 2018	125
〈표 5-1〉 북한의 농장법 개정 사항	140
〈표 5-2〉 북한 가구 식량공급원과 중앙배급체계 의존 비중	145
〈표 7-1〉 계층별 살림집 유형(2019년)	181
〈표 7-2〉 북한 살림집 개보수의 지역별 현황	183
〈표 7-3〉 계층별 가전제품 보유/경험률	190
〈표 7-4〉 계층별 전자기기 보유/경험률	191
〈표 8-1〉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생계비 비목 구성의 비교	203
〈표 8-2〉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참여자의 거주지	208
〈표 8-3〉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참여자의 가구원 수	209
〈표 8-4〉 조사대상의 특성과 소득	211
〈표 8-5〉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참여자의 소득 원천별 가구 및 비율	213
〈표 8-6〉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참여자의 월 소득 및 지출 평균값과 중위 값	214
〈표 8-7〉 곡류 및 식빵 지출	220
〈표 8-8〉 육류·낙농품·어개류 지출	223
〈표 8-9〉 채소 및 과일 지출	225
〈표 8-10〉 조미식품·빵·차·주류·외식 지출	229
〈표 8-11〉 평균 주택 가격	232
〈표 8-12〉 광열·수도비 지출	236
〈표 8-13〉 일반가구·가정용기구·식기주방용품 지출	241
〈표 8-14〉 가사잡화소모품 침구 및 직물제품 지출	243

〈표 8-15〉 피복비 겉옷 지출	246
〈표 8-16〉 와이셔츠·스웨터·속옷 지출	249
〈표 8-17〉 피복 및 신발과 피복신발 서비스 지출	251
〈표 8-18〉 보건의료서비스 지출	255
〈표 8-19〉 교육비 지출	257
〈표 8-20〉 최저 교양·오락비 지출	261
〈표 8-21〉 교통비 지출	265
〈표 8-22〉 통신비 지출	268
〈표 8-23〉 기타소비지출	270
〈표 8-24〉 비소비지출	273
〈표 8-25〉 가구당 월생계비	278
〈표 8-26〉 북한내부 시장물가 비교(2019년 6월, 해산시 기준)	282
〈표 8-27〉 식료품비	283
〈표 8-28〉 주거비	287
〈표 8-29〉 광열·수도비	288
〈표 8-30〉 가구집기·가사용품비	288
〈표 8-31〉 최저 피복·신발비	291
〈표 8-32〉 보건의료비	296
〈표 8-33〉 교육비	297
〈표 8-34〉 교양·오락비	299
〈표 8-35〉 교통·통신비	300
〈표 8-36〉 기타소비지출	301



[그림 1-1] 평화복지체제 구축과정에서 북한 사회 변화의 이상향	16
[그림 1-2] 1-5차년도 연구의 개요	18
[그림 1-3] 주민 생활 영역과 유형별 분석틀	21
[그림 2-1] 분단체제와 평화복지체제의 비교	47
[그림 3-1] 동서독 연간 소득 추이	70
[그림 4-1] 2019년 아세안(ASEAN) 국가 1인당 GDP	112
[그림 4-2] 연간 분야별 총부가가치 성장률	113
[그림 4-3] 가계 빈곤율 공식 추정치	120
[그림 4-4] 지방 가구 빈곤율(2018)	121
[그림 4-5] 1991-2008년 소득 및 지출 지니계수	122
[그림 4-6] 일부 아세안 국가 지출 지니계수(2018)	124
[그림 4-7] 소득 분위수에 따른 대학 수료(2016)	125
[그림 5-1] 북한의 곡물 생산량(2009-2018)	142
[그림 5-2] 북한의 쌀값 추이(2009-2018)	142
[그림 5-3] 북한이탈주민의 식생활 종합실태 연도별 추이	146
[그림 6-1] 북한이탈주민의 식생활 종합실태 연도별 추이	162



Abstract

Building a Peace and Welfare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by Reducing the Social Ga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Focusing on the living conditions of North Koreans

Project Head: Cho, Sungeun

This study is the first step in a plan to conceptualize how to establish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mprove the welfare of the North and South Korean residents.

This study theoretically examines the goal of a peace and welfare system, and analyzes the current state of life in North Korea from a gap perspective. In addition, research is conducted to establish a model that can systematically and continuously analyze the social gap between the two Koreas in the future. To this end, we conducted a literature 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life in North Korea, a quantitative study on North Korean defectors, and an additional qualitative study. This study approaches the present North Korean society from the perspective of “gap” from the perspective of future-oriented social integ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breaking away from the political and military perspective.

The peace and welfare system can be defined as a system

Co-Researchers: Min, Kichae·Kim, Yeseul·Kim, Yuhwi·Joo, Bohye·Song, Cheoljong·Paik, Jong Man·Ku, In-Hoe·Park, Heejin·Vimut Vanitcharearnthum·Geoffrey M. Ducanes

that establishes the virtuous-cyclic structure of welfare and peace and pursues socio-economic development in consideration of the entire popul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re are difficult problems that must be addressed in our efforts toward building a peace and welfare system. As examined in this study, the progress of North Korea's marketization and stratification is highly likely to accelerate further in the process of reform and opening up in the future. At least, it is expected that North Korea will rapidly transition to an unequal socie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in case that improv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reform and opening of the North Korean regime will not naturally lead to a peaceful welfare state. Therefore, diagnosing the welfare system and living standards in North Korea will be essential to social integr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and welfare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Key words: Peace and Welfare System, North Korea, Reunification



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이 나아가 남북 주민들의 복지 향상으로 이어지는 이상적인 목표를 평화복지체제로 개념화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방안을 단계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기획의 첫걸음이다. 이 연구를 포함하여 5개년에 걸쳐 평화복지체제 구축 방안 도출에 필요한 이론적 탐색과 실천 가능한 정책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평화복지체제라는 이상적 목표에 대해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현 북한의 생활 실태를 격차 관점에서 분석한다. 그리고 향후 남북 간 사회격차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모형 구축을 위한 탐색을 진행한다. 이를 위한 북한 생활 실태에 대한 문헌 연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양적 연구,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정치·군사적 관점에서 벗어나 남북한 사회통합의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현재의 북한 사회를 '격차(gap)'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2. 주요 연구결과

1) 평화복지체제의 개념

한반도 차원에서 복지와 평화의 문제를 검토하자면 분단에 따른 남북 간의 긴장과 대립의 해소 수준의 평화의 정착은 소극적 평화 상태를 의미한다. 우리의 경우는 그동안 소극적 평화 상태를 염두에 두고 분단을 극복하는 노력을 해온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통일된 한반도를 염두에 두

고 적극적 평화를 실현하는 분단 극복을 상상해본다면 분단체제의 극복은 남북 간의 사회통합의 문제와 복지의 문제가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복지와 평화와의 관계를 한국의 상황에서 논의할 때 한반도의 분단체제 또는 분단·전쟁 체제는 한국의 복지국가의 발전을 저해하고 억압하는 힘으로 작용하였다고 여러 학자들이 분석하고 있다.

평화복지국가에 관한 담론에서 주목하는 것은 복지국가들이 평화를 전제하고 발전되어 왔지만, 적극적으로 군사적 활동을 줄이거나 군비를 세계적으로 축소하려는 노력은 사실상 회피되어 왔으며, 오히려 “복지국가가 ‘전쟁-복지국가(warfare-welfare state)’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평화복지국가론은 기존의 복지국가에 단순히 평화를 덧붙이지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이고 항구적인 평화체계를 구축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지향하는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보다 확실히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전개되었다.

평화복지체제는 이러한 담론들의 긍정적 측면들을 수용하여 복지와 평화의 공진구조, 즉 선순환관계를 구축하고, 한반도 전체 주민을 고려하여 사회경제적 발전을 추구해나가는 체제로 정의할 수 있다.

2) 사례국가들의 경험

2차 세계대전으로 동서독이 분단된 이후 서독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사회부조제도를 발전시켰으나, 사회주의 체제를 받아들인 동독에서는 노동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강조하면서 ‘빈곤’이라는 개념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처럼 대외적으로는 빈곤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 체제임을 선전하였으나, 동독의 붕괴 전까지 실질적으로 빈곤이 존재하였으므로, 정권 내부에서는 이 문제를 엄중한 사

회적 문제로 다루었고, 사회부조제도 또한 수급자 수가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나, 계속해서 명맥을 이어가는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동독 지역의 사회부조 지원의 수급자수는 분단 직후인 1947년에 가장 많았고, 공식적으로 동독 정부가 수립된 이후(1949년 10월 7일)부터 1950년 사이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후에도 서독 편입 직전까지 동독 사회부조 지원 수급자 수는 계속해서 감소하여 1960년대 중반 이후로는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1989년에는 5000여명에 불과했다. 1991년부터는 서독의 사회부조제도가 동독지역에도 적용되면서 사회부조 수급자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졌다. 동독의 사회부조 수급자는 1989년 5535명에서 1990년 하반기에는 총 13만 4403명이 되었고, 1991년 말에는 1990년 말에 비해 수급자가 250%가 증가하였다. 통일 직후 동독 지역의 빈곤율은 28.1%로 서독 지역 7.1%에 비해 매우 높았으며, 이후 20여년 동안 동독 지역의 빈곤율 수준은 완화된 추세를 보였지만 최근까지도 서독지역에 비해 5% 이상 높은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다.

아시아의 사례를 살펴보면, 1965년 당시 동남아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는 극빈 퇴치에 성공했다. 반면에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을 포함하는 남아시아는 2014년 기준으로 아시아 전체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이 되었다. 1960년대 중반 이후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는 빈곤이 전체적으로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남아시아에서는 오히려 빈곤이 증가했다.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초까지 아시아 지역에 사회경제적 불안과 전쟁이 발생하면서 빈곤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 수십 년간 동남아 지역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 불평등이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불평등 추세는 특히 라틴아메리카 등 다른 지역이 최근 경험한 불평등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또한 이들 국가

에서는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최상위 계층에 소득이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불평등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서는 세계화, 기술 변화, 시장 중심 개혁의 3가지 요소가 자주 언급된다. 이러한 3가지 변화로 인해 숙련된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프리미엄과 자본에서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요소들은 지역 간 불평등에도 기여했다. 불평등이 증가함에 따라, 과거 빈곤 감소의 주된 동력이었던 경제성장이 빈곤 퇴치에 발휘하는 효과가 줄어들고 있다. 최근 10년간 이러한 패턴에 변화가 있었지만, 사실상 지난 30년간의 경제성장은 소득 분배의 최하위층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최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유리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2000년 이후 불평등이 크게 증가하여 최근 15년 이상 큰 개선 없이 지속되었다.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에서는 불평등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도농 격차는 불평등 증가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필리핀, 태국, 베트남에서는 지역 간 불균형이 전체 경제 불평등의 10-20%를 차지하고 있다.

3) 북한 주민의 의식주 생활 실태

북한의 식량 생산 추이는 북한 주민의 식생활 실태와 밀접한 연관관계를 보인다. 특히 2013년 식량 생산 추이가 전반적 상승 및 약간의 감소세를 보일 뿐 큰 폭의 하락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추세는 북한 주민의 식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세계기아지수(GHI)는 북한의 기아지수를 '심각'과 '위험' 상태 사이에 위치하며, 측정된 119개국 중 109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FAO와 WFP는 2019년 현재 북한은 167만 톤의 식량 지원이 필요하며, 식량안보의 취약성이 곧 북한 국내 빈곤층의 생계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북한 주

민들의 영양 상태는 ‘충분히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지 못하여 영양부족의 악순환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추정한다.

김정은 체제는 농업과 함께 경공업을 경제의 주공 전선으로 선정하여 농업부문에서 경제개혁 조치를 시행한 것과 같이 경공업 부문에서 ‘인민 생활 필수품’ 생산을 위한 적극적 개혁 조치를 취하고 있다. 북한 주민의 의생활 부문은 북한 당국이 추진하는 경공업 분야 중 가장 먼저 활성화되고 대중화된 시장화 영역이다.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산 의류제품이 원단, 반가공품, 완성품 및 중고 제품의 형태 등으로 다양하게 수입되었고, 여성에게 특화된 방직, 의류, 섬유, 피복 분야는 대부분이 외화벌이를 위한 수출 임가공 형태로 운영되거나, 평안남도 평성시와 함경북도 청진시를 거점으로 하여 전국적인 생산 유통 체계를 갖추고 있다.

북한의 주택과 관련한 통계는 유엔 인구기금(UNFPA)의 지원으로 2008년 실시한 북한의 인구 일제조사가 유일하다. 이 조사에서는 2008년 기준 북한의 주택보급률은 99.8%로 집계된다. 또한 북한의 주택형태별 가구 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연립주택 43.9%, 단독주택 33.8%, 아파트 21.4% 그리고 기타 0.9% 순이다. 주택보급률만 놓고 본다면 북한 주민의 주거생활은 그리 나쁘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실제 북한 주택의 노후화 정도와 생활 인프라의 실태는 매우 열악한 편이다.

“북한의 일반주민이 일상적으로 어떠한 소비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탐색한 결과, 남한 최저생계비 품목 중 상당한 품목들을 북한 주민들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질적 조사 결과 북한에서 생활에 필요한 상당수의 물품들을 시장에서 구매하고 있으며, 구매력의 차이에 따라 소비 수준의 차이도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결론 및 시사점

사회복지 분야에서, 남북한 주민 모두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 평화 복지국가라면 평화복지체제를 지향하는 우리의 노력에는 해결하고 넘어 가야할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은 1990년대 식량 위기 이후 상당기간 동안 전 주민의 기본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위기상황을 경험한 바 있다. 북한의 시장화, 계층화의 진행은 앞으로의 개혁·개방과정에서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는데, 적어도 아직까지는 다 같이 잘살지 않는 북한이, 급속도로 불평등한 사회로 이행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개선, 북한 체제의 개혁·개방이 저절로 평화 복지국가로의 길로 이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대비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 평화체제와 복지체제의 유기적 결합을 통하여 평화복지체제가 완성될 수 있다고 볼 때, 일국의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통제하고 변화 가능한 부분은 평화체제의 구축보다는 복지체제의 변화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제인 사회통합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북한의 복지체제와 수준을 진단하는 일은 한반도 평화복지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

*주요 용어: 평화복지체제, 북한주민 생활실태, 한반도 사회통합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해방 이후 70여 년간 지속되어 온 분단체계는 남북한 모두에게 불필요한 이념 대립과 군비 투자에 역량을 소모하게 만들어 번영과 사회발전에 큰 장애가 되어 왔다. 특히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권의 해체 이후 이른바 ‘고난의 행군기’를 거치면서 수많은 주민들이 극심한 생활고를 경험했으며, 이로 인해 인적 자원의 손실이 막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고립을 벗어나기 위한 전술로 택한 핵 개발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주요한 변인이 되고 있는 동시에 유엔재제로 인해 북한의 고립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분단체제는 장기적인 번영에 큰 걸림돌이 된다. 해방 이후 외세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강제된 분단체제는 남한사회에서 반공주의를 강화하여 민주주의를 후퇴시켰고 복지국가를 만들어 갈 주체세력으로서 노동자를 약화시켰다. 여기에 막대한 군비 지출은 복지 확대에 투여할 자원의 압박을 가져온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적극적으로 남북 평화체제 구축에 나선 것은 이렇게 분단체계가 남북 모두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 것이다.

현 정부의 5대 국정운영 목표 중 하나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남북 모두가 번영할 수 있는 비핵화된 한반도를 지향한다. 이는 정치적인 통일이나 급진적 남북통합을 우선하기 보다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 간 관계 회복을 바탕으로 한 한반도 평화체제의 궁극적 목표는 결국 한반도 전역에 평화가 정착되고 이를 기반으로 남북 주민들의 삶의 질이 증진되는데 있다

고 할 수 있다. 과거 분단체제에서 불필요하게 소모했던 남북의 역량을 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투여해서 궁극적인 공동번영으로 나아가는 것이 평화로운 한반도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이 나아가 남북 주민들의 복지 향상으로 이어지는 이상적인 목표를 평화복지체제로 개념화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방안을 단계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기획의 첫걸음이다. 이 연구를 포함하여 5개년에 걸쳐 평화복지체제 구축 방안 도출에 필요한 이론적 탐색과 실천 가능한 정책방안을 모색해 나아갈 것이다.

평화복지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정치·군사적 접근, 경제적 교류 외의 삶의 질을 공동으로 높일 수 있는 사회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남북의 정치·군사적 화해가 각 지역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각 기득권층의 부와 권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귀결된다면 진정한 의미의 평화라 할 수 없다. 적극적인 의미의 평화는 단순한 갈등의 봉합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 구성원들의 삶의 안정과 번영이 이루어져야 실현되는 것이다. 또한 현재와 같이 정치·외교적 긴장이 높은 상황에서 비정치·군사 분야에서의 교류를 정치적 관계 악화를 보완할 수 있는 기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동시에 인도주의적인 의의를 지니고, 북한 주민들의 최소한의 생활과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될 수도 있다. 지난 2017년 7월 4당대표들과의 오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순방의 성과를 설명하면서 “인도주의적 대화는 우리가 주도하고 이 역시 비핵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박지환, 2017.7.19.). 요컨대 북한에 대한 사회적 접근과 비정치·군사 분야에서의 교류 확대는 평화복지체제로 나아가는 기본적인 단계이다.

전략적으로 볼 때에도 정치·군사·외교적 논의는 남북뿐 아니라 북미,

미중, 북일 등 한반도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입장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단독의 기획과 노력만으로는 갈등을 줄이고 관계를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물론 궁극적으로 군사·외교적 차원의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은 필수적이지만 그것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더 미래지향적인 전략이 요청된다. 또한 정치·외교 관계와 별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개별 기구 중심의 인도주의적 접근은 보다 더 미래지향적으로 확대된 한반도 평화복지체제 구축, 한반도 사회통합 등의 관점에 기반한 전략적 남북교류로 발전될 때 장기적인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반도 평화복지체제로 나아가기 위해 해결해야 할 비정치·군사·외교적 과제는 무엇일까? 정치·군사·외교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단계적 평화협정이 중요한 과제라면 사회적 측면에서는 무엇보다 남북 간의 사회격차를 줄이는 것이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다. 남한과 북한이 사회격차가 지금과 같이 크게 벌어진 상태로 유지될 경우 남북의 생활 경험 차이에서 발생하는 상호 이질성은 계속 확대될 것이고 이는 상호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번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남북을 포함한 전반적인 한반도 내의 사회격차는 구성원들의 박탈감을 가져오고 삶의 만족도를 저해하는 주된 요인이 된다.

사회격차란 사전적 의미로 개인마다 수입, 재산, 생활양식, 정치적 영향력 등이 서로 다른 정도를 의미하며, 이로 인한 격차사회는 중류 계급이 붕괴하여 사회 구성원의 빈부, 생활수준 따위가 양극화 하는 사회를 지칭한다(다치바나키 도시야키, 2013). 즉, 사회격차는 소득 격차만이 아니라 정보격차, 의료격차, 교육격차 등 보편적 인권의 보장과 향유에의 차이까지 폭넓게 아우르는 개념이다. 사회격차는 비단 오늘의 한국만이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미래의 남북한 통합사회

를 상상해 본다면 한반도 차원에서 전개될 다양하고 깊은 문제성을 보유한 개념이기도 하다.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2018년 기준 남한의 국가 예산 규모는 27억6천3백만 달러인데 반해 북한의 국가 예산 규모는 8천2백만 달러에 불과하다(통계청, 2020, p. 214). 국민총소득(GNP)은 북한이 35조8천9백5십억 원인데 반해 남한은 1,905조8천3백8십억 원으로 50배 이상 차이가 난다(통계청, 2020, p. 109). 이를 인구를 고려하여 계산한 1인당 국민총소득은 한국이 북한에 비해 약 26배가 높다. 2020년 현재 남북한의 경제 사회적 격차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렇다면 북한 사회 안에서는 어떠한가?

북한은 오랜 시간 자립경제를 표방하고 글로벌 차원의 교류협력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나 1990년대 경제난 이후 소위 ‘시장화’의 시간을 거의 30여 년째 보내고 있다. 시장경제가 제공하는 경제적 풍요는 공평하게 배분되지 않으며,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배태한 북한의 시장도 시장화 이후 이전보다 나은 경제적 풍요를 누릴 순 있지만, 모든 주민들이 공평하게 누릴 순 없을 것이다. 따라서 시장화 이후 북한에서도 소득 격차가 발생하고 소득 격차는 부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것이고, 부의 불평등은 기존 북한 사회가 관행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권력과 신분과의 재결합을 통해 다양한 사회격차를 발생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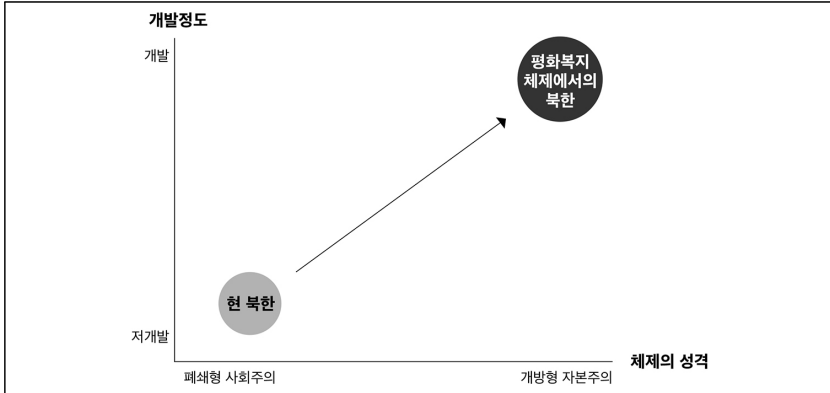
최근 북한 연구 동향에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이 잘 나타나 있다. 2003년 북한에서 종합시장(market place)이 등장한 이후 관련 연구들은 북한에서 시장을 매개로 한 장사활동이 소득차이를 발생하고 이 중에서도 사회주의 속에서 생성된 붉은 자본가로서 ‘돈주’라는 개인 축재 상인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는 거시적 측면에서 북한 사회의 계층·세대·지역적 격차를 논하기도 하고, 미시적 측면에서 소득·주거·교육·정보·건강 부분의 격차를 추적 분석하고 있다. 물론 연구자 마다 사회격차를 논증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사회균열의 측면에서 갈등과 정쟁의 접화를 논하는 한편 사회다양성 측면에서 새로운 계층의 등장과 선진사회로의 이행을 논하기도 한다.

5년에 걸쳐 진행될 본 연구기획에서는 남북한 사회통합의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현재의 북한 사회를 ‘격차(gap)’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중기 연구를 통해 북한의 생활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남한의 생활과 비교하여 격차를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1차 연구에서는 남북한 격차해소를 위한 교류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북한 사회의 거시적 균열지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공식구조와 비공식 구조를 넘나들면서 구조를 횡단하는 미시적 주민생활의 실태와 이에 따른 불평등에 포커스를 맞춰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생활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구조적 파행을 분석하며, 향후 남북한 통합사회 건설을 위한 격차해소 방안을 도출하는데 학술적·정책적 기여를 하고자 한다.

덧붙여 본 연구에서는 북한 사회를 분단체제에서 정치적 통일이 필요한 한민족국가로 간주해 온 시각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접근방식을 모색한다. 북한은 폐쇄적인 사회주의 사회의 특성과 동시에 저개발국가로서의 전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평화복지체제로의 전환은 북한사회가 단계적으로 개혁·개방을 추구하여 최소한 중국, 베트남 정도의 자본주의 체제 수용을 통해 경제사회적 개발을 이루었을 때 가능할 것이다. 앞으로 다년간의 연구를 통해 북한과의 교류·협력과 평화 정착의 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그림 1-1] 평화복지체제 구축과정에서 북한 사회 변화의 이상향



이상의 배경과 목적에서 본 연구는 평화복지체제라는 이상적 목표에 대해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현 북한의 생활 실태를 격차 관점에서 분석한다. 그리고 향후 남북 간 사회격차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모형 구축을 위한 탐색을 진행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본 연구는 5년의 연구기획 중 첫 번째 연구기간에 해당한다. 먼저 전체 5개년도의 기획된 연구내용을 살펴보고, 이어서 1차년도의 연구내용을 서술한다. 남북 간 사회격차 완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복지체제 구축 방안의 5개년에 걸친 전체 연구기획은 다음의 네 가지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첫 번째로 평화복지체제를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남북 간 사회격차 발생의 역사적·실증적 기초자료를 단계적으로 수집한다. 지난 70여

년의 분단체제를 평화복지체제로 전환해야 하는 당위성 및 필요성과 평화복지체제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정리한다. 그리고 남북한 사회제도의 경로의존성(path-dependency)을 이해할 수 있는 역사·철학적 배경에 대한 분석, 남북한 경제·사회 변화에 대한 역사적 분석과 주요 지표의 시계열적 변화 분석, 남북한 경제·사회 주요 변화의 철학적 배경 분석 등을 바탕으로 남북 간 사회격차의 역사적·실증적 과정을 고찰한다. 이 내용은 1~4차 년도에 걸쳐 단계적으로 연구하게 될 것이다.

둘째로 남북 간 사회격차에 대한 실증적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표준화하기 위해 이념형을 도출한다. 의·식·주 이용을 기본으로 건강, 보건의료, 보육·교육, 노동시장, 소득보장에 대한 실증적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남북 간 사회격차를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파악한다. 이를 위해 5개년에 걸쳐 북한 주민 생활의 표준형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북한 표준생활의 형태 변화를 분석할 것이다. 이 분석은 추후 남북 간 사회격차 완화에 필요한 자원의 총량을 실제적으로 추정하는 기준이 되며, 이를 바탕으로 북한 사회를 평가하고 남북 간 비교 분석을 통해 전략적인 교류·협력의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구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남북한 사회지표 비교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의 방법과 틀이 확립될 경우 척도 또는 지표의 개발 수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남북한 사회격차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연구가 목표한 바대로 진행된다면 5개년의 연구의 후속 작업으로 연구된 실증적·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북한사회보장통계연보, 북한사회보장백서 등을 정기적으로 발행하여 북한 사회의 상황을 표준화된 틀로 보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한 생활수준 변화 및 사회문제를 예측한다. 북한체제의 개혁·개방이 미칠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체제 전환국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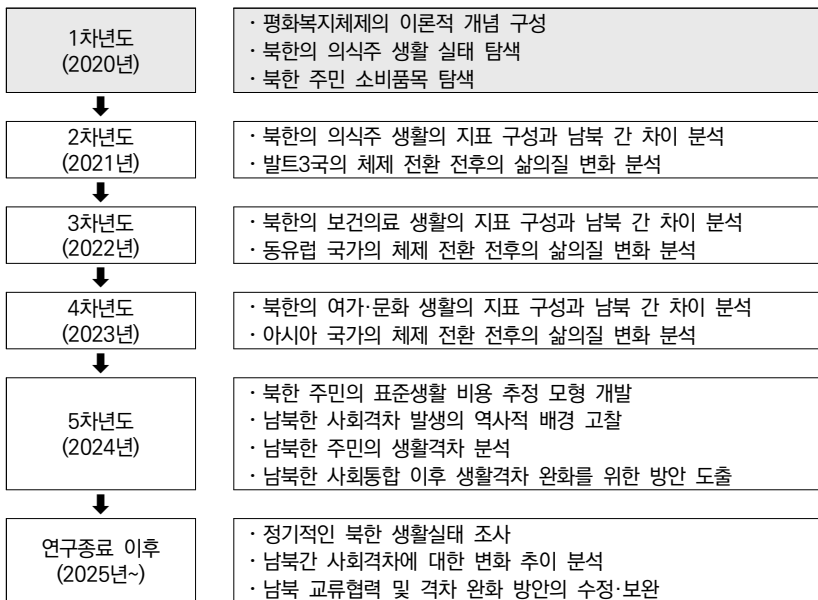
18 남북 간 사회격차 완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복지체제 구축 방안 연구: 북한 주민의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동남아 개발도상국을 사례로 하여 생활수준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 결과를 통해 북한 사회의 변화를 추정한다. 그리고 체제의 개혁·개방과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삶의질 개선과 사회문제 악화의 측면을 동시에 고찰하여, 향후 북한의 체제 전환과정에서 긍정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1-4차 년도까지 체제 전환의 경험이 있는 국가들의 사례를 차례로 연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격차 완화를 통한 평화복지국가의 지향 실현에 필요한 남북 교류협력 방안을 도출한다. 남북 교류협력의 진행과정을 분석하여 북한 주민들의 실생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격차 완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5년차에 집중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이상의 5개년 연구를 도식화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 1-2]와 같다.

[그림 1-2] 1-5차년도 연구의 개요



위의 5개년 연구 계획에 따라 1차 연도에는 평화복지체제의 이론적 개념 구성과 사회격차의 범주를 이론적으로 확정하는데 필요한 북한 생활 실태 파악 및 기초 자료 수집·분석을 진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2~4차 연도에는 생활실태의 개괄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여 범주별 지표를 확정하고, 주요 영역별(의·식·주 생활, 건강 및 보건의료, 기타 여가·문화 생활) 표준화된 지표 구성과 표준가구의 최저생활 형태를 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회격차 지표 및 측정방식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1차 연도에 해당하는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내용이 다뤄진다. 먼저 평화복지체제라는 이상적 목표에 대해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둘째로 현 북한의 생활 실태를 격차 관점에서 분석한다. 그리고 향후 남북 간 사회격차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모형 구축을 위한 탐색으로 북한 주민의 소비 품목 탐색을 진행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연구내용별로 문헌연구, 사례연구, 양적조사, 질적조사를 병행하여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먼저 1부(2~4장)는 이론적 검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주로 문헌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사례연구로 통일 전후의 동독과 동남아시아의 태국, 필리핀의 빈곤과 불평등 변화를 분석하였다. 앞의 [그림 1-1]에서 도식화한 바와 같이 평화복지체제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체제의 개방과 개발을 동시에 이루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경제사회적 전환과 발전에 필요한 투자와 개발협력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불평등과 빈곤을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에 관심을 두고 유사 사례 국가들이 체제 전환과 발전 과정에서 빈곤과 불평등과 관련한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

를 탐색한다. 앞으로의 연구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분석하여 최종적인 평화복지체제 구축 방안 도출에 함의를 반영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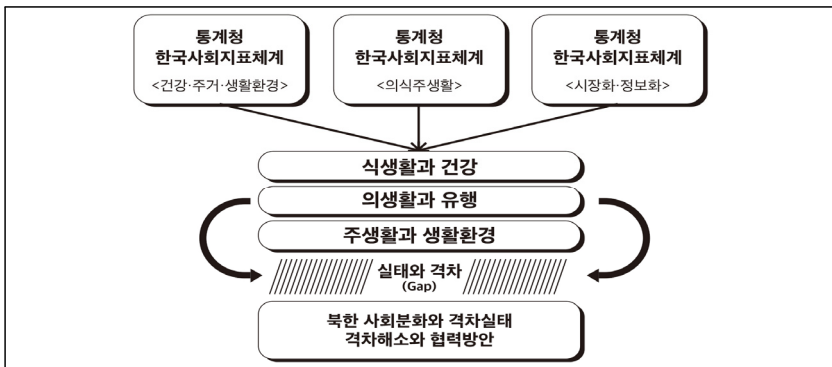
2부 5~7장에서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연구진이 이전 연구에서 축적한 질적 연구 결과를 일부 활용하였다. 문헌연구에서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북한 주민의 생활 및 보건·복지에 대한 국내 문헌과 자료, 북한의 보건·복지에 대한 국제기구 보고서 등 해외 문헌과 자료 조사, 북한 발간 공식 자료 등이다. 국내 자료 중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진행되고 있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북한사회변동 조사연구」(이하 사회변동조사)는 중요한 자료원으로 활용하였다.¹⁾ 이 연구는 조사 시점 전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탈북 직전 북한에서의 경제와 의식주 생활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년 전과 비교해 변화상을 분석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지만 통일부가 매년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하고 있는 「북한경제사회 심층조사」(이하 심층조사)도 있다. 이 조사는 경제상황 및 산업분야별 동향파악과 의식주, 보건의료, 여성가족 및 정보화 실태 부분까지 통계조사를 누적하고 있다. 2019년 조사사업에 참여한 본 연구진의 협조를 통해 출판되지는 않았지만 공개석상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이의 결과를 활용한다.²⁾ 국외에서는 UN 산하 FAO와 WFP의 「식량 작황 및

-
- 1) 서울대 사회변동 조사는 북한이탈주민 입국자의 시기별 특성을 고려하여 조금씩 조사영역이 변화하고 있다. 2012~2014년 시기에는 ① 시장화를 기본으로 하면서 ② 소득분화와 ③ 불평등 및 경제개혁을 주요 조사영역을 설정했다면 2015년 이후 부터는 ④ 정보화와 ⑤ 사회분화로 조사영역을 조정하였고, 2017년 이후에는 ⑥ 사회보장과 ⑦ 보건 영역을 추가 하였다. 이로 인해 현재는 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 보건 영역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시장화의 영역에서는 의식주 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정보화 영역에서는 휴대폰, 컴퓨터, 인터넷 사용 실태를 조사하였다. 사회분화 영역에서는 소득에 기반 한 경제적 계층 분류를 통해 도시별 계층분화와 직업별 계층분화 현상을 조사하였다. 보건의료 영역에서는 의료기관별 실태와 이용실태 및 접근성 격차를 조사하고 있다.
 - 2) 통일부의 심층조사는 ① 경제활동의 영역으로 산업부문별, 단체 및 기관별 조사를 기본으로 하면서 시장경제활동 및 학교생활, 여가생활을 포함한다. ② 주민생활 영역에서는 의식주 생활 및 생활 인프라로 전기, 통신, 체신 실태와 보건의료, 여성가족 등의 영역을

농업생산물에 관한 보고서」가 있다. 북한 당국이 선정해 준 179개의 협동농장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또한 UNICEF의 「MICS(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다중지표 군집조사)」는 북한 당국이 지정해 준 조사대상자를 상대로 1997년부터 2018년까지 총 9차례 실시되었다. 주로 영유아와 산모의 영양 상태와 주거환경에 대해 조사했고 2017년에는 가전제품이나 운송수단 등 소유자산에 대한 설문도 처음으로 추가되었다.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분석 가능한 북한 주민 생활 실태 영역을 구성하고, 남북한의 실태와 격차 비교가 가능한 동일 영역을 종합하여 북한 주민의 식·의·주 기본 실태와 건강, 유행, 소비생활을 탐색하였다.³⁾

[그림 1-3] 주민 생활 영역과 유형별 분석틀



자료: 저자 작성

- 다룬다. ③ 주민의식 영역에서는 정치의식, 경제생활의식, 사회문화 일상 및 대외의식을 포함한다.
- 3) 북한의 주민생활 실태를 영역별로 분류하고, 서술 가능한 부분으로 재구성한 후 추후 남한과 비교하기 위해서 한국 사회의 사회조사 분류체계를 참고하였다. 통계청(<http://koses.kr>)은 매년 「한국의 사회지표」를 통해 한국의 사회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국민 삶과 관련한 전반적 경제·사회 변화를 알기 쉽게 파악하도록 지표를 작성 발표해 오고 있다.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는 기본적으로 인구와 가구를 기초 통계로 하여 ① 인구, ② 가구·가족, ③ 건강, ④ 교육·훈련, ⑤ 노동·여가, ⑥ 소득·소비·자산, ⑦ 주거, ⑧ 생활환경, ⑨ 범죄·안전, ⑩ 사회통합·주관적 웰빙의 10개 항목으로 조사하고 있다.

각 영역의 범위는 우선 식생활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건강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의생활과 관련하여 유행의 영역을 새롭게 설정하였다. 여성의 치장과 옷차림, 보건 의료 영역인 피부 관리, 성형수술 뿐 아니라 마약 흡입 등의 새로운 사회적 유행현상이 포괄적으로 생겨나고 있어 통합적 차원에서 유행이라는 영역을 설정하고 북한 주민의 치장(decoration)에 관한 새로운 사회현상을 서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주생활과 관련하여 생활환경 영역은 가정의 태양열 전기이용 실태 및 휴대폰, 컴퓨터 등의 가전제품 사용과 오토바이, 택시 등의 교통시설 이용 등의 영역을 망라하여 종합 서술한다.

질적 연구 자료는 연구진이 지난 2년 동안 최근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대상 21명을 대상으로 연구해 온 심층면접 조사의 결과를 녹여 내어 현 시기 북한주민의 생활 실태를 분석하는데 활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별도의 조사는 아니기 때문에 관련한 인터뷰 대상의 목록과 특성은 본 글의 맨 뒤 부록으로 첨가한다.

2부 8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북한 주민들의 소비 품목을 확인하고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양적조사와 질적조사를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조사연구의 수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남한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 계층 등에 관한 기존연구를 분석하면서, 본 연구에 필요한 질문지를 확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남한 최저생계비 비목이 본 연구의 설문지에 적합하다는 논리를 제공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연구진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남한 최저생계비 품목이 북한 표준생계비 계층에 적합한지, 더 나은 질문 품목은 없는지 논의하였다.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북한 생활상에 부합한 품목을 일부 개발함으로써, 북한 일반주민의 일상생활에 더 다가가고자 하였다.

구성된 질문 문항을 바탕으로 '북한 주민 표준생활비 계층을 위한 기초

조사'라는 제목의 설문지를 구성하여, 예비 조사를 수행하였다. 2020년 8월 5일부터 8월 7일까지 총 4명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설문조사 및 질적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예비 조사를 통해, 본 설문지의 일부 품목을 개선하였다.

본 조사는 사전에 교육된 연구진 3명이 인터뷰어가 되어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상담이 가능한 독립된 공간에서 설문지를 제시하고, 1:1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북한 주민 표준생활비 계측을 위한 기초조사'라는 설문지를 작성함과 동시에 질적 인터뷰를 수행하는 혼합 연구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조사는 구조화된 방식(최저생계비 계측 품목)과 반구조화된 방식(질적 인터뷰 심화 질문)으로 진행되었다. 북한 표준생계비 계측을 위해 남한 최저생계비 비목을 활용하였는데, 이 때 월별 소비량과 가격을 조사하였다. 특히 해당 품목에 대한 지출을 하였다는 응답자 수에 주목하였다. 달러, 위안화, 북한 원화 중 응답자가 대답하기 쉬운 화폐단위로 응답하게 하였고, 북한 만원 단위로 바꾸어 계산하여 조사결과를 작성하였다. 인터뷰 시간은 30분부터 120분까지 각이하게 소요되었다. 인터뷰 내용은 고지된 동의하에 녹음하였으며,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전반적인 연구진행은 연구진이 소속된 한국교통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⁴⁾을 받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진행되었다.

본 조사의 대상은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방법을 통해 37명의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37명의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참여자에 대한 성별, 연령, 탈북연도, 탈북 당시 북한거주지, 학력, 직업은 다음과 같다.

4) 승인번호는 KNUT IRB 2020-21(승인일자: 2020.08.06.)로 승인유효일자는 2021년 8월 5일까지이다.

24 남북 간 사회격차 완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복지체제 구축 방안 연구: 북한 주민의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표 1-1〉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참여자의 기본 정보

연번	성별	연령	탈북연도	북한거주지	학력	직업
1	여	37	2015	함경북도 회령시	대졸	전문직 의사
2	여	33	2019	양강도 혜산시	고졸	노동자
3	남	30	2019	함경북도 부령군	고졸	사무원 자재인수
4	여	42	2019	평양시	대졸	전문직 공무원
5	여	41	2016	함경남도 낙원군	고졸	장사
6	여	49	2018	양강도 혜산시	고졸	부업
7	여	57	2016	함경남도 흥원군	고졸	부업
8	여	56	2019	양강도 혜산시	전졸	주부
9	여	45	2019	양강도 혜산시	전졸	주부
10	여	31	2017	평양시	고졸	장사
11	여	48	2019	함경북도 청진시	고졸	장사
12	여	41	2018	양강도 혜산시	대졸	장사
13	여	33	2018	양강도 혜산시	전졸	장사
14	여	35	2018	양강도 혜산시	전졸	장사
15	여	53	2015	함경북도 청진시	고졸	장사
16	여	56	2019	양강도 혜산시	고졸	장사
17	여	49	2018	함경남도 단천시	대졸	장사
18	여	55	2015	평안남도 평성시	전졸	장사
19	여	35	2018	양강도 혜산시	고졸	장사
20	여	31	2019	양강도 혜산시	고졸	주부
21	여	33	2018	양강도 혜산시	전졸	사무원
22	여	50	2019	양강도 혜산시	전졸	사무원
23	여	48	2019	함경남도 함흥시	대졸	전문직 교사
24	여	51	2016	양강도 혜산시	고졸	노동자
25	여	49	2018	양강도 혜산시	전졸	주부
26	여	55	2019	양강도 혜산시	중졸	농장원
27	여	51	2019	양강도 혜산시	중졸	노동자
28	여	38	2013	양강도 혜산시	전졸	노동자 간호사
29	여	20	2017	양강도 보천군	고졸	주부
30	여	29	2019	함경북도 회령시	고졸	노동자
31	여	54	2019	양강도 혜산시	고졸	장사
32	여	70	2016	양강도 혜산시	중졸	장사
33	남	26	2019	함경북도 무산군	고졸	노동자
34	여	25	2019	함경북도 무산군	고졸	노동자
35	여	26	2017	양강도 혜산시	고졸	노동자
36	여	57	2019	양강도 혜산시	전졸	사무원 경리
37	여	47	2019	양강도 혜산시	전졸	장사

자료: 저자 작성

인터뷰 참여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을 보면, 2명을 제외하고 모두 여성이었다. 북한에서 가계는 여성이 맡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남성은 가계상황에 대한 구술이 어렵기 때문이다. 연령은 20대 5명, 30대 10명, 40대 10명, 50대 11명, 70대 1명이었다. 30대~50대가 대다수였다.

탈북연도는 2013년 1명, 2015년 3명, 2016년 4명, 2017년 3명, 2018년 8명, 2019년 18명이었다. 인터뷰참가자는 2013년 이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으로, 가능한 한 최근 입국한 사람으로 선정하도록 하였다. 그 이유는 2가지인데, 첫째, 북한의 가격은 2013년을 기점으로 큰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김정은 등장 이후 2013년 말 새로운 경제개선조치를 실시한 이후 환율과 물가가 안정되고 주민들의 경제생활에서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탈북시기를 2013년까지 확장해도 물가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가정하였다. 가장 오래된 탈북연도가 2013년이었으므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최근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수가 많지 않고, 최근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은 혜산시를 비롯한 양강도 지역 출신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 출신지역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였다. 2018년과 2019년 탈북한 사람이 전체 면접자 중 70.2%였다.

북한에서의 거주지는 양강도가 23명(62.2%)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함경북도 7명(18.9%), 함경남도 4명(10.8%), 평양시 2명(5.4%), 평안남도 1명(2.7%)이었다. 대부분이 시, 군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

학력은 중졸 3명, 고졸 18명, 전문대졸 11명, 대졸 5명이었다. 고등학교 졸업과 전문학교 졸업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북한에서의 직업은 장사가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노동자 8명, 주부 5명, 사무원 4명, 전문직 3명, 부업 2명, 농장원 1명이었다.

가구원 수는 3인 가구가 13사례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2인 가구 10

26 남북 간 사회격차 완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복지체제 구축 방안 연구: 북한 주민의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사례, 4인 가구 9사례, 5인 가구 3사례, 단독가구 2사례였다.

〈표 1-2〉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참여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분류	소분류	인원	%
성별	여	35	94.6
	남	2	5.4
연령	20대	5	13.5
	30대	10	27.0
	40대	10	27.0
	50대	11	29.7
	60대	1	2.7
탈북연도	2013	1	2.7
	2015	3	8.1
	2016	4	10.8
	2017	3	8.1
	2018	8	21.6
	2019	18	48.6
북한거주지	평안남도	1	2.7
	평양시	2	5.4
	함경남도	4	10.8
	함경북도	7	18.9
	양강도	23	62.2
학력	중졸	3	8.1
	고졸	18	48.6
	전졸	11	29.7
	대졸	5	13.5
직업	노동자	8	21.6
	농장원	1	2.7
	사무원	4	10.8
	전문직	3	8.1
	장사	14	37.8
	부업	2	5.4
	주부	5	13.5
가구원 수	1	2	5.4
	2	10	27.0
	3	13	35.1
	4	9	24.3
	5	3	8.1

자료: 저자 작성



제 1 부

평화복지체제의 이론과 사례 검토

제2장 평화복지체제에 관한 개념적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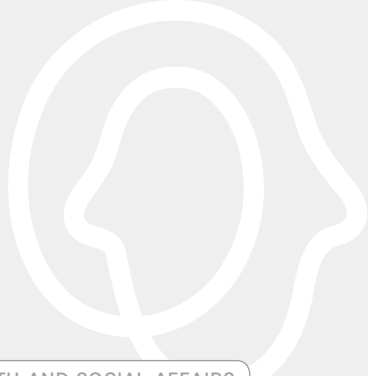
제3장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빈곤과 불평등:
동독의 경험

제4장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빈곤과 불평등:
동남아시아 국가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2장

평화복지체제에 관한 개념적 논의

제1절 평화와 복지와의 관계

제2절 평화복지체제의 개념과 구성

제 2 장 평화복지체제에 관한 개념적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 간 사회적차 완화를 통한 평화복지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평화복지체제의 개념과 특성이 무엇인가를 먼저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2010년대 초반에 시작된 한반도 평화복지체제에 관한 이론적 논의들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서, 평화복지체제의 개념을 구축하는 이론적 논거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를 위해서 평화와 복지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우리 사회에서 지난 10년 동안 전개된 평화복지체제에 관한 논의를 통하여 우리가 추구해야 할 (또는 추구해야만 하는) 평화복지체제가 무엇인가를 이론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 작업은 앞으로 남북 간 사회적차를 완화하여 남북 간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평화를 기반으로 하는 평화복지체제를 지향하는 연구의 이론적 기초가 될 것이다.

제1절 평화와 복지와의 관계

1. 적극적 평화와 복지국가

고전적인 복지국가 논의에서 평화는 복지국가의 전제 조건 또는 실천요강의 하나로 간주되어 왔다. 복지국가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영국의 템플(William Temple)이 ‘welfare state’를 ‘warfare state’와 대비하는 용어로 선택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상균(1987)에 따르면 베버리지(William Beveridge)는 “평화는 사회정책의 제반문제보다 더 중요하며

사회주의나 보수주의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김상균, 1987, p. 56).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을 마친 후 발전한 복지국가에서 평화는 기본적인 전제조건으로 여겨졌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전쟁의 위험은 군비의 강화를 수반함으로써 국가의 복지예산을 제한하기 때문에 복지국가의 실현을 제약할 수 있으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전쟁과 같이 비평화가 국민들에게 주는 심리적 부담은 여러 가지 반복지 현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복지국가의 실현을 어렵게 만든다. 한국전쟁의 경험들 가진 우리나라의 사례에서도 전쟁 이후 생명경시, 질서무시, 이기주의 편법주의, 찰라주의 등과 같은 부정적 가치관의 형성이나 기존 가치체계에 대한 충격은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비인간적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있다(김경동, 1984).

요컨대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평화로운 상태를 지속하여 국민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갖고 이를 토대로 생활의 질을 높이는 제반 정책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복지국가의 전제가 되는 평화는 어떤 상태일까? 전쟁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회피하는 것으로 복지국가의 전제는 충족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된다. 갈통(Galtung)의 견해를 보면 복지국가는 보다 적극적 의미의 평화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갈통(Galtung, 2000)은 전쟁의 부재 상태를 소극적 평화로 규정하고,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착취, 폭력을 정당화하는 문화적 폭력까지 해소된 상태를 적극적 평화의 실현으로 규정하고 있다. 적극적 평화 개념에서 강조되는 정치적 민주주의, 경제적 공정 등이 실현되는 것은 일반적인 복지국가 지향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이다. 즉 복지국가가 지향하는 평화는 갈통의 주장과 같이 보다 적극적 평화의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들에게 주는 심리적 안정감에 초

점을 둔다면 소극적 평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적극적인 평화의 개념을 원용한다면 평화라는 틀 속에서 복지 문제를 개념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차원에서 복지와 평화의 문제를 검토하자면 분단에 따른 남북 간의 긴장과 대립의 해소 수준의 평화의 정착은 소극적 평화 상태를 의미한다. 우리의 경우는 그동안 소극적 평화 상태를 염두에 두고 분단을 극복하는 노력을 해온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통일된 한반도를 염두에 두고 적극적 평화를 실현하는 분단 극복을 상상해본다면 분단체제의 극복은 남북 간의 사회통합의 문제와 복지의 문제가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에서는 남북 지역 내에서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착취의 해소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적극적 평화가 경제적 착취, 정치적 억압, 문화적 폭력까지 해소한 상태를 지향한다면, 우리가 그려야 할 통합된 한반도는 적극적 평화를 정착하는 수준이어야 할 것이다.

그간의 평화복지국가의 논의에서 평화와 복지는 동시에 연결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당위적인 논의는 평화복지국가가 단순히 분쟁이 해소된 평화 상태에서의 복지가 아닌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통일과 평화를 지향하는 복지국가로서 적극적 평화를 추구하는 통일된 국가로 나아간다면 소극적 평화를 유지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한반도의 발전과 사회통합을 지향해야 하고, 북한 주민들의 복지 문제도 남과 북의 통합을 지향하는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평화복지체제는 소극적 평화 유지 상태인 공존에서 적극적 평화유지 상태인 통합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평화체제의 실현은 필연적으로 남한과 북한의 사회통합을 고려한 복지 발전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과 정책적 틀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2. 한국 복지국가의 저발전의 원인으로서는 분단체제

복지와 평화와의 관계를 한국의 상황에서 논의할 때 한반도의 분단체제 또는 분단·전쟁 체제는 한국의 복지국가의 발전을 저해하고 억압하는 힘으로 작용하였다고 여러 학자들이 분석하고 있다(김동춘, 2013; 윤희식, 2015; 이남주, 2014)

우리는 1945년 해방된 이후 남과 북으로 갈라져 1950년에 전쟁을 치르고 휴전 상태로 70여년 이상을 분단체제에서 살고 있다. 분단체제는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을 규정하는 질곡으로 작동하여 왔다. 이승만권위주의 체제에서 ‘선통일 후건설’은 남한에서 민주주의와 산업화를 억압하고 지연시키는 명분으로 작동하였고, 박정희의 권위주의 개발국가 체제에서 ‘선건설 후통일’과 ‘선성장 후분배’는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발전을 억압하는 명분으로 작동하였다(이병천, 윤희식, 구갑우, 2016, pp. 16-28).

해방 이후 외세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강제된 분단체제는 남한사회에서 반공주의를 강화하여 민주주의를 후퇴시켰고 복지국가를 만들어 갈 주체 세력으로서 노동자를 약화시켰다. 김동춘(2013, p. 32)은 한국이 전쟁이 없는 소극적 평화에 익숙한 것은 ‘분단·전쟁체제’에 기인한다고 진단한다. 분단·전쟁체제란 자유의 이름으로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는 냉전 자유주의와 노동조합활동을 제약하는 냉전 자본주의에 뿌리를 둔 체제이다. 이 체제는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가 곧 복지’라는 프레임을 통하여 복지국가의 발전을 저해하였다.

김동춘(2013)은 한반도의 과제는 전쟁이 없는 소극적 평화가 아니라 갈등의 원인이 제거된 적극적 평화를 실현해야 하며, 적극적 평화는 분단 해소, 곧 통일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통일된 국가 전체에서 복지가 실천 될 때 진정한 통일이 될 수 있다고 본다. 21세기 우리가

지향해야 할 복지국가는 핵 위험과 다가오는 지구적 환경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국가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1세기 우리가 추구하는 국가는 복지국가, 평화국가, 21세기적 생태국가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여러 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한반도의 분단체제가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을 제약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였다. 그러나 복지국가의 달성에 평화가 필수 조건이라는 당위적 주장은 경계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은 평화체제의 달성이 복지국가체제의 달성의 전제 조건이라는 논리로 비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점에서 김영순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평화 혹은 복지와 평화를 서로 절대적인 조건으로 얘기하는 것은 경계되어야 하며, 복지(국가)와 평화와의 관계도 복지와 평화라는 두 가지 과제가 깊은 상호관련성이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가 답해야 할 과제는 ‘분단체제라는 일정한 구조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어떤 복지국가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이다. 김영순은 또한 ‘평화와 복지라는 두 가지 가치가 선순환 할 수 있게 어떻게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영순, 2013, pp. 251-253). ‘평화와 복지라는 두 가지 가치의 선순환’이라는 화두는 한반도의 분단체제가 복지 발전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는 과제를 던져주는 동시에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평화체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복지가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연구자들은 이해하고 있다.

3. 평화담론과 복지 담론의 연결이 갖는 의미

평화와 복지를 연결시켜서 미래의 통일된 복지국가의 모습의 상상해보는 우리 사회의 ‘평화복지국가’ 담론은 그동안 우리사회를 지배해온 안보담론과 민족주의적 통일담론의 지형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앞으로 그 논

의의 지형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평화복지국가 담론은 눈에 보이는 로드맵에 연결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비록 내용상 구체성과 실천성이 부족한 것 상태이지만, 평화복지국가 담론은 분단체제하에서 복지국가에 관한 담론을 반(半)국적 담론에서 전국적 담론으로 확장시켰다(민기채, 2019). 이는 곧 그동안의 복지국가 담론이 분단체제를 인정한 상태에서 남한사회에서의 복지국가 논의에 한정되었다고 한다면, 평화복지국가 담론은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 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한반도적 맥락에서 평화 과정과 통일 과정(교류 협력)은 병행되고 결합되어야 하며, 교류 협력은 평화체제의 진전 속에서만 ‘사실상의 통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이승철, 2013, pp. 264-269).

현재의 체제서 남북 간 교류 협력의 대상과 영역의 문제와 이의 확대는 남북 간에 분단체제 극복에서 평화와 복지의 문제를 보는 시각을 반영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주요 논의에서 전제되는 것과 같이 분단체제의 극복 또는 완화를 통해서 일정 수준의 평화체제가 유지되어야 남북 간 복지 분야에서 상호 교류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접근은 일정 수준의 평화체제의 달성이 남북 간 복지 발전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선평화(先平和)·후복지(後福祉)의 선후(先後) 논리이다. 그동안 냉전에 기초한 분단체제에서는 선후의 논리가 지배하였다. 그러나 평화복지국가 담론에서는 평화와 복지를 선후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함께 혹은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는 공진(共進)의 문제로 보고 있다. 이는 평화 없는 복지가 가능한가? 복지 없는 평화는 가능한가? 복지와 평화는 공존가능한가? 라는 질문에 대한 논의이다. 이 개념과 담론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의 2절에서 살펴 보도록 한다.

제2절 평화복지체제의 개념과 구성

‘평화복지체제’는 아직까지 널리 사용되는 개념은 아니다. 이 개념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 연구소가 21세기에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역사적 과제를 논의하면서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아직 기본적인 논의를 촉발한 정도에 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평화복지체제’ 역시 이 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그 의미 내용이 무엇인가를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정리해본다.

평화복지체제가 무엇인가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사회에 지난 몇 년 동안 진행된 평화복지국가에 대한 담론을 추적하는 데에서 논의를 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복지국가 관련 담론이나 동일 관련 담론에서 평화와 복지를 동시에 고려하고 연결하여 사용하고 논의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평화복지체제’ ‘평화복지국가’라는 용어는 선형적인 개념도 아니며, 우리사회에서 시대적 과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집단적 논의에서 제안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다음에서는 평화복지국가에 관한 담론이 가지는 사회적 학술적 의미를 먼저 살펴보고, 다음으로 평화복지국가의 담론의 전개와 그 내용을 관련 저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담론에서 명시적으로 제시거나 함축적으로 그 의미를 추적해 볼 수 있는 평화복지국가, 평화복지체제의 내용적 개념과 평화복지체제의 구축의 조건, 혹은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평화복지국가에 대한 담론을 구성하는 여러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본 연구에서 채택할 평화복지체제의 담론의 중요 개념과 구성에 대하여 정리해 본다.

1. 평화복지체제 담론의 등장과 의의

평화복지국가 혹은 평화복지체제에 관한 관심과 논의는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의 기획에서 비롯되었다. 평화복지국가 담론의 등장의 배경이 된 평화의 문제와 복지의 문제를 연결하는 평화복지국가에 관한 연속 기획으로 이루어진 3권의 일종의 출판물(윤홍식 편, 2013; 조홍식, 장지연 편, 2014; 이병천, 윤홍식, 구갑우 편, 2016)의 등장은 한국 복지국가체제 논쟁의 역사에서 새로운 장이 열린 것이라 할 수 있다. 2013년 발간된 윤홍식 편 의 제목인 “평화복지국가 : 분단과 전쟁을 넘어 새로운 복지국가를 상상하다”가 시사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새로운 복지국가로서 ‘평화복지국가’라는 개념을 상상하고 있다. 이어서 2014년에는 “평화와 복지, 경계를 넘어 : 평화복지국가의 정치적 조건과 주체를 찾아”라는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평화복지국가의 정치적 조건과 평화복지국가를 추동하는 주체에 대하여 논의한다. 2016년에는 “안보개발국가를 넘어 평화복지국가로 : 독일의 경험과 한국의 과제”로 독일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한국의 평화복지국가의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⁵⁾

이 시리즈를 통해 제시되고 다듬어진 평화복지국가에 관한 담론이 가지는 의미와 한계에 대하여 민기채(2019)가 비교적 잘 정리하고 있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⁶⁾

-
- 5) 남북 관계가 얼어붙었던 2013년 초에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는 평화복지국가라는 기획 시리즈로 2013년 12월에 “평화복지국가 - 분단과 전쟁을 넘어 새로운 복지국가를 상상하다”를, 2014년 7월에 “평화와복지, 경계를 넘어 - 평화복지국가의 정치적 조건과 주체를 찾아”를 출간하였고, 2016년 11월에 마지막 책인 “안보개발국가를 넘어 평화복지국가로 - 독일의 경험과 한국의 과제”로 시리즈는 마무리되었다. 서문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 책의 출간을 위해 2014년 8월부터 세미나와 워크숍, 심포지엄 등을 통해 논의를 다듬는 과정이 있었다.
- 6) 참여사회연구소가 진행한 평화복지국가에 대한 기획시리즈를 통하여 제기된 담론은 다수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지만 민기채(2019), 조성은(2018), 홍성태(2017) 등의 글을 통해 총괄적으로 평가되고 그 의의가 확인된 바 있다. 내리고 있다. 민기채는 기획시리즈 3개

먼저 담론이 갖는 학술적 의의로는 복지체제론 논쟁에서 소외되었던 평화복지국가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이 주요 의의로 평가된다. 우선 “평화복지국가의 출현은 세 가지 복지체제(자유주의, 보수주의, 시민주의) 또는 발전주의 복지체제에 주목하고 있던 한국 복지체제론 해석에서 새로운 관점과 이론적 기여”를 하였다. 둘째 “분단체제론에 입각하여 복지국가의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는 한국 복지국가의 특수성에 대한 심도 깊은 해석”을 하여 “기존에는 분단의 문제와 복지의 문제가 서로 별개의 것으로 해석되어 왔으나, 평화복지국가의 등장은 분단체제 해소와 복지국가 건설이 밀접히 연결되어 역사적 발전을 해왔고 향후 추구해야 한다는 실천적 논리를 제공”해 주었다는 것이다(민기채, 2019, 95). 이 논의가 크게 확대되지 못하고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지 못한 한계는 있지만 기존의 관점을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하다.

한편 민기채의 평가에서 눈 여겨 볼 부분은 이른바 “반(半)국적 관점이라는 한계를 갖는 담론”으로 규정된 점이다. 그는 “남한의 범위 내에서 평화복지국가를 주장하더라도 그것이 틀린 주장은 아니지만, 평화복지국가를 남북 간 통일을 위한 대안이론으로 제시하자면, 남한을 넘어 한반도를 그 적용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평화복지체제론은 한반도의 분단체제를 상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문제의식에 출발하여 잉태되었기에, 분단체제로 인한 삶의 억압은 남북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남한지역을 넘어 한반도 전역으로 평화복지에 관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민기채, 2019, p. 96).⁷⁾ 그의 지적대로 그동안 학계에

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논평하고 있으며, 조성은 마지막 3편을 중심으로 서평의 형태로 논의를 정리하면서 1편과 2편을 언급하고 있다. 홍성태도 3편에 대하여 서평 형식을 빌어 논의하고 있다.

7) 민기채의 비평은 평화복지국가 담론의 기획시리즈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보다는 우리나라의 복지발전 혹은 복지체제에 관한 논의가 분단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서 역사성과 시대성을 결여했다는 비판으로 볼 수도 있다.

서 논의되어 온 한국 사회의 복지발전 혹은 복지국가 발전의 담론이 가진 반국적 성격을 평화복지국가 담론이 전국적 성격의 통일담론으로 확대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는 아주 적절하다.

2. 평화복지체제 담론의 내용과 지향

선도적으로 담론을 제기한 참여연대 평화복지체제 담론을 중심으로 평화복지체제가 지향하는 바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화복지국가는 분단이라는 한반도의 역사적 특수성에 주목하여 평화와 복지 연계에 기초한 복지체제로, 평화와 복지의 상보성에 대한 이론에 기반하고 있다. 평화와 복지의 상보성에 대해서 윤홍식(2015)은 평화와 복지가 동시에 추진될 수 있고 추진되는 것이 분단체제를 평화적으로 극복하여 평화복지국가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평화와 복지의 공진(共進)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평화와 복지의 관계를 상보관계로 표현 하든 공진관계로 표현하든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서 분단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복지담론이 적극적으로 통일 후의 국가 모습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도 바로 평화복지국가에 대한 이런 입장에서 평화체제를 앞당기거나 촉진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출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복지담론의 측면에서 평화복지국가라는 새로운 접근은 분단체제에 기초한 복지담론이나 통일담론이 갖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홍성태, 2017; 조성은, 2018). 평화복지국가를 설명하는 연구들을 보면, 평화와 복지를 둘러싼 담론들을 국가 단위에 기초하여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발전국가 이전에 안보국가이며(김동춘, 2013, p. 30), 안보국가는 발전국가와 분리불가능한 쌍생아이기 때문에(구갑우, 2012, p. 19)

남북한의 분단·전쟁 체제는 병영국가와 전시국가를 초래하였고(김동춘, 2013, p. 30), 분단·전쟁 체제는 안보국가, 냉전 자유주의, 냉전 자본주의를 양산(김동춘, 2013, p. 32)하는 부정적 결과로 이어졌다. 20세기 후반 안보·발전국가의 한 축인 발전국가가 해체되었지만 신자유주의적 안보국가로 전환(구갑우, 2012, p. 19)하였다고 평가되며, 여전히 분단·전쟁 체제와 신자유주의 체제의 상호작용으로 복지제도 등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반이 붕괴(김동춘, 2013, p. 32)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한국의 근현대사를 볼 때 분단은 반공주의를 양산하고, 반공주의는 발전주의와 결합(유범상, 2014, p. 284)하여 반공주의와 개발국가의 결합으로서의 반공개발국가(윤홍식, 2016, p. 106), 권위주의적 반공개발국가를 대신한 신자유주의적 반공개발국가(윤홍식, 2016, p. 128)로 이어지는 부정적 체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국가 지향은 반공개발국가의 대안으로서의 평화복지국가(윤홍식, 2016, p. 127)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한반도 분단체제의 특수성에 기초하여 평화복지국가를 설명하는 대표적 논리라고 할 수 있다(민기채, 2019). 여러 가지 논의의 지점이 있지만 조금 단순화 시켜서 본다면 냉전분단체제가 야기한 한국의 복지국가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냉전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논의의 틀이 필요하며 이것이 평화복지국가 또는 평화복지체제 담론의 핵심 주제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둘째, 평화복지국가는 전쟁 또는 군축을 기반으로 한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전쟁-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바탕으로 한다. 전쟁이 복지국가 건설에 이로운 것인가 또는 해로운 것인가에 대한 해명은 분단 하에서 중요하다. Rokkan(1975, p. 570)의 국가발전단계(침투, 표준화, 참여, 재분배)중 두 번째 단계인 표준화 단계에서는, 주변부의 대중들을 중심부의 제도 내로 편입함으로써 동질한 문화로 일체화시켜야 하는데, 징병제

를 통한 군대유지는 매우 중요한 방도로 설명된다. 이때 표준화 단계에서의 군대라는 것은 국가수립의 지배도구 내지 전쟁수행의 주체로 인식되었지, 복지제도의 확대와는 유기적으로 연결지어 설명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평화복지국가 논의에서는 전쟁 또는 전쟁 위기 조장이 복지국가 건설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리고 그것은 비판받아야 한다는 점에 논점을 맞추었다. 예를 들어, 실제 전쟁을 수행하는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전쟁-복지국가이며, 군산복합체를 보편적 복지국가의 실현 도구 가운데 하나이자 군사적 자립을 위한 토대로 생각하는 스웨덴의 길은 유사 전쟁-복지국가로 규정되기도 한다(구갑우, 2012, p. 21). “분단체제 하에서 전쟁국가의 형태를 가진 한국형 복지국가는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구갑우, 2012, p. 19)는 논리는 군축의 중요성, 북한을 넘어선 한반도 비핵화, 수출형 군수산업으로의 전환이 갖는 위험성,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의문 등 다양한 문제제기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 주었다는 측면에서 평화복지국가로의 길의 조건에 대한 논의의 기반이 되었다고 본다(민기채, 2019).

셋째, 평화복지국가는 반공주의가 제약하는 정치적 주체의 문제를 확장시키는 지향을 담고 있다.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 남한 사회를 지배하여 왔던 레드 콤플렉스는 사회주의 혁명이 아닌 사회개혁 운동조차도 적을 이롭게 하는 반국가행위 또는 이적행위로 규정하여 왔다. 반공법에서 국가보안법으로 개명하였지만 그것들이 진보세력의 탄압도구였음은 역사적으로 자명하다. 동시에 국가의 전쟁 위기 조장을 통해 사회운동세력을 탄압함으로써, 결국 복지국가 확장을 막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주체(역량)와 형성조건에 대한 역사적 평가 및 향후 평화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주체 논의는 다양하다. 서구와 달리 노동계급의 소극적 복지국가 태도 하에서 시민정치운동의 정당 연대 중요성을 강조(구갑우,

2012, p. 17)하는 한편, 복지동맹과 평화동맹의 연대(구갑우, 2012, p. 22)나, 국가와 시민사회 두 주체의 공동 추진(김동춘, 2013, p. 42)과 같이 주요 주체들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평화복지국가로의 이행과정이 제시된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현재 진보정당들의 평화복지관은 구현 방안과 주체의 연결이 불분명(김윤철, 2014, p. 134)한 점을 극복해서, 진보정당과 개혁적 자유주의 정당 간의 연합 정치(이남주, 2014, p. 185)를 이루거나, 풀뿌리 지역 공동체에서 평화복지동맹 구축(조흥식, 2014, p. 239)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주도세력인 노동계급에 주목하여 한국 복지국가 주체세력인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한 좌파세력의 형성과 연대의 제약으로서의 한반도 분단(윤흥식, 2013, p. 84)에 주목하기도 한다. 반복개발국가는 주체 세력의 형성과 성장을 차단(윤흥식, 2016, p. 129)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복지국가의 전제가 되는 한민족 경제권 건설 주체로서 남북한과 700만 명의 해외 동포(김동춘, 2013, p. 47)에 주목하는 논의도 있다.

3. 평화복지체제의 개념

평화복지체제는 이념적 지향으로서 논의되는 과정에 있어 그 개념이 학술적으로 명확히 정의된 바는 없다. 다만 평화복지체제라는 담론은 분단체제에 기초한 냉전적 사고에 대한 도전에서 그 개념의 틀들이 논의되고 구성된 것으로 이해된다. 냉전적 사고에 기초한 한반도 통일국가의 논의에서는 선평화·후복지라는 사고의 틀이 지배적이었지만, 평화복지체제에 관한 논의에서는 기본적으로 평화와 복지 공진론(共進論)⁸⁾의 입장에

8) 공진론이란 평화 체계의 구축이 복지 체계의 구축에 선행되거나 복지 체계의 구축이 평화 체계의 구축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과는 달리 복지 체계와 평화 체계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고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서 평화복지체제를 구성하고 논의하고 있다. 평화복지체제 담론은 한반도의 분단 현실에서 복지국가는 어떻게 가능한가?’의 현실적이고 현재적인 문제제기인 동시에 분단체제 이후의 한반도의 통일된 모습을 지향하는 미래의 비전에 관한 담론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담론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의식에서 본다면 평화복지체제란 남북이 공생 공영하면서 사회 통합을 위한 체제를 염두에 둔 미래 지향적 체제 모델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래서 평화복지국가 담론논의에서의 대표적 개념 정의를 보면 평화복지국가는 한국사회의 사회·정치·경제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정의된, “한국사회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재벌중심의 신자유주의적 개발주의 성장방식을 지양하는 사회가 시장경제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함으로써 정상의 결과가 공정히 분배되는 복지체제”이다(이병천, 윤희식, 구갑우, 2016, p. 131). 이러한 개념정의에서 강조되는 것은 한국사회가 농인 특수성에 의해서 분단체제가 복지체제를 제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분단을 기반으로 한 반공이데올로기가 개발독재체제를 지탱하고, 개발독재체제는 복지를 통한 재분배를 억압해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는 여전히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 양극화와 과잉자본이 공존하는 남한의 불균형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이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가 한반도 평화 과정을 위협하는 악순환”(이병천, 윤희식, 구갑우, 2016, p. 83)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논의 구조는 필연적으로 평화복지국가라는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적인 두 가지 과제를 제시하게 된다. 즉, “분단으로 비롯된 반공(반북)주의를 대신해 ‘한반도 평화’를, 경제성장 제일주의에 의존하는 (신자유주의적) 개발국가를 대신해 복지국가를 한국사회에서 실현”(이

병천, 윤희식, 구갑우, 2016, p. 135)하는 것이 결국 평화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이다.

평화복지국가 논의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분단체제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서구의 복지국가 논의만으로는 한국 복지의 낙후성 또는 복지 확대의 지체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이유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분단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저간의 논의 구조에 있다는 것이다. 남북 관계에서 평화체계의 정착을 염두에 두고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고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면 주목해야 하는 것이 바로 평화체제가 복지국가의 필요조건이라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복지국가의 개념을 가장 먼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영국의 템플 대주교는 1940년대에 적국(敵國)이었던 독일을 전쟁국가(warfare state)로 규정하면서 자신의 조국인 영국은 복지국가로 가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전쟁(warfare)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복지(welfare)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일종의 국가 지향을 담지한 개념으로 복지와 국가를 조합하여 제시하였다. 이후 많은 복지국가 연구자들이 복지국가에서 평화와 민주주의는 전제된 것으로 간주하여 왔다(조성은, 2018).

평화복지국가에 관한 담론에서 주목하는 것은 복지국가들이 평화를 전제하고 발전되어 왔지만, 적극적으로 군사적 활동을 줄이거나 군비를 세계적으로 축소하려는 노력은 사실상 회피되어 왔으며, 오히려 “복지국가가 ‘전쟁-복지국가(warfare-welfare state)’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이병천, 윤희식, 구갑우, 2016, p. 200). 따라서 평화복지국가론은 기존의 복지국가에 단순히 평화를 덧붙이지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이고 항구적인 평화체계를 구축하려는 적극적 노력을 지향하는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보다 확실히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전개되었다.

역사적으로 2차 세계대전 과정의 독일은 “국제적으로는 제국주의 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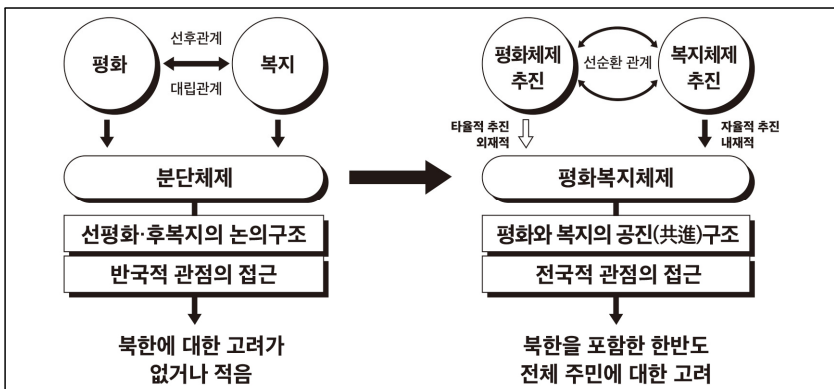
을 수행하면서 국내적으로는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여 이른바 ‘전쟁-복지국가’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 있는 사례”(김태성, 성경룡, 2014, p. 121)로 꼽힌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보편적인 복지국가의 전형인 스웨덴도 ‘중립(neutrality)’이라는 신화의 우산 하에서, 국제관계의 사회민주주의적 개혁을 모색하는 외교정책을 전개하면서 동시에 군사주의와 군사주의적 정책을 추진하는 군산복합체를 활용하던 복지국가”(이병천, 윤희식, 구갑우, 2016, p. 201)라고 평가된다. 역사적으로 스웨덴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연합국과 주축국 양자 사이에 중립을 표방하면서도 독일의 압력을 받아들여 스웨덴을 거쳐 노르웨이로 전쟁 물자를 수송하는 것을 허용했고, 결국 노르웨이는 독일에 점령당한바 있다. 물리적 충돌을 뜻하는 전쟁이 아니더라도 이른바 군산복합체(軍産複合體)의 입김이 선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우 군수 산업의 필요에 의해 국지적인 무력 사용을 종종 활용한다. 이러한 점에서 지금의 미국과 이스라엘이 대표적인 전쟁-복지국가 유형에 속하고, 스웨덴을 비롯한 서유럽의 복지국가들도 대부분 군수 산업의 발전 등 여러 형태의 군사주의에 결합되어 있어 전쟁-복지국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구갑우, 2012). 지금의 스웨덴 역시 냉전시대가 끝났음에도 미국의 정치·군사 동맹의 우산 아래에서 전투기 엔진의 개발, 로켓 프로그램, 핵개발 등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무기산업을 유지하고 군사적 자립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평화복지체제가 고려하는 공간적 범위는 남북한 전체로 확장된다.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국가와 복지국가는 남한만의 것이 될 수” 없으며, “평화공존단계, 국가연합단계든 최종적인 통일 국면이든 남북한 모두 평화국가와 복지국가가 돼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김동춘, 2013, p. 31). 구갑우(2012)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가 없다면 복지국가 만들기를 위한 정치적 동력

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한반도에서는 북한을, 국제적 차원에서는 동북아 국가들을 평화국가로 만들어 가는 것과 한국형 복지국가를 만들어 가는 것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들은 “남북한 평화 체제나 통일을 전제로 하지 않는 어떤 복지국가 전략도 동력을 갖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깔려있는 것이다(구갑우, 2012, p. 21; 김동춘, 2013, p. 48). 한편 민기채(2019)는 일부 평화복지국가에 대한 주장은 반국적 관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남한 지역 내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한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평화국가 만들기까지 논의되는 현 상황에서, 평화가 진전되면 남한 지역에 국한하여 복지국가 확대가 가능하다는 접근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평화의 중요성을 통찰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반국적(半國的) 관점을 넘어서 한반도 전체를 시야에 넣어야 하며, 평화복지를 누릴 대상 역시 8천만 겨레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이른바 전국적 관점을 강조한다.

이상의 여러 논의에서 제기되는 평화복지체제 개념이 구성되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분단체제와 평화복지체제의 비교



자료: 저자 작성

이러한 관점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하는 것은 평화체제의 추진은 외재적인데 비해 복지체제의 추진은 내재적이고 어느 정도는 자율적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동북아를 비롯한 국제 정치 구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한반도의 특성상 평화로 가는 길은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외재적 요소들에 영향을 크게 받는 노정이다. 이에 비해 남북한 주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내용으로 하는 복지체제 추진은 상대적으로 자율적 추진이 가능하다. 따라서 평화복지체제로 가는 길에 있어서 평화와 복지는 순차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선순환되는 관계로 보아서 복지체제 추진을 통해 평화체제를 견인해가는 방식을 한반도 평화복지체제의 구축에서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서 한반도 전체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적 격차 완화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평화복지체제의 구상은 남북한 모두의 변화를 전제로 하지만, 남한 복지체제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므로 북한 사회의 변화와, 그를 위한 남한 차원의 정책과제에 집중하여 논의할 것이다. 또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체제 개방과 저개발 탈피라는 2가지 방향에서의 과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의 3~4장에서는 사회주의 체제 전환을 경험한 동독과 발전과정에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함의를 얻고자 한다.



제3장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빈곤과 불평등: 동독의 경험

제1절 동독의 빈곤과 사회부조
제2절 통일 후 동독 지역의 빈곤

제 3 장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빈곤과 불평등: 동독의 경험

본 장은 동독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의 이행과정에서 빈곤 문제와 관련 제도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통일 전 동독의 빈곤 문제와 관련 제도를 살펴본 후, 다음으로 통일 후 동독 지역에 서독 사회부조제도가 적용되는 과정과 동독 지역의 빈곤 및 불평등 변화를 살펴본다.

제1절 동독의 빈곤과 사회부조

1. 동독 사회부조제도의 위상

2차 세계대전으로 동서독이 분단된 이후 서독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사회부조제도를 발전시켰으나, 사회주의 체제를 받아들인 동독에서는 노동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강조하면서 '빈곤'이라는 개념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데올로기적 이유로 빈곤에 대해 논하는 것부터 사회적으로 터부시되었다. 동독 사회에서는 사회부조제도를 서독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대량 실업 등의 부정적인 결과로 인해 불가피하게 마련한 제도로 치부하였고,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불필요한 제도로 보았다(Wienand, 1997, p. 13).

이처럼 대외적으로는 빈곤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 체제임을 선전하였으나, 동독의 붕괴 전까지 실질적으로 빈곤이 존재하였으므로, 정권 내부에서는 이 문제를 엄중한 사회적 문제로 다루었고, 사회부조제도 또한 수급

자 수가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나, 계속해서 명맥을 이어가는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본격적으로 동독 시절의 사회부조제도 변화를 살펴 보기에 앞서 동독의 45년 역사에서의 사회부조 수급자 규모 변화를 먼저 살펴보겠다.

동독 지역의 사회부조 수급자 수는 분단 직후인 1947년에 가장 많았고, 공식적으로 동독 정부가 수립된 이후(1949년 10월 7일)부터 1950년 사이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후에도 서독 편입 직전까지 동독 사회부조 지원 수급자 수는 계속해서 감소하여 1960년대 중반 이후로는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1989년에는 5000여명에 불과했다. 특히 전체 수급자 중 근로능력자는 정권 수립 이후 1970년대까지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연금생활자 비율은 20% 수준에서 유지되다가 1980년대에 이후 다소 증가하였다. 비연금생활자 중 수급자 중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18세 미만 아동 비율은 정권 후반 들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일회성급여는 1970년대에 가장 높았다.

<표 3-1> 동독의 사회부조 지원 수급자 수 변화(1947~1989년)

연도	지원 수급자(명)						일회성 급여 (건)	지원액 평균 (Mark)
	합계	(전체에서) 근로능력자	연금생활자	비연금생활자				
				남성	여성	18세미만		
1947	1,058,000	-	-	-	-	-	-	-
1950	530,167	231,301	-	-	-	-	-	-
1953	314,962	64,960	-	-	-	-	-	-
1957	214,762	29,931	45,081 (21.0)	23,981 (11.2)	116,722 (54.3)	28,978 (13.5)	64,838	72.00
1960	166,851	21,045	35,354 (21.2)	16,093 (9.6)	92,885 (55.7)	22,519 (13.5)	52,987	75.65
1965	95,087	10,377	22,648 (23.8)	7,464 (7.8)	54,554 (58.0)	10,421 (10.6)	79,071	81.81
1970	56,966	6,935	12,195 (21.4)	4,755 (8.3)	34,145 (59.9)	5,871 (10.3)	127,379	101.06

연도	지원 수급자(명)						일회성 급여 (건)	지원액 평균 (Mark)
	합계	(전체에서) 근로능력자	연금생활자	비연금생활자				
				남성	여성	18세미만		
1975	22,852	-	4,889 (21.4)	923 (4.0)	14,120 (61.8)	2,920 (12.8)	115,510	-
1980	17,172	-	6,435 (37.5)	588 (3.4)	8,611 (50.1)	1,538 (9.0)	110,670	-
1985	8,150	-	2,298 (28.2)	588 (6.8)	5,024 (61.6)	270 (3.3)	79,040	-
1989	5,553	-	2,022 (36.5)	477 (8.6)	2,905 (52.5)	131 (2.4)	77,264	-

자료: Frerich, J. & Frey, M. (1996). Handbuch der Geschichte der Sozialpolitik in Deutschland. Band 2: Sozialpolitik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p. 369;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2006). Statistische Übersichten zur Sozialpolitik in Deutschland seit 1945(Band SBZ/DDR), pp. 241-242를 저자가 재구성.

위의 자료를 통해 동독 정권에서 사회부조제도는 매우 주변적인 제도에 머물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두 가지로 설명된다. 우선, 동독의 국가와 기업의 보장시스템으로 인해 모든 인민들이 기초적인 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기본 식료품, 임대료, 난방비, 교통비, 아동 의복비, 문화행사 입장료 등에 대한 보조가 있다 (Wienand, 1997, p. 13).⁹⁾ 위와 같은 국가 및 기업의 보장 외에 지급되는 사회부조는 빈곤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을 다소 완화하는 제도로 운영될 뿐, 생활사정을 결정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부조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 이유는, 노동을

9) 동독에서 절대적 빈곤 문제는 50년대 말 최저임금(Mindesbruttolohns)의 도입과 최소 생활을 위한 물품 및 보조금 정책(Subventionspolitik)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평가된다. 최저생계보장에서부터 난방가능하고 가구가 있는 주거공간, 충분한 영양, 건강보장, 문화생활, 교육여건 등을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정도의 매우 낮은 수준으로 보장이 이루어졌다(Priller, 1994). 이러한 빈곤 상태는 대체로 낮은 소득과 낮은 연금으로 인한 문제였고, 따라서 저소득자나 저연금 노인의 경우 최저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업을 해야 할 정도였다(Manz, 1992).

권리이자 의무로 여기는 체제적 특성으로 인한 것이다. 근로능력자는 노동의 의무를 강제하여 사회부조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매우 일시적으로만 적용받았고, 유자녀 여성에게는 보육 시스템을 통해 노동이 가능한 여건을 제공하여 사회부조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였다. 그 결과 사회부조제도가 적용되는 대상은 저연금생활자 또는 취업활동이 어려운 여성이 대부분이었다.

아래에서는 동독 수립부터 통일 직전까지 동독 사회부조제도의 역사를 다음으로써 동서독의 통합 과정에서 직면했던 사회부조제도 관련 과제를 확인하고자 한다.

2. 동독 사회부조제도의 역사

가. 1949~1960년대: 사회주의 국가의 사회부조제도 설립

동독 사회부조제도의 시작은 전후 발생한 어려움과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동독에서 사회부조제도가 처음으로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된 것은 1947년으로, 이후 사회보험에서 적당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된 대상으로 제도가 운영되었다. 사회부조제도의 주된 임무는 근로능력자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 제한자에게는 재교육을 시키는 것이었다(Frerich & Frey, 1996, p. 365).

1949년 동독 수립 이후에도 이러한 기초가 유지되었다.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첫 '5개년 계획'이 1951년부터 1955년에 걸쳐 시행되었다. 사회부조제도를 완전히 없애고 다른 사회복지제도로 대체하려는 초기의 생각은 실현되기 어려웠고, 대신 '생산적인' 사회부조제도를 운영하고자 하였다(Willing, 2011, p. 41). 그 결과 1951년 초 사회부조 수급자의 약

80% 정도는 '5년 계획' 기간동안 근로를 하게 되었다(Frerich & Frey, 1996, p. 367). 한편 공적 이전소득에 의존하는 사람들을 감소시켜 정부 재정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성지원, 보육지원 정책 등이 시도되었다. 1950년 9월 「모자보호와 여성의 권리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en Mutter-und Kinderschutz und die Rechte der Frau)을 도입하면서 아동보육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Willing, 2011, p. 40). 이 정책들은 자녀를 둔 여성들에게 자녀양육 대신 소득활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부조 수급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조치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동독에서 사회부조제도는 우선적으로 가장 빈곤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이 아닌 경제적 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또 다른 수단으로 여겨졌다는 점이다(Leutwein, 1954, Frerich & Frey, p. 367에서 재인용)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2차 5개년 계획은 1956년부터 1960년까지 진행되었다. 먼저 1956년에 전후 처음으로 법적 사회부조규정이 통합되었고 기본적인 내용이 새로 정비되었다(Frerich & Frey, 1996, p. 367). 지원 대상으로는 대부분 기존의 기준이 적용되었다. 지원 내용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정규지원과 부양대상자에 대한 지원 외에 임대료 보조금, 수발급여, 특별수발급여, 추가 생활용품 구입을 위한 특별보조금, 사회부조 수급자가 병원입원 시 용돈, 일회성 보조금 등이었고, 취업제한자에 대한 재교육은 포함되지 않았다(사회부조규정 제 2조). 사회부조제도는 이후 큰 변화 없이 1960년대까지 이어졌다.

1961년에는 베를린 장벽이 건설되었고, 동독 정부는 체제유지를 위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반체제적 인사를 '반사회적' 인물로 범죄시켰으며 제재 강도를 높이고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또한 노동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주민 통제를 강화했던 이 시기에 사회부조제도는 큰 의미를 가지는 정책이 아니었다. 60년대에는 사

회부조제도가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었고, 1968년이 되어서야 10년 만에 사회부조 급여를 소폭 상향조정하였다. 수급자 수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68년에는 7만 여명 정도만 사회부조제도에 의존하고 있었다(Willing, 2011, pp. 65-71).

나. 1970~1980년대

1971년 호네커(Erich Honecker)가 집권하고 동독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았다. 호네커 정권은 ‘발전된 사회주의적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국정목표로 잡고 사회정책을 확대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사회부조 급여가 큰 폭으로 인상되었다. 물론 사회부조 급여가 60년대에 거의 인상되지 않아 70년대 초반 시점에는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준이 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인상조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그 결과 1971년부터 1973년까지 해마다 사회부조 급여는 물론 임대료 보조, 자녀보조,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지원이 개선되었다. 1974년에는 정부에 의해 ‘사회부조규정(Sozialfürsorgeverordnung)’이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의 구속적인 규정이 다소 완화되기도 했다(Willing, 2011, pp. 76-78). 이후 1976년에 개정이 이루어졌고, 1979년에는 새로운 사회부조규정이 제정되었다.

1979년에 제정된 규정은 이후 부분적인 조정만 있었을 뿐 핵심적인 부분은 통일 직전까지 큰 변화 없이 존속되었다. 여기서도 여전히 사회부조 제도를 전체 사회체계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으로 여기는 기조가 유지되었다(Wienand, 1997, p. 12). 규정에 의하면, 근로소득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고,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으며, 생계부양자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수급권을 가진다(Priller, 1994, p. 104). 즉, 모든 사례마다 소득과 재산 수준은 물론 부양의무자(자녀, 부모, 조부모)의 지

불능력이 수급자 선정에 고려된다(Wienand, 1997, p. 14). 또한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을 경우 개인이 사회부조 지원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도록 요구되며, 기초지자체와 관할 노동청은 적절한 일자리 연결, 자녀 보육시설 제공, 재활 프로그램 제공 등을 지원한다(Wienand, 1997, p. 15).

1980년대에는 기존 사회부조규정이 유지되면서 5년마다 사회주의통일당(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 SED) 정당대회 주기에 맞춰 최저연금과 함께 사회부조 지원금액 또한 상향조정되었다.¹⁰⁾ 이외에도 1987년에 있었던 아동수당 지급액 인상 또한 사회부조 수급자들의 생활 사정에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러한 조치는 1980년대 사회부조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데 기여했다(Willing, 2011, pp. 84-87).

3. 통일 전 동서독 생활수준

통일 통일 후 동독 지역의 제도와 빈곤 및 불평등 변화를 살펴보기에 앞서, 통일 전 동독과 서독의 격차를 살펴보고자 한다.

1988년 기준 사회계층별 소득수준을 비교한 결과,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서독 근로자 대비 동독 근로자의 임금이 64% 수준이었고, 사무직 근로자는 47%, 도시 자영업자는 23%, 노령연금 생활자는 30%의 수준이었다(Geißler, 2013, p. 100). 이와 같이 서독과 동독의 소득 수준의 차이가 컸다.

10) 사회주의통일당 전당대회를 전후로 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정책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1960년대 중반 이후에는 사회주의통일당 전당대회뿐만 아니라 동독 수립 기념일에도 강력한 사회보장 개선책을 내놓았다. 대표적으로 동독수립 40주년 기념일에는 전례 없이 큰 폭으로 노령연금 인상이 결정되었는데(1989년 12월 1일부터 적용), 이는 동독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이루어진 개혁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Schmidt, 1999, pp. 15-16).

한편, Manz(1992)의 연구는 동서독 소매가와 생활수준 격차를 제시하였다. <표 3-2>와 같이, 1989년 기준 일부 공산품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동독 대비 서독의 가격이 생활물품의 가격이 높았다. 식료품의 경우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서독의 소매가가 동독의 1.2~6배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동독의 교통과 주거, 에너지 관련 가격은 다른 항목보다 서독 대비 더욱 낮은 수준을 보였다.

<표 3-2> 동서독 소매가 비교(1989년)

구분	기준	동독(Mark)	서독(DM)
돼지고기 커틀릿	kg	8	11
소고기	kg	14	40
일반 식당 정식	3 코스	7~9	15~20
구내식당/학생식당 점심	-	0.70	4.00
커피	잔	1.00	2.50
우유	l	0.68	1.18
양배추	kg	0.70	2.00
호밀빵	kg	0.52	2.40
버터	250g	2.40	2.00
설탕	kg	1.55	1.92
병맥주	0.5l	1.28	0.94
와인	0.7l	32	15
커피	kg	70	16
냉동고	대	2,090	1,023
냉장고	대	1,425	559
컬러TV	대	4,900	1,550
기차운임(2등석)	km	0.08	0.21
전차 및 버스 운임	회	0.20	2.07
전기(가구 기준)	m ³	0.08	0.42
도시가스	m ³	0.16	0.34
월세(신축, 2~3개 방, 중앙난방 기준)	-	75~90	450~550

주: 서독 지역 월세는 공공주택(sozial Wohnungsbau) 기준임.

자료: Manz, G. (1992). Armut in der "DDR"-Bevölkerung: Lebensstandard und Konsumtionsniveau vor und nach der Wende, p. 111 <표 26>.

다음으로 동서독 생활수준을 살펴보면, 1989년 기준 동독의 여성 경제 활동 참여가 두드러진 특징을 보였고 서독의 근로자 세후 가구소득이 동독의 1.5배 수준이었다. 상대적으로 주민 1인당 사회지출의 수준은 서독이 높았다.

〈표 3-3〉 동서독 생활수준 비교(1989년)

구분	동독	서독
여성 고용률(근로가능 연령)	91.2%	56.0%
여성 취업자 비중	48.6%	39.5%
실업자	-	2백만 명
평균 주당 근로시간	남성 42.0시간 여성 35.0시간	남성 40.4시간 여성 38.7시간
평균 휴가일	21일	31일
세후 가구소득(근로자 4인 가구)	2,465	3,800
1980년 대비 1990년 생계비	112.3	121.0
주민당 사회지출(1986년 기준)	8,422	9,918

자료: Manz, G. (1992). Armut in der "DDR"-Bevölkerung: Lebensstandard und Konsumtionsniveau vor und nach der Wende, p. 112 〈표 27〉.

제2절 통일 후 동독 지역의 빈곤

1. 통일 후 서독 제도로의 편입

준비단계 없이 짧은 기간 동안 흡수통일이라는 통일방식에 합의하고 실행에 옮긴 동서독은 양측 모두 구체적인 통합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로 통일을 맞았다. 통일을 전후하여 더 나은 생활 여건을 원하는 동독 인구의 서독 이주가 가속화됨에 따라 서독의 사회보장제도의 과부하가 우려되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때 동서독 정부는 서독의 사회시스템을 동독에 이식한다는 합의된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당면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적인 경과조

치를 시행하였는데, 사회부조제도에서도 이러한 시도가 나타났다.

가. 통일 전후 사회부조제도 적용¹¹⁾

동서독의 사회부조제도 통합은 통일 직전부터 동독 지역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특히 1990년 중반 국가협약의 체결과 함께 통일의 방향성이 구체화되면서 동독 정부는 통일을 위한 준비작업으로서 기존 동독의 제도를 서독을 모델로 하여 재구조화 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일련의 과정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3-4) 통일 전후 사회부조규정 변화

시점	제도	내용
1979.1.23	사회부조규정 개정	• 규정 내용이 1991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됨.(수발부조, 특별수발부조, 시각장애인부조, 수발자에 대한 사회보장)
1990.3.8	4차 사회부조 규정	• 동독 시절 이루어진 마지막 개정
1990.3.18	동독 지역의 첫 자유총선거	
1990.5.18	국가협약 체결	• 동독 지역에 서독의 사회부조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됨.
1990.6.21 (1990.7.1 발효)	동독 사회부조(Das Sozialhilfesetz der DDR)	• 해당 법의 발효로 기존에 유지되던 동독의 사회부조제도(1979년 제정)가 효력을 상실함. • 연방사회부조법(서독의 제도)을 모델로 하여 사회부조 시스템이 만들어짐. • 199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됨.
1990.10.3	통일협약 체결	• 1991년 1월 1일부터 동독의 모든 연방주와 동베를린에서 「연방사회부조법」(Bundessozialhilfesetz)을 적용하도록 결정됨.

자료: Willing, M. (2011). Armutsbekämpfung nach Plan: Die Sozialfürsorge in der SBZ/DDR 1945-1990(SD 49). Lambertus, pp. 88-100; Wienand, M. (1997). Sozialhilfe. In: Wienand, M. et al. (Eds.). Fürsorge (pp. 9-60).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pp. 22-54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11) 이 부분은 Willing(2011, pp. 88-100), Wienand(1997, pp. 22-54)의 내용과 확인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다.

1979년 개정을 통해 만들어진 동독의 사회부조규정은 큰 변화없이 통일 시점까지 유지되었다. 1989년 6월 8일 통일 직전 사회부조규정이 개정되었고, 이후 1990년 3월 8일에 발표된 4차 사회부조규정은 동독 시절 이루어진 마지막 개정이다. 4차 사회부조규정 1조에 따르면 사회부조 지원 청구권은 자신의 노동소득이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모든 국민으로, 사회보험에 대한 법적 청구권이 없거나 국가나 기업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없고, 부양의무자로부터 충분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사회부조 수급자의 자녀에 대해 연금보험제도에서 아동추가지원(Kinderzuschlag)이 이루어졌다.

이후 1990년 3월 18일 이루어진 동독 지역의 첫 자유 총선거(Volkskammerwahl)에서 점진적 통일 방식을 주장하던 사민당 대신 메지에르(Lothar de Maiziere)가 이끌던 보수국민연합이 집권하면서 통일 작업이 가속화되었다. 그 결과 1990년 5월 18일 동서독은 「화폐·경제·사회 통합에 관한 국가협약」(Staatsvertrag zu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을 체결하였고, 조약은 경제 및 사회 분야의 통합에 대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였다.¹²⁾ 이 협약에서 동독 지역에 서독의 사회부조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되었다(제24조). 국가협약에 따라 동독은 기존 사회부조제도 대신 서독의 연방사회부조법(Bundessozialhilfegesetz)에 다가선 사회부조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다. 그것은 동독의 사회부조법(Sozialhilfegesetz der DDR)이고 1990년 6월 21일에 공포되어, 1990년 7월 1일부터 적용되었다. 통합 전 경과조치로 도입된 이 법에 따라 사회부조 수급 조건이 크게 변화되었다. 이어 1990년 10월 3일 체결된 통

12) 국가 협약에서의 합의에 따라 독일의 화폐가 통합되고 동독은 서독의 경제체제로 편입되었으며, 그 결과 통일 후 동독 지역은 기존과는 다른 세금과 소득이전 체계를 적용받게 되었고 사회보장제도 역시 서독의 제도를 적용받게 되었다. 모든 현금수입은 1대1 비율로 태환되었고 식료품 보조금 등이 없어지게 되었다(Manz, 1992, p. 101).

일협약에서는 1991년 1월 1일부터 동독의 모든 연방주와 동베를린에서 「연방사회부조법」(Bundessozialhilfegesetz)을 적용하도록 결정되어, 경과조치로 마련된 동독의 사회부조법은 1990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었고, 1991년부터는 서독의 사회부조제도가 동독 지역에도 적용되었다. 이처럼 동서독 통일, 사회부조제도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기존 동독 사회를 유지하던 법과 제도는 전례없는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되었고, 이는 사회부조 수급자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졌다. 동독의 사회부조 수급자는 1989년 5535명에서 1990년 하반기에는 총 13만 4403명이 되었고, 1991년 말에는 1990년 말에 비해 수급자가 2.5배 증가하였다(Priller, 1994, p. 104).¹³⁾

통일과정에서 동독 지역을 위한 임시적인 사회부조제도를 마련한 것과 같이 동서독의 사회부조제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기로 결정되었지만, 동독 지역은 서독과 처음부터 완전히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었다. 대표적으로 통일협약(Einigungsvertrag) 과정에서 마련된 통일협약 방침 3b(Massgabe 3b)는 보호가 필요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보호기관(Betreuungseinrichtung)이 동독 지역에 아직 설치되지 않았다면, 서독 주민에게는 법적으로 보장된 입소 권리를 동독 주민에게는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Willing, 2008, p. 387). 이러한 방침은 헌법에 보장된 '이주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지만 정부에서는 경과조치라는 이유로 이를 관철시켰다. 1992년 개정 과

13) 1990년말 사회부조 수급자에서 60세 이상 노인 비율은 5%에 불과했다. 이는 연금수급자에게 사회추가수당(Sozialzuschlag)을 지급했기 때문이고, 이것이 연금생활자들에게 최소소득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었다. 대신 큰 증가폭을 보인 것은 아동, 청소년 수급자이다. 15세 미만 인구가 전체 수급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분의 1 정도가 되었다. 가구구성별로 살펴보면도 유자녀 가구나 한부모가구가 사회부조 수급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사회부조 수급의 가장 큰 이유는 '실업'인 것으로 나타났다(Priller, 1994, p. 104).

정에서 이러한 경과규정 삭제가 시도되었으나, 합의에 실패하였고, 최종적으로는 1996년 7월 사회부조법 개정을 통해 동독 주민에 대한 차별 조항이 없어지게 되었다(Willing, 2011, p. 92).

이러한 경과규정은 통일 과정에서 우려되는 급격한 비용증가를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사회부조 수급자 증가가 완만하게 나타났다. 통일 직후 구동독 지역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1991년 21만 7348명, 1992년 28만 9352명, 1993년 28만 7877명으로 증가하였다(Wienand, 1997, p. 47). 1989년 5천여 명 수준과 비교할 때 1993년 말에는 거의 50배에 이르는 29만 명이 사회부조를 받았다. 또한 특별부조 수급자도 1991년 16만 7372명, 1992년 24만 15명, 1993년 25만 4618명으로 증가하였다(Wienand, 1997, p. 47). 수급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동독 지역 사회부조 수급자는 서독의 사회부조 수급자보다 적은 규모였으며 이는 지출 억제를 위해 통일과정에서 동독 지역의 사회부조 수급권에 제한을 두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있다(Willing, 2011, p. 93).

통일 직후 구동독 지역의 사회부조 수급과 관련하여 사회부조가 자선이라는 편견, 부양가족 의무에 대한 우려, 사회시설과 서비스 부족, 사회부조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다(Ritter, 2007, pp. 346-347). 이외에 통일의 과도기 과정에서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한시적 조치들이 동독 사회부조제도의 부담을 경감하였다. 동독 지역에 적용된 고용촉진 제도, 조기퇴직연금, 사회특별급여 등이 완충적 역할을 하여 체제 통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었다. 사회부조제도의 필요성을 줄이는 완충작용을 한 사회보장제도를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3-5> 체제통합 과정에서 완충적 역할을 한 사회보장제도

구분	내용
고용촉진법(Arbeitsförderungsgesetz)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규정: 조업단축수당 • 근로자가 해고나 실업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조업단축수당을 받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규정: 고용창출조치 • 동독 지역의 지자체와 비영리기관의 고용주는 임금 전액 또는 일부를 노동청으로부터 지원받음. • 교육지원 • 능력있는 직업 후속세대 양성 차원에서 청년 구직지원자에게 한시적으로 필요한 경우 1993년까지 직업교육 지원함. 또한 실업 직업 보충교육과 전환교육이 응용과학대학, 또는 비슷한 교육기관에서 시행됨.
과도기 연금(Altersübergangsgel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 공급 억제 수단으로 동독의 노인과 실업우려가 있는 근로자에게 통일협약 제 30조 2항에 따라 제한된 기간 동안 조기퇴직 연금을 지급함.
연금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협약에서 사회보험시스템 통합에 대한 원칙이 마련됨. 통일협약에서는 1992년 연금개혁과 함께 도입된 사회법전 6권이 독일 전역 적용이 결정됨. 과도기 기간 동안만 서로 동서독에 서로 다른 연금 시스템을 적용함. • 1996년까지 지급된 사회특별급여(Sozialzuschlag) 또한 사회부조 수급자 수가 증가되지 않는데 기여함.
의료보험, 의료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1년 1월 1일부터 동독 지역에도 서독과 같은 의료보험제도가 적용됨. • 직장을 가진 기혼여성이나 한부모가족 부모의 경우에는 자녀 유병 시 동독 시절의 특별규정(유급휴가)을 한시적(1991년 6월 30일)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중증장애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 후 장애인 고용 비율을 채우지 못하는 고용주는 일률적으로 200마르크의 조정부담금(Ausgleichsabgabe)이 정해졌으나, 특별한 경우 동독에 한시적으로 예외 규정이 적용됨.
재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1년 1월 1일부터 장애인은 의료재활, 직업재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산재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보험, 연금보험, 재활법 등과 같이 1991년 1월 1일 산재보험과 연방부양법(Bundesversorgungsgesetz)이 도입됨.
가족·여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동독 연방주의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연방이 1991년 6월 30일까지 보육비용을 보조함. • 아동수당 관련해서도 자세한 경과규정을 만들었음. • 양육수당과 양육휴가 또한 제한없이 제공함(1990년 12월 31일 이후 출생 아동 기준)
아동·청소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지원법(KJHG)은 1991년 1월 1일부터 동독 지역에 적용됨.

자료: Wienand, M. (1997). Sozialhilfe. In: Wienand, M. et al. (Eds.), Fürsorge (pp. 9-60).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pp. 38-40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위의 사회보장제도 중 고용촉진법은 체제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량 실업, 해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 이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으며, 기존 일자리를 유지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는데, 위에서 소개한 조업단축수당, 고용창출 조치, 직업교육 기회 제공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실업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조기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과도기 연금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이외에 중증장애인법, 의료보험, 연금보험, 보육정책 분야에서 동독 지역에 대한 한시적 우대, 또는 의무 면제 등의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급격한 사회시스템 전환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였다. 대부분의 경과규정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연금 등의 일부 제도를 제외하고는 동서독이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되었다.

나. 민간사회복지협회의 역할

동독 지역에 서독의 사회부조제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는 소득자료 미비, 행정체제 미구축, 자원 부족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다(이정우, 2011, p. 68). 이는 통일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기존에 존재하던 시스템 대신 완전히 새로운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데서 기인한다. 동독 사회복지 체계 변화의 초기에는 공간과 인력의 부족으로 사회복지기관 설립에서 어려움을 겪었다(Ritter, 2007, p. 344). 동서독 정부는 이러한 작업에서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부터 발전해 온 민간사회복지협회의 조직과 인력을 적극 활용하였다.¹⁴⁾ 분단 상황에서 민간사회복지협회는 서독 지역의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동독에서는 인민의 생계를

14) 비영리 민간 사회복지협회는 대표적으로 카톨릭 복지협회 카리타스(Deutscher Caritasverband), 개신교 복지협회 디아코니(Diakonie Deutschland), 적십자(Deutsches Rotes Kreuz) 등이 있다.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주체로서 국가의 역할을 상정하였으므로, 민간단체가 사회복지 전달체계로 참여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통일 후에는 이러한 민간 비영리 사회복지조직의 활동이 동독 지역에서도 다시 활성화되어, 구동독 시절 사회복지 활동을 수행한 단체, 대중조직으로부터 형성된 복지단체, 구동독 시절 전임 조직이 없었던 복지단체의 방식으로 발달하였다(Olk & Pabst, 1996, p. 359).

새로운 동독 정부의 사회부조법(Sozialhilfegesetz der DDR)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당시 연방청소년·가족·여성·건강부의 의뢰로 ‘독일 민관복지 협회’(Deutscher Verein für öffentliche und private Fürsorge, 이하 독일협회)가 참여했다. 독일협회는 독일의 공공, 민간 사회복지 기관들의 협의체로서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부터 활동하다가 분단 이후 서독 지역에서 주로 활동해왔으며, 동독과 서독의 사회부조 통합 과정에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였다. 특히 동서독의 사회부조 제도 통합의 과도기적 단계에서부터 입법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관여한 결과, 통일 직전 수립된 동독 사회부조법에는 “사회서비스와 기관을 설립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회부조 전담기관은 교회나 이들의 사회적 기관인 비정부기구와 협회와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되었다(11조 2항) (Wienand, 1997, pp. 26-27).

또한 독일협회는 통일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복지행정 체계를 갖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새로운 제도를 동독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선 주정부,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에게 사회부조법과 기타 사회법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급선무였고, 독일협회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독일협회는 특히 3000여명의 동독 지역 주정부, 지자체 단위 담당자에게 사회부조제도 운영을 위한 행정 전반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다(Wienand, 1997, p. 32).

2. 통일 후 동독 지역의 빈곤 및 불평등

가. 통일과 동서독 격차

통일 직후 독일 정부는 동독 주민이 서독으로 대량 이주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잔류유인 정책으로 노동생산성보다 높은 고임금 정책을 실시하였으며(노용환, 2016, p. 9), 통일 후 동독 지역은 물가상승과 실업률 상승을 경험하였다. 특히 조기은퇴와 실업이 증가하였고, 통일 후 5년 동안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실직하거나 다른 직업을 찾아야했다(Hauser & Becker, 2000, p. 63; Struck, 2017, p. 13).

통일 후 동독과 서독은 경제지표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통일 직후 서독 지역 대비 동독 지역 가구별 평균 소득은 1990년 46% 수준이었으며 1993년 69.3%로 상승하였다(Krause, 1994, p. 14). 한편, 근로자 임금을 살펴보면, 1991년 동독 지역 근로자의 임금은 서독 지역 근로자의 50.7%로, 절반 수준이었으며, 1993년 68.2%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동서독 격차가 존재하였다(Winkler, 2018, p. 161). 통일 직후 동독의 소득은 위와 같이 서독의 절반 수준으로 동서독 격차가 심각하였고 이후 격차 수준은 완화되는 추이를 보였다. 한편, 통일 직후 동독의 물가 수준 또한 상승하였다. <표 3-6>과 같이 1993년 동서독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통일 후 구동독 지역의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였다. 통일 후 동독 지역의 물가 변화를 살펴보면, 공산품 가격은 하락한 반면, 식료품 및 기호식품, 서비스 가격은 모두 상승하였다(Manz, 1992, pp. 123-124). 통일 후 가구 소득 대비 임대료 지불 비율은 동독 지역의 경우 1991년 3.6%에서 1995년 16.1%까지 상승하여 서독의 수준(1995년 18.4%)에 가까운 수치로 상승하였다(Pollack, Pickel & Jacobs, 1998, p. 18). 즉, 1절에서

제시한 통일 전 동서독 생활물가의 차이는 통일 후 동독의 생활물가가 서독의 수준으로 수렴하는 양상을 보였다.

(표 3-6) 통일 후 동서독 경제지표(1993년)

구분	서독	동독	전체
개인가구 생활물가지수 (1991년=100)	107.7	125.4	109.8
노동소득분배율 (국민소득 대비 비율)	71.8	93.7	74.2
자본소득분배율	28.2	6.3	25.8
실업률	8.2	15.8	9.8
가구순소득 구성			
노동소득	71.9	71.7	71.9
기타 시장소득	26.7	12.7	24.8
공적 소득이전	25.1	36.3	26.7
세금	14.5	9.1	13.7
사회보장기여금	10.9	13.0	11.2

자료: Hauser, R., & Becker, I. (2000). Der Einfluss des Steuer- und Transfersystems auf die Einkommensverteilung in den neuen und alten Bundesländern. p.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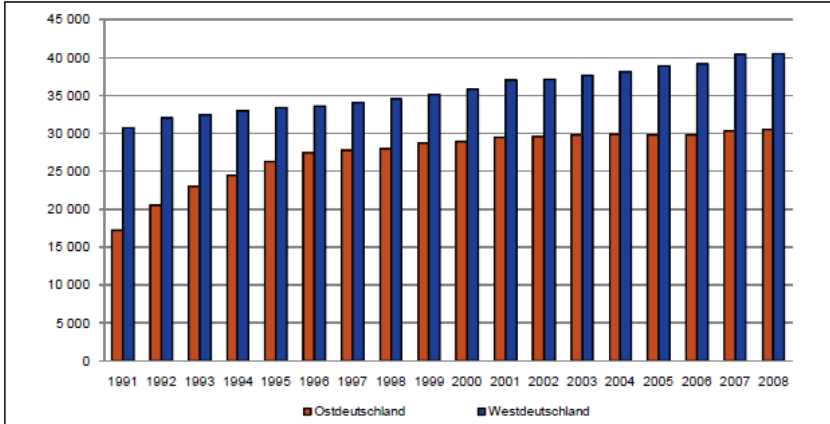
동독 지역은 서독의 경제 및 사회체계에 통합하고 동서독 격차를 완화하는 한편, 사회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실업 등의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 통일 후 동독 지역을 재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 1990년부터 1994년까지 독일 통일기금(Fonds Deutsche Einheit)은 동독 지역 연방주 재건을 목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그 규모는 총 820억 유로에 달하였다. 1991년 통일 비용을 마련하고 동독 지역의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일연대세(Solidaritätszuschlag)가 도입되어 소득세와 법인세 형태로 세금을 부과하였다. 제1차 연대협약(Solidarpakt I)에 따라 동독 지역은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연방정부의 재정을 지원받았고, 이후 2005년부터 제2차 연대협약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졌다(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2020.05.12). 위 지원 외에도 서독 지역으로부터 동독 지역으로 사회보험과 인프라 투자 등을 포함한 이전이 이루어졌다. 통일 직후 사회보장예산의 수준을 살펴보면, 서독 지역의 국내총생산(Bruttoinlandsprodukt) 대비 사회보장(Sozialleistung) 비율은 1991년 26.2%, 1992년 26.9%, 1993년 27.8% 수준이었던 반면, 동독 지역의 경우 1991년 47.8%, 1992년 54.3%, 1993년 48.7%로 상대적으로 사회보장의 비율이 높았다(Ritter, 2007, pp. 130-131). 위 <표 3-6>과 같이 1993년 기준으로 서독 지역 대비 동독 지역의 공적 소득이전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통일 후 동독 지역의 생활수준은 꾸준히 개선된 것으로 보고되었다(Bulmahn, 2000, p. 249). 동독 지역의 근로자 임금 수준은 꾸준히 상승하여 1994년 70%를 넘긴 후 70%대를 유지하다가 2015년 80%를 넘기 시작하였다(Struck, 2017, p. 15; Winkler, 2018, p. 161). 이와 같이 동서독 소득 격차는 감소하였으나 동독 지역과 서독 지역 간에는 여전히 임금과 고용의 불평등이 존재한다. 2016년 동독 지역의 세전소득 평균은 3515유로로, 서독 지역의 세전소득(4555유로)의 77% 수준이었다(Statistisches Bundesamt & Wissenschaftszentrum Berlin für Sozialforschung, 2018, p. 197). 또한 통일 이후 동독 지역 실업률은 1994년 14.8%로 1997년 17.7%로 상승하여 2006년까지 17~18%의 높은 실업률을 보였다. 반면 서독 지역 실업률은 1994년 8.1% 수준이었고 같은 기간 7~10% 수준이었다(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2020.08.18).

[그림 3-1] 동서독 연간 소득 추이

(단위: 유로)



주: 동독은 베를린 제외하고 서독은 베를린 포함함.

자료: Ulrich, B., Herbert, S. B., Huber G., Jutta G., Gerhard H., Cornelia L., ... Uulz S. (2010). Ostdeutschlands Transformation seit 1990 im Spiegel wirtschaftlicher und sozialer Indikatoren. 2. aktualisierte und verbesserte Auflage, IWH Sonderheft, No. 1/2009. Leibniz-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Halle (IWH), Halle (Saale), p. 21.

나. 통일 후 동독 지역의 빈곤

통일 후 동독 지역의 빈곤은 동독 시절부터 존재하였던 불평등과 전환기 정치·경제·사회적 격변의 영향을 모두 받았다(Haupt, 1998, p. 49). 상대적으로 동독 지역 시민들의 주택 소유나 예비자금 수준이 낮았고 통일 후 동독 지역의 실업 증가는 빈곤의 위험을 증가시켰다(Pollack et al., 1998, p. 18). 실업, 한부모, 거주지 상실(노숙인 증가),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실업 증가와 사회적 배제 및 고립), 충분하지 못한 노후보장 등으로 인한 빈곤위험이 존재하였다(Haupt, 1998, p. 50).

통일 후 동독 지역의 집단별 변화를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노인의 경우 생활수준이 향상된 측면이 있다. 동독 지역에서 60대 이상 노인의 소득이

평균 소득의 75% 이하인 경우는 1990년 46.3% 수준에서 1994년 11.9%로 감소하였다(Ritter, 2007, p. 136). 반면, 한부모가족 여성가장의 경우 통일 후 실직 위험이 커지고 동독의 주거 분배의 우선권이나 돌봄을 위한 휴직과 같은 제도를 지원받지 못하게 되었다(Ritter, 2007, p. 136). 한부모가족은 빈곤위험이 높았고 보육서비스 시간 단축의 영향을 받았다(Haupt, 1998, p. 53). 동독 지역 여성의 경우 통일 후 여성 비율이 높았던 산업과 직업군에서 상대적으로 실업이 많이 발생하였고 남성 대비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Zander, 1998, pp. 80-81). 또한 구 동독의 출산장려정책의 지원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면서 가임기 여성이나 유자녀 여성은 실직의 위험과 돌봄 비용의 상승을 경험하였다(Ritter, 2007, p. 137).

통일 직후 동독 지역의 빈곤율은 28.1%로 서독 지역 7.1%에 비해 매우 높았으며, 이후 20여 년 동안 동독 지역의 빈곤율 수준은 완화되는 추세를 보였다(Goebel, Habich & Krause, 2009, p. 129). 이는 통일 후 상대적으로 동독 지역의 소득 수준이 낮았기 때문이며, 동독 지역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빈곤율 수준 또한 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표 3-7〉 통일 후 동서독 빈곤율 추이

(단위: %)

구분	1990	1992	1997	2002	2007
전체	11.7	10.5	11.0	12.7	13.6
동독	28.1	21.2	14.3	16.3	20.1
서독	7.1	7.7	10.2	11.8	12.2

자료: Goebel, J., Habich, R., & Krause, P. (2009). Zur Angleichung von Einkommen und Lebensqualität im vereinigten Deutschland, Vierteljahrshefte zur Wirtschaftsforschung, p. 129 〈표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서독 격차 완화를 위한 공적 지원이 이루어졌다. <표 3-8>과 같이 1995년 기준 공적 소득이전을 통한 빈곤위험 감소 수준은 서독 33.6%, 동독 51.5%로 동독 지역에서 공적 소득이전으로 인한 빈곤 감소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후 동독 지역의 공적 소득이전으로 인한 빈곤위험 감소는 2014년 29.6%까지 감소한 반면, 서독 지역의 빈곤위험 감소 수준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Bundeskabinett, 2017, p. 557). 이와 같이 통일 직후 공적 지원이 동독 지역 빈곤 경감에 영향을 미쳤고 이후 공적 지원의 경감 효과가 완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8> 공적 이전을 통한 빈곤 위험 감소(공적 이전이 없을 경우의 가정과 비교)

(단위: %)

구분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동독	51.5	49.8	36.1	29.4	30.1	30.2	31.0	29.6
서독	33.6	37.5	37.7	37.4	37.0	35.0	35.1	33.3

주: 독일 Socio-Economic Panel을 바탕으로 함.

자료: Bundeskabinett. (2017). Lebenslagen in Deutschland - Der Fünfte Armuts- und Reichtumsbericht der Bundesregierung, p. 557.

통일 후 30년이 지난 지금도 상대적으로 동독 지역의 퇴직자와 연금수급자 비율이 높은 수준이고 실업자의 비율도 여전히 높아서 복지혜택에 의존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Struck, 2017, p. 15). <표 3-9>와 같이 동독 지역과 서독 지역의 빈곤율 격차는 줄었으나 여전히 동독 지역의 빈곤 수준이 높고 구직자에 대한 기초보장(SGB II)의 수급 수준 또한 동독 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여전히 동독 지역의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수준이 빈곤율의 동서독 격차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표 3-9〉 2008년 이후 동서독 빈곤율과 구직자에 대한 기초보장(SGB II) 수급률

(단위: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빈곤율	14.4	14.6	14.5	15.0	15.0	15.5	15.4	15.7	15.7	15.8	15.5
	SGB II 수급률	10.3	10.1	9.9	9.5	9.3	9.4	9.3	9.3	9.2	9.3	8.9
동독	빈곤율	19.5	19.5	19.0	19.4	19.6	19.8	19.2	19.7	18.4	17.8	17.5
	SGB II 수급률	17.7	16.9	16.3	15.6	15.3	15.1	14.7	14.1	13.4	13.0	12.0
서독	빈곤율	13.1	13.3	13.3	13.8	13.9	14.4	14.5	14.7	15.0	15.3	15.0
	SGB II 수급률	8.5	8.4	8.4	8.0	7.9	8.0	8.1	8.1	8.2	8.5	8.2

주: 동독은 베를린 포함함.

자료: Pieper, J. Schneider U., Schroeder W. & Stilling G. (2019). 30 Jahre Mauerfall Ein viergeteiltes Deutschland: Der Paritatische Armutsbericht 2019, p.15.

2004년 4차 하르츠 개혁 이후 독일의 사회부조제도는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구직자에 대한 기초보장(SGB II), 근로능력이 없는 대상에 대한 사회부조(SGB XII)로 근로능력을 기준으로 관리하기 시작하였다(우승명, 2019, p. 24). 근로능력이 없는 대상에 대한 사회부조(SGB XII)에는 생계급여, 고령 및 취업불능에 대한 기초보장, 의료지원, 수발부조, 특별부조가 포함된다. 아래 〈표 3-10〉과 같이 생계급여(Hilfe zum Lebensunterhalt) 수급자는 1995년에서 2000년까지 동독 지역에서 증가하였으며, 하르츠 개혁 이후 2015년까지 동서독 지역 모두 수급자 규모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통일 후 하르츠 개혁 전까지는 동독의 생계급여 수급자 비율이 서독 지역 대비 낮은 수준이었으나, 이후에는 생계급여 수급자 비율의 동서독 격차가 감소하였다.

74 남북 간 사회격차 완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복지체제 구축 방안 연구: 북한 주민의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표 3-10) 동서독 생계급여(Hilfe zum Lebensunterhalt) 수급자 추이

구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9년
수급자 (명)	서독	2,135,900	2,068,401	210,711	249,207	310,056	277,777
	동독	246,212	356,462	51,386	51,632	64,484	47,807
수급자 비율(%)	서독	3.33	3.18	0.32	0.38	0.47	0.41
	동독	1.74	2.57	0.39	0.40	0.51	0.38

주: 베를린을 제외한 15개 주 연도별 연말 기준 자료이고 2005년 수급자에서 브레멘 수치가 제외됨
 자료: Statistisches Bundesamt(DESTATIS). (n.d.a). Empfänger von Hilfe zum Lebensunterhalt:
 Bundesländer, Stichtag, Ort der Leistungserbringung, Geschlecht, Altersgruppen:
 Statistisches Bundesamt(DESTATIS). (n.d.b). Bevölkerung: Bundesländer, Stichtag,
 Geschlecht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

한편, 2005년 이후 동서독 지역 사회부조(SGB XII) 세출 현황을 생계
 급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동서독 지역 모두 세출 수준이 증가하였다.

(표 3-11) 동서독 사회부조(SGB XII) 급여별 세출(Bruttoaussgabe) 현황

(단위: 천유로)

구분	2005년		2019년	
	서독	동독	서독	동독
생계급여(Hilfe zum Lebensunterhalt)	957,748	205,397	1,393,155	288,214
고령 및 취업불능에 대한 기초보장(Grundsicherung im Alter und bei Erwerbsminderung)	2,406,378	457,976	-	-
의료지원(Hilfen zur Gesundheit)	910,212	184,876	680,936	112,772
수발부조(Hilfe zur Pflege)	2,682,080	469,532	3,667,393	663,134
특별부조(Hilfe z. Üb.bes.soz.Schwierigk.u.in and.Lebenslagen)	328,620	57,572	520,116	92,543

자료: Statistisches Bundesamt(DESTATIS). (n.d.c). Bruttoausgaben, Einnahmen, Nettoausgaben der Sozialhilfe: Früheres Bundesgebiet / Neue Länder, Jahre, Sozialhilfearten.
<https://www-genesis.destatis.de/genesis//online?operation=table&code=22111-0012&bypass=true&levelindex=1&levelid=1603108240986#abreadcrumb>에서
 2020. 10. 19. 인출.

다. 통일 후 동독 지역의 불평등

1993년 기준 동서독 소득 불평등을 살펴본 결과, <표 3-12>와 같이 세전 소득 기준 불평등 지수는 동독이 서독 대비 소폭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세후 소득의 경우 서독 대비 동독의 불평등 지수가 낮았다. 이는 동독의 소득 불평등 수준이 세금과 소득이전 체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Goebel 외(2009, p. 129)의 연구에서는 서독 지역의 지니계수가 1990년 0.243에서 2007년 0.272 수준으로 상승하였고 동독 지역의 경우에도 1990년 0.182에서 2007년 0.241까지 높아졌다. 동서독 모두 불평등 지수가 증가하였으나 동독 지역의 지니계수가 여전히 서독 지역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통일 후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동독 지역의 불평등 지수는 높아졌으나 서독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3-12> 통일 후 동서독 불평등 지수(1993년)

구분	세전 소득 기준		세후 소득 기준	
	서독	동독	서독	동독
지니계수	0.440	0.462	0.269	0.199
엡킨슨 지수($\epsilon=1$)	0.409	0.454	0.112	0.063

주: 세전/세후 소득은 균등화 소득 기준

자료: Hauser, R., & Becker, I. (2000). Der Einfluss des Steuer- und Transfersystems auf die Einkommensverteilung in den neuen und alten Bundesländern. pp. 71, 73의 표 2~3을 재구성

다음으로 하르츠 개혁 이후 연령별 생계급여 수급자 추이를 살펴보았다. 생계급여 수급자 중 아동의 비중을 살펴보면, 2005년에는 동서독이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10년 이후에는 서독 대비 동독 지역의 아동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생계급여 수급자 중 노인의 비중은 동독 대비 서

독 지역이 높았다. 동독 지역의 노인인구 비중이 2016년 기준 25%로 서독 지역(21%)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Statistisches Bundesamt & Wissenschaftszentrum Berlin für Sozialforschung, 2018, p. 1), 수급자 중 노인인구 비중의 동서독 격차는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동독 지역 노인의 경우 통일 과정에서 조기퇴직 등의 연금제도 적용 방식에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표 3-13〉 동서독 생계급여(Hilfe zum Lebensunterhalt) 수급자 중 아동과 노인 비중
(단위: %)

구분		2005년	2010년	2015년	2019년
18세 미만	서독	8.8%	7.6%	6.9%	7.4%
	동독	8.4%	9.9%	10.0%	10.9%
65세 이상	서독	29.9%	22.8%	24.5%	24.3%
	동독	24.4%	17.9%	17.6%	16.9%

주: 베를린을 제외한 15개 주 연도별 연말 기준 자료이고 2005년 수급자에서 브레멘 수치가 제외됨
 자료: Statistisches Bundesamt(DESTATIS). (n.d.a). Empfänger von Hilfe zum Lebensunterhalt: Bundesländer, Stichtag, Ort der Leistungserbringung, Geschlecht, Altersgruppen. <https://www-genesis.destatis.de/genesis/online#astructure>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



제4장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빈곤과 불평등: 동남아시아 국가들

제1절 동남아시아 국가에서의 빈곤

제2절 태국의 사례

제3절 필리핀의 사례

제 4 장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빈곤과 불평등: 동남아시아 국가들

본 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저개발국인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빈곤과 불평등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개발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유추하고자 한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개발에 대한 논의는 많지만 빈곤과 불평등에 관한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 상태이다.

본 장에서는 동남아시아 빈곤 일반을 탐색하고, 이어서 태국에서 활용한 빈곤 측정 방법과 나타나는 빈곤의 특징, 필리핀에서의 빈곤·불평등 측정과 최근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빈곤 특징의 변화와 이들 국가의 대응을 간략히 고찰한다.

특히 저개발 국가에서 실제로 사용했던 빈곤 측정방법은, 현재 한국에서 사용하는 상대적 빈곤측정과 다르며 2010년대 중반까지 사용했던 마켓바스켓 방식과도 다른, 저개발국가 상황에 맞는 고유의 방법이기 때문에 추후 북한의 빈곤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제1절 동남아시아 국가에서의 빈곤

1. 아시아 경제성장과 빈곤의 변화

아시아 각국은 1960년대 중반 이후 성공적인 경제성장과 급속한 빈곤 감소를 달성했다(World Bank, 1993).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급격히 발전했고 ‘네 마리 용’으로 알려진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놀라운 경제성장과 함께 분배형평성 개선을 실

현했다. 또한 중국, 말레이시아·태국·인도네시아 등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 그리고 최근에는 인도가 그 뒤를 이어 1990년대까지 국제사회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반면에 필리핀과 다수의 남아시아 국가를 포함하는 그 외 아시아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

국제기구들은 아시아의 빈곤 퇴치 성과를 보여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 2014)은 빈곤선인 3.20달러 미만 빈곤율이 1965년 73.57%에서 2014년 9.69%로 감소한 것으로 추산했다. 빈곤선을 1.90달러로 설정할 경우 빈곤율은 1965년 48.52%, 2014년 2.58%로 환산된다(Wan & Wang, 2018, p. 1에서 재인용). 아시아 내에서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등 지역별로 빈곤 추세에 일부 차이가 나타난다.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1.90달러 미만의 절대빈곤 상태에 머물러 있었으나 1980년대 초까지 이러한 빈곤을 거의 퇴치했다. 1965년 당시 동남아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는 극빈 퇴치에 성공했다. 반면에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을 포함하는 남아시아는 2014년 기준으로 아시아 전체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이 되었다. 1960년대 중반 이후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는 빈곤이 전체적으로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남아시아에서는 오히려 빈곤이 증가했다.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초까지 아시아 지역에 사회경제적 불안과 전쟁이 발생하면서 빈곤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Wan & Wang, 2018).

아시아가 빈곤 감소 측면에서 이러한 성과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빈곤 종식을 선언하는 것이 시기상조인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일부 아시아 국가는 빈곤 감소를 달성하지 못했다.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그리고 심지어 동아시아에서도 북한 등 여전히 빈곤에 매우 취약

한 국가들이 존재한다. 둘째, 단지 소득 빈곤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빈곤은 다차원적인 문제일 수 있으며, 다차원적 빈곤 해결에 대한 성과는 더욱 불균형하게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일부 국가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활수준이 상승하면서 빈곤선이 상향 조정되었다. 이렇게 상향 조정된 빈곤선을 기준으로 보면 빈곤은 아직 퇴치되지 않았다(Klasen, 2016). 또한 지역 내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빈곤 퇴치의 지속적인 진전이 가능할지에 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빈곤

가.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의 빈곤측정

어느 정도의 빈곤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빈곤이 얼마나 감소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빈곤을 정의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빈곤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빈곤선부터 설정해야 한다. 특정한 수준으로 빈곤선을 설정하는 작업에는 일정 정도의 임의성이 존재할 수 있지만, 빈곤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설정된 기준 이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를 산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빈곤선에는 절대적 빈곤선과 상대적 빈곤선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절대적 빈곤선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기본적 소비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정의된다. 가장 중요한 기본적 욕구는 정상적 활동을 위한 음식 에너지 섭취에 필요한 식품 지출이다. 정상적인 활동 수준은 ‘하루 1인당 칼로리 필요량 2,100칼로리’와 같이 칼로리 필요량을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다(Ravallion, 1994). 그러나 동일한 칼로리 섭취량이라 하더라도 아주 다양한 식품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칼로리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

방, 그리고 비타민 등의 미량 영양소를 포함하는 충분한 영양소를 나타내는 대리 개념(proxy)에 불과하다. 따라서 칼로리 필요량은 절대치로 설정할 수 있지만, 해당 수치를 달성하기 위해 선택되는 식품의 구성과 품질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선택에 해당한다(Pradhan, Suryahadi, Sumarto & Prichett, 2000, p. 4).

이러한 ‘기본욕구 비용법(cost of basic needs method)’은 기준 인구가 소비하는 식품 바스켓(basket)을 기반으로 식품 구성 및 가격을 선택한다. 먼저 수입 수준이 빈곤선과 가까운 가구 집단을 식별하고, 이들의 지출 패턴을 기반으로 상품 및 서비스 바스켓에 대한 지출 비중을 산출한다. 해당 바스켓의 식품 지출을 칼로리로 환산하고, 이 수치가 각 가구에 필요한 칼로리 표준에 도달하도록 일정한 비율로 바스켓을 확대한다. 이렇게 조정된 바스켓의 비용을 토대로 빈곤선을 산출한다(Ravallion, 1994; Klasen, 2016, p. 9에서 재인용). 비식료품을 기본 욕구에 포함시켜 이 측정법을 강화할 수 있다. 절대적 빈곤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스켓에 포함된 상품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에만 업데이트된다(Klasen, 2016, p. 9).

절대적 빈곤선 중에는 세계은행이 설정한 빈곤선이 있다. 세계은행은 1990년부터 국제 빈곤선을 설정해 왔다(World Bank, 1990; Ravallion, Datt & Walle, 1991). 원래 국제 빈곤선 기준은 하루 1달러였다. ‘하루 1달러’ 빈곤선은 22개 최빈국의 국가별 빈곤선 표본을 기반으로 설정되었다. 이 빈곤선 기준은 1990년에는 1985년 PPP 환산 달러 기준으로 하루 1.02달러로, 2000년에는 1993년 PPP 환산 달러 기준 하루 1.08달러로 상향되었다(World Bank, 2000a; Chen & Ravallion, 2001). 또한 2008년에는 2005년 PPP 환산 달러 기준 1.25달러로 조정되었다(Ravallion, Chen & Sangraula, 2009).

과거 빈곤선이 1980년대 자료에서 도출한 개발도상국의 국가별 빈곤선을 토대로 한 반면, 새로운 빈곤선은 1990년대 자료에서 도출한 국가별 빈곤선을 토대로 했다. 2011년 세계은행이 새로 설정한 빈곤선은 인플레이션만을 반영하여 1.90달러로 조정됐다. 이러한 국제 빈곤선은 세계 빈곤 퇴치의 진전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척도로 기능한다(World Bank, 2018).

칼로리 필요량 섭취 비용을 근거로 절대적 빈곤선을 설정할 경우 몇 가지 약점이 있다. 첫째, 식품 바스켓의 질이 지출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빈곤선이 기준 인구의 임의적 선택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또한 빈곤의 개념을 단순히 식품 소비 수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교육, 건강, 기타 필수품에 대한 접근성 등 또 다른 관점의 생활수준을 포함시켜야 한다(Pradhan et al., 2000). 그러나 빈곤의 관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상대적 빈곤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적 관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 빈곤 개념에 따르면 빈곤선은 사회의 생활수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방법은 소득 분포의 평균값 또는 중위값에 대한 특정 비중을 빈곤선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상대적 빈곤선은 국가 중위소득의 50%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빈곤선은 ‘매우 상대적인(strongly relative)’ 빈곤선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대적 빈곤 개념은 소득분포 하위 50%에 존재하는 불평등의 양을 나타낸다. 이러한 개념은 경제성장에 따라 실질소득 관점에서 빈곤의 의미가 변화한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빈곤선을 평균소득 증가에 비례하여 상향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다소 상대적인 빈곤(weakly relative poverty)’이라는 새로운 개념은 절대적 빈곤과 (매우) 상대적인 빈곤이라는 양 극단 사이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다. 이 개념은 평균값에 대한 빈곤선의 탄력성이 최빈국의 0에서

최부국에서는 1로 증가한다는 국가 간 비교 결과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보다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Ravallion, 2016). 이러한 다소 상대적인 빈곤선이 국제 빈곤척도로 제안되었으며, 따라서 국가별 빈곤선과 유사한 빈곤선을 설정하기 위해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 한편 미국에서는 이와 유사한 상대적 빈곤선이 이미 국가 차원에서 제안된 바 있다(Citro & Michael, 1995). 이러한 접근법은 개발도상국의 상황에 맞도록 손쉽게 조정 가능하다. 국가 차원에서 다소 상대적인 빈곤선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빈곤선을 조정해야 하며, 이는 빈곤선 인구 내에서 나타나는 지출 패턴의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가능하다(Sen, 1983).

세계은행은 널리 알려진 빈곤선을 개발도상국에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러한 빈곤선은 국제 척도이며, 해당 빈곤선이 절대적이든 상대적이든 각 국가 차원의 빈곤 평가와의 관련성은 제한적이다. 국가 차원의 빈곤선과 국제 차원의 빈곤선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사실 국제 빈곤선은 너무 낮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빠르게 성장하는 일부 아시아 국가에 적용하기 어렵다(Klasen, 2016). 이러한 이유로 많은 국가가 국가별 빈곤선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와 소득 모두 빈곤측정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많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소비를 기반으로 하는 공식 빈곤 기준을 도입한 반면,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을 포함한 또 다른 동남아 국가들은 소득을 기반으로 빈곤을 측정한다(World Bank, 2018).

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빈곤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는 경제성장과 깊은 관련이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성장과 빈곤 감소를 동시에 성공적으로 달성한 모델로 언급

되어 왔다. 다음의 <표 4-1>은 1960~2015년 동아시아 각국의 경제성장률을 나타낸다. 비교를 위해 라틴아메리카·카리브 지역의 평균 성장률도 함께 제시되어 있다. 1990년대까지 일본, 홍콩, 한국, 싱가포르, 대만 등 일부 동아시아 국가가 높은 성장률을 지속한 점이 가장 두드러진다. 일본은 1990년대에 장기 불황으로 접어들었지만 그 외 대부분의 국가는 2000년대에도 성장을 지속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은 앞서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들을 바짝 추격했다. 필리핀은 특히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성장률이 감소했지만 2000년대부터는 성장률이 확대됐다. 중국은 1980년대부터, 그리고 베트남은 1990년대부터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상위권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는 라틴아메리카·카리브 지역 국가 대비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표 4-1> 1960~2015년 동아시아 경제성장률

(단위: %)

구분	1960~'69	1970~'79	1980~'89	1990~'99	2000~'07	2008~'15
일본	10.4	4.1	4.4	1.5	1.5	0.2
홍콩	4.5	9.0	7.4	3.6	5.3	2.6
한국	8.3	10.5	8.6	6.7	5.4	3.1
싱가포르	8.9	9.5	7.8	7.3	6.5	4.4
대만	9.9	10.9	8.5	6.6	4.9	2.8
중국	3.0	7.4	9.8	10.0	10.5	8.6
인도네시아	3.7	7.8	6.4	4.8	5.1	5.6
말레이시아	6.5	7.7	5.9	7.2	5.6	4.6
필리핀	5.1	5.8	2.0	2.8	4.9	5.3
태국	7.8	7.5	7.3	5.2	5.3	2.9
베트남	n.a.	n.a.	4.5	7.4	6.9	5.9
LAC	6.1	6.9	2.5	2.7	3.5	2.9

주: LAC=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지역

자료: World Bank. (2018). *Riding the Wave: An East Asian Miracle for the 21st Century*. World Bank East Asia and Pacific Regional Report,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p.115, TABLE C.1.

동아시아 지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비농업 부문에서 비숙련 노동력을 위한 일자리가 창출됐다. 빈곤 인구는 과거보다 높은 임금을 받으며 일자리 기회 확대에 따른 이점을 누렸다. 1980년대 초에서 2012년까지 동아시아 개발도상국 전체 고용에서 산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5%에서 20%로 증가한 반면, 서비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5%에서 약 45%로 급증했다. 정부는 시장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자원을 할당하며, 개입을 통해 수출 주도 경제발전을 촉진했다. 정부는 지대를 추구하는 (rent-seeking) 민간 이익집단의 간섭으로부터 대체로 자유로운 유능한 공무원 조직을 구축했다. 또한 농촌의 소득 확대를 위해 농업 부문을 지원했다. 일본, 한국, 대만 등 대규모 농지 개혁을 실시한 국가들은 특히 빈곤층에 중점을 두고 농업에 대한 대대적인 공공 지원을 제공했다 (World Bank, 2018).

반면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성장 및 빈곤 경험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일부 국가들은 1960년대에 1인당 소득이 매우 낮았으며 이후 매우 완만한 경제성장을 기록했다. 캄보디아와 버마가 이러한 국가의 예이며, 1980년대 후반부터 경제성장이 가속화된 라오스와 베트남 역시 이 범주에 속한다. 브루나이와 필리핀을 포함하는 또 다른 국가들은 1960년대에는 1인당 GDP가 비교적 높았지만 그 이후 매우 더딘 성장세를 보였다. 또 다른 국가들은 1960년대에는 1인당 GDP가 낮았지만 그 이후 급속한 성장을 달성했다. 태국과 인도네시아가 여기에 속한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또 다른 범주를 구성하는데, 이 범주에 속하는 국가들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1인당 GDP로 시작하여 그 이후에도 빠른 성장을 지속한 고성국 국가들이다(Booth, 1999).

이러한 성장 패턴은 세계은행의 빈곤선 기준 1.90달러 미만에 해당하는 극빈 퇴치 성과에 여실히 반영되어 있다. 대다수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극빈

은 더 이상 도전과제가 아니다. 싱가포르는 1970년대 중반에 극빈을 사실상 퇴치했고, 1990년대 말에는 말레이시아가 그 뒤를 이었다. 태국 역시 2000년대에 극빈 퇴치에 성공했다. 비교를 위해 언급하자면 한국은 1980년대 초에 극빈을 퇴치했다(Wan & Wang, 2018).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국가들은 극빈 인구 비율을 한 자릿수로 줄이는 데 성공했지만 2010년대까지 어려움을 겪었다. 동남아 국가에서는 특히 소수민족이나 지리적으로 외딴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등 취약계층에 여전히 극빈 인구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는 소수민족 및/또는 외딴 산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극빈층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경제성장만으로는 지역 내에서 빈곤을 퇴치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World Bank, 2018).

특히 한국 등 동북아 국가와 비교하여 동남아 국가들은 빈곤의 역사적 추세와 관련된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을 보인다. 식민지배가 동남아에 남긴 중요한 유산 한 가지는 도농·지역·민족 간의 상당한 소득 불평등이었다. 이러한 불평등은 독립 직후에도 지속되었다. 농촌 지역의 토지 분배는 불평등하게 이루어졌다. 필리핀은 농지 개혁에 실패하여,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과 토지를 보유한 엘리트층의 정치적 지배를 초래했다. 1955년 농지개혁법은 전국 농지의 약 2%만을 재분배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농지개혁이 시행된 첫 6년간 정부가 확보한 농지는 전체의 0.4%도 채 되지 않았다(You, 2014).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는 경작지 확장을 통해 증가하는 농촌 인구를 수용했다. 그러나 토지의 질이 낮고 기본 기반시설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다(Booth, 1999).

동남아 국가 대부분은 한국이나 대만보다 경제 불평등이 더 심각한 상황에서 경제발전을 시작했다. 이러한 불균형은 이후 산업화 기간에도 지속되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광업 및 제조업이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1960년대 후반부터 주(州) 간에 큰 폭의 GDP 격차가 지속됐다. 태국에서는 도농·

지역 간 큰 소득 격차가 상존했으며,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한 1980년대에도 이러한 격차가 좁혀졌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도 경제성장과 더불어 소득 격차가 계속됐다. 지속적인 경제적 불균형에 기여하는 또 다른 요인은 제조업 부문의 더딘 일자리 성장이다. 동남아의 농업 부문 고용 비중은 동북아시아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에서는 비농업 부문 중 서비스의 고용 비중이 제조업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Booth, 1999).

동남아 국가에서 교육의 발전이 동북아 대비 더디게 진행된 점 역시 이러한 상황에 일조했다. 1960년대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의 학력 수준은 대만이나 한국보다 낮았다. 식민지배가 동남아 지역에 남긴 교육 유산은 극도로 빈약했다. 충분한 교육 시설이 제공되지 못했으며, 제공된 교육 시설은 통상적으로 인종과 소득에 따라 할당되었다. 이후 교육이 큰 폭으로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태국과 인도네시아에는 여전히 교육 격차가 상존한다. 이들 두 국가 모두 1980년대와 1990년대 초에 교육 발전이 정체되었다. 필리핀의 경험은 독특하다. 필리핀은 강력한 교육 기반을 갖추고 탈식민 시대를 시작했다. 그러나 마르코스가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1972-1986) 이러한 교육 측면의 우위는 의미 없이 허비되었다(Booth, 1999).

지난 수십 년간 동남아 지역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 불평등이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불평등 추세는 특히 라틴아메리카 등 다른 지역이 최근 경험한 불평등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또한 이들 국가에서는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최상위 계층에 소득이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불평등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세계화, 기술 변화, 시장 중심 개혁의 3가지 요소가 자주 언급된다. 이러한 3가지 변화로 인해 숙련된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프리미엄과 자본에서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게 된 것이

다. 또한 이러한 요소들은 지역 간 불평등에도 기여했다(Kanbur, Rhee & Zhuang, 2014). 불평등이 증가함에 따라, 과거 빈곤 감소의 주된 동력 이었던 경제성장이 빈곤 퇴치에 발휘하는 효과가 줄어들고 있다. 최근 10년간 이러한 패턴에 변화가 있었지만, 사실상 지난 30년간의 경제성장은 소득 분배의 최하위층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최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유리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2000년 이후 불평등이 크게 증가하여 최근 15년 이상 큰 개선 없이 지속되었다.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에서는 불평등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도농 격차는 불평등 증가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필리핀, 태국, 베트남에서는 지역 간 불균형이 전체 경제 불평등의 10-20%를 차지하고 있다(World Bank, 2018).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와 수명의 증가로 인한 인구 고령화가 동남아 지역의 주요 도전과제로 부상했다. 10년 내에 다수 국가에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시작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은 이미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중진국이 된 반면, 필리핀,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는 아직 젊은 국가에 속하며 고령화를 경험하지 않을 전망이다. 인구 고령화와 함께 전통적 지원망의 약화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고령층이 충분한 저축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보장제도 역시 충분히 발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World Bank, 2018). 증가하는 노인 인구가 높은 빈곤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제2절 태국의 사례

1970년대 태국이 저소득 국가로 분류되고 있을 당시 빈곤은 정부의 핵심 과제였다. 빈곤에 대한 우려는 제3차 태국 5개년 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 제4차 5개년 개발계획에는 더욱 명백하게 드러난다. 본 절에서는

태국에서 빈곤을 측정하기 시작한 과정과 변화를 살펴보고 저개발 국가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빈곤 양상을 고찰한다.

1. 태국에서의 빈곤 측정

태국에서 빈곤이 측정되기 시작한 것은 1979년부터이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기술 지원으로 1979년에 첫 빈곤선이 추정되었다(Meesook 1979). 빈곤선은 빈곤율과 이에 따른 빈곤 감소 목표 측정에 사용되었다.

태국의 첫 국가 빈곤선은 절대적 빈곤 관점에서 접근하였으며 다양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후 새로운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연구자들은 초기 평가치를 향상시키고 소비자 행동 변화에 따라 방법론을 조정하려 노력했다.

〈표 4-2〉 태국에서의 빈곤 측정

발표 연도	사용된 데이터	비고
1979	1976	Meesook(1979), 세계은행 (1980) 첫 국가 빈곤선
1998	1992	Kakwani와 Krongkaew (2000)
2004	2002	UNDP와 TDRI(Jitsuchon, Plangpraphan, 그리고 Kakwani, 2006), NESDB (2004)
-	2011	2004년 발표 자료와 방법론은 같지만 다른 매개 변수 사용하여 분석

자료: 저자 작성.

가. 세계은행의 빈곤 측정(1979)

세계은행의 빈곤선 추정 접근방식은 영양에 대한 국가 연구를 바탕으로 일반적으로 섭취되는 식품으로 구성된 최소 영양 식단을 추정하고, 기준

가격으로 해당 식단을 평가하여 식료품에 대한 최저 지출 산출하며, 비식료품에 대한 지출은 1975/76 사회경제 조사(1975/76 Socio-Economic Survey)에서 하위 20%의 총 지출 대비 식료품 지출 비율을 계산해서 산출하였다. 최종적으로 최소 식료품 지출과 비식료품 지출을 합산해서 빈곤선의 최저 지출 수준을 결정하였다.

영양식단의 추정은 세계은행 연구는 보건부(Ministry of Public Health)가 만든 연령대 및 성별에 따른 일일 영양 권장량을 사용했다. 즉, 보건부가 각 연령대 별 성별에 따라 대부분의 태국인이 활동적인 사람의 몸무게를 기준으로 영양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기 위한 하루 영양 필요량을 제공한 것이다(칼로리 단위, 단백질, 칼슘 등). 영양 권장량과 전체 인구 중 각 인구 그룹 별 “몸무게”를 함께 사용하여¹⁵⁾, “종합적인” 태국인에 대한 영양 요건이 산출되었다. 특히 각 연령대 별 남성과 여성의 일일 영양 요건에 총 인구 중 해당 그룹의 비율을 곱한 후 모든 연령대에 대해 가중평균 일일 영양 요건의 총합을 구해 종합적인 태국인에 대한 권장 영양요건을 산출했다. 세계은행 보고서의 영양 권장량은 1인당 하루 1,978 칼로리 및 단백질 38그램이다.

식료품 지출은 도시 및 농촌 지역에서 일일 필요 칼로리와 단백질을 제공할 수 있는 표준 식료품 항목(food basket)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정했다. 이 절차는 세계은행이 식료품 지출을 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도시 식료품 항목의 단위 가격은 방콕 대도시의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s Indexes)를 이용했으며¹⁶⁾, 농촌지역 식료품 항목의 단위 가격은 북부지방 소비자물가지수¹⁷⁾를 사용했는데, 당시 농촌지역

15) 성별에 따라 분류된 전체 인구의 연령 분포는 인구예측 실무단(Working Group on Population Projection)의 “1970-85 태국 지역 인구 예측(Regional Population Projection for Thailand 1970-85)”에서 나온 것이다.

16) 태국 상무부 사업경제국의 ‘1976년 1-12월 방콕 대도시 소비자물가지수 (Consumer Prices Indexes for Bangkok Metropolis, January-December 1976)’를 사용하였다.

물가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도시 소비자 물가를 바탕으로 한 지수가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1976년 생활비를 기준으로 도시 지역 일반적인 태국인 한 명의 식료품 항목에는 백미, 돼지고기, 계란, 배추, 바나나 등이 포함되었으며 연간 비용은 1,593 바트였고 농촌 지역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연간 비용은 1,342.7 바트였다.

1975/76 사회경제 조사를 바탕으로 총 지출 대비 식료품 비율은 농촌 지역의 경우 67.8%, 도시 지역은 53.8%로 산정되었다. 해당 수치들은 1975/76 조사에서 가계 총 지출 하위 20%에서 나온 비율이다. 따라서 총 가계 지출 중 32.2%, 46.2%는 각각 농촌 및 도시 지역 비식료품 항목으로 할당되었다.

세계은행의 1980년 빈곤선은 각 농촌 및 도시 지역의 일반적인 태국인 한 명에게 필요한 영양 권장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최저 총 지출이다. 이를 기준으로 측정한 결과 <표 4-3>과 같이 해당 빈곤선과 이에 해당하는 빈곤율, 즉 빈곤선 이하 소득 인구 비율이 농촌에서는 35%, 도시에서도 14%로 측정되었다.

<표 4-3> 태국 빈곤선 (1976 바트/연간/1인당)과 빈곤율

	농촌	도시
식료품 항목	1,343	1,593
비식료품 항목	638	1,368
총 (바트/연간/1인당)	1,981	2,961
빈곤율 (%)	35	14
국가 전체 (%)		31

자료: 저자 작성

17) 태국 상무부 사업경제국의 '1976년 북부지방 소비자물가지수 (Consumer Prices Indices for the Northern Region, 1976)'를 사용하였다.

1976년 빈곤율은 태국 통계청(National Statistic Office) 1975/76 사회경제 조사의 소득 분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이 당시 빈곤율을 각 지역별로 나누어보면 다음의 <표 4-4>와 같다.

<표 4-4> 빈곤 인구 비율 (총 인구의 %)

지역	1962/63			1975/76		
	도시	농촌	총	도시	농촌	총
동북부	44	77	74	20	45	44
북부	56	66	65	18	33	33
남부	35	46	44	22	33	31
중부	40	40	40	12	15	14
방콕 및 주변지역	28	-	28	12	-	12
국가 전체	38	61	57	14	35	31

자료: World Bank. (1980). Income Growth and Poverty Alleviation, *World Bank Country Study*.

나. Kakwani와 Krongkaew의 빈곤 측정(1998)

1980년부터 태국 경제는 급격한 성장을 겪었으며 다양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났다. 이후 태국인의 인구 구조 및 소비 양상은 크게 바뀌어 1970년대 태국 가구의 영양적 필요요소, 인구 분포 및 지출 내역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측정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Kakwani와 Krongkaew는 세계은행 빈곤선의 주요 결점은 해당 빈곤선이 모든 가계에 대해 단일 빈곤선을 제공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이하 축약하여 KK로 명기함). KK(1998)는 한 가구 내 사람들의 다양한 필요를 고려했다. 따라서 이들 연구에서는 가구의 규모 및 구성에 따라 빈곤선이 다르며 가구 구성원의 각각 다른 필요를 반영한다. 이후 이 빈곤선이 태국에서 빈곤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게 된다.

KK(1998)는 1989년 태국 보건부(Ministry of Health Care) 보건국에 따른 영양 기준을 사용했는데, 해당 기준은 영양소를 6가지로 분류한다: 칼로리,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그리고 무기질이다. 하지만 전체 6가지 영양소를 기반으로 빈곤선을 구축하는 것은 당시에는 불가능했다. 따라서 이들은 영양 기준으로 단순히 칼로리 섭취 또는 열량 요건만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개인의 칼로리 필요량은 연령, 성별, 몸무게, 활동 수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KK(1998)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했다.

$$R_i = (\alpha_i + \beta_i w_i) a_i$$

여기서 R_i 은 몸무게가 w_i , 활동 수준 a_i 이 인 개인*i*에게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다. 매개변수 α_i 와 β_i 는 개인 *i*의 연령 및 성별에 따라 다르다. 태국의 경우와 값은 아래 표처럼 산정되었다.

<표 4-5> 성별과 연령대에 따른 칼로리 요건 매개변수

성별	연령	α_i	β_i
남성	20-29	679	15.3
	30-59	879	11.6
	60 이상	487	13.5
여성	20-29	496	14.7
	30-59	829	8.7
	60 이상	596	10.5

자료: Kakwani, Nanak and Medhi Krongkaew. (1998). Poverty in Thailand: Defining, Measuring and Analyzing. Working Paper No. 4, Asian Development Bank and Development Evaluation Division and NESDB.

활동 수준은 기초대사율(BMR)에 따라 측정된다. 개인은 신체 활동 수준, 즉 저, 중, 고강도를 바탕으로 세 그룹으로 분류된다. 또한 활동 수준은 연령, 성별, 몸무게 및 지역에 따라 다르다. 1992년 인구 구조를 기준

으로 KK(1998)는 아래 표와 같이 BMR 인수를 정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태국인에게 필요한 칼로리를 결정할 수 있었다.

〈표 4-6〉 유형, 연령, 성별, 지역 및 BMR 수준에 따른 하루 칼로리 요건

개인의 유형	연령(세)	몸무게(kg)	BMR 인수	필요 칼로리 (kcal)
아동	1-3	12	-	1200
	4-6	16	-	1450
	7-9	22	-	1600
농촌 남성	10-12	29	1.75	1850
	13-15	42	1.68	2300
	16-19	54	1.6	2400
	20-29	58	2.1	3289
	30-59	58	2.1	3264
	60 이상	58	1.78	2261
도시 남성	10-12	29	1.75	1850
	13-15	42	1.68	2300
	16-19	54	1.6	2400
	20-29	58	1.78	2787
	30-59	58	1.78	2767
	60 이상	58	1.55	1969
농촌 여성	10-12	33	1.64	1700
	13-15	28.5	1.59	2000
	16-19	25.5	1.53	1850
	20-29	50	1.82	2239
	30-59	50	1.82	2302
	60 이상	50	1.64	1837
도시 여성	10-12	33	1.64	1700
	13-15	28.5	1.59	2000
	16-19	25.5	1.53	1850
	20-29	50	1.64	2017
	30-59	50	1.64	2075
	60 이상	50	1.56	1747

자료: Kakwani, Nanak and Medhi Krongkaew. (1998). Poverty in Thailand: Defining, Measuring and Analyzing. Working Paper No. 4, Asian Development Bank and Development Evaluation Division and NESDB.

위 공식을 사용했을 때 개인의 칼로리 요건이 개인의 신체 활동 수준에 매우 민감하다는 것이 눈에 띈다. 예를 들어 20-29세 연령대의 도시 남성은 농촌지역 같은 인구 그룹 대비 신체적 활동이 적은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해당 연령대 도시 남성의 BMR은 1.78로 하루 2,787 칼로리가 필요한 반면, 농촌지역 남성은 BMR이 2.1인 것으로 추산되어 하루 3,289 칼로리가 필요하다.

이후 전체 인구의 평균 영양 요건은 해당 샘플 (사회경제 조사 기반)에서 각 가계의 1인당 칼로리 요건을 합산하여 산출된다. 이 총합은 가중평균 방식으로 합산되며 이 때 비중은 각 샘플 가구에 주어진 인구 비중과 동일하다. 아래 <표 4-7>은 지역별 1인당 하루 평균 칼로리를 보여준다.

<표 4-7> 지역별 1인당 하루 필요 칼로리

(단위: kcal)

지역	농촌	도시	총
북부	2316	2102	2275
동북부	2274	2086	2252
중부	2311	2109	2259
남부	2260	2079	2223
방콕	-	2142	2142
방콕 주변지역	2366	2132	2215
총	2291	2116	2241

자료: Kakwani, Nanak and Medhi Krongkaew. (1998). Poverty in Thailand: Defining, Measuring and Analyzing. Working Paper No. 4, Asian Development Bank and Development Evaluation Division and NESDB.

결과적으로 KK(1998)의 평균 칼로리 요건은 1인당 하루 2,241칼로리이며, 이는 세계은행 (1980)이 사용한 칼로리보다 약 13% 높다. 세계은행의 추정치는 1974년 인구 구조를 사용한 반면 KK(1998)가추정한 평균 칼로리는 1992년 인구 구조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칼로리 요건이 결정되고 나면 다음 단계는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식품 또는 소비 표준 품목(basket)을 구성하는 것이다.

여기에 KK(1998)는 상무부(MOC, Ministry of Commerce) 사업경제국(Department of Business Economics)의 좀 더 자세한 소비 표준 품목을 활용했다. 해당 소비 바스켓은 태국 여러 지방의 농촌 및 도시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MOC가 생활비, 즉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MOC 소비 바스켓은 321개의 가계소비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대부분의 태국인이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124개의 식료품 항목과 이에 상응하는 지역 간 물가 지수로 구성되며 MOC는 이를 통해 여러 지방 및 지역의 상대적인 생활비를 평가할 수 있다.

지역 간 물가지수는 방콕 물가 벡터를 기본값으로 설정한다. 즉, 1992년 방콕의 지수 값은 100이다. 따라서 1992년 동북부 지방 도시 지역의 지수 값이 88.9라면, 이는 동북부 도시의 생활비가 방콕의 88.9%라는 의미다. 여기에서 1992년이 기준이 되는 해로 선택된 이유는 기본 소비 양상과 지역 간 물가 지수가 구축된 “일반적인 해”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식료품비는 다음 단계에 따라 산출된다.

- ① 식료품 항목의 평균 가격을 고려해서, KK(1998)는 각각 다른 지방 및 지역 식료품 바스켓의 평균 비용을 산정했다.
- ② 식품 섭취 수준을 월별 킬로그램으로 제공하는 식료품 바스켓을 일일 그램 단위로 변경한 후 각 식품의 1그램에 대한 영양 값을 곱해 해당 바스켓의 일일 칼로리를 산출한다. KK(1998)는 보건부 보건국 영양부서가 제공하는 1994년 태국 음식의 영양 값을 사용해서 섭취 수준을 칼로리 단위로 전환했다. 그 결과 해당 식품 바스켓의 전체 칼로리가 구축될 수 있었다.

③ 이후 모든 지방/지역 내 식품 바스켓의 “칼로리 비용”이 산출되었다. 식품 바스켓에서 구해진 총 칼로리를 각 지방/지역에서 해당 바스켓을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으로 나눴다. 이 비율을 칼로리 비용, 또는 식료품 지출 1바트 당 제공되는 칼로리라고 부른다.

④ 1의 칼로리 요건을 고려해서, KK(1998)는 각 지방과 지역에서 일일 칼로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산출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1992년 중부지방 농촌 지역의 식품 바스켓은 바트 당 195 칼로리를 살 수 있는 반면 중부지방 도시 지역에서 같은 바스켓에 대해 바트 당 163칼로리를 살 수 있다. <표 4-7>과 같이 중부지방 농촌 및 도시 지역에서 1인당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는 각각 2,311 및 2,109 칼로리다. 따라서 1992년 중부지방 농촌 및 도시 지역의 식료품 지출은 각각 하루 11.85 바트 및 12.94 바트다.

이상적으로 빈곤선은 각 지방/지역에서 하위 20%의 권장 칼로리 섭취량에 필요한 식료품 지출비와 비식료품 지출비의 총합이다. KK(1998)는 빈곤선을 구축하기 위해 다음 공식을 사용하기로 했다.

$$\text{식료품 지출} \left(1 + \frac{P_{NF}}{P_F} \cdot h\right)$$

이 공식에서 $\frac{P_{NF}}{P_F}$ 는 식료품 대비 비식료품의 지역 간 물가 지수 비율이고 h 는 0.67로 고정되는데, 식료품 바스켓 비용 대비 비식료품 바스켓 비용 비율이다. 이 수치는 빈곤층은 소득의 60% 이상을 식료품에 지출해서는 안된다는 추정을 반영하기 위해 선택되었다.

KK 방식을 적용한 아래 <표 4-8>은 1998년에서 2002년 방콕과 다른 4개 지방의 빈곤선을 보여준다. 이에 따른 빈곤율은 <표 4-9>에서 볼 수 있다.

〈표 4-8〉 빈곤선, 1988-2002 (바트/1인당/월별)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1	2002
방콕	584	684	752	835	950	1,019	1,101	1,109	1,112
중부	476	526	599	622	714	876	882	925	930
북부	459	498	563	581	702	791	777	828	830
동북부	443	477	577	611	698	880	864	890	898
남부	466	518	582	624	716	843	841	879	890
국가 전체	473	522	600	636	737	878	882	916	922

자료: Kakwani, Nanak and Medhi Krongkaew. (1998). Poverty in Thailand: Defining, Measuring and Analyzing. Working Paper No. 4, Asian Development Bank and Development Evaluation Division and NESDB.

〈표 4-9〉 빈곤율 (전체 인구의 %)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1	2002
방콕	3.8	3.3	2.9	0.6	0.3	0.5	0.3	0.8	0.5
중부	25.2	20.5	12.1	8.4	5.9	7.0	5.4	4.6	4.3
북부	32.0	23.2	22.6	13.2	11.2	9.1	12.1	10.6	9.8
동북부	48.4	43.1	39.9	28.6	19.4	24.0	28.1	24.5	17.7
남부	32.5	27.6	19.7	17.3	11.5	14.6	11.0	13.5	8.7
국가 전체	32.6	27.2	23.2	16.3	11.4	13.0	14.2	13.0	9.8

자료: Kakwani, Nanak and Medhi Krongkaew. (1998). Poverty in Thailand: Defining, Measuring and Analyzing. Working Paper No. 4, Asian Development Bank and Development Evaluation Division and NESDB.

다. UNDP/TDRI의 빈곤측정(2004)

이전 빈곤선보다 우수한 방법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KK(1998) 빈곤선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이유로 비판을 받았다.

- ① 빈곤선 공식의 고정비율 0.67 또는 변수 h에 해당하는 비율은 시간과 지역에 상관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하지만 가계 소득이 늘어나면서 소비 양상이 변화하기 때문에 해당 비율이 동일하게 유지될 확률은 낮다는 주장이 있다.

- ② KK(1998)는 태국인 전체의 소비를 대표하기 위해 평균적인 위생 수준의 지역 소비 양상을 사용했다. 이는 태국 전체 국민의 특이성을 명백히 간과한 것이다.
- ③ 1997년 경제 위기이후 태국은 현대 역사상 최악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소비자 행동 역시 1992년 당시 관찰된 양상에서 크게 변화했다.
- ④ 인구 구조 또한 1992년부터 변화했다.

이에 새로운 공식 빈곤선 기준을 태국 국가 경제사회 개발위원회(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oard, NESDB)와 UN 개발 계획(United Nation Development Programme, UNDP)이 태국 개발 연구원(Thailand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연구원들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개발했다.

빈곤선에 대한 변경 내용은 다음으로 요약될 수 있다.

- ① 칼로리와 단백질 필요량 업데이트: 보건부 보건국은 2003년 태국 인구의 칼로리와 단백질 필요요건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진행했으며 다음의 <표 4-10>과 에서 볼 수 있다. 이전 연구 결과 대비 일반적인 태국인(남성 및 여성 모두)에게 필요한 칼로리는 줄어들었지만 단백질은 늘어났다.

<표 4-10> 2003년 일반적인 태국인에게 필요한 1인당 최소 칼로리(일일, 그램)

연령대	남성	여성
1세 미만	800	800
1-3	1,000	1,000
4-5	1,300	1,300
6-8	1,400	1,400
9-12	1,700	1,600
13-15	2,100	1,800

연령대	남성	여성
16-18	2,300	1,850
19-30	2,150	1,750
31-50	2,100	1,750
51-70	2,100	1,750
71세 이상	1,750	1,550

자료: Jitsuchon, Somchai, Jiraporn Plangpraphan, and Nanak Kakwani (2006) "Thailand's New Official Poverty Line" Prepared for the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oard and the United National Development Programme.

〈표 4-11〉 2003년 일반적인 태국인에게 필요한 1인당 최소 단백질

(단위: 일, g)

연령대	남성	여성
1세 미만	16	16
1-3	19	19
4-5	25	25
6-8	28	28
9-12	42	42
13-15	61	57
16-18	62	48
19세 이상	57	52

자료: Jitsuchon, Somchai, Jiraporn Plangpraphan, and Nanak Kakwani (2006) "Thailand's New Official Poverty Line" Prepared for the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oard and the United National Development Programme.

- ② 지방의 물가와 영양 함량 데이터 업데이트: 2002년 지방 물가와 칼로리 및 단백질 함량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가 수집되었다. 또한 2002년 지역 간 물가 지수도 산정되었는데 이는 이후 몇 년 동안 빈곤선 업데이트의 기준 데이터로 사용된다.

가장 빈곤한 20%의 평균 식료품 비용을 식료품 비용의 기준으로 사용했다. 이를 위해 ① 하위 20% 가구의 식료품 소비 지출 ② 섭취 식료품 항목의 가격 ③ 각 식료품 항목의 칼로리와 단백질 함량 등의 자료가 사용하였다.

이 단계에서 어려운 점은 식료품 가격의 지역 간 편차를 고려하는 것이다. 식료품 항목에 대한 지역 간 물가 지수와 하위20% 가정의 칼로리 및 단백질 비용은 각각 아래 <표 4-12>, <표 4-13>에서 볼 수 있다.

<표 4-12> 지역 간 식료품 물가 지수

지역/지방	5분위 수					총
	1	2	3	4/	5	
자치시						
방콕	112.53	112.52	112.96	113.56	112.49	112.83
중부	103.31	103.34	103.78	104.36	104.72	104.15
북부	101.91	101.40	101.21	100.91	100.72	101.06
동북부	104.98	105.88	107.0	108.48	109.58	107.93
남부	107.88	108.0	108.46	109.42	109.62	109.01
비 자치시						
중부	97.38	97.01	96.49	95.75	95.31	96.05
북부	93.77	93.64	93.15	92.32	91.8	92.6
동북부	96.82	97.05	97.12	97.07	97.62	97.25
남부	99.67	99.36	99.07	99.34	99.37	99.34

자료: Jitsuchon, Somchai, Jiraporn Plangpraphan, and Nanak Kakwani (2006) "Thailand's New Official Poverty Line" Prepared for the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oard and the United National Development Programme.

<표 4-13> 하위 20%에 해당하는 가구의 칼로리 및 단백질 비용

지역/지방	칼로리 비용 (100그램 당 바트)	단백질 비용 (100그램 당 바트)
자치시		
방콕	14.28	41.42
중부	13.11	38.03
북부	12.93	37.51
동북부	13.32	38.64
남부	13.69	39.71
비 자치시		
방콕	12.36	35.84

지역/지방	칼로리 비용 (100그램 당 바트)	단백질 비용 (100그램 당 바트)
중부	11.9	34.51
북부	12.28	35.63
동북부	12.65	36.69
남부	12.65	36.69
국가 전체	12.69	36.81

자료: Jitsuchon, Somchai, Jiraporn Plangpraphan, and Nanak Kakwani (2006) "Thailand's New Official Poverty Line" Prepared for the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oard and the United National Development Programme.

그 결과 도출된 각 지방 및 지역 별 식량빈곤선은 다음의 <표 4-14>와 같다.

<표 4-14> 지방 및 지역 별 평균 식량 빈곤선(2002)

(단위: 바트)

지방	지역	평균 식량 빈곤선		
		칼로리 기반	단백질 기반	식량 빈곤선
방콕	자치시	687.6	552.7	687.6
	자치시	628.4	504.4	628.4
중부	비 자치시	581.7	464.7	581.7
	전체	597.5	478.2	597.5
북부	자치시	628.4	501.6	623.4
	비 자치시	564.3	451.5	564.6
	전체	576.6	461.9	576.6
동북부	자치시	628.7	502.3	628.7
	비 자치시	566.9	448.8	566.9
	전체	578.3	458.8	578.3
남부	자치시	645.7	515.8	645.7
	비 자치시	584.0	462.7	584.0
	전체	599.1	475.8	599.1
국가 전체	자치시	649.2	520.8	649.2
	비 자치시	573.3	455.1	572.2
	전체	596.8	476.1	596.8

자료: Jitsuchon, Somchai, Jiraporn Plangpraphan, and Nanak Kakwani (2006) "Thailand's New Official Poverty Line" Prepared for the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oard and the United National Development Programme.

소비자 이론을 바탕으로 식료품과 비식료품 지출로 구성된 총 지출 함수를 구할 수 있다. 비식료품 지출 함수에는 의류 및 신발, 주거지, 광열비, 가정용품, 의료, 개인 생활용품, 교통, 커뮤니케이션, 교육 등 9가지 품목이 포함되었다.

비식료품 빈곤선을 얻기 위해 “최빈곤” 집단의 평균 비식료품 지출을 추정한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가구의 1인당 식료품 빈곤선 대비 1인당 식료품 지출 비율을 계산하여 100을 곱한다. 만약 가구의 1인당 식료품 지출이 1인당 식료품 빈곤선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면 100이 된다.
- ② ①에서 산출된 식료품 빈곤선 비율의 오름차 순으로 가구를 정렬한다.
- ③ 식료품 빈곤선 비율이 90에서 110 사이인 가구를 대상이 되는 가구의 대표로 선택한다.
- ④ 가구 설문조사 데이터를 이용해서 ③에서 선택된 가계 그룹의 평균 비식료품 지출을 계산한다.

이러한 단계로 비식료품 빈곤선이 설정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비식료품 빈곤선이 일반적으로 한 명 이상의 가구 구성원 간 공유되는 일부 지출 항목의 규모의 경제를 고려한다는 사실이다. 지출의 경우 한 지붕 아래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은 주거지 비용을 공유하며 따라서 가족 구성원 수가 늘어나면 1인당 자본 지출은 줄어든다.

식료품 및 비식료품 빈곤선을 합산하여 2006년 방법론을 기반으로 산출한 빈곤선은 다음의 <표 4-15>와 같다.

〈표 4-15〉 UNDP/TDRI 2004 빈곤선

구분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중부	방콕	980	1,105	1,227	1,346	1,502	1,696	1,736	1,801	1,853	2,020
	자차시	813	886	990	1,044	1,173	1,368	1,389	1,457	1,525	1,678
	비 자차시	645	703	791	822	934	1,132	1,142	1,184	1,243	1,383
북부	전체	696	760	854	894	1,013	1,211	1,227	1,277	1,339	1,476
	자차시	708	762	860	913	1,023	1,178	1,199	1,252	1,294	1,425
	비 자차시	578	623	705	729	835	984	974	1,032	1,089	1,227
동북부	전체	604	652	737	767	874	1,023	1,019	1,078	1,131	1,266
	자차시	644	692	787	836	952	1,128	1,131	1,181	1,229	1,365
	비 자차시	500	538	645	684	784	973	966	1,009	1,043	1,215
남부	전체	520	560	667	707	811	998	993	1,040	1,078	1,240
	자차시	684	748	837	903	1,029	1,197	1,201	1,265	1,313	1,448
	비 자차시	560	618	694	745	860	986	985	1,041	1,116	1,304
국가 전체	전체	584	644	724	778	897	1,033	1,034	1,096	1,164	1,340
	자차시	821	903	1,009	1,084	1,216	1,397	1,417	1,471	1,525	1,661
	비 자차시	557	604	697	733	839	1,012	1,009	1,058	1,110	1,271
전체	633	692	790	838	953	1,130	1,135	1,190	1,242	1,386	

자료: Jitsuchon, Somchai, Jiraporn Plangraphan, and Nanak Kakwani (2006) "Thailand's New Official Poverty Line" Prepared for the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oard and the United National Development Programme.

(단위: 바트/1인당/월)

라. 수정된 NESDB의 빈곤 측정(2011)

2011년에 NESDB(이후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uncil, NESDC로 변경)은 빈곤선을 산정하는 2004년 방식을 일부 변경했다. 이 때 다음의 사항들이 변경되었다.

- 새로운 빈곤선은 여러 지역에 걸친 다양한 소비 양상을 인지했다
- 기준이 되는 그룹은 1인당 소비를 바탕으로 하위 20%에서 하위 10%로 변경되었다.
- 식료품 바스켓 가격은 소매상점 가격이 아닌 유통사나 직판점 가격을 수집하는 상무부 데이터 대신 사회경제 조사의 물가를 직접 사용했다.
- 비식료품 빈곤선 산정에서 일부 “사치품 지출”은 제외되었는데 해당 품목은 상위 가구의 소비 항목을 대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며 예를 들면 사립학교 교육비, 외래 환자 치료 및 차량 구입이나 수리 등이다.
- 비식료품 빈곤선에서 10분위 수 6에서 10까지의 샘플은 제외한다.
- 방콕 광역시의 샘플 규모를 확대해서 다른 근교 도시 지역을 포함하여 비식료품 빈곤선을 산출한다. 새로운 샘플에는 논타부리(Nonthaburi), 촌부리(Chonburi), 치앙마이(Chiangmai), 푸켓(Phuket)과 트랑(Trang) 도시 지역 가구가 포함된다.
- 2010년 태국 인구 조사를 반영하기 위해 샘플링 비중을 수정한다.

다음의 <표 4-16>는 2011년 방법론을 기준으로 한 빈곤선을 보여준다.

〈표 4-16〉 2000-2019 지방 별 빈곤선

구분	2000	2002	2004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방콕	2,161	2,200	2,309	2,512	2,565	2,694	2,676	2,756	2,901	2,994	3,047	3,133	3,132	3,147	3,165	3,214	3,276
중부	1,781	1,825	1,952	2,165	2,220	2,390	2,382	2,490	2,610	2,696	2,775	2,832	2,827	2,841	2,861	2,892	2,933
북부	1,383	1,433	1,533	1,712	1,782	1,936	1,938	2,040	2,160	2,226	2,314	2,387	2,377	2,396	2,411	2,413	2,463
동북부	1,312	1,346	1,427	1,630	1,717	1,882	1,883	2,005	2,130	2,188	2,273	2,355	2,355	2,396	2,403	2,417	2,479
남부	1,550	1,605	1,733	1,979	2,042	2,219	2,239	2,344	2,492	2,577	2,651	2,735	2,724	2,731	2,768	2,793	2,820
국가 전체	1,555	1,606	1,719	1,934	2,006	2,172	2,174	2,285	2,415	2,492	2,572	2,647	2,644	2,667	2,686	2,710	2,763

자료: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uncil(NESDC). (2020). "Report on Poverty and Inequality Situation in Thailand"
(in Thai)

이를 통해 측정된 결과 전 지역에서 빈곤선이 상승했지만, 태국의 빈곤 인구 숫자는 10년 전과 비교해서 줄어들었다. 태국에서 빈곤은 더 이상 응급조치가 필요한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속적인 소득 불균형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표 4-17〉 1988-2019 지니계수

	국가 전체	방콕	중부	북부	동북부	남부
1988	0.439	0.363	0.377	0.395	0.388	0.377
1990	0.443	0.384	0.386	0.411	0.382	0.361
1992	0.450	0.393	0.372	0.390	0.396	0.374
1994	0.438	0.364	0.373	0.398	0.391	0.398
1996	0.431	0.348	0.360	0.387	0.378	0.374
1998	0.409	0.326	0.335	0.358	0.343	0.361
2000	0.428	0.329	0.366	0.375	0.352	0.374
2002	0.419	0.365	0.357	0.384	0.356	0.368
2004	0.425	0.359	0.363	0.409	0.382	0.389
2006	0.420	0.362	0.355	0.410	0.399	0.374
2007	0.398	0.344	0.340	0.385	0.373	0.371
2008	0.405	0.357	0.344	0.387	0.374	0.351
2009	0.398	0.343	0.347	0.370	0.371	0.363
2010	0.396	0.354	0.341	0.389	0.385	0.353
2011	0.375	0.398	0.325	0.349	0.353	0.343
2012	0.393	0.368	0.339	0.353	0.349	0.370
2013	0.378	0.333	0.332	0.346	0.340	0.345
2014	0.371	0.338	0.317	0.328	0.351	0.354
2015	0.359	0.343	0.310	0.310	0.338	0.347
2016	0.367	0.337	0.319	0.329	0.329	0.361
2017	0.364	0.338	0.312	0.333	0.333	0.345
2018	0.362	0.312	0.328	0.322	0.328	0.347
2019	0.348	0.286	0.323	0.310	0.323	0.335

자료: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uncil(NESDC). (2020) "Report on Poverty and Inequality Situation in Thailand" (in Thai)

2. 태국 5개년 국가 경제정책과 빈곤에의 대응

태국 발전 과정의 초기 단계에서 정부는 5개년 국가 경제개발 계획에 규정된 정책들을 통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빈곤 감소의 목표는 해당 국가 계획에 명확히 기술되어 있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1961-1965년 1차 국가 경제사회 개발계획은 1인당 GDP 성장률 증가와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며, 특히 농업분야에 집중한다. 3차 국가 계획(1973-1977)이 되어서야 농촌 지역 개발과 소득 분배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이 변화는 냉전 시대에 공산주의 위협을 피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었을 수 있다.

1973년 10월 정치적 반란 이후 민주화 과정이 일시적으로 가속화되었다. 소수집단과 상대적으로 덜 부유한 사회 집단이 선거 제도를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할 수 있었다. 정치인들은 방콕 외 지역 국민들의 필요에 더 반응을 보였다. 1975년 연립정부가 지역 구의회에 일괄 지급금을 주고 지역 행정 기관이 지역의 필요에 맞게 자체적인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정책은 분권화 과정을 통해 빈곤율을 완화하려는 최초의 정책으로 평가된다.

안타깝게도 소득 격차 감소목표는 4차에서 6차 국가 경제계획에서 모습을 감춘다. 이 목표가 다시 나타난 것은 7차 계획(1992-1996)인데 농촌지역 빈곤층에 집중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8차 계획(1997-2001)은 최상위와 최하위 소득 그룹 간 격차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해당 기간 말까지 소득 분포 중간에 위치한 인구의 소득을 국민 소득의 최소 5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1997년 경제 위기로 정부는 2001년까지 소득 분포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소득 격차 감소를 국가 계획에 포함시킨 것은 부분적으로는 데이터 수집과 빈곤 및 불평등 측정 향상 때문이었다. 90년대 후반의 빈곤선 발전

덕분에 빈곤의 심각도를 좀 더 잘 측정할 수 있었다. 정부는 빈곤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지는 않았지만, 보다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2001년 타이락타이(Thai Rak Thai, TRT) 당의 부상은 농촌지역 개발 환경을 바꾸어 놓았다. TRT 당은 빈곤층 삶의 질 향상 공약 때문에 총선에서 승리했다. 이 당은 보편적인 의료, 마을 기금, 농민들에 대한 부채 경감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빈곤층은 30바트(현재 환율 기준 약 1달러)로 양질의 의료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각 마을은 1백만 바트(약 33,000 USD) 규모의 일회성 기금을 받았으며 마을 구성원들이 회전 자금으로 관리하게 된다. 또한 농업 분야 대출 제공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인 농업은행 및 협동조합(Bank of Agriculture and Agricultural Co-operatives, BAAC)에서 대출을 받은 농부들은 부채 상환을 3년간 유예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빈곤층과 농촌 지역 국민들의 복지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 9차 국가 경제계획(2002-2006)에 소득 분포 관련 목표는 없었지만, 해당 기간에 소득 불균형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주의를 통한 경제 발전은 2006년 9월 군사 정부가 TRT 당 집권 정부에 대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추진력을 잃었다. TRT 정부의 복지 프로그램을 선호했던 빈곤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군사 정부가 임명한 정부는 해당 프로그램의 상당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소득 불평등을 10차 국가 경제개발 계획(2007-2011)의 목표 중 하나로 지정했다. 특히 10차 계획은 2011년까지 최상위 20%의 소득이 최하위 20% 소득의 10배를 넘지 않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안타깝게도 10차 계획이 종료되는 시점에 최상위 및 최하위 20% 간 소득 격차는 11.81이었다. 2007년에는 13.06이었다. 소득 그룹 및 지역 간 소득 불균형 감소는 아직 11차 국가 경제계획(2011-2015)의 과제로 남아 있다.

제3절 필리핀의 사례

본 절에서는 필리핀의 빈곤과 불평등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측정, 양상, 동향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빈곤과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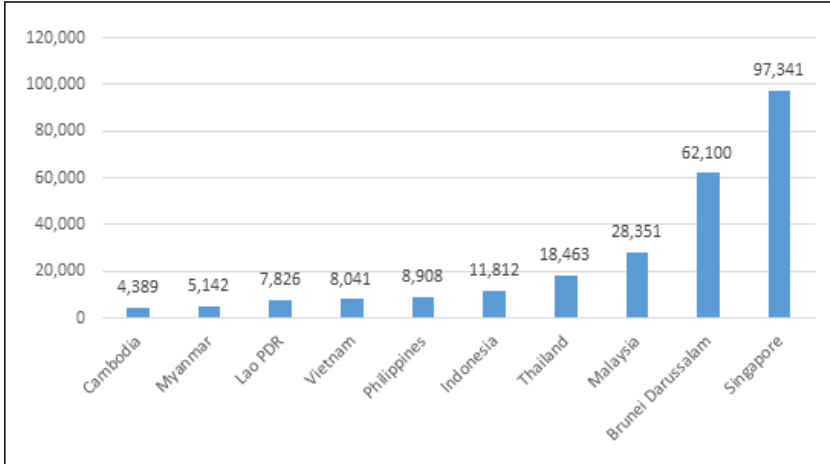
1. 필리핀 경제·사회의 개요

필리핀은 하위 중소득국가로 가장 최근의 인구조사인 2015년 기준 1억 1백만의 인구를 가졌으며 동남아에서는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두 번째, 전세계에서는 13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다. 그리고 필리핀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과 함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창립 회원국 중 하나이다. 행정적으로 17개의 지방, 81개의 주(17개 지방 내에), 그리고 146개의 도시와 1,488개의 지방 자치체로 구성되어 있다.

2019년 기준 필리핀 경제 규모는 3,770억 USD로 추정되며, 인구 측면에서 훨씬 작은 국가인 아일랜드, 싱가포르, 홍콩과 비슷한 규모이다 (World Bank, 2020a). 이는 수 십 년에 걸친 불규칙한 저성장의 결과로 필리핀의 1인당 소득이 훨씬 낮기 때문이며 2000년대에 들어서야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2017년 달러 기준 구매력평가(PPP\$)로 측정한 필리핀의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019년 PPP\$8,908이었으며, 엘살바도르 및 볼리비아와 같은 수준이었고 아세안 국가 내에서는 베트남(PPP\$8,041)보다 높았지만 인도네시아(PPP\$11,812)보다는 낮았다.

[그림 4-1] 2019년 아세안(ASEAN) 국가 1인당 GDP

(단위: PPP\$)



주: 2017년 PPP\$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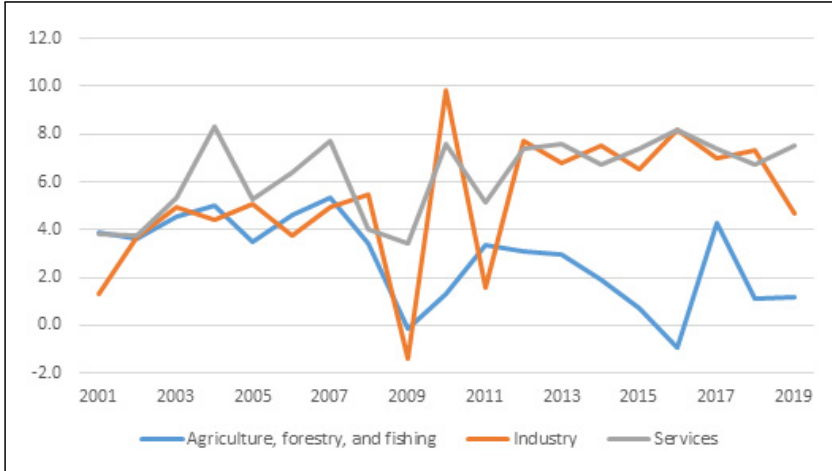
자료: World Bank. (2020c).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s://datacatalog.worldbank.org/dataset/world-development-indicators>
[accessed 3 August 2020]

필리핀 경제는 서비스 분야가 주도하는데 서비스 분야는 2019년 GDP의 58%를 차지했으며 지난 20년 간 국가 경제 성장의 대부분을 견인했다 (그림 4-2 참조). 반대로 산업 분야는 2019년 기준 경제의 3분의 1에 불과했으며, 농업분야는 8%에 그쳤다. 고용 측면에서 서비스 분야는 2019년 필리핀 전체 근로자의 59%를 고용했으며, 산업은 19%, 농업은 22% 였다. 필리핀은 완전한 산업화 없이 곧바로 서비스 중심 경제로 발전했다는 점에서 다른 아세안 창립 회원국과는 다르다. 이후 설명하겠지만 이는 필리핀의 빈곤과 불평등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그림 4-2] 연간 분야별 총부가가치 성장률

(단위: %)



자료: 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PSA). (2020a), Annual National Accounts 1998-2019.

해외 노동 이주는 지난 40년 간 필리핀 경제의 주요 동력이었다. 필리핀이 받는 개인의 송금액은 2019년 GDP의 9.3%에 해당했으며 2005년에는 GDP의 12.8%나 되었다(World Bank, 2020d). 평균적으로 해외근로자가 있는 가정은 총 가계소득의 43%를 송금에 의존한다 (Mangahas & Ducanes, 2020, p. 3). 최근에는 콜 센터를 포함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PO)이 필리핀 경제와 외화 획득의 주요 동인이 되었다. BPO 분야는 2019년 기준 약 130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GDP의 7%에 해당하는 260억 USD의 수익을 창출한다고 BPO 기업 협회가 밝혔다 (Newsbytes.ph, 2020.5.13.).

2. 필리핀에서의 빈곤과 불평등 측정

필리핀에서 빈곤층은 공식적으로는 소득이 공식 빈곤선 이하이거나 식품, 보건, 교육, 주거 및 기타 필수품에 대한 최저 기본 필요를 지속적으로 충족할 수 없는 개인 및 가족으로 정의 된다(Social Reform and Poverty Alleviation Act, 1998). 역사적으로 빈곤 측정은 소득 빈곤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최근 공식 자료들은 빈곤을 다면적으로 측정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Act Providing for a Magna Carta of the Poor, 2019).

가. 소득 빈곤 측정

필리핀에서 빈곤을 측정한 첫 공식 방법론은 1987년에 개발되었다. 필리핀의 새로운 헌법(1987년 필리핀 헌법) 채택에 따른 것으로, 이 헌법은 여러 목표 중 정부가 “모든 사람들에게 적절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완전 고용과 생활수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정책을 통해 사람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코리 아키노(Cory Aquino) 행정부가 빈곤 완화를 정책의 주요 요지로 인지하면서 빈곤의 정도와 변화 양상을 제대로 모니터링하는 방법론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필리핀 정부가 채택한 빈곤 측정 방법론의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National Statistical Coordination Board, 2000).

- ① 1985년 방법론: 1985년 방법론은 필리핀 각 지방(도시와 농촌 모두)의 1일 저비용 식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National Statistical Coordination Board, 2000). 1일 식단 메뉴는 각 지방에 대해 필리핀 식품영양연구소(Food Nutrition Research Institute)가 제공했으며 영양 요건(열량과 단백질의 경우 권장 섭취

취량 (RDA)의 최소 100%, 비타민과 기타 영양소의 경우 RDA의 80%), 각 지방의 식료품 가용성, 그리고 비용(저비용)을 구성한다. 식료품 구매에 대한 지역 소매가와 자체 조리 음식에 대한 농산물 가격을 사용해서 해당 식단의 비용을 산정하고 여기에 365를 곱해서 연간 1인당 식료품 기준치(threshold)를 구한다. 기본적인 비식료품 필요를 포함하는 1인당 총 빈곤선을 구하기 위해 각 지방의 1인당 식료품 기준치를 인수(factor)로 나누는데, 이 인수는 1인당 소득이 1인당 식료품 기준치 위, 아래로 10% 내에 있는 가족의 총 지출 대비 식료품 지출 비율이다. 이 비율은 필리핀 통계청(PSA)의 가족 소득 및 지출조사(FIES)를 사용하여 측정된다. FIES에서 가구 1인당 소득(총 소득을 가족 수로 나눔)을 산정하고 이것을 지방의 1인당 빈곤선과 지방의 1인당 식료품 기준치와 비교하여 빈곤층과 최저 생활 빈곤층을 파악한다. 지방 단위까지 포함하는 빈곤표가 만들어졌으며 현재의 필리핀 통계청(PSA)¹⁸⁾ 이 공식 발표했다. PSA는 개인인구 및 가계에 대해 따로 측정된 빈곤 추정치를 발표한다. 두 추정치의 차이점은 개인인구에 대해 측정된 빈곤이 더 높다는 것인데, 빈곤 가구는 일반적으로 빈곤하지 않은 가구보다 가구 규모가 더 크기 때문이다.

- ② 1992년 수정: 빈곤을 측정하는 방법론은 1992년 처음으로 수정되었다. 이 수정은 1인당 식료품 기준치를 나눠서 총 1인당 빈곤선으로 바꾸기 위해 사용되는 인수(1인당 소득이 1인당 식료품 기준치에 가까운 가구의 식료품 지출/총 지출)의 산출 방식을 변경한 것이었다. 즉, 빈곤선의 비식료품 요소를 수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항목을 총 지출에서 제외한 것인데, 필수품이 아닌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술; 담배; 유흥; 내구성 가구 및 장비; 기타 지출이다. 이와 같은 항목이 포함되면서 빈곤선이 과대평가되었고 따라서 빈곤의 정도도 과대평가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18) 국가 통계조정청(National Statistical Coordination Board) 이 개발했으며 해당 기관은 현재 필리핀 통계청 하에 병합되었다.

- ③ 2003년 수정: 2003년 수정의 이유는 주 단위 (지방 단위 뿐 아니라) 빈곤 측정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지방의 메뉴가 아닌) 주의 메뉴를 사용하고 해당 메뉴에 대해 각 주의 물가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했다. 이와 같은 수정을 거친 후, 주 단위 빈곤표가 만들어졌으며 정부 통계청이 이를 발표했다.
- ④ 2011년 수정: 공식 빈곤선을 결정하는 가장 최근 방법론은 2011년 개발되었다(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n.d.). 해당 수정의 이유는 장소(특히 주)와 시간에 따라 빈곤 추정치를 더 잘 비교하기 위해서였다. 이는 매우 중요했는데, 각 주의 빈곤 추정치가 빈곤 목표설정 및 기타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주를 선택하는 데 이미 이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방법론은 ‘현실적이며’ 최저 비용이 드는 전국 단위 식료품 묶음을 규정하고 이후 이를 식품 가용성과 과거 소비 양상을 바탕으로 주 단위 식료품 묶음으로 조정한다.¹⁹⁾ 마찬가지로 주 단위 식료품 묶음은 권장 섭취 열량과 단백질의 100%를 제공하기에 충분하도록 구성되며 권장 섭취 비타민과 무기질의 경우 80%를 제공해야 한다. 이 주 단위 식료품 묶음은 이후 PSA가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당 묶음 구성 요소의 실제 가격을 사용해서 가격이 정해진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식량 빈곤선에 상수 인자(constant factor)를 곱해서 1인당 빈곤선을 산출하는데, 이 상수 인자는 식량 빈곤선에 가까운 가정의 총 지출 중 과거 식료품 지출 비율 추정치의 역수(inverse)이다.

필리핀에서 빈곤선은 주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는데 그 차이는 크게 나타나기도 한다. 2018년 빈곤선이 가장 높은 주의 빈곤선은 가장 낮은 주의 빈곤선보다 80% 높았다. 필리핀 통계청(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이하 PSA)는 주 단위의 빈곤율, 빈곤갭, 빈곤 강도에 대해 공식적인 식료품 및 총 빈곤 추정치를 발표한다.²⁰⁾

19) 식료품 묶음은 식품영양 연구소(Food and Nutrition Research Institute)가 결정한다.

나. 다면적 빈곤 측정

2018년 PSA는 다면 빈곤 통계와 다면 빈곤 지수(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 MPI)를 발표하기 시작했다(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2018a). 2016년과 2017년에 대해 이와 같은 산출이 시행되었다. 방법론은 여전히 검토되고 있지만 최초 고안 및 산정됐을 때를 기준으로 MPI에는 교육, 보건 및 영양, 주거, 물, 위생, 그리고 고용 등의 4가지 항목이 포함되었다. 데이터 출처는 노동력 설문조사와 연간 빈곤 지수 설문조사를 통합한 것이다(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2019).

각 항목은 여러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에는 두 가지 지표가 있는데 5-17세 연령대의 학교 출석률과 18세 이상의 고등학교 졸업률이다. 보건과 영양에는 섭취할 음식 부족으로 지난 1분기에 최소 한 번 굶주린 경험, 식량 빈곤선 대비 상대적 식품 섭취량, 그리고 전체 가계 구성원의 건강보험 부재의 세 가지 지표가 있다.

주거, 물, 위생 항목에는 6가지 지표가 있는데 내구재, 통신 자산, 이동 자산 소유, 화장실 유형, 수자원 유형, 주택 거주권, 주택의 자재, 그리고 전력에 대한 접근성이다. 고용에 대해서는 불완전 고용 가족 구성원 비율, 고용되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 가족 구성원이 있는지 여부의 두 지표가 있다.

20) 빈곤 인구비율(head count ratio)이라고도 불리는 빈곤율(poverty incidence)은 1인당 소득이 빈곤선을 하회하는 가계의 비율이다. 빈곤 심도(poverty depth)라고도 알려진 빈곤갭(poverty gap) 지수는 빈곤선 이하 인구의 격차 총합이다. 빈곤 강도(poverty severity)는 빈곤층 간 불평등을 측정한다.

다. 불평등 측정

필리핀에서 불평등은 공식적으로 가계소득의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측정된다. 정부가 발표하는 다른 불평등 측정치에는 상위 10% 가족의 소득 대비 하위 10% 가족의 소득 비율, 총 소득 대비 가장 빈곤한 30% 가족의 소득 비율, 총 소득에서 가장 빈곤한 10% 가족의 소득 비율이 있다.

이상의 소득 빈곤과 불평등 측정치는 매 3년마다 진행되는 필리핀 통계청의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s Survey(FIES)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2018년 이전에 FIES는 지방 단위까지의 데이터를 나타냈다. 2018년에 샘플 추출 방식이 변경되어 주 단위까지 보여줄 수 있도록 샘플 규모가 확대되었다. FIES는 같은 기간 실시된 노동력 설문조사와 동일한 샘플을 공유한다. 노동력 설문조사는 필리핀에서 분기마다 행해진다. 이는 가계 내 개인의 고용 특성까지 살펴보고 이것을 가계소득 또는 빈곤과 연결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FIES가 실시되지 않는 해에는 PSA가 APIS를 실시하는데 소득 및 지출 정보는 제한적으로 수집하지만 정부 및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험에 대한 접근성, 기아의 경험 등 가계의 소득 외 정보까지도 수집한다.

3. 빈곤과 불평등 동향 및 양상

가. 소득빈곤

필리핀의 빈곤은 말레이시아나 태국, 인도네시아와 같은 아세안 주변 국가보다 더디게 감소하고 있는데, 불규칙하고 활기 없는 경제 성장이 꽤

최근까지 지속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마르코스(Marcos) 체제(1986년 종료) 말로 향해가면서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은 후 아키노(Aquino) 대통령 집권 초기 경제 및 고용 회복으로 인해 1985년부터 1988년까지 빈곤율이 감소했다. 하지만 아키노 대통령 임기 중반부터 여러 차례의 쿠데타 시도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 때문에 필리핀의 경제 성장은 추진력을 잃었고 고 경제 성장과 빈곤이 정체상태가 되었다.

라모스(Ramos) 대통령(1992년 취임) 임기 동안 공격적인 구조 개혁으로 아시아 금융 위기 전까지 다시 경제 성장이 촉진되고 빈곤이 감소했다.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부터 2012년까지 경제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발전했음에도 빈곤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1985, 같은 기간에 GDP 성장률은 매년 평균 약 5%였다. 하지만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필리핀의 빈곤율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감소했다. 가장 최근 FIES가 실시된 2018년에는 가계 빈곤율이 12.1%로 측정되었다(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2018b).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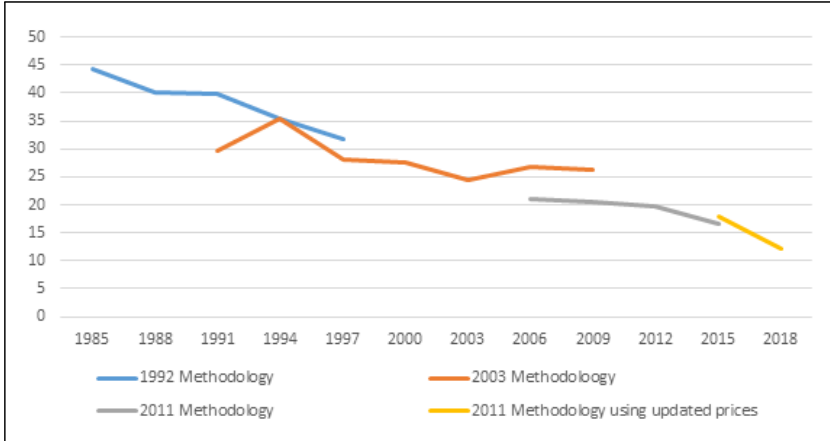
빈곤은 필리핀의 여러 지역에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필리핀 대부분의 지역 대비 메트로 마닐라 지역과 주변 지역(크게 도시화된 지역)의 빈곤은 훨씬 낮지만, 필리핀 일부 남부지역은 훨씬 높다([그림 4-4]).²²⁾ 메트로 마닐라의 가계 빈곤율은 2018년 기준 1.5%에 불과했지만, 무슬림 민다나오 자치구(ARMM)의 경우 53.6%였다. ARMM 내 술루(Sulu) 주는 빈곤율이 74.3%인 것으로 추정된다. 4 가구 중 거의 3 가구가 빈곤하게 나타난 것이다.

21) 이와 비교해서 인구 빈곤율 추정치는 16.6% 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의 가구 규모가 훨씬 작기 때문이다(PSA, 2018b).

22) 메트로 마닐라, CAR, 그리고 지방 1내지4는 필리핀 북부 루존(Luzon) 도서 지역, 지방 6 내지 8은 필리핀 중부 비사야(Visayas) 도서 지역, 지방 9 내지 13과 ARMM은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Mindanao) 도서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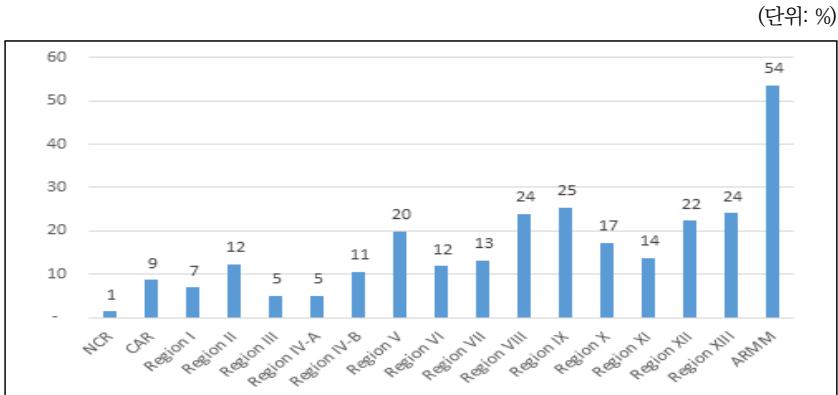
[그림 4-3] 가계 빈곤율 공식 추정치

(단위: %)



자료: 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PSA).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2015, 2018b).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s Survey. [data files and codebooks, Files obtained from the 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PSA). (n.d.). Official Poverty Statistics of the Philippines Pagtukoy sa mga mahihirap sa Pilipinas. <https://psa.gov.ph/sites/default/files/FAQ%20on%20Poverty%20Statistics%20Methodology%20-%20Filipino.pdf>에서 2020.8.1. 인출; 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PSA), (2016). Updated Annual Per Capita Poverty Threshold, Poverty Incidence and Magnitude of Poor Families, by Region and Province - 2005, 2009, 2012 and 2015. [data files]. <https://psa.gov.ph/sites/default/files/Table%201.%20Annual%20Per%20Capita%20Poverty%20Threshold%2C%20Poverty%20Incidence%20and%20Magnitude%20of%20Poor%20Families%2C%20by%20Region%20and%20Province%20-%202006%2C%202009%2C%202012%20and%202015.xlsx>에서 2020.5.1. 자료 인출; 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PSA). (2020b). *Updated Annual Per Capita Poverty Threshold, Poverty Incidence and Magnitude of Poor Families with Measures of Precision*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작 작성.

[그림 4-4] 지방 가구 빈곤율(2018)



자료: 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2020b). Updated Annual Per Capita Poverty Threshold, Poverty Incidence and Magnitude of Poor Families with Measures of Precision.

필리핀의 빈곤은 아직 대부분 농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2018년 농촌지역 빈곤율은 18.7%로 6%로 추정된 도시 지역 빈곤율의 3배 이상이다. 필리핀에서 농촌 지역은 전체 가구의 48%에 불과하지만, 필리핀 빈곤 가구의 74%를 차지한다. 개인 근로자 빈곤율은 특히 농민(31.6%)과 어민(26.2%)에서 높게 나타난다(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2020c).

나. 다면적 빈곤

2017년 필리핀 통계청은 필리핀 가구의 17.3%가 앞에서 언급된 다면적 빈곤의 13개 지표 중 최소 4개 지표에 대해 결핍되어 있다고 추정했다. 이 비율은 빈곤 인구비율이라고 알려져 있다. 또한 평균적으로 이들은 13개 지표에 대해 41.2% 결핍되어 있다고 추정된다. 이 비율은 결핍의 심도(intensity)를 보여준다. 빈곤 인구비율과 결핍 심도의 산물이 MPI인데 2017년에는 7.1이었다. 2016년 MPI가 10.4였던 것에 비해 향상된 수치다. PSA에 따르면 모든 가정의 거의 절반 정도가 2017년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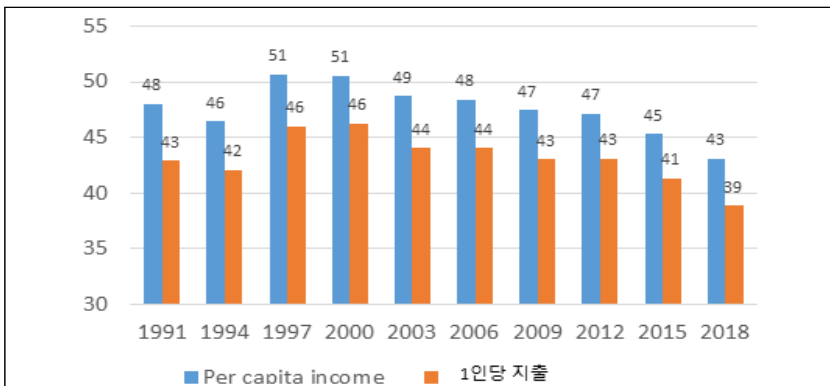
육적 성취 측면에서 결핍되어 있었다. 또한 건강보험, 자산소유, 불완전 고용에서도 결핍이 높았다(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2018a).

다. 소득 불균형

필리핀에서 불평등 관련 가장 흔히 언급되는 추정치는 소득에 대한 지니계수인데, 1에서 100까지의 범위로 0은 완벽한 평등, 즉 각 개인의 소득 수준이 같음을 의미하며 100은 완벽한 불평등, 즉 모든 소득이 한 개인에게만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4-5]에서 알 수 있듯이 필리핀의 소득 불평등은 하락세인 것으로 보이며 2012년부터 하락이 더욱 두드러진다(Ducanes, Balisacan, & Ramos, 2020). 지니계수는 1인당 소득 또는 1인당 지출(항상 소득 지표)을 바탕으로 할 때 모두 30년만의 최저치다. 불평등 감소는 앞서 설명한 빈곤 감소 추세와 일치한다.

[그림 4-5] 1991-2008년 소득 및 지출 지니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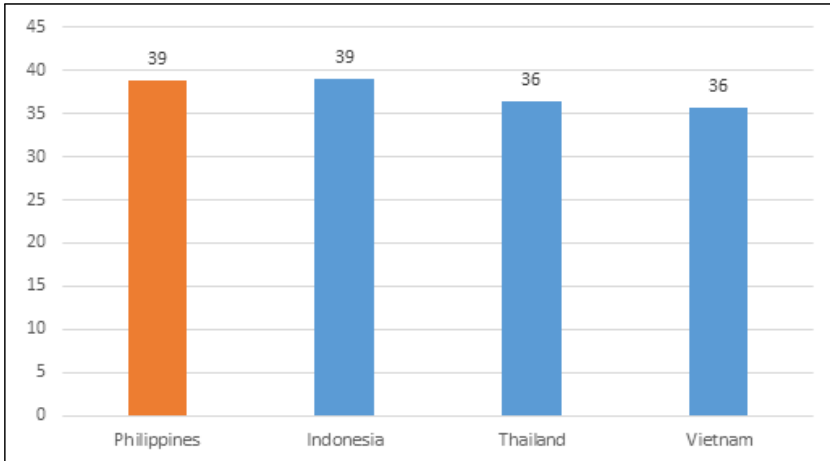
자료: 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PSA).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2015, 2018b).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s Survey. [data files and codebooks, Files obtained from the 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의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하지만 가계 조사에서 측정된 소득 불평등은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큰데, 가장 부유한 가계의 소득이 일반적으로 잘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필리핀에서 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소득을 낮춰 보고하는 경향이 있으며 부유한 가정의 경우 이 폭이 더 크다. 필리핀의 경우 또 다른 문제는 게이트로 둘러싸여 있고 경비가 삼엄한 커뮤니티까지 조사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데이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Chandy와 Seidel은 국민소득계정과 가계조사에서 나온 추정 소득 간 격차를 활용해서 이 문제점을 바로잡으려 했다. 일반적으로 국민소득계정에서 나온 소득 소득치가 훨씬 크다. 이들은 두 추정치 간 격차의 절반이 “누락된 1%” 가구 때문이라고 봤다. 이들은 140개의 국가에 대해 연구를 했다. 이 연구 결과는 필리핀의 경우 지니계수가 최대 16%p까지 틀렸을 수 있다고 제시한다. 이렇게 되면 필리핀은 140개 국가 중 지니계수가 가장 높은 20개 국 중 하나가 되며 지니계수 조정 없이는 상위 40개국 정도의 수준인 것과 대비된다(Chandy & Seidel, 2017).

하지만 조정되지 않은 지니계수를 바탕으로 주변 아세안 국가들의 비슷한 데이터와 비교해 봐도 필리핀의 지출 지니계수는 이미 높은 수준이다(그림 4-6). 필리핀의 지출 지니계수는 인도네시아와 비슷하거나 태국 및 베트남보다 높았다. 이 네 개 국가를 제외한 다른 아세안 국가들은 지출 대신 소득을 사용했거나 데이터가 오래되어 직접 비교하지 않았다. 소득 지니계수는 일반적으로 지출 지니계수 대비 몇 %p 더 높다. 2018년 이전에 필리핀은 네 개 국가 중 지출 지니계수가 가장 높았다.

[그림 4-6] 일부 아세안 국가 지출 지니계수(2018)



자료: World Bank. (2020b).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bank.worldbank.org/data/download/WDI_excel.zip에서 2020.8.10. 인출한 자료와 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PSA). (2018b).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s Survey. [data files and codebooks, Files obtained from the 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세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라. 그룹 내 및 그룹 간 소득 불평등

필리핀의 불평등은 주로 지역 간이 아닌 지역 내 불평등이다 (Balisacan & Piza, 2008). <표 4-18>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는데 다양한 매개변수의 일반 엔트로피 지수(General Entropy Index)²³⁾를 사용해서 도시와 농촌 지역 간 불평등과 도시 및 농촌 지역 내 불평등의 구성을 보여준다. 이 표를 보면 그룹 내 불평등이 필리핀 전체 불평등의 91% (GE(0))에서 97%(GE(2))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지방이나 주에 따라 그룹을 분류해도 정성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난다.

23) 각각의 다른 매개변수 값은 소득 분포의 다른 부분에 대한 민감도를 나타내는데, 값이 낮으면 소득 분포 하단 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값이 높으면 상단 부분 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뜻한다.

〈표 4-18〉 1인당 소득의 일반 엔트로피 지수,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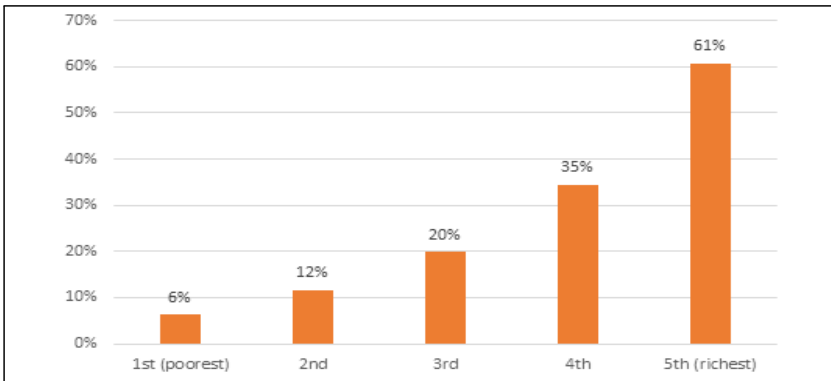
	GE(-1)	GE(0)	GE(1)	GE(2)	Gini
필리핀	0.363	0.308	0.366	0.988	43.0
도시	0.335	0.284	0.340	0.968	41.2
농촌	0.305	0.278	0.340	0.765	41.2
그룹 내 불평등	0.335	0.281	0.340	0.962	
그룹 간 불평등	0.028	0.027	0.026	0.026	

자료: 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PSA). (2018b).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s Survey. [data files and codebooks, Files obtained from the 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세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마. 비소득 불평등

필리핀의 불평등은 소득(그리고 부)의 불평등 뿐 아니라 상품과 서비스 접근성에 대해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대학교육 수료로 측정된 교육에 대한 불평등이 상당하다. [그림 4-7]에서 볼 수 있듯이 2016년 소득 상위 20% 성인의 61%가 대학교를 졸업했지만 하위 20%의 경우 이 비율이 6%에 불과했다.

[그림 4-7] 소득 분위수에 따른 대학 수료(2016)



자료: 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PSA). (2015).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s Survey. [data files and codebooks, Files obtained from the 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와 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PSA). (2017). Merged 2015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s Survey and Labor Force Survey. [data files and codebooks]. Files obtained from the 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의 세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또한 기본 서비스 접근성, 노동 시장 성과, 건강보험 접근성, 인터넷 접근성, 그리고 자동차나 다른 내구 상품 등 자산 소유에 대해 불평등이 심각하며 이는 다른 여러 연구에서도 드러난다.²⁴⁾

바.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코로나19 위기의 잠재적 영향

코로나19 위기는 필리핀 빈곤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 루존(Luzon)에서 3월부터 6월말까지 실시된 엄격한 봉쇄령과 이후 다양한 수준의 반봉쇄령은 고용과 가계 소득에 큰 손해를 입혔다. 봉쇄령이 가장 엄격했던 2020년 4월 실시된 노동력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9년 4월 대비 8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실업률 상승은 교육 수준이 가장 낮아 소득 역시 최저수준일 가능성이 큰 인구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Ducanes, 2020). 봉쇄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했던 2020년 7월에도 고용은 2019년 7월 대비 여전히 110만 명 낮았으며 실업자는 130만 명 많았다. Ducanes (2020)는 2020년 빈곤 가구의 수가 팬데믹 이전에 비해 140만 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

코로나19 위기가 소득 불평등에 준 영향은 좀 더 애매한데, 소득이 전반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포브스지에 따르면 가장 부유한 필리핀 10인의 순 가치가 2020년 9월 기준 작년대비 17% 하락했다. 동시에 많은 저소득 필리핀인, 특히 저가 서비스 분야 종사자의 경우 봉쇄기간 동안 일자리를 잃고 일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로 비소득 불평등은 높아졌을 가능성이 크다. 유치원부터 시작하는 12년 간의 교육과정(K-12)에 등록된 학생수가 약 300만 명 감소한 것에서 가장 잘 드러난

24) Albert, Dumagan, & Martinez(2015), McDoom, Reyes, Mina, & Asis(2018), Ducanes & Balisacan(2019), Asian Development Bank(2009) 등의 연구에서 이에 대해 다양하게 분석한 바 있다.

다. 2분기에 많은 가정이 소득 감소를 겪은 것과 디지털 기술 접근성에 대한 엄청난 불평등이 그 이유일 것이다(Ducanes & Tan, 2020).

4. 필리핀에서의 빈곤과 불평등 변화의 요인

가. 빈곤

앞 장에서 논의한 것처럼 필리핀의 빈곤은 90년대 중반부터 2012년까지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 시기 경제 성장은 빈곤 감소로 이어지지 못했다(ADB, 2009). 빈곤이 크게 감소하기 시작한 것은 2012년에서 2018년 사이였다. 2012년까지 빈곤 감소가 더딘 이유에는 빈번한 자연재해 발생(Larano, 2013.12.9.), 높은 인구 성장률(Balisacan, 2007), 빈약한 경제 성장 자원과 이에 따라 창출되는 양질의 일자리 수 적음(ADB, 2009), 그리고 해당 기간 상대적으로 높았던 식품 물가상승률(Son, 2008)이었다.

지방에 대한 패널 데이터를 사용해서 Fabella와 Ducanes는 2009년에서 2015년까지 필리핀 지방의 빈곤 감소가 현대적인 분야(산업 및 서비스 분야, 특히 산업)의 고용 성장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급격한 경제 성장과 함께 일어난 일이다. 특히 이 연구는 건설, 광산, 유틸리티를 포함하는 '기타 산업'에 고용된 노동 연령 인구 비율 1%p 증가는 전 지역 빈곤율 2.1%p 감소와 관련되고, 제조업에 고용된 노동 연령 인구 비율 1%p 증가는 빈곤율 약 1.2%p 감소와 관련되며 그리고 서비스 분야에 고용된 노동 연령 인구 비율 1%p 증가는 빈곤율 약 0.5%p 감소와 관련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농업 분야에 고용된 노동 연령 인구 비율과 빈곤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다(Fabella & Ducanes, 2020).

특히 산업 분야는 2000년 대 후반부터 견조한 성장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 성장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접근할 수 있었던 산업 분야의 고용 증가로 이어졌는데, 산업 분야 고용에 요구되는 교육 조건이 크게 높지 않기 때문이다. 급여 역시 농업에 비해서는 높다. 서비스 분야, 특히 교육 수준이 높고 처음부터 빈곤층이 아닌 사람들에게 대해 고용 기회가 많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금융, 부동산 등이 대부분의 성장을 주도했던 과거와는 상반되는 것이었다.

해당 기간 빈곤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밝혀진 또 다른 요인은 사회구호 프로그램(Pantawid Pamilyang Pilipino Program, 4Ps)으로 알려진 필리핀 정부의 조건부 현금 지급(Conditional Cash Transfer)이다. 필리핀 4Ps 프로그램은 2007년에 시작되어 2016년 12월까지 440만 가구에 혜택을 제공했다(World Bank, 2017). Acosta와 Velarde(2015)는 2013년 4Ps가 수혜 가구의 빈곤율을 64.5%에서 58%로, 식량 빈곤율은 35.2%에서 28.5%로 낮췄다고 추정했다. 이들은 4Ps로 인해 전국적으로 총 빈곤과 식량 빈곤이 모두 1.2%p 감소했다고 추산했다(Acosta & Velarde, 2015).

나. 불평등

필리핀의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 및 비소득 불평등은 필리핀 경제, 지역, 구조적인 성장 양상에 대한 대기업의 지배, 역사적으로 불평등한 인적 및 물적 자원 분포, 그리고 영세 및 중소 기업에 불리한 환경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Tuaño & Cruz, 2019).

필리핀은 다양한 차원의 무상 공공 교육을 제공하는 여러 법을 통해 교육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데 가장 큰 성과를 거뒀다. 이 중 한 예가 1988

년 무상 공공 중등교육법(Free Public Secondary Education Act of 1988)이며 해당 법에 따라 국립 중등 학교에 등록된 학생들은 교육비와 기타 학교 수업료를 면제받았다. 이 법은 시행 다음해 중등 교육 등록 증가율을 거의 2%p 끌어올렸으며, 이 증가분의 전체가 공립 학교에서 나왔다(Ducanes & Balisacan, 2019). 2013년 기본 교육법(Basic Education Act)이 제정되었는데, 필리핀 고등학교의 제도화와 중등교육을 4년에서 6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공립학교에서 추가 2년간의 교육에 대해 교육비와 기타 수업료 등은 역시 면제되었다. Ducanes and Ocampo(2019)는 이로 인해 16-17세, 또는 고등학생 연령대에서 학교 참여율이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최저 소득 인구층에서 증가율이 두드러지면서 빈곤층과 비 빈곤층 간 교육 격차가 줄어들었음을 보여주었다. 2017년 양질의 3차 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법 (Universal Access to Quality Tertiary Education Act)이 발효되었는데, 3차 교육에 대한 사회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Ducanes & Balisacan, 2019). 해당 법에 따라 학사 취득을 위해 국립 대학에 등록하거나 수료증 취득을 위해 정부 기술 및 직업 교육 기관에 등록한 학생들은 수업료가 무료였으며 다른 비용도 면제받았다. 이러한 정책의 영향을 평가하는 자료는 아직 없지만, 저소득 학생들의 3차 교육 학교 참여율을 전반적으로 높였을 가능성이 크다.

규제 완화 역시 접근성에 대한 형평성 향상에 영향을 미쳤다(Ducanes et al., 2020). 이 중 한 예가 메트로 마닐라와 인근 리살(Rizal)주의 상수도인데, 과거에는 정부가 독점했지만 두 개의 민간 기업이 영업권을 입찰을 받아 1997년 인수했다. 데이터를 보면 이 두 기업이 인수한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영업권 지역인 메트로 마닐라와 리살주에서 지역사회 상수도의 개인 또는 공용 수도꼭지에서 물을 조달한다고 보고한 가구 비율

이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필리핀 다른 지역에서 이와 같은 변화는 발견되지는 않았다.

5. 필리핀에서 빈곤의 특징과 대응

최근까지 필리핀의 공식 측정치는 소득 빈곤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공식적으로 다면적 빈곤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필리핀에서 소득 빈곤 측정은 매 3년마다 시행되는 가족 소득 및 지출 조사를 바탕으로 한다. 식량 빈곤선은 현실적인 전국적 최소 비용 식료품 묶음을 바탕으로 산출되며 이를 미세 조정하여 일부 열량 및 영양소 요건을 충족시키는 주 단위 식료품 묶음을 구성하고 여기에 가격을 매긴 후 365를 곱해 연간 측정치를 산정한다. 식량 빈곤선에 가까운 가구의 총 지출 대비 식료품 지출 비율의 역수인 상수를 식량 빈곤선에 곱해서 (식료품과 비료품에 대한) 빈곤선을 구한다.

필리핀 불평등은 공식적으로 지니계수를 사용하여 측정되지만 일부 소득 비율이 보고되기도 한다.

필리핀의 빈곤은 아세안 주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디게 감소해왔다. 필리핀의 빈곤율은 1990년대 중반부터 약 2012년까지 변동이 없었지만 그 이후 상대적으로 빠르게 감소했다. 하지만 빈곤은 각 지방 및 주에 걸쳐 매우 다르게 나타나며 여전히 농촌 지역 농업 근로자들 사이에 집중되어 있다. 지니계수를 기반으로 하는 필리핀의 불평등은 감소해오고 있지만 과소평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이유가 있다. 하지만 조정되지 않은 지니계수 역시 아세안 주변국에 비하면 높은 편이다. 대부분의 소득 불평등은 지역 간 불평등 보다는 지역 내 불평등 때문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불평등이

크게 나타난다.

코로나19 위기는 빈곤과 교육 등의 상품 및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불평등을 증가시킬 것이다. 소득 불평등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은 이보다 는 애매모호하다.

최근 몇 년 간 빈곤 감소의 대부분은 산업 분야의 견조한 성장에서 기 인했는데, 산업 분야는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이 낮은 근로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교육 수준이 높은 근로자들을 위한 일자리를 주로 창출했던 고급 서비스 분야가 성장을 주도했던 과거와는 상반된다. 빈곤 감소에 기여했을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은 정부의 조건부 현금 지원 프로그램 확대로, 이미 4백만 가정에 혜택을 주었다. 필리핀에 서 불평등 감소에 있어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교육 분야일 것이며, 다양 한 수준에서 최대 대학 교육까지 무상 공공 교육을 제공하는 법 제정에 따른 것이다. 독점 분해 형태의 규제완화 역시 접근성에 대한 일부 불평 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필리핀에는 아직 빈곤과 불평등 감소를 위한 여러 도전과제가 남아있 다. 필리핀 경제 성장을 최소 2년 지연시킨 코로나19로 인해 이 도전과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졌다. 하지만 필리핀은 경제를 팬데믹 이전 성장 궤도 로 돌려놓는 것 뿐 아니라 보다 포용적인 성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지 난 30년 동안 시행되어 온 구조 및 사회 개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제2부

북한 주민의 생활실태

제5장 식생활과 건강

제6장 의생활과 유행

제7장 주생활과 생활환경

제8장 북한 주민 소비품목의 탐색

제9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5장

식생활과 건강

제1절 농업개혁과 식량생산

제2절 식생활 실태와 건강

제 5 장 식생활과 건강

제1절 농업개혁과 식량생산

1.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시행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모든 분야에서 시장을 매개로 하는 경제운영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라고 하는 북한식 경제개혁의 추진이며, 식량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북한은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과 함께 2012년부터 농업개혁에 착수하였다.

농업개혁은 국가는 협동농장에게, 협동농장은 농장원에 대해 자율권을 확대하여 생산증대와 영농효율을 증가시키는 반면, 농장원과 협동농장은 국가에 자율권에 상응하는 영농의 결과를 납부하여야 한다. 즉, 협동농장의 생산물 중 곡물, 고기, 과일, 말린 고치는 중앙지표이고 나머지 농산물은 협동농장의 자체 지표이기 때문에, 협동농장은 중앙지표의 생산과제 수행을 우선시해야 하며, 중앙지표의 생산 목표량은 국가 수매를 통해 국정 가격으로 국가에 판매한다. 그런 이후 협동농장은 자체 지표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포괄적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자체 계획권, 소득 분배권 및 자금 조달권, 잉여 농산물의 판매권 및 가격 제정권, 농장 조직의 조정권, 농장의 자체 조달 자금을 통한 설비 투자권, 공예 농산물의 무역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권태진, 2018, p. 6).

가. 농장책임관리제 실시

농장책임관리제란 “협동농장과 농장이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하여 실제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기업활동을 창발적으로 하여”, “농업근로자들이 생산과 관리에서 주인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는 농장관리방법”이다(심철룡, 2019, p. 39). 심철룡(2019)에 따르면 농장책임관리제에서 경제적 공간 이용은 다음의 세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생산과 분배, 유통, 소비 등 농업 재생산의 모든 계획, 생산, 과학기술, 노동조직, 생산물 유통, 재정회계 등 모든 측면에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게 된다. 둘째, 분조를 단위로 계획권 및 생산조직권을 적용하며 연간 결산분배를 통해 국정 수매가격인 현금분배가 아니라 시장가격으로 처분이 가능한 현물 분배를 실시한다. 셋째, 가격제정권 및 판매권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지표로 설정한 규칙에 의거해 계절성 요인, 수요·공급 요인 등을 고려하여 가격 차등을 준다. 넷째, 농업부문 특성에 맞게 무역과 합영·합작도 도, 시, 군 안의 농업부문 경영위원회를 단위로 적용할 수 있다(심철룡, 2019, pp. 39-40).

농장책임관리제란 공업 분야의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농업분야에 적용한 경제관리법으로 농업을 기업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목적을 담지고 있다. 여러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실제 협동농장 안의 1개 작업반은 150-200명으로 내외로 군 단위 지방공장 규모이다. 1개 분조는 20여명 내외의 소규모 지방공장 규모이다. 그리고 말단 단위의 계획 및 생산 목표를 조직하는 마지막 책임자는 분조장이다. 기존에 작업반의 반장이 관리기능을 수행했다면 농장책임관리제 실시로 인해 작업반 아래 분조장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며 관리권한이 분권화 된 것이다. 분조장은 분조 안의 3-5가구의 가구 현황 및 노동력의 특성, 토지의 비옥도, 집과 경작

지와의 거리 등등을 고려하여 포전을 분할하고 노동력을 배치하는 권한을 갖는다. 또한 분조장은 분조 내 포전별 영농현황을 점검하고 국가 수매 작물의 납세분을 수확할 수 있도록 관리 책임을 진다. 이에 북한은 2013년 12월 이례적으로 2014년 농사만을 단일 안전으로 다룬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고 각 협동농장에서 분조장을 능력 있는 농장원으로 구성하였으며, 그들의 수준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정창현, 2014. 2. 10.). 그리고 이듬해 1월 31일 북한 역사상 처음으로 '농업 분조장대회'를 개최하여 협동농장의 최말단 조직책임자인 분조장만을 모아 회의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 회의를 기점으로 농업부문에서 포전담당책임제를 전면화하는 계기로 삼았다.

나. 포전담당책임제 실시

포전담당책임제는 3-5명의 농민에게 하나의 포전을 맡겨 생산을 책임지도록 하는 소영농제도이다. 기존의 협동농장 조직은 약 20여 명 정도로 구성된 분조와, 분조가 담당하는 평균 50여 정보의 토지에서 농업생산을 관리 책임지도록 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경제난을 겪으면서 식량 생산의 획기적 증산이 요구되자 분조관리제의 분조 규모를 기존 20여 명에서 7-8명 단위로 줄이고, 협동농장의 자율성을 강화한 바 있다. 2002년 이른바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이하 7.1조치)가 그것이다. 그리고 2004년에는 분조마저 나누어 포전별 생산량책임제 실시하도록 시도하였다. 각 포전별로 생산량, 토지사용료, 영농물자, 비료 등의 대금을 현물로 상납하고, 나머지 농작물에 대한 처분권을 협동농장이 소유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포전담당책임제가 개인농, 사유농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황색 바람의 하나로 취급되어 전면 실시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포전담당책임제는 김정은 시기인 2014년 이후 전국적으로 실시되었고, 2015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장법’의 분조관리제 조항 안에 포전담당책임제를 삽입하여 법제화를 하였다(양문수, 2017, p. 84)

〈표 5-1〉 북한의 농장법 개정 사항

구분	종전 법령	2012-2015년 개정 법령
농장의 경영활동원칙	언급 없음	농장책임관리제의 실시
농장 운영 관련 제도	분조관리제, 작업반우대제, 독립채산제 실시	분조관리제 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와 유상유별제 실시
계획지표의 분담	언급 없음	중앙지표와 농장지표의 구분, 농장은 중앙지표 달성 전제 하에 자체로 농장지표 계획화 가능
농업생산조직 및 노동력배치	언급 없음	여러 부업생산단위 자체 조직 가능. 직종별 노동력 배치 관련 자율성 확대
농장의 재정 관련 권한	언급 없음	농장의 현금 보유 가능, 농장지표를 통해 획득 자금의 경영활동 무제한 사용 가능, 주민들의 유희 화폐 자금 동원 이용 가능
결산분배	원론적 언급 (현금분배방식)	현물분배를 기본, 현금분배를 결합하는 방식
국가 수매와 농장의 자율처분	일정 수량만 남겨두고 전량 국가에 수매	국가수매량 납부 이후 남은 물량을 농장이 자율적으로 처분 가능
가격 제정 및 판매 권한	일부 농산물을 직매점 판매 가능	국가수매량 납부 이후 남은 물량을 기관, 기업소 등에 판매 가능, 농장지표와 부업생산물은 농장 자체로 가격 결정 및 판매 가능

자료: 양문수. (2017), 김정은 집권 이후 개정 법령을 통해 본 ‘우리식경제관리방법’, 통일정책연구, 26(2), p. 84.

2. 식량생산 추이와 배분

가. 식량생산과 쌀값 안정

포전담당책임제를 위시한 농업개혁의 성과는 곡물 생산량의 증대로 나타났다. UN OCHA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에는 약 543만 톤에서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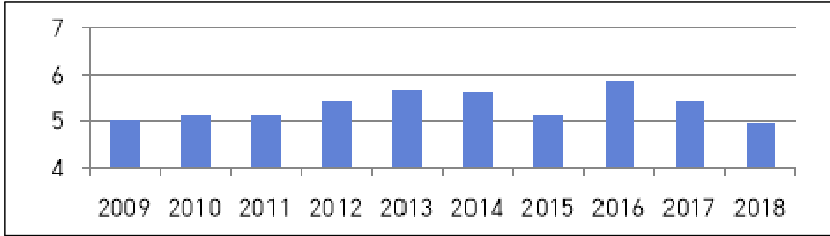
년에는 569만 톤, 2014년에는 565만 톤으로 증가했고, 2016년 북한 조선로동당 제7차 당 대회가 열리는 해에는 589만 톤의 최고 생산량에 이르렀다(UN OCHA, 2019, p. 5). 국제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이 생산해야 하는 식량의 최소 소요량 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하는 최소 소요량의 75% 수준으로 감안했을 때 한해 650만 톤의 곡물이 있어야 기본적인 식량과 최소한의 가축 사육이 가능하다고 판단 한다(이유진, 2015, p. 4). 여전히 북한의 식량 생산은 완전한 자급 상태에 미치지 못하지만, 김정은 시기 농업개혁은 상당한 증산의 효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쌀 시장가격 또한 유사한 추이를 나타낸다. 국내에서 북한의 쌀 시장가격을 조사하고 있는 NK Daily의 추적 결과를 보면 2009년 12월 화폐개혁 후 1Kg 46.4원이던 쌀값은 2012년 9월까지 전체 관측 기간 중 최대치인 6,800원을 기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2013년 말에 들어서서 4,000-6,000원대의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가격 추이는 2020년까지 지속되고 있다. 2020년 8월 현재 북한의 쌀값은 4,400원 수준이다(데일리NK, 2020a).

반면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수소탄)과 12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에 따른 UN 안보리 결의 제2375호와 제2397호가 발효되었다. 고강도 대북한 경제제재가 실시된 것이다. 북한의 식량 생산 추이는 2017년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8년에는 크게 감소하였고, 2019년 현재 464만 톤의 식량생산을 추정한다(김영훈, 2020a, p. 14). 그렇다면 대북한 경제제재 이후 식량생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경제제재의 여파가 구조적으로 침투하고 있다고 했을 때 안정적인 물가와 쌀 가격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림 5-1] 북한의 곡물 생산량(2009-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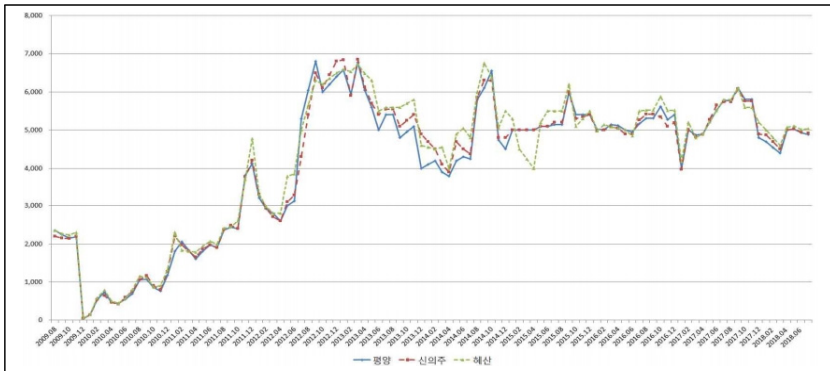
(단위: 백만 ton)



자료: UN OCHA, (2019). DPR KOREA Needs and Priorities 2019.3.
<https://www.unocha.org/story/dprk-beyond-numbers-human-cost-our-inability-respond-unmeasurable> 에서 2020.9.30 인출

[그림 5-2] 북한의 쌀값 추이(2009-2018)

(단위: 원)



자료: 데일리NK. (2020b). <http://www.dailynk.com/> '北장마당-동향'에서 2020.5.1. 인출

우선 2017년 이후 북한의 곡물수입 추이가 크게 증가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대외무역 교역국 1위인 중국으로부터 곡물수입을 확대하였다. 통계를 보면 2017년 6,600만 달러에서 2018년 9,100억 달러, 2019년에는 1억 5,500만 달러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것은 북한의 식량생산이 감소세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쌀값이 안정세를 보이는 이유

이다. 또한 대북한 경제제재의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았으며, 특히 중국으로부터 곡물 수입이 상쇄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김영훈, 2020b, p. 11)

나. 차등적 결산배분 현황

2019년 북한이탈주민들과 만나 북한에서 경제제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일상에서 느끼는지 질문한 바 있다. 질문을 던질 때 마다 그들은 ‘평생 제재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별 다를 것 없다’는 투로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제재의 여파는 농업개혁이 진행될수록 결산분배의 차등적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FAO와 WEF는 북한 인구의 대부분이 중앙배급체계를 통해 주식을 공급받고 있으나 이들은 근로자, 정부 관료, 또는 연금수급자들이다. 그리고 나머지 인구는 수확 후 할당을 통해 식량을 직접 해결하고 있다. 대체로 협동농장 농장원이나 국영농장 소속 농민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 포전담당책임제는 각 포전마다 영농차비로부터 수확, 탈곡에 이르기까지 모든 농사과정을 책임지고, 결과에 따라 농민들에게 결산 분배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농업개혁의 결과는 매우 차등적 결과를 배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의 다수확 본보기 농장인 황해북도 미곡협동농장, 황해남도 삼지강협동농장 등은 농업개혁의 성과를 누리고 있다. 예를 들어 삼지강협동농장은 작업반 9개에 분조가 36개 있으며 분조는 대체로 2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포전담당책임제 실시 이후 5명을 한 조로 하여 포전으로 담당하게 하였다. 평야지대에 위치하여 농업생산 조건이 양호했던 이 농장은 포전농사 이후 다수확 생산을 거두었고, 농장원들은 많은 양곡을 현물로 분배받았다(김지영, 2013.12.25.; 박희진, 2020b, pp. 221-

222에서 재인용) 그러나 산간지대에 위치한 양강도 김정숙군 신상협동농장의 경우는 협동농장의 분조 안에서 포전별 좋고 나쁜 땅을 고루 나눠주지 않고 간부들과의 인연에 따라 포전 땅을 분배하였다. 영농자재와 비료를 비싼 값으로 공급하고 가을에 수확한 식량을 값싸게 매겨 농장원의 현물분배 때 농장의 영농자재 몫을 크게 차감하고 배분하였다. 분조의 농민들이 항의하여 분조장이 사직서를 내는 등의 일이 발생하였다(문성휘, 2014.4.1.; 박희진, 2020b, p. 222에서 재인용). 땅의 형질과 비옥도가 농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보니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시한 이후 협동농장별 편차가 크게 나타난 것이다. 함경북도 길주군 안의 협동농장들은 농장 간부들이 분조들끼리 해마다 담당 농지를 바꾸어 농사를 짓는 ‘포전순화제’ 도입을 결정했다는 보도도 있지만 전국적 실행은 여의치 않다(문성휘, 2015.3.25.; 박희진, 2020b, p. 222에서 재인용).

차등적인 결산배분의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는 협동농장에 영농물자와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해 주어 토지 형질과 비옥도의 격차를 보완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면 포전 스스로가 영농에 필요한 물자를 시장에서 조달해야만 한다. 경제제재의 여파로 영농물자 구입이 어려워지자 분조장의 능력 즉, 분조장이 영농물자와 소요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는가의 문제로 나선다. 이에 한시적으로 “분조원들은 도시의 돈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농사를 짓고 연말 결산 때 현물로 상환하거나(자금지원), 토지의 질이 나쁘다면 외부의 자금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땅을 임대하여 대신 경작하게 하거나(토지임대)”, 농업생산을 증대할 수 있는 농사기술이 탁월한 농업 경영인을 요청하는 방식(전문경영) 등을 선택하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박희진, 2020b, p. 223). 농업개혁 이후 북한의 농업과 농촌이 도시의 시장화 흐름과 함께 차등적 생활실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표 5-2〉 북한 가구 식량공급원과 중앙배급체계 의존 비중

가계구분 (비중)	식량공급원					현금
	중앙배급체계 배급	텃밭	국영상점 쿠폰	민간농민 시장	친인척	
중앙배급체계의존 (71.5%)	중앙배급체계 배급	텃밭	국영상점 쿠폰	민간농민 시장	친인척	임금
협동농장농민 (28.5%)	수확 후 할당 (1-2회/1년)	텃밭, 개간산지경작	국영상점 쿠폰	민간농민 시장	친인척	수확 후 현금할당

자료: FAO/WFP. (2019). Joint Rapid Food Security Assessment-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2019.5), p.29. table.11, 12 참조하여 저자 작성.
<http://www.fao.org/documents/card/en/c/ca4447en>에서 2019.11.2. 인출함.

제2절 식생활 실태와 건강

1. 식생활 종합실태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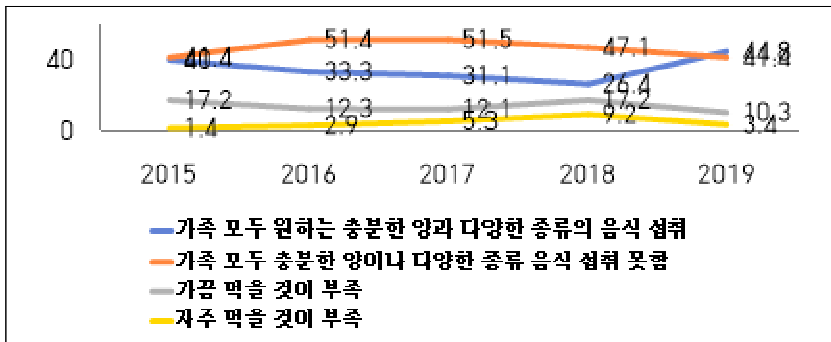
북한의 식량 생산 추이는 북한 주민의 식생활 실태와 밀접한 연관관계를 보인다. 특히 2013년 식량 생산 추이가 전반적 상승 및 약간의 감소세를 보일 뿐 큰 폭의 하락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추세는 북한 주민의 식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대 사회변동조사의 식생활 조사항목을 보면, ‘하루 세끼 이상 식사를 했다’는 응답은 2014년 이후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5년 86.9%, 2016년 89.9%, 2017년 87.7%, 2018년 87.4%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한 끼도 먹지 못했다는 응답은 2015년 이후 1% 미만으로 나타나 결식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천경효 외, 2019, p. 34). 통일부의 경제사회심층조사 결과에서도 2019년 전체 응답자 중 82.6%가 1일 3회 식사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전반적으로 식생활 개선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미(2020)의 분석에 의하면 식생활의 질적 측면에서도 ‘거의 입쌀

을 먹었다’는 응답이 2015년에는 61.4%였으나, 2016년 60.1%, 2017년 52.3%, 2018년 45.3%로 감소하다가 2019년에는 69.0%로 크게 상승하였다. 고기섭취 빈도 또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먹었다’는 응답이 2012년 3.2%에서 2019년 15.5%로 12.3%p나 상승하였다(천경효 외, 2020, pp. 34-77).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모든 데이터는 북한 주민의 전반적인 식생활 향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시장화 이후 식량 공급이 시장구매로 전환되어 주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3] 북한이탈주민의 식생활 종합실태 연도별 추이



자료: 천경효, 강재연, 박상민, 이해원, 정은미, 임경훈, 조용신. (2020). 북한사회변동2019: 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 보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p.42.

가. 부식물 섭취의 차이

일반적인 식생활 개선과 달리 부식물 섭취에서는 생활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북한 당국은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전통적인 부식물 섭취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과거에는 곡식을 적게 소비하면서도 식생활을 다양하게 하는 방안으로 채소와 산나물 등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주식인 밥도 쌀로만 지을 것이 아니라 제철 채소와 산나물, 들나물 등을 섞어 볶음밥, 비빔밥 등으로 만들어 먹고, 팥, 콩이나 갖가지 채소를 이용

하여 죽을 만들어 먹으면 좋고 소화에도 좋으며 영양섭취에도 효과적"이라든가 "자기 지방 특산음식을 적극 발전시키자면서 식생활의 다양화와 음식문화의 균형적 발전을 강조하여왔다(본사기자, 2019.8., p. 52).

김정은 시기에는 '먹는 문제 해결'을 최우선적 과제로 제시하며 식량증산의 재원으로 토끼, 양어와 메기 등 양식 물고기와 닭, 염소, 버섯재배 등을 강조하고 있다. '고리형 순환생산체계'라 하여 농작물 재배와 축산물 생산을 결합한 복합생태기술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축산물에서 나오는 가축배설물로 유기질 비료를 많이 생산해 농업토지의 지력을 높이고 알곡생산을 늘어나면, 다시 사료문제가 해결되어 축산물 생산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주식 섭취만이 아니라 식생활의 질적 개선을 위해 다양한 대체 방안을 마련할 데 대한 적극적 조치인 셈이다. 최근에는 식료품 공장의 현대화와 함께 북한 당국이 주도하여 간장, 된장 의 장류부터 엿, 과자, 파배기 등의 기호 식품류를 생산 보급하고 있다 (최은경, 조미숙, 2019, p. 264). 구술자들은 거의 모두가 공산품은 몰라도 식료품은 '북한산'이 최고라고 말한다.

그러나 2010년 이후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여성 24명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면접자들의 소득수준을 '상, 중상, 중, 중하, 하'의 5단계로 분류했을 때 부식물의 섭취에서 소득수준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이 높은 계층은 쌀밥을 섭취하고 고기, 생선, 채소 등의 부식 섭취 뿐 아니라 장마당이나 상점을 통해 사탕, 초콜렛, 과자, 커피 등과 같은 중국 식품을 구매하여 간식으로 섭취했다고 응답했다. 반면 경제적 수준이 하층이라고 응답한 계층은 주식으로 감자밥이나 강냉이밥을 먹고 텃밭에서 기른 채소 절인 것이나 김치가 부식의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식도 강냉이 튀긴 것이나 엿이 유일했다고 조사되었다(윤소윤, 짱청위, 조서호, 윤지현, 2016, p. 169)

역으로 2015년~2016년 시기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북한주민의 식생활 욕구조사에 의하면 ‘매일 먹기를 원하다’는 응답이 과일 54%, 다과 51%, 고기 14%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기는 주 3회(54%) 먹고 싶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이것은 “현재 북한의 식생활 수준이 세끼 식사 이외에는 부식물 및 간식에 대한 공급이 부족하다는 점을 반증”한다. 그리고 “식생활 욕구 중 고기·과일·다과의 욕구는 응답자의 경제적 수준과 양의 관계”를 보여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욕구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소성규, 박희진, 장인숙, 정병화, 정은미, 2017, pp. 53-54).

나. 외식문화 빈도의 차이

식생활에서 가장 뚜렷한 격차는 얼마나 자주 외식을 하는가와 한 끼 식사에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출하는가이다. 외식의 빈도와 소요비용은 현재 북한의 소득차이와 부유계층을 구별하는 또 하나의 지표가 되고 있다. 시장화 이후 북한 주민의 외식경험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북한의 도시와 지역에는 식당 및 음식점이 다양하게 들어서서 고급한 음식점부터 저렴한 한 끼 식당까지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외식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통일부의 비공개 심층조사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 전체 응답자 중 외식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58.0%이며, 외식경험이 없다는 응답자는 41.1%이다. 외식 장소로는 장마당이 77.3%, 개인식당 36.2%, 국영식당 6.0% 순으로 나타났으며, 외식경험은 소득수준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사회활동이 비교적 활발한 젊은 연령과 남성, 도시민, 장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부류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그동안 북한이탈주민들과 진행했던 인터뷰를 종합해 보면 외식문화의 확산 이유는 기존의 노동과 직업 생활이 시장화 이후 변화했기 때문에 나

타나는 현상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과거 직장 생활을 했을 때는 점심을 구내식당에 해결할 수 있었다. 대학생만 하여 교내에 식당을 주로 이용했었다. 그러나 지금 해당 식당들은 사영업자에게 임대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사영업자들이 그 자리에 식당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선택사항이 되었다. 시장에서 장사활동을 하거나 지역 간 출장업무를 보는 사람들, 지방에서 올라온 각 직군의 군인, 대학생, 직장인 등은 이제 식당에서 음식을 사먹는 문화로 변화한 것이다. 특히 무역업자들은 무역파트너와 고급식당에서 음식접대를 하는 것이 늘어났으며, 가격이 비싸고 고급할수록 큰 무역 장사꾼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큰 도시에는 음식 거리가 형성되고 고급한 식당은 간부 식당이라 칭한다.

〈구술자 A씨〉는 국경도시에서 식당을 했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출한 식당을 인수하여 처음에는 지방에서 도시로 온 대학생들에게 점심 장사를 하다가, 입소문이 나서 직장인들도 많이 드나 들었다고 한다. 장사를 확대하기 위해 도시에게 가장 큰 ‘○○각’이란 중국식 식당에 가본 적이 있다고 한다. 식당을 키워 그런 전문음식점을 운영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식당의 가격 차이는 비교할 바가 아니다. A씨에 의하면 자신이 파는 한 그릇의 옥수수 국수는 조선돈 1,500원, 메밀국수는 조선돈 4,000원인데 반해 큰 식당의 음식점 요리 하나는 인민페 25원이었다고 했다.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다는 〈구술자 B씨〉는 아이들 현장학습이나 소풍, 운동회를 갈 때는 도시락을 주문 배달해서 보냈고(인민페 50원), 외식도 자주 했다고 했다. 아래의 구술은 외식문화가 실제 북한 주민 사이에서 얼마나 부의 과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웬만해서 큰 식당 같은 데는 한두 주일에 한 번씩 나가구요. 소식당 같은 데는 그저 거기에 가서 먹어도 100원은 인민비 100원, 70원 이

렇게는 쓰거든요. 70원은 쓰고 오거든요. 뭐 크게 먹은 거도 없는데 거기가 좀 작은 식당이거든요. 그런데 벌써 친구들이 모여서, 가족이 한 서너 팀이 가서 벌써 먹는다면 이미 이거 5-600원, 7-800원 순간에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먹고도 돈 낼 때는 엄청 아깝거든요. ‘야 우리 이 돈을 어떻게 버는 돈인데 이렇게’, 한 끼에 그러거든요. 그걸 이자처럼 그 돈을 갖고 우리가 조미료를 사서 하면 며칠 해도 그걸 다 못 먹거든요. 그런데 하두 식당에 사람이 환경이 좋고 깨끗하고 분위기도 좋고 이러니까 그저 한 번씩 가서는 그렇게 먹고는 오면서 우리 이렇게 말하거든요. ‘야 우리 미쳤다. 돈 힘들게 버는 돈 하루 아침에 싹 써치우고. 널 부터는 우리 밥 먹지 말자’. 근데 많이 문명해지긴 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니까 빈민차이가 엄청 심하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기차게 많아요.” (구술자 B)

2. 건강과 보건실태

김정은 시기 북한은 종합병원 설립 등 의료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의학 연구소, 의약품공장을 현대화하면서 보건의료분야의 기술적 개선과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통일부 심층조사도 김정은 시기에 북한 주민들의 병원 이용 비중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병원 이용 목적’을 2012~2019년 추이로 조사했을 때 평균 질병 55.6%, 상처 치료 18.8%, 통증 13.8%, 임신 및 출산 12.9%, 건강 검진 6.4%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질병 때문에 병원을 이용하는 목적은 감소하는 반면 건강 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는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거시 추이로 볼 때 북한의 의료 서비스 범위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시장화 이후 식생활에 소득 차이가 반영되고, 식생활 문화가 소득계층별 차이로 나타나는 것처럼 북한 주민의 영양과 보건 상태 또한 양극화 추이를 보인다. 국가는 국제사회의 지원에 의존하고, 주민들은 시장

을 통한 약품 구입에 의존하면서 소득에 따른 계층별 의료서비스 접근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가. 국제사회의 지원 의존

세계기아지수(GHI)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기아지수는 2019년 ‘심각’과 ‘위험’ 상태 사이에 위치하며, 2019년 측정된 119개국 중 109위를 차지하였다(Global Hunger Index, 2019). 2020년을 기준으로 107개국 중 96위로 다소 완화되었으며 단계도 ‘심각’한 상태로 평가되었다(Global Hunger Index, 2020). FAO와 WFP는 2019년 현재 북한은 136만 톤의 식량이 부족하며(FAO/WFP, 2019, p. 43), 식량안보의 취약성이 곧 북한 국내 빈곤층의 생계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 주민들의 영양 상태는 ‘충분히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지 못하여 영양부족의 악순환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추정한다(UN OCHA, 2019).

거시적으로 보면 북한의 유아사망률과 아동사망율은 감소세를 나타내고, 95%에 육박하는 높은 예방접종률은 영유아 질병 예방에 상당한 개선을 이루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여전히 5세 미만의 아동이 사망하는 원인은 설사와 폐렴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기초보건 상태는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는 충분한 영양섭취, 필수약품 그리고 경구 수액제만으로도 예방율을 높이고 사망률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2017년 기준 산모사망률 역시 출생아 100,000명 당 89명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신희영 외, 2019, p. 186). 북한의 전체 출산 중 8.9%의 산모가 집에서 출산을 하는데 (UNFPA, DPRK, 2015, p. 82), 이 경우

산모의 사망 가능성이 높아진다. 집에서 출산하는 경우 산모 사망의 주원인인 분만 후 출혈, 감염, 폐혈증 등이 충분히 예방되지 못하고 감염되어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한편 북한의 결핵 발병률은 2000년 이후 인구 100,000명 당 500명 안팎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신희영 외, 2019, p. 192). 북한에서는 매년 10만 건 이상의 결핵 발생 건수가 보고되고 있고, 500명 이상의 다제내성 결핵(MDR-TB)이 발생하고 있다(WHO, 2019, p. 35). 이에 2018년 북한은 IPPF(International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의 지원을 받아 ‘연합진료소 창설’ 계획을 수립하고 24-여개의 리(里)진료소들에서 임산모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총 443,041건의 재생산 건강봉사를 진행하였다. 보건의료 기초단위인 진료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시급한 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이었고, 의료 시급계층에 대한 건강봉사를 단행한 것이다(조선가족계획 및 모성유아건강협회, 2019). 국가의 의료전달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못한 현실과 의료전달체계를 통해 의약품이 제대로 공급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지원하는 기초보건 치료와 의약품 공급에 알맞은 연합진료소 체계를 기획한 것이다.

〈구술자 C〉는 2017년 도(道) 산원병원에서 출산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산모수첩과 진찰, 출산 등은 의사에게 담배 한 갑 정도 제공하고, 출산 시에는 조선 돈 3만원(인민페 20원)을 지불했다고 했다. 영아는 출산 후 일주일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해서 주기적으로 진행했다고 했다. “예방주사는 무료예요. 유엔에서 들어왔다는 예방주사, 주사기 한 대씩 딱딱 애한테 맞고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거” 하면서 작은 일회용 주사기를 신기하다는 듯 구술했다. 영유아 및 모자보건 분야는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물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북한은 평양에

유선종양병원을 현대화 한 이후 2014-2015년 시기 전국 인민반 별로 여성의 유방암과 자궁암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2018년 국경을 넘다 걸려 단련대에 구금되었을 때는 의사들이 여성 모두에게 자궁, 질염에 관한 구강약과 좌약을 복용케 하도록 하였다고 했다. <구술자 C>는 북한 당국은 다른 건 몰라도 여성과 아동 즉 모자보건사업은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많이 개선 향상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구술자 D>의 경우는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북한 전역의 유명하다는 병원은 다 다녀보았지만 불신만 가득한 경우였다. 평양의 종합병원에서도 CT 사진을 찍었고, 약 100불 정도 지출했다고 했다. 가는 병원마다 진단이 다르고 원인을 찾지 못했다. 끝내 좋은 결과는 얻지 못했다고 했다.

북한의 의료 현황은 의학적 지식, 과학기술적 장비, 훈련된 의료진과 병원시설 등의 면에서 취약하고 부실한 상태이다. 당국은 동의학을 강조하면서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이미 발병한 환자들에 대한 치료는 정확하게 제 때에 치료되고 있지 않다. 북한에서 자주 유행하는 질환은 독감, 간염, 결핵이 대표적인데 국제기구를 통해 청진기, 혈압계, 백신 등의 예방약을 공급받아 지역별로 균등하지 못한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하고 실정이다.

나. 의약품의 시장 의존

북한 주민들은 병원과 의료진에 대한 불신이 깊은 편이다. 서울대 사회변동조사에서도 무상치료에 대한 만족도는 긍정적 답변이 19%인데 반해 부정적 응답이 50.0%로 나타났다. 부정적 답변 중 '매우 불만족'이라는 응답은 3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천경효 외, 2020, p. 126). 환자 입

장에서는 어차피 완전한 무상치료도 아니고, 치료비 대신 처방전에 따른 약품 값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대체로 자가 진단을 통해 시장이나 개인약국을 통해 약을 구매하여 복용하는 방식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앞선 <구술자 D>는 현재 북한 내 의학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의대 진학 학생들의 대다수가 학업성취는 낮으면서 돈이 있는 부유계층들이기 때문에 의대를 졸업하고 나온 최근의 의료진 실력은 한심하다는 것이다. 의학대학에서 학업을 진행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이를 감당할 만한 부유층의 자식들만이 진학하기 때문에 이들의 실력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김정은 시기 북한 당국은 의사들의 근무지 외 진료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방침아래 의료진의 개인 진료를 허용하였다. 구술자들에게 의하면 병원 당국이 해결하지 못하는 환자 치료의 문제를 의료진 개개인들이 사적 의료행위를 통해서라도 치료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는 것이다. 다만 반드시 개인병원, 개인약국의 의료행위는 관련한 자격증을 갖춘 이들만이 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자격증을 보유한 개인 의사들이 병원 근무 대신 집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공식적으로 진료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약값에 진료비를 더하여 약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구술자 D>에 의하면 의약품은 대부분이 중국산이며, 북한 자체로 생산하는 의약품은 포도당(5%짜리와 25%짜리 두 종류), 회충약, 동약(고려약) 정도라고 했다.

북한의 독특한 현상 중 하나는 자가 진단 및 자가 치료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또 동의학의 실제적 활용도 매우 일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구술자 E>는 북한 ‘가정에서 ‘나비침’ 놓는 방법은 거의 다 할 줄 알며, 또 집안에 환자가 있다면 주사도 놓을 줄 알게 되고, 약 이름들도 대충 알

기 때문에 웬만한 병은 다 자체로 해결하는 편'이라고 했다. 환자와 환자의 가족이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곧 의사·약사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력이 있는 집에서는 병원보다 침을 잘 놓는 민간 침술사들을 집 안에 들여 치료비 대신 숙식을 제공하며 장기간 한의 치료를 받기도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식생활과 건강에 관한 북한주민실태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은 시기 전면적인 농업개혁은 농업생산량 증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향후 대북경제제재 및 기후변화 변수가 농작물 생산에 어떻게 나타날지 보아야겠지만 거시적 추이로 보면 긍정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둘째, 식생활이 개선되고 식량부족으로 인해 끼는 굶는 일은 발생하고 있지 않다. 다만, 농업개혁 이후 농촌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농업소득에 따른 계층화 현상이 도시의 시장화와 맞물려 구조화되고 있다는 점이 파악되었다. 또한 소득의 격차, 소득계층의 불균등한 분포는 북한 주민의 식생활 환경에도 빈부격차가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셋째, 건강과 보건실태 또한 거시적으로 개선되는 긍정적 신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영유아, 모자 보건 분야의 국제 지원에 의존하고 있고 전염병, 결핵 등의 예방치료제에 대한 국제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병원시설 및 의료진 불신은 향후 개선·향상되어야 할 사안으로 나타났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6장

의생활과 유행

제1절 경공업의 현대화·국산화

제2절 새로운 트렌드(trend)

제 6 장 의생활과 유행

제1절 경공업의 현대화·국산화

김정은 체제는 농업과 함께 경공업을 경제의 주공 전선으로 선정하여 농업부문에서 경제개혁 조치를 시행한 것과 같이 경공업 부문에서 '인민 생활 필수품' 생산을 위한 적극적 개혁 조치를 취하고 있다. 북한은 2013년 3월 18일 전국경공업대회를 개최하고 이 대회에서 김정은은 경공업발전에 역량을 집중하여 경공업을 종자로,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완강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정은, 2013.3.18.). 2015년 1월 1일 신년사에서는 “사대와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라면서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수입병을 없애고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할 것을 지시하였다(김정은, 2015.1.1.). 경공업 생산을 증대하되 자본, 기술 및 원료의 수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국내의 공업생산 토대를 강화하여 국산제품을 생산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이러한 강조의 배경에는 북한이 처한 대외정치적 환경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는 자립적 경제강국을 건설하는 것이 목표이다(리기성, 2017, p. 47). 김정일 시기 주저했던 경제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이유도 현 시기 경제성장만이 김정은의 통치력 확보, 지지기반 강화, 사회적 균열의 완화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화 정책이 심화될수록 북한의 내수시장은 대중국 의존도가 심화되고,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의존은 또 다른 정치적 예측을 가져올 수 있는 후과를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2016년 이후 북한 핵 문제로 인해 국제사회의 대북한 경제제재가 심화하면서 이를 돌파할

수 있는 대안적 경제정책이 요청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자강력 경제'를 정치적 슬로건으로 삼아 경공업 분야를 먼저 개선·현대화하고, 경공업 제품의 질을 개선하여 수입품을 대체할 수 있도록 대량생산, 질 좋은 상품 생산, 그리고 낮은 가격의 제품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1. 성장하는 의류 시장

가. 의류 임가공, 외화벌이 활성화

북한 주민의 의생활 부문은 북한 당국이 추진하는 경공업 분야 중 가장 먼저 활성화되고 대중화된 시장화 영역이다.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산 의류제품이 원단, 반가공품, 완성품 및 중고 제품의 형태 등으로 다양하게 수입되었고, 여성에게 특화된 방직, 의류, 섬유, 피복 분야는 대부분이 외화벌이를 위한 수출 임가공 형태로 운영되거나, 평안남도 평성시와 함경북도 청진시를 거점으로 하여 전국적인 생산 유통 체계를 갖추고 있다. 여러 북한이탈주민들이 옷만 봐도 어느 지역 생산품인지 알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의류생산 영역에서는 분업화,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의 의류 시장이 나날이 성장한 이유는 북-중 간의 의류생산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대북 위탁가공이 활성화된 데 기인한다. 2010년을 전후하여 중국의 제조업 활동은 한계에 직면하였으며, 제조원가에서 인건비의 비중이 높은 의류, 섬유, 전자조립과 같은 노동집약적 업종의 일부 기업체는 중국 내에서 생산 활동과 경영수익이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 의류 부분의 생산업체는 북한에 아웃소싱하는 방안을 적극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시장화 과정을 통해 숙련된 북한의 노동력은 값싼 임금과 높은 기술숙련도를 바탕으로 중국의 변화하는 기업환경과 맞물리면서 수출생

산을 확장하였다. 중국 측이 북한에 생산설비와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북한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의 임가공사업이 확대되었고, 북한은 경제개혁을 통해 대외무역을 확대하고 임가공수출을 증대하면서 특히 수출에서 의류제품의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된 것이다(이종운, 2017, p.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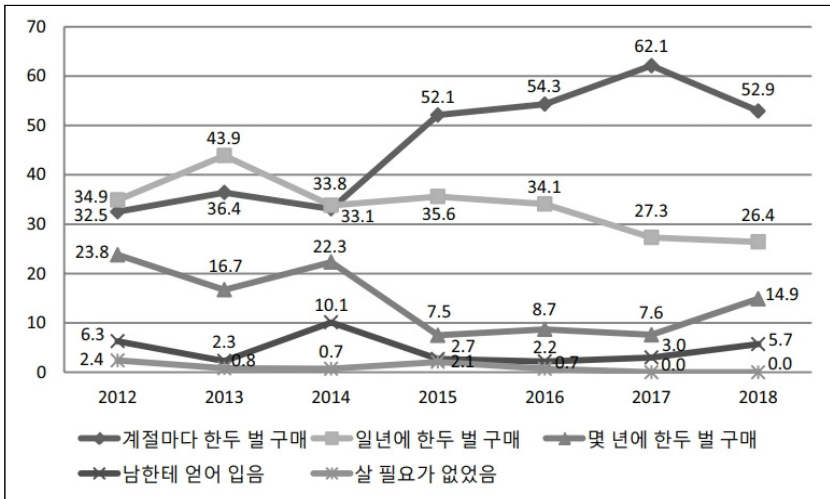
북한이 「세계의 옷공장」이라고 주장하는 책의 저자 김승재는 다 년 간의 취재를 통해 북한에서 가공되어 수출 혹은 밀수되는 의류 임가공사업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는데, “세계의 톱 브랜드 나이키부터 이름 없는 저가 브랜드까지 북한의 노동자는 안 만들어 본 옷이 없을 정도이다”(김승재, 2020, p. 220). 김승재의 취재기록을 보면 북한에는 최소 1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봉제 노동자가 있다. 2019년 한 해 동안 2조원이 넘게 벌어들였다고 주장한다. 북한에서 봉제 공장은 평양시가 가장 많고, 라선시, 청진시, 그리고 개성시와 신의주시 순으로 봉제 노동자가 많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추정치에는 북한 내수용 봉제품 제조 인력도 포함됐다. 이들 가운데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노동자는 최소 5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평양, 신의주, 개성공단 일대의 봉제 인력 35만 명의 40%는 패딩류 제품을 만든다. 그리고 60%는 바지, 티셔츠, 점퍼, 한복 등 다양한 종류의 의류를 만든다(김승재, 2020, p. 238).

김승재에 의하면 최근 봉제 분야의 해외인력은 90% 이상이 초보자이며 북한 내부의 인력양성소에서 업무를 습득한 뒤 해외 근무를 나간다. 숙련자들은 북한 국내에서도 외화벌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 나가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임금은 평양 노동자 1인에게 인민폐 60원에 해당하는 조선돈이 지급되고 쌀, 채소, 고기 등 생활필수품이 배급된다(김승재, 2020, p. 243).

북한의 의류 임가공이 활성화되었다는 사실은 이와 병행하여 국내 의

류 생산도 활성화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시장에 다양한 의류의 공급이 많아지고 주민들의 의류 소비는 기본적인 의생활을 충족시킨다. 서울대 사회변동조사에는 ‘옷 구입 빈도’에 대한 조사항목이 있다. 조사 초기 시점인 2012년에는 ‘남한테 얻어 있음’ 혹은 ‘살 필요가 없었음’ 등의 응답 문항이 있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한 달에 한두 벌 또는 더 자주 구입’을 포함시켰다. 그 결과 2019년 조사응답에서는 ‘계절마다 한두 벌 구매’이 56.0%, ‘한 달에 한두 벌 또는 더 자주 구입’이 18.1%로 조사되었다. 이를 합하면 총 74.1%로 북한 주민의 의생활 형편이 매우 좋아졌음을 나타낸다(천경효 외, 2019, pp. 43-44).

[그림 6-1] 북한이탈주민의 식생활 종합실태 연도별 추이



자료: 천경효, 김일한, 조성은, 최경희, 임경훈, 조용신. (2019). 북한사회변동 2018: 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 사회보장.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p.44.

나. 중국산·평성산·한국산 순으로 선호

최근 북한 주민의 의생활에서 특징적 변화는 ‘다양성’이다. 시장을 통해 다양한 디자인과 화려한 컬러의 의류제품이 구입 가능하고 해외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제품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 시장을 통한 비교적 자유로운 공급은 북한 패션에 다양한 스타일을 만들어냈고, 북한 주민들이 의생활에서 자신의 선호도를 나타내기 시작했다(최현숙, 2016, p. 131). 김정은 시기 퍼스트레이디의 등장과 이설주의 옷차림도 의생활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한 때 엄격한 단속대상이었던 여성의 바지착용 금지가 비공식적으로 허용의 계기가 되었으며 옷차림의 자유바람을 불러와 몸에 맞는 짧은 치마와 가슴이 패인 상의, 클러치, 헤어스타일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휘장 대신 브로치를 착용하는 등의 전반적 옷차림이 서구화되었다(최현숙, 2016, p. 127). 여기에는 중국 수입의류의 영향도 크고, 개성을 통해 공급된 남한 스타일의 유형과 한국 중고 옷이 크게 인기를 얻으면서 북한 의생활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통일부 심층조사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북한 주민들은 대체로 장마당(88.6%)에서 의류를 구매한다. 최근 북한 도시 곳곳에 개인상점들이 신설되고 국영상점 뿐 아니라 외화상점, 백화점도 생겼지만, 아직 장마당을 제외한 곳에서 의류를 구매하는 비율은 낮은 편이다. 개인상점 이용은 10대(6.7%)와 소득수준 상위(5.9%)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의류의 구매처에 따라 소득수준별 계층화 형태가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연구자는 관련한 구술을 채록한 바 있다. <구술자 F>는 국경 도시에서 음식점사를 한 분이었는데, F씨의 딸이 예술학교에 다녔다. 시 예술학교는 진짜 부자들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F씨는 딸아이의 옷을 장마당에서 한 벌당 인민페 300원씩을 주고 사서 입히고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사람들이 먹는

티는 만나도 저 입은 티는 난다고, 입는데 신경을 많이 쓰지요..” 그러나 자신의 딸은 예술학교 학급반 아이들 속에서 축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탄했다. 자신은 장마당에서 그나마 제일 좋고 곱다는 옷을 사서 입혀도 다른 부자들은 자녀들에게 개인상점에서 ‘기성복’을 맞추거나, 중국에서 들어온 중국산 의복을 입히면서 인민폐 1,000~3,000원 이상을 소비한다는 것이다. 즉, 소득수준별 의복생활의 차이는 자녀들에게 더 세련되고 더 질 좋은 의복을 사주려는 부모들의 자녀양육태도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서울대 사회변동조사는 2019년 조사에서 북한 주민의 옷 구입처에 관한 응답 중 국영상점 및 직매점의 응답률이 3.4%, 백화점과 외화상점의 응답률이 6.9%로 나타남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7년 옷 구입처에 관한 응답 중 위의 응답은 평균 0.6%~1.2%를 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백화점과 외화상점의 응답률이 높아진 것은 소비의 계층화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고, 다른 한편 국영상점 및 직매점의 응답률이 높아진 것은 북한 당국의 국산화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천경효 외, 2020, pp. 46-47).

북한 당국의 국산화 정책은 의류 및 의복의 원산지를 보아도 비슷한 추세를 나타낸다. 북한에서 소비되는 의류 및 의복의 원산지는 대부분 중국산이며 한 때 중국산은 거의 90%를 넘어설 정도로 북한의 시장을 휩쓸었다. 그러나 2016년 이후 북한 당국이 경공업의 현대화 및 국산화 정책을 강력하게 전개하면서 중국산의 유통이 다소 주춤해졌다. 가장 최근 조사인 통일부 심층조사에서 북한 주민이 구매한 의복의 원산지는 중국산이 70.3%로 나타나 서울대 사회변동조사의 73.0%와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중국산의 비중이 감소하는 대신 북한산의 비중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의생활 분야에서 국산화의 영향이 확대되고 있

음을 반영하고 있다.

실제 구술자들은 북한산 의류가 질이 좋다고 말한다. 특히 평성산은 북한에서 최고로 알아준다고 입 모아 이야기 한다. 평성이 봉제, 의류 전문 생산기지로서 앞선 북한의 외화벌이 기지이자 의류 임가공 수출 공장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한국산이 매대에서 공공연하게 팔리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 상인들의 방문판매 혹은 주문방식으로 거래되고 있다. 연구자가 2017-2018년 시기 중국 접경지역에서 만난 중국 화교상인들은 북측에서 한국 중고 옷이 아주 인기가 많으면서 중국 새 옷과 한국 중고 옷을 동시에 가져가면 한국 중고 옷을 더 선호한다고 하였다. 한국산 옷은 빨아도 옷의 형태나 질이 변화하지 않는 반면, 중국산 옷은 겉모양은 좋은데 몇 번 세탁을 하고 나면 금방 망가진다고 하였다. 당시 한국 중고 옷은 수십 kg 무게의 그물망에 아무렇게나 담겨 ‘kg에 얼마’ 하는 식으로 팔리고 있었다.

종합하면 북한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중국산을 대중적으로 입고 소비하고 있지만, 국내산 특히 평성산 제품에 대한 평판이 좋고, 한국산은 제품의 질이나 디자인 모두가 가장 좋다고 인식하고 있다.

2. 문명사회주의의 옷차림과 몸단장

가. 고급 맞춤옷집 성행

북한 주민의 의생활이 다양해진 이유는 시장화의 영향도 있지만, 북한 당국이 의복생활의 현대화를 적극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북한은 “인민의 옷차림과 몸단장은 사회주의조선의 문명수준을 반영 한다”면서, 북한 주민들의 옷차림과 몸단장이 “사회의 모습을 비쳐주는 하나의

겨울”이라고 교양하고 있다(김광명, 2020.6.14.). 특히 평양시 같은 경우는 청년들에게 특정 옷차림과 머리 모양을 요구하며 수도의 모습과 사회의 분위기에 조응하기를 독려하고 있다. 당국이 강조하는 ‘조선인민의 감정과 정서’ 혹은 ‘사회주의 생활양식’은 민족 옷 또는 조선옷에 치우치는 경향이 농후하다. 현실의 북한 주민들은 전통적이며 현대적 미감을 강조하는 조선옷보다는 가격 차이가 반영되는 옷차림을 통해 타인과의 차별성을 드러내는 과시 욕구를 드러내고자 한다. 대표적인 것인 평양시 주요 거리에 등장하는 맞춤 옷집들이다. 최근 북한 주요 거리에 등장하고 있는 종합양복점에서는 재단사가 소비자의 체형과 기호에 맞게 직접 옷을 만들어 판매한다. 소비자들도 착용감이 좋아 호평이 높다고 한다(Choe, 2020.7.26). 북한이탈주민들은 이와 같은 맞춤 옷을 ‘기성복’이라고 불렀다. 장마당 의류 매탁에서 파는 의류와 달리 기성복은 신체 사이즈별로 다양하게 있으며 디자인이 좋아 가격은 비싸더라도 선호한다고 했다. 2012년 완공된 평양시 창전거리에 창전옷집, 선경옷집 등의 점포가 생기면서 시작된 전문 맞춤옷집들이 이제는 평양시 각 구역마다 00종합양복점이라는 상점의 형태로 기성복 맞춤옷을 주문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백화점의 여성, 남성, 아동복 코너가 신설되고 다양한 북한산 제품들과 중국산 의류 그리고 유명 브랜드 의류도 판매되고 있다.

나. 브랜드 관념의 형성

시장화 이후 북한에는 기존의 국영상점 및 공업품 상점을 대신하는 대형 마트와 백화점이 계속 신설되고 있다. 그리고 전문화된 상점들은 경쟁적으로 소비자를 향해 제품을 판매하면서 독자적인 고유 브랜드가 곧 상품의 신용과 품질을 대변한다는 인식의 변화를 보인다. 북한 보도 매체인

로동신문의 “지적소유권 대상으로서 상표의 기능”이라는 보도를 보면, 지난 시기 상표가 단순 상품 식별의 기능을 담당했다면 현재의 그것은 출처에 관계없이 상표만을 보고 그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예사로운 현상으로 되었다. 더불어 브랜드는 현실에 맞는 광고와 품질보증, 판매촉진수단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김철웅, 2020.1.12.). 북한이 기존과 달리 상표가 지닌 출처표시 기능이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신용을 형성하고 타 상품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의류를 비롯한 경공업 제품들은 자기 고유의 상표를 달아 해당 분야에서 최고의 상품임을 홍보하며 판매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모란> 남성복, <독수리표>시멘트, <은하수>, <봄향기>화장품, <묘향산>, <진달래>연필, <철쭉>양말, <대봉>소주, <만복>이불, <마안산>담요, <금강산표>음료, <미래>비누, <천지>화물자동차, <날파람>자전거, <소나무표>가방, <방울껌>, <츄잉껌>, <평양소주>, <릉라도>오토바이, <왕관표>고려약, <눈꽃빵> 과자 등등이다.²⁵⁾

제2절 새로운 트렌드(trend)

경공업 공장에서 생산되는 각종의 인민소비품들은 현재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제품의 가지 수를 늘리고, 질을 향상 시킨 <상표> 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리고 이 <상표>는 주민들의 소비 욕구를 자극하고, 더 좋은 제품과 남들이 갖지 못한 제품의 소유욕을 불러일으킨다. 유행이란 일반적 의미에서 ‘새로움 자체를 위한 새로운 것의 추구’라 할 수 있다(Sproles, 1981, p. 116). 사회학적으로 접근하면 유행

25) 「내나라」사이트에서 검색하여 확인 가능한 대표적인 상표들이다.

의 본질은 경쟁이며, 경쟁적인 모방과 경쟁적인 구별의 상호작용에 의해 가변성(changeability)이 유발되고 유행 기간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정주, 1991, p. 267).

현재 북한 사회에서 유행이 형성되고 전이 전파되는 주요요인은 시장화 이후 전사회적으로 확산된 시장경제메커니즘과 시장경제메커니즘이 파생하는 소득수준의 차이이다. 북한의 신흥부유층은 몇 부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북한 시장에서 성장한 도매업자인 50대의 중년여성, △국제무역 및 친인척을 통한 북일/북중/남북을 오가며 자본을 축적한 사람들, △비공식 통로로 이익을 수취한 간부 및 권력엘리트들이다(서사가, 2018, p. 87).

이들 소수의 신흥 부유층의 소비패턴이 사회적 유행을 형성하여 오늘날 북한의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는 선도 계층이 되고 있으며, 이들이 소비한 상품, 소비 가치관과 소비습관은 계속 사회적으로 모방되며 복사되고 있다. 특히 유행을 수용하고 전파하는데서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크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먹는 것을 가장 먼저 취하고 그다음은 입는 것, 그리고 사는 곳의 순서로 수용하고 확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성별로 보면 여성이 보다 유행에 민감하다.

1. 미용과 화장품

가. 드라마 주인공 스타일

북한 주민의 의복이 다채로워지고 옷차림이 유행을 따라 변화하니, 머리와 신발 및 장신구 또한 의복의 변화와 함께 다양하고 화려해지는 변화 추이를 보인다. 대표적으로 여성들의 옷차림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머리와 화장이 그렇다. 또 북한에서 소비되는 대부분이 의류생산품이 중국 제

조품인데다 중국식 스타일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 유행하는 소비 영역에서도 중국적인 것이 많다.

북한의 국영이발소는 지역별로 있는 창광원식 미용실이 대표적이다. 이 때 창광원은 평양시에 있는 편의복합시설을 총칭한다. 지하는 수영장(물놀이장), 1층은 목욕탕과 청량음료점, 2층은 미용실과 이발관, 3층은 음식점 혹은 탁구장 등이 있다. 지역마다 창광원식 편의복합시설이 있는데 부흥원, 은덕원 등 각기 다른 이름으로 명명되지만 이 복합시설 안에 남성과 여성의 이·미용실이 있다.

〈구술자 G〉씨는 국영 이발관에서 이발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북한의 편의 부문 종사자는 상업학교에서 자격을 취득해야 하지만, 현재 개인이 운영하는 편의 부문 종사자들은 대부분이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로 〈구술자 G〉씨도 특별한 기술을 전수 받기보다 알선을 통해 취업한 이후 미용기술을 배우게 되었다. 그리고 주로 남성들의 머리를 손질해 주었다. 북한의 남성들은 아직도 국영이발소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며 짧고 시원하게 올린 머리(이른바 지도자식 머리)를 선호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국영 미용실은 이미 헤어스타일 경쟁에서 뒤졌기 때문에 대부분은 개인 집들에서 하는 미장원을 보편적으로 이용한다고 하였다. 개인집 미장원 퍼머는 평균 인민페 2-30원 수준이나, 더 비싼 퍼머도 있다. 아직은 염색머리가 보편화되진 않았지만 새치 염색같은 경우는 북한산을 쓰면 조선돈 5원인 반면 수입 염색약을 쓰면 인민페 10원 이상한다.

〈구술자 H〉씨는 2018년 당시 중국 영화 ‘양아버지’에 나오는 ‘소환이 머리’가 크게 유행하여 대부분의 젊은 여성들이 이 머리를 따라 했다고 하면서 헤어스타일은 드라마 주인공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청진 여자들은 여기 한국에 있는 여자들보다 더 머릿도 세련되고 더 멋있게 하고 다니”는 것 같다고 북한 여성의 미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

었다. 즉, 북한도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남측보다 더 잘 꾸미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은 드러내고 싶어 했다.

여성들의 옷차림이나 머리 모양이 너무 문란하다 싶으면 대학생 규찰대를 통해 여성의 용모단정 상태를 주기적으로 검열하고 통제하고 있지만 대체로 자유로운 편이라고 했다. 구슬자들은 2018년 당시 여성들에게 여름에는 짧은 반바지, 그리고 짤 바지(스키니바지)를 단속했고, 머리는 퍼머는 가능하나 흑발염색 이외 컬러 염색을 단속했다고 전했다.

나. 하얀 얼굴과 썬크림 유행

북한 주민들은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 생산되는 봄향기나 은하수 화장품을 사용해 보지 못한 경우가 많다. 북한 주민들은 보편적으로 저가의 중국산 화장품을 사용한다. 2019년 당시 중국산 크림이 인민폐 50원이면 한국산 크림은 인민폐 300원이었고, 북한산 봄향기 화장품은 중국산 보다는 비싸다고 했다.

최근의 변화로는 화장품의 종류가 다양해졌다는 점이다. 미크림(스킨, 로션), 분크림, 비비크림, 립스틱(구홍), 눈썹연필 등 다양해진 화장품의 종류만큼 이것으로 소비생활의 등급을 나눈다고 했다. <구슬자 F>씨는 자신을 하층이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가 화장품을 하나만 바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다른 변화로는 여성들이 하얀 얼굴을 선호하고 얼굴을 맑고 투명하게, 하얗게 가꾸기 위해 썬크림, 마스크팩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역시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드라마의 영향이 강하며, 하얀얼굴이 더 고급져보이고 소위 말하는 부티가 난다고 했다.

“거기 조선에서 화장할 때에는 얼굴 세수 뵙 하고서 이거 비비크림 쪽 바른단 말입니다. 크림 바른다는 문새를 모르고, 그러니깐 내 같은 거

는 영 하층이지요.” 그러면서 “검은 피부를 하얗게 해 주는 거, 그거 나와서리 한창 유행이었고, 또 여기 와서 보니 플러스 오십 몇 이런게 있는데 우리는 그런 기호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하얀크림, 이것을 검은 피부를 하얗게 해 준다고 유행”했다. (구술자 F)

또 다른 변화로는 화장하는 여성의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것은 한국 사회와 유사한 현상으로 북한에서도 10대들의 화장품 사용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진한 화장보다는 은은한 화장이 더 사람을 고상하게 표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체로 얇은 화장을 선호하지만 15-16세부터 화장을 시작하는 것이 보편적 추세이다.

2. 악세서리와 성형수술

가. 차별화와 부의 과시

최근 북한 사회의 트렌드에는 ‘부의 과시’가 진하게 묻어난다. 몇 년 전만 해도 큰 돈을 벌면 이의 사실을 감추거나 주목받지 않으려 회피했고, 북한 당국도 수입 대 지출을 맞추어 비상식적으로 높은 소비생활을 한다면 단속의 대상으로 삼곤 했었다. 그러나 김정은 시기에는 부의 축적 경위를 따지지 않았으며 개인 수준에 있는 돈을 소비지출을 통해 공식경제로 환원하고자 애쓰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서는 북한에서 밀수를 하거나 중국 측에 친척이 있어 돈을 건네 받거나, 남한에 가서 돈을 보내오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있다. 오히려 서로 통하는 사람이 모여있으며 ‘중국에 갔으면 좋겠다거나 한국에 갔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돈을 벌 수 있길 희망하고, 고가의 소비생활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다.

북한 여성들이 자신의 몸에 금 목걸이를 착용하고, 금반지를 낀다는 사실은 큰 변화이다. 치장을 한다는 것은 생활의 여유와 자신의 소비 욕망을 드러내는 것으로 사실상 북한에서 매우 과시적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런데 2014년부터 북한에서도 귀걸이가 유행하기 시작하여 장마당에서 여성들의 장신구가 거래되고 판매되기 시작하였다. 대부분은 중국 물건이며 장마당 장신구는 모조품이고, 진짜 금과 은 등의 귀금속은 개인이 개인 사이에서 거래된다.

〈구술자 I〉씨는 북한에서 2017년부터 모조품이 아니라 금 귀걸이가 유행하기 시작했고, 돈 있는 사람들은 개인 집에 가서 권총같은 걸로 딱! 총을 쏘서 뚫는다고 했다. 구술자의 귀에 나뭇가시 같은 것이 박혀 있길래 사연을 물었더니 귀걸이를 하고 싶어서 자신이 스스로 바늘을 찔러 구멍을 냈다고 했다. 구멍이 막힐까봐 나뭇가시를 임시로 박아 놓았다며 곧 금 귀걸이를 사겠노라고 했다. 또 개인집에서 네일아트만 전문적으로 하는 솜은 없지만, 시장에서 ‘반짝이’를 판매하고 있으며 개인들의 이것을 사서 손톱에 붙이고 다니는 것이 유행 중이라고 했다.

북한에서도 점차 안경을 쓰는 사람이 많아져서 전문 안경점이 중심지에 있는데 안경매대 옆에서 시계, 악세서리를 같이 판매하는 그런 상점이 생겨나고 있다고 했다. 인민페 200원 정도의 시계면 고급 축에 속한다는 구술자 I씨는 자신의 시계도 가짜(모조품)라고 했다.

나. 쌍꺼풀과 보톡스

북한 여성들이 쌍꺼풀 수술을 많이 한다고 익히 알려져 있다. 알려진 만큼 보편화 되어 계산시의 경우는 인민페 50원 정도면 쌍꺼풀 수술이 가능하다. 얼굴에 바르는 크림이 동일 가격이었다는 것을 상기하면 쌍꺼풀

수술에 관한 북한 주민들의 관대한 인식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료행위는 자격증 있는 사람들에 한하여 허용된 기술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별도의 시술소가 있지 않고,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개인 집에서 눈썹을 짚고, 입술과 쌍꺼풀 수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나마 의과대학을 나와 자격증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

최근에는 문신도 하고, 보톡스 시술도 도입되고 있다. 아직 보편화되진 않았지만 보톡스 시술 주사약은 평양에서 공급되고 있으며, 지역마다 시술이 가능한 곳들이 생기고 있다고 한다. <구술자 I>는 가격은 많이 비싼 편이라고만 했다. 그리고 2017년 즈음부터 다이어트 약이 유행하여 시장에서 판매되거나 개인끼리 거래하여 복용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자신을 꾸미고 가꾸고 싶어하는 여성의 미에 관한 욕망은 그동안 늘려왔던 소비 욕구의 분출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이들의 소비 욕망을 사회주의 여성이라는 제약과 관념 속에서 획일화 된 여성상을 탈피해 보고자 '주체적 여성되기'라는 또 다른 표현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구술자 J>씨는 현재 북한에서 유행하는 현상들은 북한 여성의 돈벌이와 취업, 구직 등과 관련한 경제적 현상의 또 다른 사회적 효과로 해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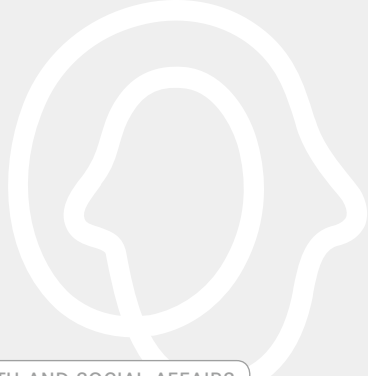
“어쨌든 곱게 생기면 이짜처럼 어디 뽕혀 간다든가 옷가라라든가 이런 데 뽕혀 갈 수도 있고 그래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런 접대원으로 뽕혀 갈 수도 있고, 그런 계통에서 많이 성행하는 것 같아요” (구술자 J)

북한의 상위 소득계층들이 하향전파하고 있는 옷차림과 새로운 트렌드는 중하위 소득계층들의 소비 욕구를 자극하고 그들의 억눌린 꾸미기 욕망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현재 북한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의 모습이 매우 후진 자본주의와 닮아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7장

주생활과 생활환경

제1절 주택건설 현황

제2절 생활환경 개선 실태

제 7 장 주생활과 생활환경

제1절 주택건설 현황

북한의 주택과 관련한 통계는 유엔 인구기금(UNFPA)의 지원으로 2008년 실시한 북한의 인구 일제조사가 유일하다. 이 조사에서는 2008년 기준 북한의 주택보급률은 99.8%로 집계된다. 또한 북한의 주택형태별 가구 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연립주택 43.9%, 단독주택 33.8%, 아파트 21.4% 그리고 기타 0.9% 순이다. 주택보급률만 놓고 본다면 북한 주민의 주거생활은 그리 나쁘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실제 북한 주택의 노후화 정도와 생활 인프라의 실태는 매우 열악한 편이다. 주택의 평균 규모는 61.1㎡로 방 2칸 규모가 가장 보편적이다. 난방시설의 경우는 단독주택의 66.8%가 나무를 연료로 하고 있고, 공동주택은 60%가 가정용 석탄난방을 사용하고 있다. 취사용 연료는 석탄 비중이 높아 도시는 56.5%, 전국적으로는 63.45% 정도가 석탄을 사용하고 있다. 집안에 수도가 설치된 세대는 도시지역 89.5%이며 평양 95.7%로 식수 공급에는 문제가 없지만 수세식 개인 화장실을 설치한 주택은 도시의 경우 66.3%이고 평양은 83.5%로 평양과 평양 이외의 지역은 차이가 난다(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2009; 최상희, 최대식, 이종권, 홍성원, 2015, p. 34에서 재인용).

북한 인구조사 자료를 보면 전반적으로 북한의 주택보급률, 평균 주택 규모, 상하수도 등 주거 인프라 수준이 한국의 90년대 말과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되지만, 이 역시 북한이탈주민의 구술에 의하면 현실은 보다 열악한 것으로 나타난다. 심지어 아직도 우물 물을 길고, 압록강 강물을 퍼

다 사용하거나, 심각한 전력난으로 인해 수도물 공급마저 원활하지 않은 곳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은 시장을 통한 자생적 기초생활을 영위 하였고, 김정은 시기에 와서는 먹는 문제, 입는 문제라는 기본적인 식생활과 의생활이 해결된 중상위 계층에서부터 주거생활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시작한다.

1. 건설 경기의 부양

가. 주택거래의 활성화

김정은 시기 주택건설의 시작은 평양시 창전거리의 건설이었다. 김정일 시기 계획된 것으로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고안된 건설사업이었다. 평양의 중심부인 만수대 거리를 현대화하여 만수대 언덕과 김일성 동상 그리고 만수대 거리에 이르는 구역을 새롭게 단장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 김정일 시기 창전거리 건설사업은 내내 지연되다가 김정은이 집권하자 선대 수령의 유훈 사업을 서둘러 마무리하라고 다그치면서 2012년 6월에 완공한다. 이 과정에서 김정은은 창전거리 조성에 깊숙이 관여하고 도심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며, 평양시 전반의 스펙타클한 전경을 구상하였다. 이후 김정은은 매년마다 새로운 거리를 조성하면서 발전된 건축기술, 미감 있는 건축디자인, 효율성을 증대한 에너지건축, 편리성을 확대한 인테리어를 강조하며 건설·건축에 관한 다양한 연관 산업들을 동시에 활성화시켰다(박희진, 2018a, p. 28).

북한이 건설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 매체의 보도 경향에서도 알 수 있다. 일례로 2018년 한 해 동안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에 보도된 건설 부문 관련 기사는 총 480여 건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공장

시설과 인프라 건설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고, 공장 > 인프라> 농림 어업> 교육복지> 문화휴양> 살림집> 종합기사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평양시와 평안남도에서 건설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도시별로는 평양시와 남포시, 그리고 원산시와 삼지연시의 건설 보도가 많았다. 조사를 더 진행해보아야 하겠지만 김정은 시기 북한 당국의 건설은 매우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생산현장을 중심으로 재건축, 신축 건설 등의 현대화 건설이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북한 당국의 건설 경기 활성화는 첫째, 국가 차원의 투자 활성화 및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건설사업이 미치는 전후방 산업연관 효과를 통해 건재생산과 원부자재 (시멘트, 목재, 타일, 유리 등) 시장의 활성화, 마감재 생산과 보일러, 물탱크 등 국산품 소비 진작을 통해 공식경제를 순환시키고자 한 것이다. 둘째, 시장화 이후 사금융이 발달하고 국가의 재정은 무력화된 데 반해, 시장 활동을 통해 자본을 축적한 주민들의 외화자금은 그 규모와 실체를 파악할 수 없는 가운데 건전한 투자처를 마땅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 경기를 부양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북한 주민의 주거생활 측면에서 보면 북한 당국의 건설 경기 부양책은 금·부정의 효과를 동시에 지닌다. 부정적 측면은 북한 주민들에게 기존의 살림집은 주거의 개념 속에 모든 세대에게 주어지는 복지의 산물이었다면, 신규 아파트 건설과 주택 공급 정책은 주택이 상품으로 거래되어 주거입지와 주변 생활환경에 따라 상품의 가격이 차등화 되는 변화를 가져와 북한 주민들의 불평등한 주거생활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자본이 대거 유입되면서 북한의 국내 부동산 자산의 침식도 병행될 우려가 있다. 반면 긍정적 측면은 그동안 주택을 개보수할 권한이 개인에게 있지 않은 까닭에 기존의 낡고 오래된 살림집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만 이

제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더 이상 불편한 생활을 지속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소위 ‘주택결정권’을 갖게 된 주민들이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거나 집 꾸미기를 통해 거주 조건을 개선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나. 선호주택과 계층별 주택유형

북한 「살림집법」규정에는 국가가 부담하여 주민들의 살림집 보장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살림집법, 제3조). 그러나 대체로 북한 주민들은 본인들의 능력으로 살림집을 마련하고 있다. 살림집 거래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거래를 ‘교환’으로 명시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 교환’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주택을 교환하면서 동시에 주택의 크기, 입지조건, 주변 생활환경을 고려한 가격 차이에 따라 집의 교환 비용을 지불한다. 구매가 되는 것이다.

연구진이 그동안 만났던 북한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 주민들이 모두 큰 규모의 집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북한 주민 대부분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도 아니다. 북한의 경제 상황, 전기 상황, 노동 및 직업 생활 여건 등이 고려해야 할 요소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3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시장화 초기 북한 주민들은 무조건 시장 활동에 유리한 조건을 선호하였다. 집에서 물건을 제조하여 시장에 나가 파는 사람들은 소위 ‘독집’이라고 하는 단독집을 선호하였다. 여유 공간이 있는 집에서 술도 빚고, 두부도 만들고, 국수도 만들 뿐 아니라 애플 주사약도 만들고, 마약도 제조하였다. 시내 중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시외 단독집으로 이사 가는 이유가 대부분 장사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제조하기 위한 집을 원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그동안 신분이 변변치 않아서 낙후한 삶을 살았던 노동

자들 중 시장 활동을 통해 돈을 번 사람들은 시장이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거나 교육·교통 조건이 좋은 시내 중심으로 이주하였다. 시장 활동과 거주 조건을 연계하여 스스로 새로운 직주근접을 실현하는 것이다. 세 번째, 아파트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장사 활동보다는 개인의 사생활을 중시여기는 사람들이었다. 집을 치장하고 가꾸며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타인과 차단된 공간에서 은밀한 사생활(드라마보기, 게임하기, 술 파티하기 등)을 즐기는 사람들이 선호했다(박희진, 2018b, pp. 76-79). 3단계의 구분에서 분명한 것은 상위 계층일수록 장사 활동과 무관한 아파트를 선호한다는 점이다.

〈표 7-1〉 계층별 살림집 유형(2019년)

구분	상층	중층	하층
아파트	35.3	32.9	14.3
연립주택	29.4	35.7	64.3
단독주택	23.5	27.1	14.3
기타	11.8	4.3	7.2
전체(N, %)	17(100.0)	70(100.0)	28(100.0)

자료: 천경효, 강재연, 박상민, 이해원, 정은미, 임경훈, 조용신. (2020). 북한사회변동2019: 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 보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p.76

서울대 사회변동조사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하층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의 비중이 14.3%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반대로 상층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중이 3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천경효 외, 2020, p. 76, 위의 〈표 7-1〉 참조). 이제 ‘집(주택)’은 북한의 계층을 구분하는 또 하나의 지표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식생활, 의생활에서 구분할 수 있는 계층 차이와 다르게 주생활에서 나타나는 계층 차이는 ‘안정된 주거’와 ‘생활의 정착’을 의미하기 때문에 좋은 주택일수록 그만큼의 권력 크기를 반영하는 지표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2. 내 집 꾸미기 확산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주거형태는 북한의 평양시와 몇몇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북한 주민의 대부분은 10층 이하의 연립아파트 유형에 거주하며 도시 이외의 군(읍)단위는 문화주택 혹은 농촌주택이라 불리는 단층 연립주택에 거주한다. 따라서 실제 일상의 주민들은 아파트 건설 및 매매, 분양 등의 행위에 참여하고 있기 보다는 주택 수리 혹은 주택개조의 경험을 보편적으로 더 많이 갖고 있다.

2016년 제7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최근 3년 간 북한의 「로동신문」과 「민주조선」 보도 중 살림집 개·보수와 관련한 기사만 종합한 결과 총 87건으로 집계되었다. “살림집 개보수의 주요 내용은 벽체 보수, 외장재 바르기, 공동위생실 꾸리기, 울타리 보수, 지붕 보수, 계단공사, 외형개조 등이 주”가 되었고, 지역별로는 평양시를 비롯한 인근의 평양남도, 황해북도의 주요 도시 살림집과 농촌 문화주택이 많이 개·보수된 것으로 나타났다(박희진, 2020a, p. 160).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살림집 개·보수는 「살림집법」규정 중 중보수 혹은 대보수에 속하는 것으로 해당 시(군) 전문보수사업소인 ‘건물보수사업’과 인민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은 살림집 대보수계획을 수립하여 각 인민반에서 차출된 노동력과 각 세대 주민들이 부담하는 장비와 건설자금으로 건설을 진행한다.

〈표 7-2〉 북한 살림집 개보수의 지역별 현황

(단위 : 개)

지역/년도	2017	2018	2019	지역별 합계
평양시	5	1	2	8
남포시	1	2	1	4
나선시			1	1
평안남도	2	5	3	10
평안북도	3	2	1	6
자강도	3	1	3	7
황해남도	1	3		4
황해북도	4	3	2	9
강원도	2		1	3
함경남도	1	2	2	5
함경북도		2	3	5
량강도	2	4	1	7
위치미상	6	7	5	18
연도별 합계	30	32	25	87

자료: 박희진. (2020a). 북한 국가건설담론과 '내 집 꾸미기(remodeling)' 현상의 혼성성 연구, 도시 인문학연구 제20권 1호, p.161

가. 농촌 주택의 부엌과 화장실

농촌의 살림집들이 가장 많이 개·보수를 추진하는 곳은 부엌과 화장실이다. 농촌 살림집은 오랜 시간 전기공급이 되지 않아 냉장고, 세탁기 등의 전기용품들은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생활에의 편의를 위해 제일 먼저 태양열판을 설치하는 것이 보편적 추세이다. <구술자 K>씨는 “가정의 필수품이 태양열판, 텔레비, 바페리, 손전화, 오토바이, 자전거 이런 거 꼭 삽니다”라면서 사실상 집에 전기 코드는 필요도 없다고 했다. 그래서 집을 꾸린다 하면 제일 먼저 태양열판을 설치하여 가정의 전기 충전기와 연동하여 놓고 도배, 장판을 다시 한다고 하였다(박희진, 2020a, pp. 167-168).

그리고 농촌살림집은 대부분이 석탄과 나무를 연료로 삼고 있기 때문에 창고를 크게 가꾼다고 했다. <구술자 L>씨는 “여름에 쌀 때 땀감을 사서 창고에 넣어요. 창고는 김치부터...화장실도 창고에..창고가 더 편해요. 집은 작으니까 (창고를 꾸려)화장실과 별도로 샤워도 할 수 있고..” 라면서 창고를 크게 만들어 다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말했다. 특히 집 밖에 설치된 공동화장실이 불편하기 때문에 집 안으로 화장실을 꾸려 샤워도 할 수 있는 욕실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했다. 과거 화장실이 축사 근처에 설치되어 인분을 거름으로 삼는 비위생적인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집 안으로 들여 생활에의 편리와 위생을 도모하는 공간으로 변한 것이다(박희진, 2020a, pp. 168-169).

또 취사와 난방을 분리하여 취사만을 위한 부엌을 별도로 만드는 것도 또 다른 개·보수의 중요 항목이다. 기존에는 나무를 때서 취사와 난방을 동시에 했기 때문에 부엌을 입식으로 하거나 실내 속으로 설계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궁이 난방을 하면서도 부엌만 개조하여 주방 개수대를 타일로 둘러서 물 사용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였다. 또 취사방식으로 프로판 가스를 쓰는 집들도 많이 증가하였다. <구술자 L>씨는 “아무래도 나무를 땄 때는 연기가 나고 부엌을 가꾸기가 어렵지만, 가스를 사용하면 좀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엌을 집 안에 꾸려서 좀 편리하게 서서 일 할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구술자 L>씨의 경우는 동네에서 좀 떨어진 위치에 있는 몇 채 되지 않는 마을의 단독 집이었기에, 아예 아궁이를 다 들어내고 보일러 선을 깔고 집 안에 부엌이랑 화장실 공사까지 다 스스로 했다고 했다. 자신의 이리저리 자재를 구입해서 완전 새집으로 꾸려놓았는데 그냥 두고 와서 아쉽다고 했다(박희진, 2020a, p. 169).

나. 도시 아파트의 고급 인테리어

북한에서 도시의 살림집을 아파트 형식으로 설계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여겼던 사안은 ‘방의 칸 수와 면적’이다. 세대당 건축면적을 측정하여 구조 간격을 3m로 잡고, 방 1개 아파트, 방 2개 아파트로 층별 구성을 하였다. 앞서 〈구술자 H〉씨는 청진시 포항구역 중심부 아파트에 거주하였는데 청진시 중심부의 아파트들이 방은 2개짜리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그리고 평양시 같은 대도시에서만 방 개수가 더 많은 방 3개, 방 4개 아파트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신규 건설되는 아파트들은 방 3개짜리를 많이 짓는다고 했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에서는 방 2개 아파트가 보편적이라고 했다. 아파트를 지을 때는 방 2칸짜리 세대와 방 4칸짜리 세대를 하나의 조각으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외형이 독특한 아파트를 조성한다. 주로 1980년대 평양시, 원산시, 함흥시, 청진시 등에 건설한 탑형 아파트, 원형식 아파트, Y형아파트, 바람개비형 아파트들이 그렇다(임동우, 라파엘 루나, 2014, pp. 444-458; 박희진, 2020a, pp. 170-173).

도시 아파트는 골조식 주거공간으로 집 자체를 변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부 인테리어에 치장을 하는 편이다. 가장 많이 하는 인테리어는 부엌과 화장실이다. 기존의 아파트들은 세면 칸과 변소 칸이 분리되어 있거나 변소 칸만 있는데 화장실과 욕실을 합한 공간으로 새로 꾸미는 방식이다. 특히 전기와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욕실 안에 물탱크를 크게 설치한다고 했다. 최근에는 또 북한에서 타일과 유리 생산이 잘되어 유리로 장식장을 만들거나 부엌에 타일을 깨끗이 발라 고급한 인테리어를 추구한다.

〈구술자 M〉씨는 “시내 아파트를 보면 구조가 다 똑같잖아요. 1층부터 5층까지 그 구조가 다 똑같이 올라가서, 우리 아파트 같은 거는 옛날 아파

트니까. 그런데 서로 자기가 마음대로 설계를 해가지고 집을 다 이렇게 변경해놨어요. 그게 다 틀려요.” 라면서 도시의 아파트들이 내부 인테리어를 유행처럼 하고 있고 있음을 구술했다(박희진, 2020a, pp. 172-173). 인테리어는 집 안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술자 N>씨에 의하면 국경도시에 제법 돈을 크게 만지는 돈주들의 집은 대단하게 고치고 산다고 전했다. 집에 자물쇠를 단다거나, 초인종과 연결된 인터폰을 설치한다던가, 심지어 집 담장에 CCTV를 설치한 경우도 있다고 했다.

집을 꾸미는 것이 문화 수준으로 표현된다면 문화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은 경제력과 구매력이 높아졌다는 것을 말한다. 도시의 아파트를 내부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은 꽤 윤택한 집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구술자 O>씨는 전문 인테리어 일만 했던 사람으로 2018년-2019년 당시 욕실 하나를 리모델링 하는데 물탱크 놓고, 변기, 세면대, 환풍기, 타일 마감을 하면 300달러를 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방 하나와 욕실까지 하면 싸게는 600달러부터 좋은 자재를 쓰면 7-8천 달러까지 소요된다고 했다.

이처럼 최근 주택개조는 소위 ‘견적’이 나온다. 따라서 개인들이 자신의 주택을 꾸미고 거주공간을 공고히 한다는 사실은 복잡다단한 시장화의 터널을 거쳐 내 집이라는 거주지에 정착할 수 있을 정도로 삶의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개인의 집에서 자신의 구매력과 소비행태를 드러내며 주택을 꾸미고 가꾼다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경제적 부의 과시만이 아니다. 과거 돈주라는 역할론에 기반한 자본축적의 개체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변화에 따라 형성되고 있는 재계층화의 실제적 존재로서 중위계층, 중산층을 의미한다.

제2절 생활환경 개선 실태

1. 가전제품의 수요 증가

북한 경제난의 핵심이 식량난, 외화난, 에너지난이라고 할 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에너지 문제이다. 화력발전소와 수력발전소를 통한 자연 에너지원만으로는 산업생산을 물론이고 가정용 생활필수품 조차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아파트를 지어도 10층 이하는 모두 걸어다니도록 한다거나, 최근 고층아파트는 엘리베이터 운행 시간이 정해져 있어 세 시간에 엘리베이터를 타야만 해서 벌어지는 우스꽝스러운 뒷이야기들도 있다. 또 신규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공간을 마련해 놓고도 엘리베이터를 작동하지 못해 그 공간을 막아서 창고로 쓴다는 구술도 있었다. 이렇게 북한 경제에서 전력난, 에너지난은 고질적인 모든 문제의 주요 원인이다.

북한 주민들은 그동안 매일 국가가 제공하는 1-2시간의 전력을 충전하여 전등, 라디오, 밥 가마 등의 필수적인 생활전기만 사용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태양열을 통한 전기생산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충전 배터리의 용량이 증가하면서 개인들의 전력사용량은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주거생활이 전력사용 증가로 인해 변화한 측면이 많다. 대표적인 것은 가전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전자기기의 사용이 늘어난 것이다.

북한 당국 또한 전민과학기술인재 육성을 목표로 학교 교육체계 및 생산현장에서 과학기술 보급을 장려하고, 각 종 과학기술이 뒷받침된 소프트웨어, 앱 개발을 통해 전사회적으로 정보화 기기를 확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 주방용 가전제품 사용 실태

북한 주민들이 살림집 개·보수를 통해 부엌을 리모델링하고 있는 이유는 가정집의 취사와 난방의 방식이 변경된 이유가 가장 크다. 대표적으로는 가정집의 전기공급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나무와 석탄 이외에도 프로판가스 사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먼저 기존에는 가정집 전기는 100% 국가공급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개인 혹은 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전기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전력공급체계는 특별하게 도시마다 가장 대표적인 연합기업소 혹은 특급·1급 기업소에 가장 먼저 전력이 공급되고 이를 통해서 기업소 주변의 노동자 주택으로 전기가 공급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중소형 발전소를 많이 만들었고, 이것은 기업소를 거친 전력공급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공공기관으로 들어가거나 주민세대에게 공급하도록 신설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도시와 군에서는 전기가 발전소를 통해 주민세대 변전소를 거쳐 개별 세대에게 전달되는 시스템이 아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기관·기업소에 전달되면 기관·기업소가 이 전기선을 주민세대와 연결하여 돈을 받고 판매하고 있다. 또 영리한 개인이 기업소의 전기선을 따와 개별적으로 전기를 판매도 하는 것이다. <구술자 S>의 말이다.

“10년 전에는 전기가 개인집에서 전기를 구하려면 힘들었습니다. 돈을 내도 전기가 모자랐으니까. 그런데 점점 가면서 3, 4~5년 전에는 돈만 착실히 내면 전기들을 다 공급해주는 형태로 넘어갔으니까 전기가 좀 풀렸다고 볼 수 있지. (중략) 이거가 어떤 방법이냐면 주민선이 있고 공업선이 따로 두 가지가 원칙적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선은 체계가 거의 다 파괴되고 주민선이라는게 전기선도 따로 있고 변압기들

도 주민지대에 다 따로 있었는데 아직 그걸 없애진 않았지만 실제 사용은 못하는 상태로 넘어갔고, 공업선이라고 할 때는, 그 동네가 있으면 그 주변에 대표적인 기업소에 공급받는 전기 부담을, 기업소에서 전기가 남으니까, 이걸 주민지대에다가 이게 돈을 받고 나눠서 세금을 걷어서 그 돈을 국가에도 바치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장에도 돈 챙기고...국가 전기세는 따로 내는거고 그건 작고, 기관이고 개인 공장한테 내는 전기세가 만원 내지 이만원으로 (중략)...” <구술자 S>

이처럼 북한 가정집에 전기를 판매하는 시장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국가가 공급해주는 전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삶도 전환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매개 가정에서 필요할 때 구매가 가능한 전기를 활용하면서 가정용 전기제품의 구매도 증가하고, 활용도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대표적으로 냉장고와 세탁기이다. 기존에는 가정에서 냉장고를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냉장고가 있다 해도 보관 용도로만 사용했었다. 최근에는 냉장고와 세탁기의 보급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소득계층별 차이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대 사회변동조사에서 가구별 가전제품 품목 중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의 보유율을 계층별로 조사하였다. 이의 응답을 보면 전기밥솥, 그리고 냉장고, 그 다음이 세탁기였다. 세탁기 보유율의 비중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기밥솥의 경우는 보편화되어 중층에서 72.9%의 사용율을 보였다. 그러나 냉장고의 경우는 상위 계층에서 58.8%의 보유율을 보이는 반면 하위 계층에서는 10.7%로 나타났다. 세탁기 역시 상위 계층에서는 29.4%인데 반데 하위 계층에서는 7.1%로 나타났다.

〈표 7-3〉 계층별 가전제품 보유/경험률

(단위: %)

구분	상층	중층	하층
냉장고	58.8	32.9	10.7
전기밥솥	88.2	72.9	46.4
세탁기	29.4	20.0	7.1

자료: 천경효, 강재연, 박상민, 이혜원, 정은미, 임경훈, 조용신. (2020). 북한사회변동2019: 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 보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p. 77.

나. 전자기기 사용 실태

북한에서 광케이블이 전역에 설치되고, 핸드폰이 보편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시점은 2011년을 전후 시점이다. 김정은 시기 매년마다 핸드폰 보급률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컴퓨터 이용자도 늘고 있다는 보도가 전해졌지만, 이를 집계한 조사는 2016년부터이다. 유니세프(UNICEF)와 북한의 중앙통계국이 공동 조사하여 발표한 ‘2017 DPR Korea MICS’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의 전자기기 중 TV 98.2%, CD재생기 75.5%, 핸드폰 66.4%, 컴퓨터 18.7% 순으로 보유율이 나타났다(UNICEF, 2018, p. 31). 반면 2019년 실시한 통일부 심층조사에서는 TV 70.8%, CD재생기 48.7%, 핸드폰 14.3%, 컴퓨터 8.8% 순으로 보유율이 나타났다. 두 개의 조사에서 각 항목별 응답율이 다른 이유는 통일부 심층조사의 제한성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누적 데이터가 최근으로 올수록 감소하고 있는 데다가 국경지역에 편중된 사람들의 응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MICS와 비교한다면 오히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전자기기의 사용이 계층별·지역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서울대 사회변동조사에서는 핸드폰을 보유했다는 응답은 62.9%, 컴퓨터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4.0%로 나타났다(천경효 외, 2020, pp. 66-68). 특히 서울대 사회변동조사는 계층별 이용율을 조사하

여 분류하였다. 이에 따르면 계층별 차이가 가장 큰 전자기기는 손전화(핸드폰)이었다. 손전화는 상층에서 88.2%로 나왔으나 하층에서는 35.7%로 나타났다. 또한 컴퓨터도 계층별 이용경험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상층인 58.8%이고, 하층은 21.4%였다. 이와 같은 계층별 차이가 앞선 MICS에서는 핸드폰, 컴퓨터가 높은 비중을 나타낸 반면, 통일부 심층조사에는 낮은 비중으로 나타난 이유이기도 하다.

〈표 7-4〉 계층별 전자기기 보유/경험률

(단위: %)

구분	상층	중층	하층
TV	94.1	91.4	78.6
CD플레이어	88.2	85.7	64.3
집전화	58.8	67.1	28.6
손전화	88.2	64.3	35.7
컴퓨터	58.8	44.3	21.4

자료: 천경효, 강채연, 박상민, 이혜원, 정은미, 임경훈, 조용신. (2020). 북한사회변동 2019: 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 보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p.77.

가장 최근에 입국한 <구술자 P>씨는 탈북의 직접적인 이유가 아들들에게 핸드폰을 사주기 위해 돈을 벌려고 국경을 넘은 분이었다. 내륙의 농장원으로 부지런히 살았지만 손전화가 없어서 작업반장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2020년 현재 조선돈 120-130만원, 중국 인민폐 2천원을 마련해야 핸드폰 1대를 살 수 있다고 했다. 더 놀라운 것은 협동농장 작업반에 핸드폰을 가진 사람이 11명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 120만원, 130만원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선돈은 아니, 조선의 핸드폰은 살 때는 힘들어도. 매달 전화했더니 11월 초하면 달랑 하고 소리가 난다고 딸랑하고 전화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깐 내가 만약에 전화를 할 데 가 없어서 전화돈이 남죠? 그러면 70%를 빼가

지고 그걸 돈으로 팔아먹고 그 돈을 모으면 잠깐이고...전화 돈 산 돈
이 나온다 말이에요.” (구술자 P)

그러니깐 초기 핸드폰 비용만 있으면, 사용하면서 제공되는 전화돈을 다 쓰지 않고 남겨서 현금처럼 계산하여 타인에게 팔 수 있기 때문에 매달 모으면 핸드폰 구입 비용을 상쇄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

또다른 <구술자 Q>씨는 최신형 ‘신아리랑’은 인민페 3,500원으로 거래되는 신형으로 이 기종만 전화돈 월 800원을 제공해 준다고 했다. 핸드폰의 기기값이 높아지는 만큼 핸드폰에 제공되는 전화돈의 액수도 높아지면서 전화돈을 통한 거래도 증가하는 추세인 것이다.

2. 이동수단과 여가 문화의 차이

가. 도시의 택시, 지방의 오토바이

2000년대 시장화를 시기를 관통하면서 가장 많이 변화한 것은 아마도 교통수단일 것이다. 대부분 초기에는 손수레를 밀고 다녔고, 자전거에 많은 짐을 싣고 다니는 모습이 보편적이었다. 고양이 담배 한 막대기 들고 손을 흔들면 지나가는 트럭이나 기업소 차를 얻어 타고 다니던 시절은 이제 지나갔다. 열차표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자주 운행되지 않고 저속으로 움직이는 열차를 대신하여 사설 장거리버스가 운영되기 시작했으며, 지금은 시외교통, 시내교통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구술자 중 큰 도시 출신들은 인민페 5원 짜리 택시를 타 본 사람이 있으나 매우 적었다. 대부분은 아는 사람의 기업소 운행의 자동차를 탔다고 했다. 반면 농촌 군에서는 보통 오토바이가 새로운 유행이 되고 있으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 사람은 제법 많았다.

최근 평양시, 청진시 등 큰 대도시를 제외한 북한 도시 주변에서는 오토바이가 유행이다. 이미 5년 남짓 유행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국경연선 지역에서는 오토바이가 최고의 이동수단이다. <구술자 R>씨는 오토바이 중계 상인을 했었다. 중국에서 밀수로 들여와 파는 일을 했는데 1대를 팔면 50달러 정도의 이윤이 남는다고 했다. 2019년 오토바이의 시세는 1천 달러였고, 오토바이 점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고자 하는 사람이 오토바이 주문을 해오면 <구술자 R>씨가 연계하여 오토바이를 구해다 주고 지불 가격을 받는 형식으로 운영했다. 북한이 자체로 생산하는 오토바이가 있지만, 대부분은 중국산 중고 오토바이를 거래하고 있으며, 오토바이는 등록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이의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기관·기업소에 등록을 하고 개인이 사적으로 운행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했다.

돈이 있어도 번호 받는 절차가 복잡하여 구입하지 않는 사람도 많지만, 다른 한편 전기모토(충전식 전기자전거)가 장착된 새로운 자전거가 유행하고 있다면서 이동수단에도 유행이 돌고 있음을 전했다. 또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으로 자전거가 전부이다 보니, 각 개인들은 일을 왕성하게 하려면 오토바이나 트럭 같은 것을 운행하고 싶어한다고 했다. 북한 주민세대에 자전거가 100% 다 있다고 치면, 오토바이는 한 30-40% 있을 정도로 오토바이는 지방에서 일반 교통을 대신하고 있다.

나. 탁구장, 목욕탕, 게임방 성행

시장도입 초기부터 북한 당국이 가장 먼저 허용한 곳은 개인이 하는 편의봉사 부문이었다. 2000년대 초반 평성시에서는 재일교포들이 일본 가족들이 송금해 준 엔화를 목욕탕에 투자하여 운영하다가 망했다는 구술

을 채록한 바 있다. 이후 김정은 시기에 북한 당국이 본보기 공장·기업소, 본보기 농촌마을 등 본보기 단위를 조성하면 꼭 창광원식 00원이라는 복합문화시설을 건설하고 이를 홍보했었다. 그런 만큼 목욕탕, 탁구장, 청량음료매대, 게임방, 식당 등은 북한 주민들의 주요한 문화 휴식공간이다.

2011년 8월 13일에는 평양에 문을 연 ‘은덕원’이라는 목욕탕이 북한 방송에 소개된 적이 있는데 ‘역포구역에 종합적인 편의시설을 갖춘 은덕원’의 개건 현대화를 집중 보도하였다. 이후 평양시 각 구역마다 은덕원 외에도 창광원이나 북새원, 문수원 같은 대형 목욕탕이 복합문화 휴식시설로 건립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소개 보도한 은덕원은 1층이 남녀 목욕탕과 가족탕, 독탕이고, 2층은 이발소와 미용실, 3층은 오락실과 체육시설이 있었다.

이와 같은 도시의 대형 복합문화휴식시설이 지방에서는 소규모와 개인들이 운영하는 편의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구술자 T>씨는 처음에 식당의 청소원으로 일하기 시작하다 식당을 인수하고 밥집으로 운영하다가, 결국 돈을 벌어서 식당 옆에 탁구장을 꾸몄다고 했다. 그런데 손님들이 탁구를 치다보면 땀이 나서 씻고 싶어 하는 손님들이 생겨나 목욕탕을 자그맣게 꾸밀 요량으로 전기며 물 공급 등의 조직사업을 전개하던 중 완성하지 못하고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안정적인 기업에 다니거나 사무원들은 점심시간에 탁구도 치고 목욕하고, 그리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는 일하러 들어간다고 하였다. 그렇게 손님들의 요구에 맞춰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 복합적으로 자꾸 넓혀 나가게 되었다고 했다. 주요 이용하는 손님들의 연령대가 젊으면 청량음료랑 게임기 같은 것을 놓고, 중년들은 탁구가 제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최근 북한 주요 도시에 위치한 목욕탕이 ‘성매매’, ‘마약’, ‘블루’의 근거지로 활용되고 있다(장원재, 2019.11.). 북한의 목욕탕이 심각

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게 된 것은 마약 거래 때문이다. 목욕탕 관리원들이 미리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가, 손님이 오면 필로폰 약 1g을 보여준다. 시중가에 1.5배에서 2배를 더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속이 들어와도 비교적 안전하다고 입소문이 퍼져있기 때문이다. 목욕탕에서 사용하는 마약은 조립식이다. 좁은 공간에서 간단하게 마약을 흡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여가 문화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개인의 노력과 무관하게 장사 활동을 통해 우연히 큰 돈을 벌게 된 사람들은 어린 첩을 두고, 마약을 하는 등의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서슴치 않는다. <구술자 U> 씨는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 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을에서 제일 부자인 돈주의 첩으로 지냈고, 아들까지 출산했다. 쌍방의 합의 아래 아들을 낳고 본처에게 보냈다고 했다. 그런 이후 돈을 받아 고향을 떠나 새로운 터전에서 마약 장사를 했다고 했다. 그렇게 돈벌이를 배웠기 때문이었다.

북한의 시장화가 파생하는 소득의 불균형은 하위 계층들의 삶과 생활의 곤란으로 이어지며 노동의 상품화가 이뤄지고 있는 반면 상위 계층들은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적당한 여가 문화와 휴식공간을 갖고 있지 못한 현실로 판단된다.



제8장

북한 주민 소비품목의 탐색

제1절 소비품목 탐색의 의의와 구성

제2절 북한 소비 품목 조사의 결과

제3절 북한 주민의 소비 품목 탐색

제 8 장 북한 주민 소비품목의 탐색

앞의 5장에서 7장까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면접조사, 국제기구의 북한 현지 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의·식·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어느 정도 축적되어 왔지만 조사의 목적과 수준 자체가 한국에서의 생활실태조사와는 거리가 있다. 또한 국제기구의 북한 현지 조사는 원자료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분석이 불가능한 한계도 있다.

이 장에서는 북한 주민 생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탐색적 차원에서 전 물량 방식을 변용한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의 분석 결과를 살펴본다. 이 조사의 목적은 북한 주민의 실제 생활은 어떠한지를 소비 품목을 통해 탐색적 차원에서 이해해 보고자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초연구를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표준적인 생활 실태를 보다 실증적이고 계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1절 소비품목 탐색의 의의와 구성

1. 소비품목 탐색의 의의

최근 북한 주민의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들은 일정하게 축적되어 왔다 (민기채, 조성은, 한경훈, 김아람, 2017; 이철수, 외, 2017; 홍제환, 김석진, 정은미, 2018).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영유아, 장애인, 노인, 산모 등의 특정 인구집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나, 연금, 건강, 영양 등의 특정

이슈에 주목하여 왔다. 기존 연구들이 해당 인구집단의 주요한 사회적 위험 실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을 볼 때, 특정 집단이 아닌 일반주민, 특정 이슈가 아닌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일반주민이 일상적으로 어떠한 소비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통적인 취약계층으로 대변되는 집단을 넘어 일반주민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또한 전통적인 취약계층이 겪는 사회적 위험을 넘어 일상생활에 주목하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일반주민의 일상생활을 이해하기 위해 ‘소비’를 분석하고자 한다. 남한은 1973년부터 정기적으로 최저생계비 계측을 통해 남한주민의 소비실태를 분석하여 왔다. 최근에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국민생활실태조사를 통해 3년 주기로 표준가구의 지역별 최저생계비와 지역별 가구규모별 및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여 왔다(김태완 외, 2017). 남한은 일반주민의 일상생활을 이해하기 위해 정기적인 ‘소비’ 실태를 분석해왔던 것이다. 반면, 북한의 경우 ‘일반주민의 일상생활’을 이해하기 위한 정기적 조사가 있는지 확인된 바 없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을 통한 간접적 경로로 북한 소비생활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한이탈주민을 통한 인터뷰 자료의 신뢰성에 대하여 인터뷰 대상자의 출신지역, 북한이탈년도, 북한이탈년도와 남한입국년도 간의 시간 간격, 질문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이해력, 답변에 대한 인터뷰어의 해석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연구방법적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북한 연구에 있어 감안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변수중심의 양적연구방법과 사례중심의 질적연구방법을 동시에 진행한 조합전략(combined strategy)을 추구함으로써 일정하게나마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한편,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서의 소비와 남한에서의 소비를 균일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는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소비는 사적 소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양하고 충분하게 소유하고 있다면 그리고 국가에서 소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있다면, 소비품목과 지출총액은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 바로 여기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차이가 발생한다. 자본주의는 다양하고 충분하게 소유하고 있지만, 국가에서 소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낮다. 반면, 사회주의는 다양하고 충분하게 소유하고 있지는 않아도, 국가에서 소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높다. 따라서 남북 간 소비실태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자본주의 생산양식과 사회주의 생산양식은 소유관계에 대하여 달리 이해하고 있다. 북한은 “자본주의적소유는 자본주의발전에 따라 그 집중과정이 더욱더 강화되면서 이 소유 밑에서 형성된 고도로 사회화된 생산력의 발전을 저애하는 질곡으로 전화되며 따라서 생산력과 소유관계간의 불가피한 적대적 모순을 발생시킨다”고 비판하면서, “이 모순은 자본주의적소유를 없애고 전인민적소유가 수립됨으로써 해결”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사회과학출판사, 1973, p. 750).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는 생산의 주체는 노동자의 잉여가치를 착취한 것이므로 모순적이라는 비판이다. 그 모순 해결은 전인민적 소유, 즉 사회주의적 국유화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북한은 해방 이후 토지개혁을 통해 사회주의적 국유화를 시작한 바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적 국유화를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이 사적, 자본주의적 소유로 되어있던 중요생산수단을 수탈하여 국가적, 전인민적 소유로 넘기는 것”으로 정의하며(사회과학출판사, 1973, p. 559), “우리 당과 인민정권은 3.7제등 소작료를 감면하는 투쟁으로부터 시작하여 일제와 그 주구들의 토지를 몰수하는 투쟁을 진행하였으며 조건이 성숙되자 1946년 3월 5일 력사적인 토지개혁법령을 발표”한 바 있다(사회과학출

판사, 1973, p. 1151). 토지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전인민적 소유의 시작을 알린 것이다.

결국 생산수단이 국유화되어 무료 또는 낮은 이용료로 소비가 가능한 북한의 전인민적 소유관계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여 본 연구결과는 해석될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 간 주민의 소비 품목의 총량과 소비 지출의 총합에 대한 등가 비교는 주의를 요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문제제기에 따른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표준생활비 계측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함으로써, 북한 표준생활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품목들을 탐색적 차원에서 선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남한 표준생계비 품목을 기준으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질적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이 조사의 차별성은 첫째, 남한 표준생계비 품목에 기초한 북한이탈주민 대상 최초의 설문조사라는 점이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 생활실태에 대한 연구는 일부 있으나, 그 연구들은 개방형 질문 형식의 질적 연구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남한 표준생계비 품목을 기준으로 한 조사 결과는 향후 남북 간 생활격차 완화를 위한 모색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남한 표준생계비 품목에 기초한 설문조사 뿐만 아니라 질적 인터뷰도 동시에 수행한 혼합연구방법(mixed methods)을 수행한 점이다.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연구들은 대개 질적 연구방법이나 양적 연구방법을 단독으로 수행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나, 본 연구는 변수중심의 양적연구방법과 사례중심의 질적연구방법을 동시에 진행한 조합전략(combined strategy)을 추구함으로써 양 연구방법이 갖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북한 주민 생활에서 소비되는 품목을 탐색적으로 선별함으로써, 향후 북한 표준생활모형 개발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남북한 생활 소비 품목 비교를 통해, 궁극적으로 남북 간 생활격차 완화를 도

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 조사를 위한 품목의 선정

가. 남한의 생계비 조사 품목

남한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생계비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하는 최저생계비 계측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표준생계비 조사가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생계비 비목은 총 11개로 구성된다.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표준생계비 비목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10개 비목으로 구성되었다가, 2014년부터 12개 비목으로 확대되어 계측되고 있다. 아래 <표 8-1>은 최저생계비와 표준생계비 각각의 비목을 보여주고 있다.

<표 8-1>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생계비 비목 구성의 비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저생계비 비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표준생계비 비목
식료품비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비
주거비	주류 및 담배비
피복·신발비	의류 및 신발비
광열·수도비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비
보건의료비	보건비
교통·통신비	교통비
	통신비
교양·오락비	오락 및 문화비
교육비	교육비
기타 소비지출	기타 상품 및 서비스비
비소비지출	조세공과금

자료: 김미곤, 여유진, 이상은, 정재훈, 김계연, 양시현 ... 임미진. (2009).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19). 2019년 한국노동표준생계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생계비 비목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생계비 비목을 비교해보면 대체로 비슷하나 몇 가지 비목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식료품비 비목 아래 식료품, 주류 및 비주류 음료비를 계측하고 있는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는 해당 품목들에 대해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비와 주류 및 담배비로 나누어 계측하고 있다.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식료품비에는 담배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전물량 방식으로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기 위해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생활필수품'을 선정함에 있어 담배는 해당 품목이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주거비와 광열·수도비를 나누어 조사하는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는 해당 품목들을 묶어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비 비목으로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통신비의 경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두 품목을 묶어 하나의 비목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는 교통비와 통신비 두 비목으로 나누어 계측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밖의 비목들은 명명하는 단어의 차이가 있을 뿐 내용은 비슷하다.

나. 북한 주민 소비 품목 조사 항목의 구성

본 연구에서 북한 주민의 소비 품목 탐색을 위해 남한 최저생계비 비목을 활용하였다. 최저생계비 비목은 다음의 11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최저 식료품비, 최저 주거비, 최저 광열·수도비,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최저 피복·신발비, 최저 보건의료비, 최저 교육비, 최저 교양·오락비, 최저 교통·통신비, 최저 기타소비지출, 최저 비소비지출이다(김태완 외, 2017).

북한 주민 소비 품목 탐색을 위해 첫째, 남한 최저생계비 비목을 활용하며, 둘째, 북한 생활상에 부합한 품목을 일부 개발하였다. 먼저 남한 최저생계비 비목을 활용한 이유는 '남북 간 사회격차 완화'라는 연구목표를

달성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남북 간 사회격차 완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복지체제 구축 방안을 고려한다는 연구목적에 기여하고자 한다. 남북 간 사회격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남한의 최저생계비 비목을 기준으로 하던지, 북한의 최저생계비 비목을 기준으로 하던지, 제3의 최저생계비 비목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표준생계비 비목을 확인할 수 없으며, 제3의 표준생계비 비목은 남북한 주민의 생활과 사회문화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실적 대안으로서 남한의 표준생계비 비목을 고려하였다.

다음으로 북한 생활상에 부합한 품목을 일부 개발하였다. 남한과 북한은 한 민족이며, 한반도 지역에 거주하며, 21세기의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주민생활에서 큰 차이는 없다. 특히 남한 최저생계비 비목을 고려할 때, 11개의 대분류와 대분류 하의 품목들에 대하여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과는 다른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생산양식을 가진 경제시스템이자 저발전 경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생활상에 부합한 또는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에 적합한 품목들을 추가하거나 내용상의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변경하였다.

추가된 품목들은 첫째, 소득이다. “탈북 직전 연도의 모든 가족 성원들의 소득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이때 소득은 직장월급(현금, 현물, 인사차례로 받는 돈 또는 물건포함), 농장원의 경우 분배, 알곡 현물 분배 등 연간 소득, 장사 업종과 월 평균수입 또는 연간 소득, 부업(소토지농사, 짐승기르기 등을 통해 얻은 연간 소득), 가족 중 사회보장비, 년로보장비 수급자와 받은 액수, 부채와 부채로 인한 이자로 구성하였고, 각 품목들을 합산한 총액을 계산하였다.

둘째, 자산이다. “탈북 직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산에 대해 말씀해 주세

요”라고 답변을 요청하였다. 거주하고 있는 집을 제외한 주택, 주택 외 건물(사업장, 창고, 상가), 소토지(평수, 가격), 사업설비(기계, 영업용 자동차, 버스, 오토바이, 자전거 선박 등), 현금·골동품·귀금속 등을 합산한 총액을 계산하였다.

셋째, 최저 식료품비에서는 ‘강냉이’, ‘사탕 과자’를 추가하였다. 북한 먹거리에 필요한 품목을 추가한 것이다.

넷째, 최저 주거비에서는 ‘조달비용(집 가격)’을 추가하였다. 조달비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하여 집 가격이라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다섯째, 최저 광열·수도비에서는 전기요금 품목을 ‘공식 전기요금’, ‘불법 전기 비용’, ‘태양광판’, ‘배터리’로 세분화하였다. 상하수도 요금 품목을 ‘공식 상하수도 요금’, ‘실제 상하수도 요금’으로 세분화하였다. 난방 및 취사비 품목을 ‘난방’, ‘취사’로 세분화하였다. 북한의 실생활을 반영하고,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여섯째,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에서는 ‘기타 일반가구’, ‘기타 가정용가구’를 추가하였다. 남한과는 다른 북한의 가구들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일곱째, 최저 교육비에서는 교재비 품목을 ‘교재(총교재비)’, ‘교과서’, ‘참고서’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자녀 교육비 구분이 매우 세분화되어 있어서, 답변의 정확성과 간소화를 위한 것이었다. 보충교육비 품목에 ‘개인과외’, ‘농촌동원/청년근위대’, ‘운동회/원족’, ‘답사/견학/야영’을 추가하였다. 문방구비 품목에서 ‘스케이트/롤러스케이트’, ‘공’을 추가하였다. 북한의 아동·청소년기 생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함이었다.

여덟째, 최저 교양·오락비에서는 교약오락용품기구 품목에서 ‘노트북’과 ‘노트텔’을 추가하였다. 북한 주민들이 주로 활용하는 제품을 반영한 것이었다.

아홉째, 최저 교통·통신비에서는 교통비 품목에서 ‘기타’를 추가하였다. 남한과는 다른 북한의 교통비 지출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열째, 최저 비소비지출에서는 부담금 품목을 추가하여 ‘직장’, ‘인민반’, ‘여맹/직맹/청년동맹’, ‘학교’, ‘장세/토지세’ 품목들을 추가하였다. 남한과는 다른 세외 부담을 고려한 것이다. 그 외 최저 피복·신발비, 최저 보건의료비, 최저 기타소비지출에서 수정한 내용은 없다.

남한 최저생계비 비목에 대한 질문 이외에 경제수준, 소비지출, 남북 간 격차인식에 대한 심화 질문도 추가하였다. 심화 질문들은 가족의 월 소비지출(넉넉하게, 보통, 빠듯하게)에 대한 질문(“가족의 월생계비 지출은 총 얼마라고 생각했습니까?”, “넉넉하게 생활하자면 얼마면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빠듯하게 생활하자면 얼마면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주관적 경제수준(“북한에서의 경제적 수준은 ‘상, 중, 하’ 가운데 어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출 여력이 없을 경우 해결 방법(“북한 지역에서의 지출 여력이 없을 때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남한과 북한의 공통점과 차이점(“북한과 남한의 수입과 지출(품목, 금액)을 비교할 때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남북한 주민 생활격차 완화 방안(“남북한주민 생활격차 완화를 위한 남과 북의 각각 국가차원의 역할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이다. 이상의 모든 응답내용은 ‘탈북 시점으로부터 1년 이전을 기준으로’라고 명시하여 통일성을 기하였다.

조사에서 주목한 점은 해당 품목을 소비하는 가구들의 빈도와 가격이다. 품목의 등급이 각이하므로 가격도 상이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따라서 가격보다는 빈도에 주목하여, 빈도가 높은 품목부터 내림차순으로 표를 구성하였다. 품목의 가격은 평균값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소수 품목에 대해서는 연구진(전문가)의 판단 하에 최빈치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가구원 수에 따라 표준생계비를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해당 품목을 소비한 총 가구원 수로 나누어 1인당 소비량 측정을 시도하였다. 주택, 전기 등 공동이용 필수품들은 품목의 특성 상 가구 단위로 측정하였다. 가격을 중국 위안화, 달러, 북한 원으로 각이하게 기록하였으므로, 북한 원화로 환산하였다. 북한 원화의 단위는 만원이다.

3. 모집단과 표본 간 거주지와 가구원 수의 차이 이해

북한의 실제 가구와 북한이탈주민 조사가구의 거주지역에는 차이가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은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북한 이탈주민들은 재북 당시 대부분 양강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거주자였다. 그 중 62.2%는 양강도 거주자였다. 도시 거주자가 83.7%였고, 군 거주자는 16.3%였다. 유엔인구기금에서의 실제 조사에서 도시와 농촌의 구분 기준은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2014년 조사가구 중 도시 거주자는 58.3%, 농어촌 거주자는 41.7%였다(UNFPA, DPRK, 2015, p. 7, Sampled Households Table 참조). 본 연구는 유엔인구기금의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시 출신 비율이 높다.

〈표 8-2〉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참여자의 거주지

(단위: 빈도, %)

	시	군	총계	%
양강도	22	1	23	62.2
함경북도	4	3	7	18.9
함경남도	2	2	4	10.8
평양시	2	0	2	5.4
평안남도	1	0	1	2.7
총계	31	6	37	100.0%
%	83.7	16.3	100.0%	

자료: 저자작성

유엔인구기금 조사는 4인 가구가 34.7%로 가장 많고, 5인 이상 가구가 28.2%로 그 뒤를 잇는 반면(UNFPA, DPRK, 2015, p.19), 본 조사는 3인 가구가 35.1%로 가장 많고, 2인가구와 4인 가구는 27%였으며, 5인 가구는 5.4%에 불과하였다. 유엔인구기금 조사에서의 가구원 수와 본 조사에서의 가구원 수는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다.

후속 연구에서 표준 가구를 구성하는 데에는 가구원수도 고려되어야 한다. 남한에서 최저생계비 조사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는데, 북한 이탈주민은 4인 가구만을 선정해서 표본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것은 최근 남한 입국자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으므로, 쉬운 문제는 아닐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조사를 통한 간접 생계비 조사는 이러한 제한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도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표 8-3〉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참여자의 가구원 수

(단위: 빈도, %)

본 조사			유엔인구기금 조사
가구원 수	조사대상 가구원 수	%	%
1	2	5.4	0.9
2	10	27.0	13.3
3	13	35.1	22.9
4	10	27.0	34.7
5	2	5.4	28.2
평균 가구원 수	3	100.0%	3.9

자료: 유엔인구기금 조사 결과는 UNFPA, DPRK. (2015).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ocio-Economic Demographic Health Survey 2014. <https://www.undp.org/content/undp/en/home/search.html?q=Socio-Economic+Demographic+Health+Survey> 에서 2020.9.30. 인출, p.19 참조. 본 조사는 저자작성

제2절 북한 소비 품목 조사의 결과

1. 가구 총소득과 총지출

가. 가구 월 소득

먼저 조사대상의 월 소득액 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입 원천은 크게 5가지로 구분하였다. 직장(직장에서 받는 월급, 직장에서 받는 배급(시장가격으로 환산)), 장사(장사를 통해 번 소득), 부업(부업을 통해서 번 소득(소토지, 약초, 산나물 채취, 돼지사육 등)), 수급(국가로부터 받은 수급액), 송금(외국(주로 남한, 간혹 일본)의 친척들로부터 받은 송금)으로 제시하였다.

가구 연소득(북한 만원)은 5가지 수입 원천의 총합이며, 가구 월소득(북한 만원)은 가구 연소득을 월로 환산한 금액이며, 마지막으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남한 원으로 환산한 가구 월소득을 제시하였다. 남북한 간 공식 환율은 없다. 이에 각각의 달러 환율비를 고려하였는데 북한 원은 1\$당 8,000원, 남한 원은 1\$당 1,100원으로 가정하여 남한 원은 북한 원의 0.1375배(= 1,100원 ÷ 8,000원)로 간주하였다. 분석 결과, 조사대상의 월평균 소득액은 북한 원화로 168.9만원으로, 한국 원화로는 232천원이었다.

〈표 8-4〉 조사대상의 특성과 소득

(단위: 빈도, 북한 만원, 남한 원, 월)

번호	성별	연령	탈북 년도	거주지	학력	가구 원수	미성년	소득 원천				가구 연소득 (한국 원)	가구월소득 (북한 만원)	가구월소득 (한국 원)	
								직장	장사	부업	수급				송금
1	여	37	2015	회령시	대졸	2	-	158.4	864	70	0.42	-	1092.8	91.1	125,263
2	여	33	2019	혜산시	고졸	3	1	33.6	1800	62.5	-	-	1896.1	158	217,250
3	남	30	2019	부경군	고졸	2	-	-	3000	-	-	-	3000	250	343,750
4	여	42	2019	평양시	대졸	3	-	1926.9	-	-	-	-	1926.9	80.6	110,825
5	여	41	2016	낙원군	중졸	4	-	-	6000	-	-	-	6000	500.1	687,638
6	여	49	2018	혜산시	중졸	2	-	-	4320	-	-	-	4320	360	495,000
7	여	57	2016	홍원군	고졸	4	-	-	240	-	-	-	240	20	27,500
8	여	56	2019	혜산시	전졸	2	-	-	4320	-	-	2880	7200	600	825,000
9	여	45	2019	혜산시	전졸	5	-	-	-	480	-	1200	1680	140	192,500
10	여	31	2017	평양시	고졸	5	-	4.2	12	96	3.6	-	115.8	9.7	13,338
11	여	48	2019	청진시	고졸	2	-	-	1800	-	-	-	1800	150	206,250
12	여	41	2018	혜산시	대졸	3	1	-	3120	-	-	-	3120	260	357,500
13	여	33	2018	혜산시	전졸	3	1	20	2160	-	-	-	2180	181.7	249,838
14	여	35	2018	혜산시	전졸	3	1	-	7200	-	-	-	7200	600.1	825,138
15	여	53	2014	청진시	고졸	4	-	225	7632	-	-	1600	9457	788.1	1,083,638
16	여	56	2019	혜산시	고졸	3	-	144	2160	-	-	-	2304	192	264,000
17	여	49	2018	단천시	대졸	2	1	-	360	-	-	720	1080	90	123,750
18	여	55	2015	평성시	전졸	4	1	432	1440	-	-	-	1872	156	214,500
19	여	35	2018	혜산시	고졸	1	-	-	-	-	-	1200	1200	100	137,500

번호	성별	연령	탈북 년도	거주지	학력	가구 원수	미성년	소득 원천				가구 연소득	가구월소득 (북한 만원)	가구월소득 (한국 원)	
								직장	장사	부업	수급				승급
20	여	31	2019	혜산시	고졸	3	1	-	-	-	-	-	-	-	
21	여	33	2018	혜산시	전졸	3	1	1.98	2700	-	-	240	2942	245.2	
22	여	50	2019	혜산시	전졸	4	2	-	1296	-	0.96	3000	4297	358.1	
23	여	48	2019	함흥시	대졸	3	-	7.2	2880	-	-	-	2887.2	240.6	
24	여	51	2016	혜산시	고졸	1	-	2.4	-	-	-	240	242.4	20.2	
25	여	49	2018	혜산시	전졸	3	1	2.4	240	-	-	-	242.4	20.2	
26	여	55	2019	혜산시	중졸	3	-	10	-	-	-	480	490	40.8	
27	여	51	2019	혜산시	중졸	4	-	2.4	-	-	-	480	482.4	40.2	
28	여	38	2013	혜산시	전졸	5	1	0.8	1560	-	-	-	1560.8	130.1	
29	여	20	2017	보천군	고졸	2	1	35	72	-	-	-	107	8.9	
30	여	29	2019	회령시	고졸	4	1	1	-	130	-	-	131	10.9	
31	여	54	2019	혜산시	기술학교	4	1	144	576	-	-	-	720	60	
32	여	70	2016	혜산시	중졸	2	1	-	144	-	-	-	144	12	
33	남	26	2019	무산군	고졸	3	-	88.6	-	250	-	-	338.6	28.2	
34	여	25	2019	무산군	고졸	2	-	48	-	18	-	-	66	5.5	
35	여	26	2017	혜산시	고졸	4	-	432	-	-	-	-	432	36	
36	여	57	2019	혜산시	전졸	3	-	2.58	-	43.2	-	1008	1053.8	87.8	
37	여	47	2019	혜산시	전졸	2	1	-	120	-	-	-	120	10	
평균 소득	-	-	-	-	-	-	-	3,722.46	56,016.00	1,149.70	4.98	13,048.00	73941.14	168.9	232,237

소득 원천별로 그 빈도와 비율을 비교한 결과, 소득 원천으로 장사가 25가구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직장 22가구, 송금 11가구, 부업 8가구, 수급 3가구로 응답하였다. 소득 원천 총액을 기준으로 비율을 보았을 때, 장사가 75.76%로 가장 높고, 송금 17.65%, 직장 5.03%, 부업 1.55%, 수급 0.01%였다. 장사 > 송금 > 직장 > 부업 > 수급(년로보장비)의 순이었다.

그 결과를 볼 때, 직장에서 소득이 발생한 가구가 22가구나 되었지만, 실제 비중은 5%에 불과하였다는 점이다. 반면 송금을 받았다는 가구의 소득 비중은 17.6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년로보장비로 대변되는 국가로부터의 사회보장급여의 비중은 0.01%에 불과하였다.

〈표 8-5〉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참여자의 소득 원천별 가구 및 비율

(단위: 빈도, %, 북한 만원, 연)

분류	직장	장사	부업	수급	송금
가구 빈도수	22	25	8	3	11
소득 원천 총액	3,722.46	56,016.00	1,149.70	4.98	13,048.00
%	5.03	75.76	1.55	0.01	17.65

주: 복수응답
자료: 저자작성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참여자의 월 소득 및 지출 평균값과 중위 값을 조사하였다. 송금은 북한 내에서 창출된 소득이 아니므로, 송금을 제외한 소득과 송금을 포함한 소득을 모두 제시하였다. 송금제외 월 평균 소득은 199천원(남한 원)이었고, 송금포함 월 평균 소득은 232천원(남한 원)이었다.

나. 가구 월 지출

지출은 객관적 지출과 주관적 지출을 모두 조사하였다. 객관적 가구 월 지출은 147천원(남한 원)인데, 주관적 지출로서 ‘넉넉하게 생활하자면’

월 317천원(남한 원), ‘빠듯하게 생활하자면’ 월 82천원(남한 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넉넉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약 2배의 지출이 필요하며, 빠듯하게 살아야 한다면 현재보다 약 1/2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전반적으로 평균값보다 중위값이 낮게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 내에서 인구집단 간 소득과 지출의 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도 자본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소득과 지출 측정에서 평균값과 동시에 중위값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표 8-6〉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참여자의 월 소득 및 지출 평균값과 중위 값

(단위: 북한 만원, 한국 원, 월)

		소득		객관적 지출과 주관적 지출		
		송금제외 월 소득	송금포함 월 소득	가구 월 지출	넉넉하게 생활하자면	빠듯하게 생활하자면
평균값	북한 만원	145	168.9	107.1	230.3	59.6
	한국 원	199,375	232,238	147,263	316,663	81,950
중위값	북한 만원	91.1	95.5	60	132	30
	한국 원	125,263	131,313	82,500	181,500	41,250

자료: 저자작성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참여자의 월 소득 및 지출과 관련된 인터뷰 내용들이다.

직장에서 제정된 월급은 1850원이죠. 거기에서 수당도 해서, 2020원 정도. 그런데 병원 안에서는 월 평균이 그냥 능력에 따른거니까... 여기 오기 1년 전에는 월에 북한돈으로 한 10만원에서 13만원 사이 받았어요. 장사는 약장사하면 솔솔한데 1달에 최소한으로다가 중국 돈으로 600위안은 벌었어요. (ID 1, 37세, 회령시)

직장에서 월급을 받았어요. 예산제니까. 저는 2850원이고 애 아빠는 2900원 정도 받았어요. 다른 수입은 동무들이나 친척들이 도와줬는데 한 달에 100불 정도 받았어요. (ID 4, 42세, 평양시)

남편이 벌어들인 게 없었어요. 작장만 출근하고 월급 받아온 게 없었어요. 그물업으로 살았어요. 그게 한 달 수입이 북한돈으로 20만원. 그 다음에 사회보장비 받는 것도 없고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도 동생이 돈을 보내줘서 중국돈 5600원 정도 보내줘서 달러 두 장 200만원 저축해놓고 나머지 돈으로 살았어요. (ID 7, 57세, 홍원군)

월급은 남편은 지배인 했으니까 월급은 거의 없어도 식량은 가을에 그저 한 옥수수 500kg 들어와요. 그러면 나는 그걸 쌀로 바꿔요. 그러면 입쌀은 한 250kg 정도는 되니까. 큰 딸이 장사를 했는데 그런데 재미삼아 해서 월에 300위안 정도 벌었어요. 놀지 못해서 그냥 한거예요. 작은딸은 중국 돈으로 5천 벌 때도 있고 6천 벌 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일 안하고 집에 있었어요. (ID 15, 53세, 청진시)

아버지가 농장원이었기 때문에 1년치 감자를 300에서 400키로그램 받으셨습니다. 본인은 이제 학교를 다녔어야 되는데 이제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고요. 장사해서 돈 번으로 생활비에 보탬이요. (ID 29, 20세, 보천군)

남편이 탄광 노동자였는데 직장 월급은 없었고요. 1년에 감자 100키로 정도 받았어요. 저는 부업을 했는데 돼지 키웠어요. 그걸 키워가지고 90만 원 벌고, 옥수수도 800키로 부업했어요. 옥수수 800키로로 40만원 정도 받았어요. 4인 가족이었는데 총 소득이 130만원 정도였어요. (ID 30, 29세, 회령시)

가족 소득을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사위가 직장인 그저 그냥 회산데 드문드문 나왔어요. 국가서 주는 생활비라면 소득을 정하겠는데 이

저는 국가서 주는 생활비가 아니니까. 일 있을 때 나가고 일 없을 때 안 나가니까. 그 소득을 어떻게 말할 수가 없지. 그래도 한 달로 따졌을 때... 못 벌어도 100위안은 벌었어요.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던 건 내가 짐 소개해서 벌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로 말하면 택배. 회사에서 짐을 싸서는 앞에 다가 보내거든요. 거기다가 한 3%~2% 붙여서 보내면 그 돈을 받아요. 그런 장사 했어요. 월 평균 300에서 500원 벌었어요. 네 식구 월간소득을 치면 그저 500원대 드물어요. 400원 들어오면 잘 들어오는거예요. 그런데 400원도 잘 안들어와요. (ID 31, 54세, 혜산시)

뜨개질 장사를 했어요. 한 달이면 스웨터 같은 걸 떠서리... 5개는 떴단 말이에요. 그거 4개 주면 중국돈 20원씩 할 수 있다 이거예요. 5개면 100위안. 여름철 낮에는 썩을 뜯어다가 시장 나가서 떡집에다가 넘겨줬어요. 그렇게 돈 벌어서 한 달에 100위안 정도 벌었어요. (ID 32, 70세, 혜산시)

아버지와 제가 같은 직장에 다녔어요. 광산 노동자였는데 강냉이 9키로, 쌀 4.5키로 배급을 받았어요. 이걸 국돈으로 환산하면 4만원씩이 되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농사도 하고, 버섯이나 잣도 뜯고 하면서 그 일하는 소득에서 소득이 조금 남는거예요. 그게 월 25만원 정도 됐어요. 그래서 세 식구 총 소득이 월 33만원 정도였어요. (ID 33, 26세, 무산군)

저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식당에서 합숙생활을 했어요. 거기서 일하면서 월급을 받았어요. 월 강냉이 9kg에 쌀 4.5kg. 이게 국돈으로치면 한 4만원 정도예요. 아버지는 부업을 하셨는데 산나물이나 버섯, 잣 이런 거 캐서서 월에 한 10-15만원 정도 벌었어요. (ID 34, 25세, 무산군)

아버지는 군관이었고 저는 가발공장에서 가발 만들었어요. 월급을 받았는데 중국돈으로 아버지가 150, 저도 150정도 되요. 그래서 총 300

원 정도. 돈으로 주는게 아니에요. 쌀로 주는데... 쌀 30kg가 150이었어요. 가끔씩 담배나 쌀, 강냉이로 받기도 했어요. 그걸로 4인 식구가 살았어요. (ID 35, 26세, 혜산시)

남편이 도시건설노동자를 했는데 월급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쌀이고 뭐고 이런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학교 경리원하면서 월급으로 받았던 2150원이 주 소득이었어요. 대신에 남편은 부업으로 집 수리를 했어요. 한달에 고저 1번 할때도 있고, 2번 할때도 있고. 그런데 아예 일을 못할때도 있어서 그거 평균내면 한 달에 중국돈 30위안 정도 되요. 근데 아들이 한국에 있어서 1년에 한 3번 정도 한 번에 중국돈 4000원씩 보내요. 거기서 30%를 잘리고 나면 고저 2800원 정도 들어와요. 그게 있어서 살았지요. (ID 36, 57세, 혜산시)

저하고 동생이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북한에서는 전기가 너무 약하게 들어오거든요, 변압기라고 자동변압기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거든요. 일을 하면서 부수입으로. 동생이 연간 한 5천원 정도. 그래서 동생이랑 저하고 합치면 년에 1만 3천원 정도 수입이 있었거든요. (ID 28, 38세, 혜산시)

조사대상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수입원은 직장 소득, 직장에서 받는 배급, 장사 소득, 부업 소득 등으로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은 직장을 다녀도 월급을 받지 못해 직장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은 거의 없었고, 대체로 장사나 부업을 통해 돈을 벌며 생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사의 종류는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주로는 집에서 만든 상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곳에서 물건을 떼서 판매하였다.

먼저 탈북한 가족으로부터 송금을 받아 생활비에 보태어 쓰는 경우가 있었다. 37가구 중 11가구가 송금을 받았다고 하여, 남한과는 다른 독특한 소득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2. 비목별 소비 품목

비목별 소비품목에 대한 각 항목을 설명하기 전에 어떠한 방식으로 조사결과를 제시하였는지에 대하여 먼저 설명하고자 한다. 본 조사에서는 조사에 참가한 사람들이 북한에서 일상적으로 섭취하던 식료품 품목에 대한 총량, 소비 가구 수, kg당 가격, 품목당 지출총액을 북한 만원과 남한 원으로 환산하여 조사하였다.

‘총량’은 조사대상 가구들이 품목별로 한 달 동안 소비한 양을 모두 합한 것이다. 주거비·수도 광열비 지출, 가사잡화소모품 침구 및 직물제품 지출 등 일부 항목들에 대해서는 항목의 특성 상 총량 대신 ‘총액’을 기입하였다.

‘가구 수’는 조사대상 중 그 품목을 사용했다고 응답한 가구의 합이다. 각 표의 조사결과는 해당 품목을 가장 많이 사용한 가구 수를 내림차순 방식으로 제시하였다.

‘kg당 가격’은 해당 품목이 kg당 시장에서 얼마에 구입가능한지를 응답하게 하였고, 평균(또는 최빈치) 가격을 적은 것이다. 일반가구·가정용기구·식기주방용품 지출, 가사잡화소모품 침구 및 직물제품 지출 등 일부 항목들에 대해서는 항목의 특성 상 kg당 가격 대신 ‘개당 가격’을 기입하였다.

‘사용연한’은 일부 항목들에 대해서만 제시하였다. 일반가구·가정용기구·식기주방용품 지출, 가사잡화소모품 침구 및 직물제품 지출 항목에서는 사용연한이 제시되어 있다.

‘지출총액’은 모든 가구들이 소비한 총량에 품목의 가격을 곱하여 얻은 수로, 조사대상 가구가 그 품목 소비에 지출한 총 금액이며, 북한 만원과 남한 원을 각각 계산하였다. 예를 들어, 쌀의 경우, $640.9(\text{총량(kg)}) \times 0.5(\text{kg당 가격}) = 320.5(\text{북한 만원})$ 이다. 모든 품목에 대한 가격을 합산

하여 조사가구의 총 가구원 수인 112명으로 나누어 1인당 식료품비를 산출했다. 예를 들어, 곡류 및 식빵 지출의 경우, $1,454.925(\text{총량(kg)}) \div 121(\text{총 가구원 수}) = 13(\text{1인당 월 지출 총량(kg)})$ 이고, $565.2(\text{총액, 북한 만원}) \div 121(\text{총 가구원 수}) = 5(\text{1인당 월 지출 총액, 북한 만원})$ 이며, $777,150(\text{총액, 남한 원}) \div 121(\text{총 가구원 수}) = 6,938.8(\text{1인당 월 지출 총액, 남한 원})$ 을 의미한다.

물론 특정 품목에 대한 지출을 하지 않은 가구도 있으나,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 총 가구원 수로 나누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해당 품목 대한 소비를 했던 가구원 수만을 제시할 경우, 평균값을 제시하기가 복잡하여, 총 가구원 수로 나누는 방식을 활용한 측면도 있다. 또한 해당 품목에 대한 소비를 했던 가구원 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하면, 과대추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출에 대한 평균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수치로 활용할 목적으로 위 방식을 선택하였다.

이상과 같은 절차에 따라 다른 항목들도 수치를 계산하고 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수치들은 분명한 한계를 갖는다. 그러나 37가구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치를 제시한 배경은 향후 궁극적인 북한 표준생활 모형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에 개괄적 이해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수치는 제한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 식료품비

식료품비란 인간의 필수적인 열량과 영양소를 섭취하는데 소비되는 비용이다. 그러므로 영양학적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나 북한에서 식료품비는 아직까지 그러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식품비는 배고픔을 느끼지 않고 생활하는데 드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식료품 품목으로서는 곡물 및 식빵, 육류·낙농품·어개류, 채소 및 과일, 조미식품·빵·차·주류·외식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① 곡물 및 식빵 지출

곡물 및 식빵 지출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쌀 소비가 37가구로 가장 많았고, kg당 가격은 5천원(북한 원), 지출총액은 321만원(북한 원), 441천원(남한 원)이었다. 쌀을 소비한 가구 수가 가장 많았고, 국수, 밀가루, 찹쌀, 콩, 강냉이, 라면, 당면, 보리, 팥, 식빵, 만두 순이었다. 1인당 월 지출 총량은 약 13kg이며, 1인당 월 지출 총액은 6,938.8원(남한 원)이었다.

분석결과를 볼 때, 남한의 최저생계비 비목에 해당하는 곡류 및 식빵 품목들은 북한 주민도 모두 소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품목을 추가했던 강냉이도 17가구가 소비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표 8-7> 곡류 및 식빵 지출

(단위: kg, 빈도, 북한 만원, 남한 원, 월)

품목	총량 kg	가구 수	kg당 가격	지출총액	
				북한 만원	남한 원
쌀	640.9	37	0.5	320.5	440,687.5
국수	205.32	30	0.2	41.1	56,512.5
밀가루	119.75	29	0.45	53.9	74,112.5
찹쌀	45.33	20	0.55	24.9	34,237.5
콩	48.8	18	0.45	22.0	30,250.0
강냉이	251	17	0.2	50.2	69,025.0
라면	38.9	13	0.15	5.8	7,975.0
당면	7.325	12	0.5	3.7	5,087.5
보리	56.4	11	0.3	16.9	23,237.5
팥	18.4	10	0.45	8.3	11,412.5

품목	총량 kg	가구 수	kg당 가격	지출총액	
				북한 만원	남한 원
식빵	19	7	0.9	17.1	23,512.5
만두	3.8	4	0.25	1.0	1,375.0
합계	1454.925	-	-	565.2	777,150.0
1인당	13.0	-	-	5.0	6,938.8

자료: 저자작성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참여자의 곡물 및 식빵 지출과 관련된 인터뷰 내용들이다.

두명에서 먹으니까, 많이 필요하지는 않고. 쌀 한 20kg도 안 들어요. 15kg정도... 근데 그거는 또 10kg 이상부터는 다 중국 돈으로 사니까. 20kg짜리 시대 한 개가 그 때 당시에 100위안이 안 됐거든요. 직접 대 거래하는 데니까. 저희는 한 80원씩 산 것 같아요. kg당 한 4000원 정도. 찹쌀은 거기에 1000원 정도 더 비쌌는데 한 달에 한 3kg 정도 먹었어요, 살짝살짝 섞어서. 보리는 애초에 함경도에는 없어요. 강냉이도 안 먹었어요. (ID 1, 37세, 회령시)

세 식구가 한 달에 한 20kg정도 먹었어요. 강냉이는 먹지 않았고, 찹쌀도 먹은 적 없어요. 식빵을 먹었는데 한 달에 1kg 먹었어요. (ID 4, 42세, 평양시)

쌀은 월에 1kg 정도 먹었나... 명절이 있어야 먹고 명절이 없으면 안 먹고. 강냉이를 주로 먹었어요. 강냉이는 한달에 45kg. 1kg이 1500원 이었어요. 찹쌀은 1년에 설날에 먹었던 거 같아요. 국수는 한 달에 2-3번 먹었는지... 콩도 거의 못 먹었어요. 반찬 같은게 없었어요. (ID 7, 57세, 홍원군)

네 식구였는데 월에 쌀을 총 20키로 먹은거 같아요. 이게 8만원 정도

예요. 그리고 강냉이랑 찹쌀도 같이 먹었어요. (ID 30, 29세, 회령시)

4인 가족인데 쌀은 한 달에 30kg 먹었어요. 1키로에 중국돈 4원 10전 씩. 옥수수나 찹쌀, 보리같은 건 안먹었어요. 쌀밥만 해먹었어요. 국수도 해먹었는데 한 달에 한 10 키로를 먹었어요. 이걸 국돈이에요. 1키로에 2,500원 내지 3,000원 그러니까 25,000원 내지 30,000원을 쓴 거죠. 이거는 중국돈으로 안해요. (ID 31, 54세, 혜산시)

손녀랑 같이 살면서 입쌀만 먹었어요. 한 달에 5키로 정도. 중국돈으로 10원정도 했어요. 옥수수는 거의 안먹고, 국수는 2키로에 4원짜리 먹었어요. (ID 32, 70세, 혜산시)

네 식구가 쌀을 20키로 먹었어요. 가격은 중국돈 200원정도했어요. 강냉이도 먹었고, 다른건 안먹었는데 밀가루랑 국수는 좀 먹었어요. (ID 35, 26세, 혜산시)

조사대상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재북 당시 소비한 곡류는 주로 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옥수수의 경우, 지역이나 형편에 따라 거의 먹지 않은 가구도 있었고, 먹은 가구도 있었다. 또한 밀가루와 국수 소비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② 육류·낙농품·어개류 지출

육류·낙농품·어개류 지출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돼지고기 소비가 35가구로 가장 많았고, kg당 가격은 1.3만원(북한 원), 지출총액은 170.8만원(북한 원), 235천원(남한 원)이었다. 돼지고기를 소비한 가구 수가 가장 많고, 달걀, 명태, 냉동오징어, 멸치젓, 콩치, 소고기(갈비)/연, 멸치, 소시지, 새우젓, 고등어, 닭고기, 북어, 우유리터, 홍합, 튀김닭, 유산발효

유, 햄 순이었다. 1인당 월 지출 총량은 약 16.5kg이며, 1인당 월 지출 총액은 9,487.5원(남한 원)이었다.

분석결과를 볼 때, 남한의 최저생계비 비목에 해당하는 육류·낙농품·어개류 품목들은 북한 주민도 대부분 소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갈치, 어묵, 참치캔은 소비한 가구가 없었다.

〈표 8-8〉 육류·낙농품·어개류 지출

(단위: kg, 빈도, 북한 만원, 남한 원, 월)

품목	총량	가구 수	kg당 가격	지출총액	
				북한 만원	남한 원
돼지고기	136.6	35	1.3	170.8	234,850.0
달걀	1041.7	32	0.1	104.2	143,275.0
명태	60.46	25	1.3	75.6	103,950.0
냉동오징어	40.76	22	1.5	61.1	84,012.5
멸치젓	32.8	16	0.3	8.2	11,275.0
풍치	22.09	15	0.8	17.7	24,337.5
소고기(갈비)/연	20.53	15	3.0	61.6	84,700.0
멸치	32.72	14	0.5	16.4	22,550.0
소시지	257.5	13	0.1	20.6	28,325.0
새우젓	20.2	12	0.3	6.7	9,212.5
고등어	11.785	11	1.2	14.1	19,387.5
닭고기	4.28	9	3.6	15.4	21,175.0
복어	39.6	9	0.7	27.7	38,087.5
우유리터	40.26	9	3.6	144.9	199,237.5
홍합	6.7	5	0.3	2.0	2,750.0
튀김닭	3.05	3	1.9	5.7	7,837.5
유산발효유	55	2	0.2	11.0	15,125.0
햄	3.5	2	0.3	0.9	1,237.5
갈치	-	0	-	-	-
어묵	-	0	-	-	-
참치캔	-	0	-	-	-
합계	1829.535	-	-	764.5	1,051,187.5
1인당	16.4823	-	-	6.9	9,487.5

자료: 저자작성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참여자의 육류·낙농품·어개류 지출 지출과 관련된 인터뷰 내용들이다.

돼지고기 한번에 사면 2.5kg-3kg 샀던 것 같아요. 식구들 모여서 만두 할 때 많이 썼어요. 두부도 넣고 야채도 넣고. 중국 돈으로 했으니까, 고기 사는데 돈이 많이 들거든요. 100위안은 넘었었던 것 같아요. 1주일에 한 회씩은 먹었어요. 소고기는 제가 병원에 있다보니까, 사서 먹은 적은 없어요. 소고기 대놓고 못 파니까. 22호에서 나오는 송아지 고기가 있는데, 그걸 한 1년에 10kg는 먹은 것 같아요. 이거는 그저 주는거 먹었으니까. 소고기는 시장에서 팔면 일반 돼지고기에 한 세배가 비쌌어요. (ID 1, 37세, 회령시)

바다에서 물고기 들어온다는게 도루메기 철에 은어하구 멸치철에... 멸치도 많지 않아요. 그게 너무 비싸서, 20만원 버는데 그렇게는 못 써요. 은어는 그 철이 되야 1kg 2,500원 하지 자기 철이 넘어가면 은어도 비싸져요. 북한에 있을 때 동생한테 돈 받아서 5-7번 사먹었어요. (ID 7, 57세, 흥원군)

생선은 저희 이제 사는 데가 양강도 쪽이니까 많이 먹을 일이 없어요. 그리고 또 제가 생선을 못 먹어요. (ID 29, 20세, 보천군)

돼지고기를 다 많이 먹었어요. 물고기는 송어를 먹었는데 월로 치면 6마리 정도 먹었고요. 이걸 1키로에 6천원이에요. (ID 30, 29세, 회령시)

소고기는 안먹었고 돼지고기는 한 달에 5키로 정도 먹었어요. 이거는 키로당 10위안이니까 50위안정도. 소시지는 아들이 좋아해서 사 먹었어요. 한 개당 1위엔이니까 12위엔이지... 우리는 멸치를 생 거를 사다가 절여서 만들어먹어요. 따로 멸치젓이나 새우젓을 사먹지 않았어요. (ID 31, 54세, 혜산시)

조사대상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재북 당시 소비한 육류는 주로 돼지고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낙농품의 경우, 달걀을 가장 많이 먹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어개류는 바닷가와 인접한 지역의 경우 제철 어류를 먹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젓갈의 경우, 시장에서 완제품을 사서 먹기 보다는 대체로 멸치나 새우를 사서 집에서 담가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③ 채소 및 과일 지출

채소 및 과일 지출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배추 소비가 37가구로 가장 많았고, kg당 가격은 0.1만원(북한 원), 지출총액은 49.5만원(북한 원), 68천원(남한 원)이었다. 배추를 소비한 가구 수가 가장 많고, 풋고추, 오이, 사과, 무, 두부, 감자, 콩나물, 파, 양배추, 미역, 시금치, 배, 양파, 가지, 호박, 토마토, 고구마, 미나리, 감, 수박, 복숭아, 당근, 감귤, 포도, 딸기, 버섯, 김, 상추, 바나나, 도라지, 깻잎, 단무지, 참외, 숙주나물, 부추, 도토리묵 순이었다. 1인당 월 지출 총량은 약 36.8kg이며, 1인당 월 지출 총액은 11,962.5원(남한 원)이었다.

분석결과를 볼 때, 남한의 최저생계비 비목에 해당하는 채소 및 과일 품목들은 북한 주민도 대부분 소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9〉 채소 및 과일 지출

(단위: kg, 빈도, 북한 만원, 남한 원, 월)

품목	총량	가구 수	kg당 가격	지출총액	
				북한 만원	남한 원
배추 (기준:월,1kg당가격)	494.7	37	0.1	49.5	68,062.5
풋고추	108.1	36	0.2	16.2	22,275.0
오이	143.0	35	0.2	21.5	29,562.5
사과	572.3	35	0.5	286.1	393,387.5

226 남북 간 사회격차 완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복지체제 구축 방안 연구: 북한 주민의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품목	총량	가구 수	kg당 가격	지출총액	
				북한 만원	남한 원
무	254.6	35	0.1	25.5	35,062.5
두부	251.2	35	0.1	25.1	34,512.5
감자	430.8	35	0.1	43.1	59,262.5
콩나물	85.1	32	0.2	12.8	17,600.0
파	66.6	31	0.2	10.0	13,750.0
양배추	117.7	30	0.2	23.5	32,312.5
미역	82.0	30	0.4	34.8	47,850.0
시금치	85.4	29	0.1	8.5	11,687.5
배	342.7	28	0.3	102.8	141,350.0
양파	51.4	27	0.3	12.8	17,600.0
가지	82.0	27	0.2	16.4	22,550.0
호박	131.6	26	0.1	13.2	18,150.0
토마토	129.6	26	0.2	19.4	26,675.0
고구마	62.7	24	0.2	9.4	12,925.0
미나리	84.8	23	0.2	14.8	20,350.0
감	48.6	22	0.4	19.4	26,675.0
수박	25.2	18	0.4	10.7	14,712.5
복숭아	144.0	18	0.4	57.6	79,200.0
당근	23.2	17	0.3	5.8	7,975.0
감귤	34.6	17	0.6	20.8	28,600.0
포도	58.3	16	0.3	16.5	22,687.5
딸기	23.4	16	1.0	22.5	30,937.5
버섯	36.0	15	0.3	10.8	14,850.0
김	32.4	14	0.2	6.2	8,525.0
상추	15.9	13	0.2	2.4	3,300.0
바나나	16.6	11	1.8	29.0	39,875.0
도라지	5.5	11	0.8	4.2	5,775.0
깻잎	26.5	11	0.2	6.5	8,937.5
단무지	26.5	6	0.2	4.0	5,500.0
참외	2.4	5	1.1	2.6	3,575.0
숙주나물	14.4	4	0.2	2.7	3,712.5
부추	6.5	3	0.1	0.7	962.5
도토리묵	0.5	1	0.1	0.0	0.0
합계	4116.8	-	-	967.8	1,330,725.0
1인당	36.76	-	-	8.7	11,962.5

자료: 저자작성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참여자의 채소 및 과일 지출과 관련된 인터뷰 내용들이다.

채소는 다 조선돈으로 썼어요. 두부 빼고는. 우리나라서 나오는 거는 조선돈이 대체로 싸요. 중국에서 들어오는 쌀이나 기름이나 이런거는 다 중국돈으로 사고요. (ID 31, 54세, 혜산시)

사과는 제철에 조금 먹었어요. 사과나 배는 일년에 3kg 정도. 쌀을 서 먹다 보니까 과일을 크게 못 먹었어요. (ID 6, 49세, 혜산시)

사과는 대체로 사과철에만 먹거든요. 뭐 열기로 먹겠죠. 더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거고 보관도 못 하고. 배는 한 스무키로 정도 먹어요, 배는 싸니까. 황도는 비싸요, 7천원. 이걸 중국에서 들어오거든요? 황도가 북한에 없고. 그다음 나머지 복숭아는 2천원인데 그거 사면 한두키로 먹어요. 복숭아 철에. 그런데 별로 안 사먹어요. 왜 크기 전에 다 따니까 여기처럼 큰 복숭아 받이 없어요, 다 너무 조금해서 맛이 없어서. 포도는 추석, 설에 먹으니까 한 열기로 정도 먹어요. 감은 많이 먹거든요. 감은 보자.. 1년에 한 스물키로는 설탕에 재워서 먹으니까 감은 그저 한 서른키로 정도 사요. 귤은 보통 1년에 그저 한두키로 정도 밖에 안 사요. 귤이가 비싸거든요 7천, 8천. 7천, 8천 하니까 비싸서 안 사먹죠. 참외는 제가 북한에서 안 사먹어봤어요. 왜, 북한 참외는 하나도 달지 않고 그저 오이같은데 향만 나잖아요? 수박은 그저 한 다섯키로 정도 짜리를 북한은 제일 큰 게 다섯키로예요. 한 번. 딸기는 비싸서 못 먹어요. (ID 17, 49세, 단천시)

양강도니까 감자가 주식이에요. 한달에 10키로 정도 먹었어요. 다른 채소들도 가격을 잘 모르겠어요 다 집에서 심어먹어서... 고구마는 양강도에 없어요. (ID 32, 70세, 혜산시)

두부는 콩을 사면 시장에서 만들어줘요. 콩 1키로에 두부가 4모예요. (ID 34, 25세, 무산군)

아빠랑 동생이 직장이 좀 좋아가지고 국가에서 공급을 받았거든요. 저희가. 배추, 파, 시금치, 상추는 공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채소들도 텃밭에서 농사지어서 그거로 충족을 했어요. (ID 28, 38세, 혜산시)

조사대상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재북 당시 소비한 채소는 다양했는데, 그 중 감자를 많이 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채소는 각 가구에서 직접 재배해 먹거나 물물교환으로 먹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과일의 경우, 사과나 배를 가장 많이 먹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과일은 명절 때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가끔 먹은 것으로 보인다.

④ 조미식품·빵·차·주류·외식 지출

조미식품·빵·차·주류·외식 지출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마늘을 소비가 36가구로 가장 많았고, kg당 가격은 0.83만원(북한 원), 연간 지출총액은 16만원(북한 원), 22천원(남한 원)이었다. 마늘을 소비한 가구 수가 가장 많고, 고춧가루, 콩기름, 사탕과자, 소금, 설탕, 식초 병, 고추장, 된장, 소주, 간장, 깨, 혼합조미료, 생강, 후추가루, 외식횃수, 물엿, 주스, 참기름, 마요네즈, 커피, 콜라, 스낵과자, 카레가루, 비스킷, 케이크, 케첩 순이었다. 품목의 특성 상 1인당 월 지출 총량은 월 기준과 년 기준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계산하기 쉽지 않아 제시하지 못했다. 월 소비량과 연 소비량의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1인당 월 지출 총액은 7,425원(남한 원)으로 추정하였다.

분석결과를 볼 때, 남한의 최저생계비 비목에 해당하는 조미식품·빵·차·주류·외식 품목들은 북한 주민도 대부분 소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보리차를 소비한 가구는 없었다.

〈표 8-10〉 조미식품·빵·차·주류·외식 지출

(단위: kg, 빈도, 북한 만원, 남한 원, 월, 연)

품목	총량	가구 수	kg당 가격	지출총액	
				북한 만원	남한 원
마늘/년	232.3	36	0.83	16	22,000.0
고춧가루/년	250.2	35	1.5	31.3	43,037.5
콩기름	87.1	35	1	87.1	119,762.5
사탕과자	86.8	34	0.5	43.4	59,675.0
소금	55.6	34	0.1	5.6	7,700.0
설탕	37.1	32	0.5	18.6	25,575.0
식초 병/1년	113.9	30	0.1	11.4	15,675.0
고추장	26.3	24	0.5	13.3	18,287.5
된장	39.0	20	0.25	9.8	13,475.0
소주	74.0	20	0.2	14.8	20,350.0
간장	16.7	17	0.15	2.5	3,437.5
깨/년	5.3	17	1	0.4	550.0
혼합조미료	9.8	17	0.3	2.9	3,987.5
생강 /년	17.9	15	1.53	27.4	37,675.0
후추가루/년	23.4	14	1.11	2.2	3,025.0
외식횟수	100.0	13	2.73	273.3	375,787.5
물엿	8.5	11	0.4	3.4	4,675.0
주스	43.5	11	0.5	21.8	29,975.0
참기름/년	27.5	11	1.33	3	4,125.0
마요네즈	4.5	7	0.15	0.7	962.5
커피	2.5	7	1.35	3.4	4,675.0
콜라	13.0	6	0.4	5.2	7,150.0
스낵과자	9.5	5	1	9.5	13,062.5
카레가루/년	3.1	5	0.5	0.1	137.5
비스킷	2.4	3	0.1	0.2	275.0
케이크 /년/개수	4.5	3	2.75	1	1,375.0
케첩	1.0	2	0.3	0.3	412.5
보리차	1.0	1	0	0	0.0
버터	-	0	-	-	-
총액	-	-	-	608.6	836,825.0
1인당	-	-	-	5.4	7,425.0

자료: 저자작성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참여자의 조미식품·빵·차·주류·외식 지출과 관련된 인터뷰 내용들이다.

참기름은 얼마 안 비쌌어요. 그거는 1만 원 정도면 샀으니까. 월에 500g씩은 먹었어요. 콩기름은 월에 한 4kg, 아니 2.5kg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5kg짜리를 두 달에 먹었으니까. 집에 오는 사람이 많아서 많이 먹은 편이에요. 버터는 없었고, 고춧가루는 많이 썼어요. 1년에 한 10kg, 고춧가루는 kg에 6500원 정도 할거예요... 원래 북한 주민 1인 된장량이 10kg거든요. 국가에서 기준이 된게 1인 10kg. 근데 없는 집이 너무 먹고, 우리는 된장 많이 안 먹었어요. 1년에 들어서 10kg 먹은 것 같아요. 된장은 두부콩 가격을 기준으로 보거든요. 소주는 제가 딱 먹은게 아니라, 사업용으로 많으니까 1년에 쓴걸 계산하면 진짜 많아요. 박스로 샀는데... 거기는 500g 짜리니까. 백살보시술이라고 전통주가 박스로 나와요. 리터로 따지면 한 20kg씩은 무조건 줬거든요. 먹은게 아니라. 이게 다 소비니까. 이건 국정가격으로 샀어요. 원래 가격은 국정가격이 소주 한병에 25원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걸 박스로 주다보니까 현금으로 그냥 5만원 이상씩 줬던 것 같아요. (ID 1, 37세, 회령시)

나가서 먹는거는 한 달에 7번에서 8번 정도 했어요. 두 명이서 한번 나가서 먹을 때 한 3만원 정도 들었어요. (ID 30, 29세, 회령시)

사위가 술을 먹었어요. 한 달에 한 2kg는 먹어요. 우리는 소주가 아니고 40도짜리 술을... 이거는 1키로에 4원 내지 5원해요. 중국돈으로. (ID 31, 54세, 혜산시)

아버지가 민주를 드렸어요, 집에서 만든 술이에요. 그거 2kg면 한 4병 정도가 되고 가격은 4000원이에요. (ID 34, 25세, 무산군)

조사대상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재북 당시 소비한 조미식품은 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마늘, 고춧가루, 소금, 설탕, 기름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의 경우, 11가구만이 외식했다고 응답한 반면, 그 11가구 중 일부는 월 7-8회 정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식료품비 지출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북한주민의 식품소비에서 1인당 지출총액을 볼 때, 채소 및 과일(1만 2천원(남한 원)) > 육류·낙농품·어개류(9천500원(남한 원)) > 조미식품·빵·차·주류·외식(7천 4백원(남한 원)) > 곡류 및 식빵(6천 9백원(남한 원)) 순이다. 1인당 지출총액 비교를 보면, 강냉이나 보리를 주식으로 하여 생계를 연명했던 시대가 아니라고 이해할 수 있다. 북한도 고난의 행군 시기와는 질적으로 다른 식생활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소비패턴이 다양하지 못하고, 특정 식품을 경험해보지 못한 소비소의 가구도 있다. 육류·낙농품·어개류는 고난의 행군 시기와 비교하면 소비량이 증가했지만, 튀김 닭, 유산발효유, 햄, 갈치, 어묵을 먹어본 가구가 거의 없다. 채소 및 과일도 이전과 달리 시장에 남방과일을 비롯하여 각종 과일이 판매되지만 대부분 계절에 따라 나오는 채소와 과일을 먹고 있다. 조미식품·빵·차·주류·외식도 비스킷, 케이크, 케첩, 보리차, 버터를 3가구 미만이 소비하였다. 북한주민은 과자도 종류별로 다양하게 구분해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탕과자를 소비했다고 하였다.

나. 주거비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참여자의 주거비를 조사하였다. 주거비 조사품목에는 조달비용(집 가격), 보증보험료, 인지세, 관리비, 이사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도배비였다.

조사 결과, 1명만 집값을 모른다고 했을 뿐, 37가구 모두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 북한의 일부 주택은 작고 낙후되었지만, 주민들은 모두 본인 명의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다. 조사 대상들이 증언한 가구의 집 가격을 모두 합하여 얻은 총액을 가구 수로 나누어 주택 평균가격을 구하였다. 주택 가격은 평균 3,896천원(남한 원)이었다. 주택 구입 당시 도배비는 평균 153천원(남한 원)이라고 하였다. 도배도 거의 스스로 해결하므로, 적은 금액만이 소요된다고 하였다.

보증보험료, 인지세, 관리비를 지출했다는 가구는 없었다. 주택구입과 매매에 대한 시장원리 및 그에 대한 국가개입 시스템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이해된다.

이사비도 거의 없었다. 북한에서는 이사가 적고 이사하는 경우에도 이사집 센터가 없으므로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해결하는 것과 관련된다. 북한에서는 일단 집을 얻으면 거의 이사하지 않고 평생 동안 사는 것으로 생각한다.

부동산 수수료는 2가구가 지불한 경험이 있었는데, 해당 가구의 거주지는 평양과 평성이었다. 이곳에서는 수수료를 집값의 10%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였다. 상당히 높은 수수료라고 할 수 있다. 그 외 지역에서는 현재까지는 수수료 없이 알음알음으로 집을 얻는다고 하였다.

〈표 8-11〉 평균 주택 가격

(단위: 빈도, 북한 만원, 남한 원)

구분	총액	가구 수	지출총액	
			북한 만원	남한 원
주택 가격	102007.5	36	2833.5	3,896,062.5

자료: 저자작성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참여자의 주거 지출과 관련된 인터뷰 내용들이다.

집은 국정 가격이 있어요. 인민위원회 도시 경영과에서 국정으로 다 매기거든요. 저도 몰랐는데, 병원에 있다 보니까 간부들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정 가격이 다 있더라고요. 야매가격으로 하면 북한 돈으로 하면. 그 때 당시에 집이 중국돈으로 25000원 정도 컸으니까. 많이 비싸죠. (ID 1, 37세, 회령시)

집은 아파트였는데 방이 두 칸에 조그만 것이 하나 있어서 두 칸 반이에요. 부엌 따로 있고 세면장도 따로 있었어요. 80평방 정도 됐는데 35000불 짜리예요. 도배비는 한 200불 정도 먹은 것 같아요. (ID 4, 42세, 평양시)

집 가격이 1200만원 정도 했어요. 단층인데 한 동 4세대짜리예요. 방은 한 칸을 이렇게 갈라서 있고, 부엌이 있고 평방수는 한 30평방 될거예요. 이사를 한번 했는데 사람들 시켜서 다 하다보니깐 5만원 정도 들었어요. (ID 11, 48세, 청진시)

전에 살던 집이 단층집이었어요. 그 집을 제가 650불에 팔았어요. 3메다 2.5니까 한 25평 정도 되는 크기였어요. 도배는 한 번 하면 도배지가 한 130장 들거든요? 한 55000원 정도 들어요. (ID 17, 49세, 단천시)

집은 독채에 살았는데 72평 정도였어요. 이게 가격이 북한 돈으로 했을 때 13만 4280원. 집을 산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때부터 그냥 살던집인데... 그 부동산세라고 해야 하나? 그거 집 평수 재가지고 매달 나오는.. 매해 나오는 돈이 이겁니다. 여기에 토지세는 따로고, 땅 있는 건 또 따로 내야해요. 그 집을 팔면 중국돈으로 한 만오천, 만삼천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ID

30, 29세, 회령시)

우리 땅집이 32평짜리 하나 있고 옆에 10평짜리를 한개 붙였거든요. 가격은... 원래 집은 93년도에 내가 우리 세대주하고 같이 지었는데 그 때만해도 가격을 따질때가 아니니까 가격은 잘 모르겠어요. 옆에 10평 짜리 집을 지을 때는 비용이 중국돈으로 6,000원 들었어요. (ID 31, 54세, 혜산시)

한 동에 5세대 있는 집에서 살았어요. 저희 집만 봤을 때는 한 28평정도 되요. 여기에 세 식구가 살았는데 이게 중국돈으로 했을 때 1200원 정도 해요. (ID 33, 26세, 무산군)

아버지가 밭에 있는 막에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나무로 해가지고 자체로 기틀집을 짓고 비닐막을 싸가지고 이렇게 비가 안 새게. 바깥은 진흙으로 해서 살았어요. 이유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게 어머니가 이렇게 중국에 와서 없고 아버지가 다른 여자랑 살다가 그 여자가 빗 무슨 장사를 하다가 망해서 빚을 많이 져서 어디 달아나다가 그래서 갈 때 집이랑 다 팔아먹었어요. 나는 아버지랑 10년 정도 말을 안 하고 살았어요.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아버지가 다른 여자 만나서 살다가 갈라져서. 그니까 어머니는 중국 오고 저는 외할머니네 집에서 살다가 혼자서 직장이라도 가서 살다가 그 아버지가 다른 여자가 달아나면 갈 데가 없잖아요.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내가 직장 다니면서리 집에다 말해가지고 밭을 좀 달래가지고 한 300평 정도 아버지를 해줬어요. 그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서 아버지가 나무를 해가지고 막 쳐가지고 사셨어요. (ID 34, 25세, 무산군)

한 동 세 세대집에 살았어요. 평수는 30평 정도였는데 중국돈으로 한 9천원 했을거예요. (ID 35, 26세, 혜산시)

문화주택 이집을 산게 한 95년인가 96년인가에 샀어요. 2만원짜리에

요. 관리비는 제가 안 해가지고, 부모님 집에 일단 제가 얹혀 산거라.
엄청 싸게 내기는 했는데... 공식 전기요금은 월에 5천원 정도 냈어요.
국돈으로. (ID 28, 38세, 혜산시)

조사대상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대체로 자가 가구이다. 부모가 쓰던 집을 물려받거나, 친척이나 지인의 집을 구매하기도 한다. 주택형태는 독채의 단층집이라고 응답한 가구가 많았다. 주택 가격은 균일하지 않았다. 특수한 경우, 밭에서 움막을 지어 살았다고 응답한 가구도 있었다.

다. 광열·수도비

북한에서 국가에 납부하는 공식 광열 수도비는 월 3,000원(북한 원) 미만인데, 북한이탈주민들은 그 금액이 너무 적어서 정확한 금액을 기억하지 못했다. 따라서 비공식적 방식으로 광열·수도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광열·수도비 지출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난방비는 37가구 모두 지출하였다. 연간 난방비 지출총액은 4,122만원(북한 원), 5,667천원(남한 원)이었다. 상당히 높은 비용이 지출되었다. 가구당 1년 소비금액은 134.9만원(북한 원), 186천원(남한 원)이었다.

북한가구가 1년간 난방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양강도 지역에서 난방에 필요한 나무는 평균 5입방으로 60만원(북한 원), 평양 평성 지역에서 난방과 취사에 필요한 구멍탄(연탄)은 평균 800개로 80만원(북한 원), 함경도 지역에서 갈탄 4톤, 나무 0.5입방으로 65만원(북한 원) 정도 소요된다. 난방형태도 지역에 따라 차이 있는데 양강도 지역은 나무, 함경북도는 갈탄, 함경남도, 평안남도 평양은 무연탄을 사용하여 난방을 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전기를 거의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자체로 전력을 충당하

기 위해 돈을 투자하여야 한다. 27가구가 연간 평균 66.2만원(북한 원)의 배터리 구입비용을 지출하였고, 25가구가 연간 평균 129.9만원(북한 원)의 태양광 비용을 1회성으로 지출하였고, 13가구가 불법전기 비용으로 연간 371.2만원(북한 원)을 지출하였다.

수도가 잘 나오지 않아 자체로 양수기를 놓고 물을 퍼 올리거나 남의 집에 가서 물을 길기 위해, 해당 비용을 지불하는 가구도 있었다.

〈표 8-12〉 광열·수도비 지출

(단위: 빈도, 북한 만원, 남한 원, 년)

구분	총액	가구 수	사용 연한	지출총액	
				북한 만원	남한 원
난방	4121.8	37	1	4121.8	5,667,475.0
배터리	662.2	27	10	66.2	91,025.0
태양광	1298.75	25	10	129.9	178,612.5
도배비	316.92	15	10	31.7	43,587.5
불법전기	371.2	13	1	371.2	510,400.0
취사	269.6	12	1	269.6	370,700.00
합계	-	-	-	4,720.8	6,491,100.0
가구당 1년 소비액	-	-	-	134.9	185,487.5

자료: 저자작성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참여자의 광열·수도비 지출과 관련된 인터뷰 내용들이다.

공식 상하수도비가 얼마냐면, 월에 몇백 밖에 안 했는데, 300원에서 350원이었던 것 같아요. 국정가격이. 아파트는 물을 좀 줘요. 아침 저녁으로 주는데, 매일 아침마다 물탱크에 물을 채워넣고. 물은 돈이 거의 안 들었어요. 그다음에 진짜 물이 필요한 날은 명절에 음식 만들고 할 때, 그 때는 물을 또 사서... 명절에는 100리터 짜리가 2개는 있어야 하더라고요. 200리터는 있어야 하는데, 그건 우리 북한 돈으로 2만원씩 줬던

것 같아요. 샘물 길어다 주는거예요. 자연 샘물을 길어다. 난방은 갈탄으로 했어요. 1년에 3톤 이상을 떼야 하는데, 이걸 한번에 들여 놓을 수 있는 용량이 없으니까. 밖에 두면 다 도둑질 해가기 때문에. 소달구지로 치면 3개씩 3개씩 6개니까. 한 달구지를 500kg씩 재도 3톤? 톤당 비쌌어요. 진짜 비쌌어요. 민비로 얼마나 줬지. 100위안씩 줬던 것 같아요. 취사는 여름에만 가스를 썼어요. 가스 통은 자기가 그 집에서 사는데, 10kg인가... 한 번 충전하는데 100위안씩 했어요. (ID 1, 37세, 회령시)

공식 전기요금은 국정 가격으로 2100원 이었어요. 태양광판은 안 불리고 살았고, 배터리만 있었고요. 전기는 불법으로 쓸 전기도 없어요. 올 시간이 없으니까. 상하수도 요금은 국정가격으로 500원 냈어요. 겨울에 석탄은 구명탄으로 700-800kg 정도 사요. 가스비는 20kg짜리 월에 25불 줬어요. (ID 4, 42세, 평양시)

주거는 1동 2세대 집에 살았어요. 전기는 휴대용 후레쉬로 했는데 두 개로 일 년 정도 썼던거 같아요. 후레쉬는 위에다가 달아가지고 썼어요. 물도 길어 가지고 쓰고... 난방은 나무로 땀는데 대형 트럭에 1차 들어오는거 이제 그게 300원이었어요. 그게 1년치예요. (ID 29, 20세, 보천군)

전기는 몰래 불법으로... 그런 전기를 한 달에 중국 돈 100원씩에 그냥 줍니다. 북한돈으로는 12만 5천원. 태양광판은 사서 쓰는데 한 개 14만원에 샀어요. 배터리는 자동차 배터리로... 그 때 10만원 정도 들었어요. 물은 자연수, 산에서 나오는거를 써서 따로 비용은 들지 않았어요, 난방은 참나무로 해서 1년에 20톤짜리 차로 하나 사면 그거 절반 쓴거 같습니다. 가격은 10톤에 30만원했어요. (ID 30, 29세, 회령시)

전기 안들어와요. 전기세 내는거도 없어요. 내가 올 때까지는 전기 안들어왔어요. 더러 불법으로 끌어다 쓰는 사람들 있지. 근데 우리는 안그랬어요. 우리는 끌어 쓸 처지가 못됐어요. 왜냐 공장 기업소에서 여

기까지 따면 사업에서 쓰라 했는데... 우리는 이 주민 가옥에 있으니까 어디가 전기를 끌 데가 없어요. 공장 여간에 같이 붙어있는 사람들은 공장 기업소하고 계속해서 전기를 끌어온다고 비 100원 150원씩 주고...한 1년에 300원이던가. 우리는 농장 기업소하고 거리가 머니까 전기를 끌어올 데가 없죠. 그러니까 전기가 없었죠. 그래서 햇빛판있죠. 태양열을 그저 받아놓고 밧테리에다가 충전해서 그저 썼죠. 태양 광판은 두 개 있었어요. 65암페어짜리하고 55암페어짜리. 가격은...65암페어짜리는 450원 주고 55암페어짜리는 250원줬던지 그랬던 것 같아요. 수입품이니까 다 중국돈으로. 밧터리는 중국돈으로 10원도 주고 사고, 330원 주고 산 것도 있고 250원 주고 산 것도 있고... 밧터리는 날개, 세트 종류가 많아요... 난방은 나무 땀어요. 잎갈나무로 한 해에 한 여섯 입방정도 써요. 그러니까 평방 당 80미터면 한 입방이라 하거든요... 그런 걸 한 해에 다섯 내지 여섯 입방 사다가 썼어요. 한 차에 열 둘 입방씩 들어오니까 우리는 절반이니까 반차씩. 중국돈 500원 내지 600원 들어요 1년에. (ID 31, 54세, 혜산시)

물세라는게 없어요. 이거 우리는 길러다 쓴다기보다 이렇게 그 펌프식이에요. 난방은 소형 한 차가 3-4립방 정도 되는데 그게 25만원이에요. 사면 1년 써요. (ID 33, 26세, 무산군)

전기요금을 국가에 냈어요. 국돈으로 한 800원 정도 냈는데 전기가 안오다가 그러니까 오로지 전기 들어오면 그거 쓰고... 불법으로 끌어다 쓰지는 않았어요. 태양판은 한 개 있었어요. 중국돈으로 160원 정도 해요. 밧터리는 2개 정도 있었는데 중국돈으로 220원 정도 했어요. 물은 펌프로 해서 물세는 안냈고, 난방은 일년에 6입방 정도 썼어요. 한 입방에 100원이니까 600원치 사면 1년 써요. (ID 35, 26세, 혜산시)

2018년도에 혜산에 전기라는게 오지 않아서 전기세라는 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연풍동에는 전기가 안들어왔어요. 동네마다 다를 수는 있으니까. 불법으로 땀겨서 쓰는 거는 있었어요, 그거는 한달에 중국돈 5원

이었어요. (ID 36, 57세, 혜산시)

공식 전기요금은 월에 천원 냈어요. 불법 전기는 끌어와서 썼는데 1만원 냈고요. 전기는 아파트 건설하는 건설장에서 끌어오는 거예요. 태양광판은 하나 있었는데 50와트짜리 100원 했어요. 상하수도 요금은 월당 국돈으로 1500원 걸었어요. 난방은 입방으로 하는데 다주택이 돼서 한 겨울 나는데 1입방이면 났어요. 한 입방이 중국도 100원 정도 했는데 작게 든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촘촘히 들어가있는 세대라서 그렇게 작게 들고 또 돈이 너무 드니까 좀 아껴서 쓰려고 하니가 그랬어요. (ID 37, 47세, 혜산시)

전기 요금은 상관없이 계속, 그런 걸 기억 안하거든요. 대체로 카드를 내서... 돈 무슨 1만원을 넣든 2만원을 넣든 본인이 얼마 여기까지 썼으니까 계산 안하고 쪽 쓰는거죠. 대체로 전기가 너무 안오니까 계산 할수도 없고. 1만원 내면 쪽 불이 계속 안오니까. 태양광판은 지금은 가격이 올랐겠는데, 태양광판은 90달러. 대충 70만원이에요. 배터리는 16만원. 상하수도는 우리가 물이 4층이라 잘 안올라왔거든요. 양수 펌프 전기 펌프 같은 거 놓고 불 좀 올 때 한번 사서 쓰곤 했거든요. 물세는 북한에서 별로 신경 안쓰고, 따로 받지 않았거든요. 인민반에서 통보했는데 한달에 5-10만원 냈는데 여기에 인민반 관리비, 물세, 전기세가 들어가거든요. 난방은 탄을 구멍탄 때서 하나까. 한 장에 한 장에 850원인데, 한번 쌓이면 800장 쌓이니까 64000원? 1년치 800장 쌓였어요. 한 7만원 정도 됩니다. (ID 23, 48세, 함흥시)

조사대상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재북 당시 공식적인 전기, 수도 요금은 크지 않았다. 전기는 주로 비공식적이거나 비법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물도 직접 길어 쓰거나 양수기를 통해 수도 문제를 해결하였다. 겨울철 난방비에 대한 지출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에 따른 사용 재료와 방식에서 다른 양상을 보였다.

라. 가구집기·가사용품비

가구집기는 일반가구·가정용기구·식기주방용품 지출과 가사잡화소모품 침구 및 직물제품 지출로 구분하여 조사결과를 제시하였다. 지출액 산정은 앞서 언급한 식품비 산정방식과 같은 방법으로 하였다. 다만 수명을 고려하여 10년으로 구분하여 연간 소요되는 금액을 계산했다. 10년이라는 기간은 남한의 최저 가구집기 조사문항 방식에서 차용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일반가구·가정용기구·식기주방용품의 수명을 10년으로 계산한 것이다.

일반가구·가정용기구·식기주방용품 지출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바가지는 35가구가 소유하고 있었다. 바가지의 개당 가격은 7천원(북한 원)이었고, 연간 바가지 지출총액은 45.2만원(북한 원), 62천원(남한 원)이었다. 바가지와 접시를 소비한 가구 수가 가장 많았고, 국자, 도마, 컵, 수저, 조미료통, 수저통, 밥상, 주발은 30가구 이상이 소비하고 있었다. 가구당 1년 소비금액은 24.2만원(북한 원), 33천원(남한 원)이었다.

분석결과를 볼 때, 남한의 최저생계비 비목에 해당하는 일반가구·가정용기구·식기주방용품 품목들은 북한 주민도 대부분 소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랩, 문갑, 청소기 소비는 1가구밖에 없었고, 쿠킹호일을 소비한 가구는 없었다. 특히 북한에서는 아직 믹서, 헤어드라이어, 전자레인지, 청소기를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북한이 전기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어도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랩은 1가구만 사용하고, 쿠킹호일은 이용자가 없다.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를 하지 않고 있으며, 냉장고가 있어도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표 8-13〉 일반가구·가정용기구·식기주방용품 지출

(단위: 빈도, 북한 만원, 남한 원, 연)

품목	총량	가구 수	개당 가격	지출총액	
				북한 만원	남한 원
바가지	66.5	35	0.7	45.2	62,150.0
접시	646	35	1.0	646.0	888,250.0
국자	62	34	0.2	12.4	17,050.0
도마	39	34	0.9	36.1	49,637.5
컵	313	34	0.5	156.5	215,187.5
수저	230	33	1.0	230.0	316,250.0
조미료통	110	33	0.9	97.2	133,650.0
수저통	38	32	0.7	24.7	33,962.5
밥상	35	30	10.0	350.0	481,250.0
주발	354	30	2.1	743.4	1,022,175.0
냄비	96.5	29	0.9	89.7	123,337.5
쟁반	76	29	0.7	49.4	67,925.0
대야	207	28	1.0	207.0	284,625.0
벽시계	30	27	4.4	133.4	183,425.0
식도	38	26	0.9	33.6	46,200.0
반찬통	79	26	2.0	158.0	217,250.0
장롱	55	23	29.1	1598.4	2,197,800.0
항아리	93	22	4.5	418.5	575,437.5
화장대	24	22	34.7	833.1	1,145,512.5
김치통	55	21	2.3	124.8	171,600.0
선풍기	21	20	2.0	42.0	57,750.0
전기밥솥	21	20	31.0	651.0	895,125.0
주전자	85	19	0.9	72.3	99,412.5
후라이팬	33	18	1.6	52.8	72,600.0
보온병	23	17	4.0	91.4	125,675.0
과도	15	15	0.4	5.3	7,287.5
다리미	15	15	5.0	75.0	103,125.0
가스레인지	14	14	3.0	42.0	57,750.0
냉장고	10	10	90.0	900.0	1,237,500.0
행거	10	9	5.6	55.7	76,587.5
고무통	20	8	0.9	18.0	24,750.0

품목	총량	가구 수	개당 가격	지출총액	
				북한 만원	남한 원
서랍장	8	8	7.7	61.3	84,287.5
탁상시계	9	8	4.1	36.7	50,462.5
세탁기	7	7	80.0	560.0	770,000.0
책상	7	7	10.3	72.1	99,137.5
의자	6	6	2.0	12.0	16,500.0
믹서	4	4	23.7	94.7	130,212.5
헤어드라이어	3	3	0.0		0.0
전자레인지	2	2	13.0	26.0	35,750.0
랩	1	1	0.5	0.5	687.5
문갑	1	1	-	-	0.0
청소기	1	1	30.0	30.0	41,250.0
쿠기호일	-	0	-	-	0.0
합계	-	-	-	8886.0/10년	12,218,250.0/10년
가구당 연간 비용	-	-	-	24.2	33,275.0

자료: 저자작성

가사잡화소모품 침구 및 직물제품도 가구와 같은 방법으로 비용을 계산하였다. 가사잡화소모품 침구 및 직물제품 지출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이불은 36가구가 보유하고 있었다. 이불의 개당 가격은 19.8만원(북한 원)이었고, 연간 이불 지출총액은 277.2만원(북한 원), 381천원(남한 원)이었다. 이불을 소비한 가구 수가 가장 많았고, 베개, 요, 바늘, 행주, 비누통, 수세미, 타올, 방빗자루, 화장지는 30가구 이상이 소비하고 있었다. 가구당 1년 소비금액은 31.2만원(북한 원), 43천원(남한 원)이었다.

분석결과를 볼 때, 남한의 최저생계비 비목에 해당하는 가사잡화소모품 침구 및 직물제품의 품목들은 북한 주민도 대부분 소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14〉 가사잡화소모품 침구 및 식물제품 지출

(단위: 빈도, 년, 북한 만원, 남한 원, 연)

품목	총량	가구 수	개당 가격	지출총액			
				총액	사용연한	연간 사용액	
						북한 만원	남한 원
이불	140	36	19.8	2772	10	277.2	381,150.0
베개	161	35	2	322	10	32.2	44,275.0
요	113	35	10.3	1163.9	10	116.39	160,036.3
바늘	120	34	0.1	12	5	2.4	3,300.0
행주	84	34	0.2	16.8	1	16.8	23,100.0
비누통	43	33	0.2	8.6	10	0.86	1,182.5
수세미	57	31	0.1	5.7	1	5.7	7,837.5
타올	122	31	0.2	24.4	2	12.2	16,775.0
방뿔자루	32	30	0.3	9.6	10	0.96	1,320.0
화장지 (1년)	431	30	0.1	43.1	1	43.1	59,262.5
가위	38	29	0.5	19	10	1.9	2,612.5
쓰레받기	30	29	0.3	9	10	0.9	1,237.5
빨래비누(1년)	177	29	0.3	53	1	53	72,875.0
커튼	58	29	10	580	10	58	79,750.0
부엌용세제	37	28	0.8	29.5	1	29.5	40,562.5
휴지통	59	25	1.4	82.6	9	9.18	12,622.5
건전지	64	25	2	128	5	25.6	35,200.0
고무장갑 (1년)	33	25	0.5	16.3	1	16.3	22,412.5
합성세제	537	25	0.7	375.6	1	375.6	516,450.0
망치	38	24	0.7	26.6	10	2.66	3,657.5
못	50	23	0.5	25	10	2.5	3,437.5
빨래집게	303	23	0.1	30.3	1	30.3	41,662.5
형광전구	55	21	0.1	5.5	1	5.5	7,562.5
구두약	20	20	0.2	4	1	4	5,500.0
LED 전구	57	19	0.9	51.3	3	17.1	23,512.5
구두솔	21	19	0.2	4.2	1	4.2	5,775.0
건조대	17	17	3.8	64.6	10	6.46	8,882.5
드라이버	22	16	0.3	6.6	10	0.66	907.5
접착제	17	12	0.1	1.7	1	1.7	2,337.5
빨래판	9	9	0.9	8.1	5	1.62	2,227.5
목도장	8	4	0.2	1.6	10	0.16	220
합계	-	-	-	-	-	1,154.49	1,570,868.8
가구당 연간 비용	-	-	-	-	-	31.2	42,900.0

자료: 저자작성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참여자의 일반가구·가정용기구·식기주방용품 지출과 가사잡화소모품 침구 및 식물제품 지출과 관련된 인터뷰 내용들이다.

화장지는 많이 쓰죠. 근데 그렇게 어떻게 말을 해야하지. 20개짜리 롤 하나씩 썼다고 해야하나. 한 달에 두 개는 썼죠. 거기는 휴지종이가 그런거 쓰자면 비쌌어요. 민비로 30위안씩 줬으니까, 60위안 줬죠. 빨래 비누는 가루비누 많이 써요. 월에 1kg정도인데 가격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부엌용 세제는 1달에 하나 더 쓰죠. 300g, 500g. 월에 700g 쓰더라고요. (ID 1, 37세, 회령시)

밥사발, 국사발 그렇지 않아 다섯 개 정도예요. 왜 식구가 적으니까 그 이상 필요도 없고. 접시는 한 스무 개 정도, 컵 같은 거는 이것저것 술잔이요 뭐 하면 한 열 개 정도 되고. 쟁반 하나. 냄비는 한 서너 개 돼요. 주전자 같은 건 물주전자 하나, 후라이팬 같은 건 안 썼어요. 식도나 과도는 구분 없었어요. 수저는 열 개 정도 있어요. 수저통이 당연히 있고, 조미료통은 당연히 있고, 반찬통이라고 특별히.. 뭐 그냥 냉장고에 넣지를 않으니까 뭐 별로. 랩이나 쿠킹호일은 없는 거고 구경하도 못 했어요. (ID 17, 49세, 단천시)

형광전구야 있지요. 근데 불이 아니 오니까 키지도 못하지. 형광전구가 4개나 있어요. 하나 중국돈 8원씩 주고 샀어요. 화장지는 휴지종이 있어요. 새까맣게 나오는게 있어요. 그건 하나에 중국돈 1원씩해요. 휴지는 한 달에 한 두 개씩 써요... 빨래비누는 1년에 가루비누 12원 짜리 2개 쓰고 빨래비누를 한 장에 얼마씩 주고 샀던가... 국돈 2,500원씩 주고 샀던거 같은데, 1년에 10장씩 쓰는 거 같애. 부엌용 세제는 사 써요. 그때 그거 한 통에 15위안 주고 사 썼어요. (ID 31, 54세, 혜산시)

우리는 북한은 여기처럼 휴지 없어요. 아이들 있는 집은 교과서 있으니

까 그거 뜯어 쓰는데, 종이휴지라고 시장에서 팔아요. 가격은 500그램에 중국돈 1원이예요. 그거 사면 꽤 오래 써요. (ID 32, 70세, 혜산시)

가사용품을 많이 못 쓰게 이전에 저기 그 앞 지대에서 살다가 이제 양강도 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이사 올 때 차로 못 오고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제 기차로 20일 동안 들었어요. 겨울에. 그래서 이제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그 집에 가사는 다 팔고 옷, 옷만 이제 가지고 들어온... 이사를 양강도에 가서 이제 그 빈집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이 이제 하나부터 다시 시작을 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롱이나 화장대, 서랍장 이런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ID 29, 20세, 보천군)

냉장고는 없어요. 전기가 아예 들어오질 않으니까. 전기밥솥은 있어도 쓰지 못해요. 그거 있다는 표시를 했다는 뿐이지. 그때 내 중국돈 100원 주고 샀겠지. 세탁기도 없고, 다리미는 있어도 아예 쓰지 못해요. 불이 없으니까... 선풍기는 이 발동기를 쓰는건데 작년도에 중국도 65원 주고 샀어요. (ID 31, 54세, 혜산시)

조사대상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재북 당시 일반가구·가정용기구 및 식기주방용품에 대한 지출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지고 있었던 가구·기구 및 용품들은 다양했으나, 그 수량이 많지 않았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냉장고나 헤어드라이어 등은 있어도 전기가 없어 사용하지 못했다는 진술과 함께, 책상이나 의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가구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 피복·신발비

피복·신발비는 피복비 겉옷 지출, 와이셔츠·스웨터·속옷 지출, 피복 및 신발과 피복신발 서비스 지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가장, 주부, 아들,

딸로 구분하였다. 지출액 산정은 앞서 언급한 식품비 산정방식과 같은 방법으로 하였다.

피복비 겉옷 지출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가장의 경우 반바지 24명, 주부의 경우 오버코트 29명, 아들의 경우 동절기잠바 24명, 딸의 경우 춘추복 바지 13명이 소비하고 있었다. 1인당 연간지출액은 18.6만원(북한 원), 26천원(남한 원)이었다.

분석결과를 볼 때, 남한의 최저생계비 비목에 해당하는 겉옷은 북한 주민도 대부분 소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그 양이 많지는 않았다. 북한주민은 겉옷을 많이 소비하고 있지 않으며, 한 번 소유하면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시에서 거주할지라도 시장에서 장사하는 여성들은 숙녀복이 1벌도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적지 않았다.

〈표 8-15〉 피복비 겉옷 지출

(단위: 빈도, 년, 북한 만원, 남한 원, 연)

구분	품목	총량	가구 수	개당 가격	지출총액			
					총액	사용 연한	년간 사용액	
							북한 만원	남한 원
가장	반바지	75	24	3	222.5	8	27.8	38,225.0
	바지동	59	22	5	295	10	29.5	40,562.5
	오버코트	38	22	26.7	1014.6	10	101.5	139,562.5
	잠바춘추	41	22	12.7	520.7	10	52.1	71,637.50
	바지춘추	60	21	5.5	330	8	41.3	56,787.5
	신사복 등	29	18	8.8	253.8	10	25.4	34,925.0
	운동복동	32	18	3.5	112	8	14	19,250.0
	신사복 춘추	43	17	2.8	121.8	10	12.2	16,775.0
	잠바동	25	15	23.1	578.1	10	57.8	79,475.0
	운동복춘추	26	13	1.8	46.8	8	5.9	8,112.5
주부	오버코트	41	29	32.8	1344.8	10	134.5	184,937.5
	바지춘추	75.5	28	3	226.5	8	28.3	38,912.5
	바지동	61	27	5	305	10	30.5	41,937.5
	잠바	44	22	12	528	10	52.8	72,600.00

구분	품목	총량	가구 수	개당 가격	지출총액			
					총액	사용 연한	년간 사용액	
							북한 만원	남한 원
	반바지	43	20	5	215	8	26.9	36,987.5
	숙녀복동	37	19	21	777	10	77.7	106,837.5
	숙녀복춘추	54	19	13.2	712.8	10	71.3	98,037.5
	운동복동	30	16	8.5	255	8	31.9	43,862.5
	스커트	26	14	10.6	275	10	27.5	37,812.5
	운동복춘추	25	13	6	150	8	18.8	25,850.0
아들	잠바동	46	24	11.8	540.5	3	180.2	247,775.0
	잠바춘추	52	23	7.6	394.6	2	197.3	271,287.5
	바지동	55	22	6.7	366.7	2	183.3	252,037.5
	바지춘추	58	21	4.3	247.5	2	123.7	170,087.5
	반바지	45	19	2	92	2	46	63,250.0
	체육복하	26	16	4.7	123.2	3	41.1	56,512.5
	체육복동	25	15	7.4	184.4	3	61.5	84,562.5
	잠바동	32	14	5.2	166.4	2	83.2	114,400.0
딸	바지동	35	13	1.4	49	2	24.5	33,687.5
	바지춘추	33	13	5.5	181.5	2	90.8	124,850.0
	잠바춘추	28	13	2.9	82.3	2	41.2	56,650.0
	반바지	31	12	2.2	68.2	2	34.1	46,887.5
	체육복동	18	12	10.2	183.6	3	61.2	84,150.0
	교복동	13	10	8.4	109.2	3	36.4	50,050.0
	체육복하	15	9	0.8	11.3	3	3.8	5,225.0
	교복하	11	7	1.3	14.5	3	4.8	6,600.0
합계	-	-	-	-	-	-	2085.2	2,867,150.0
	1인당	-	-	-	-	-	18.6	25,575.0

자료: 저자작성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참여자의 피복피 겉옷과 관련된 인터뷰 내용들이다.

정장은 해마다 식이 바뀌니까 샀기는 샀죠. 저는 맞춤으로 계속 해 입

였으니까, 한 번 한 벌 착으로 해 입는게 치마까지 뽑는게 정장이 150 위안씩 들었어요. 겨울 거는 패딩은 비싸죠. 패딩은 민비로 거의 600 위안 이상 줬어요. 패딩 말고 코트는. 숙녀복은 150 위안이 들어요. 잠바는 싸요. 50위안 정도. 바지도 싸어요. 북한 돈으로 2-3만원이면 샀어요. 트레이닝복은 따로 구별된 것은 없는데, 저는 사 입기는 했어요. 운동복이 제대로 된 걸 사려면 북한에서도 150위안 줬어요. (ID 1, 37세, 회령시)

제가 옷 장사를 해서 옷이 많았어요. 보고 마음에 들면 무조건 사요. 그래도 북한이 한국보다는 옷이 적으니까 계절 바뀔때마다 옷은 꼭 샀어요. 겨울에 동복 하나는 무조건 샀고. 그것도 두꺼운거랑 얇은거 사고, 스웨터도 몇 개씩 샀고. 그리고 바지도 샀고. 우린 추우니까 안에 털바지 같은 것도 속내의도 입어야 하고 그래서 무조건 다 샀어요. (ID 18, 55세, 평성시)

옷은 가격이 겨울 거하고 여름 거하고 이제 차이가 많이 나요. 거기는 겨울이 이제 엄청 많이 춥고 그 기간도 길고 해서... (ID 29, 20세, 보천군)

피복비 겉옷의 경우, 조사대상자들의 형편에 따라 지출 정도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장을 해마다 사는 경우도 있는 반면, 정장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었다.

다음으로 와이셔츠·스웨터·속옷 지출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가장의 경우 와이셔츠 긴팔을 24명, 주부의 경우 셔츠긴팔과 스웨터를 24명, 아들의 경우 셔츠 긴팔을 15명, 딸의 경우 셔츠긴팔을 23명이 소비하고 있었다. 속옷에 대해서는 가장의 경우 동내의와 팬티를 24명, 주부의 경우 팬티를 24명, 아들의 경우 동내의를 14명, 딸의 경우 팬티를 25명이 소비하고 있었다. 1인당 연간지출액은 16.3만원(북한 원), 22천원(남한 원)이었다.

분석결과를 볼 때, 남한의 최저생계비 비목에 해당하는 와이셔츠·스웨터·속옷은 북한 주민도 대부분 소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겹옷과 마찬가지로 그 양이 많지는 않았고, 속옷을 연간 1번도 소비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있다.

〈표 8-16〉 와이셔츠·스웨터·속옷 지출

(단위: 빈도, 년, 북한 만원, 남한 원, 연)

구분	품목	총량	가구 수	개당 가격	지출총액			
					총액	사용 연한	연간 사용액	
							북한 만원	남한 원
가장	와이셔츠 긴팔	50	23	7.3	366.7	6	61.1	84,012.5
	와이셔츠 반팔	49	21	3.5	171.5	6	28.6	39,325.0
	셔츠 긴팔	45	20	2	90	6	15	20,625.0
	셔츠반팔	47	18	3.1	143.4	6	23.9	32,862.5
	남방	27	11	1.2	32.4	6	5.4	7,425.0
	스웨터	29	10	10	290	6	48.3	66,412.5
주부	셔츠긴팔	63	24	7.3	462	6	77	105,875.0
	스웨터	68	24	5.2	351.3	6	58.6	80,575.0
	셔츠 반팔	60	22	3.5	208	6	34.7	47,712.5
	블라우스	58	21	4.2	243.6	6	40.6	55,825.0
아들	셔츠 긴팔	45	15	3.3	148.5	6	24.8	34,100.0
	셔츠반팔	43	14	1.7	71.0	6	11.8	16,225.0
	스웨터	28	10	5.5	154.0	6	25.7	35,337.5
딸	셔츠긴팔	69	23	10	690	6	115	158,125.0
	셔츠 반팔	55	21	5	275	6	45.8	62,975.0
	스웨터	64	21	9	576	6	96	132,000.0
	블라우스	32	13	4.5	144	6	24	33,000.0
가장	동내의	56	24	3	168	6	28	38,500.0
	팬티	105	24	2	210	3	70	96,250.0
	런닝	74	22	1.7	125.8	3	41.9	57,612.5
주부	팬티	143.5	32	1.3	189.4	3	63.1	86,762.5
	동내의	74	31	8	592	3	197.3	271,287.5
	브래지어	88	28	3	264	3	88	121,000.0

구분	품목	총량	가구 수	개당 가격	지출총액			
					총액	사용 연한	연간 사용액	
							북한 만원	남한 원
	런닝	76	25	1.8	133	3	44.3	60,912.5
	속치마	10	4	2	20	3	6.7	9,212.50
아들	동내의	45	14	6.0	270.0	3	90.0	123,750.0
	런닝	58	13	3.5	203.0	3	67.7	93,087.5
	팬티	74	13	5.0	370.0	3	123.3	169,537.5
딸	팬티	133.5	25	1.5	201.6		67.2	92,400.0
	동내의	66	23	3	198	3	66	90,750.0
	런닝	78	23	3.7	291.2	3	97.1	133,512.5
	브래지어	46	16	2	92	3	30.7	42,212.5
	실	51	20	0.3	15.6	3	5.2	7,150.0
합계	-	-	-	-	-	-	1822.7	2,506,212.5
1인당	-	-	-	-	-	-	16.3	22,412.5

자료: 저자작성

피복 및 신발과 피복신발 서비스 지출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양말에 대하여 가장 26명, 주부 34명, 아들 15명, 딸 24명이 소비하고 있었다. 모두 양말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품목이었다. 신발류 소비와 관련해서는 가장의 경우 구두 23명, 주부의 경우 구두 31명, 아들의 경우 운동화 15명, 딸의 경우 운동화 23명으로 나타났다. 성인은 구두, 청소년은 운동화를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었다. 1인당 연간지출액은 18만원(북한 원), 25천원(남한 원)이었다.

분석결과를 볼 때, 남한의 최저생계비 비목에 해당하는 피복 및 신발은 북한 주민도 대부분 소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겉옷과 마찬가지로 피복 및 신발 지출 총량은 양이 많지는 않았다. 특히 수선료 지출은 있으나, 세탁료 지출 가구는 없었다.

(표 8-17) 피복 및 신발과 피복신발 서비스 지출

(단위: 빈도, 년, 북한 만원, 남한 원, 연)

구분	품목	총량	가구 수	개당 가격	지출총액			
					총액	사용 연한	연간 사용액	
							북한 만원	남한 원
가장	양말	195	26	1.3	243.8	1	243.8	335,225.0
	장갑	43	25	0.5	21.5	2	10.8	14,850.0
	혁대	46	23	3.7	170.2	3	56.7	77,962.5
	목도리	27	15	0.1	2.7	6	0.5	687.5
	손수건	33	14	0.4	12.8	6	2.1	2,887.5
	넥타이	28	12	1.2	33.6	6	5.6	7,700.0
주부	양말	252.5	34	0.5	126.3	1	126.3	173,662.5
	장갑	46	32	1.3	57.5	2	28.8	39,600.0
	목도리	37	22	2.3	83.9	6	14	19,250.0
	손수건	49	15	0.2	9.8	6	1.6	2,200.0
	스타킹	58	14	0.8	43.5	0.3	145	199,375.0
	혁대	12	8	0.8	9.6	3	3.2	4,400.0
아들	양말	137	15	0.5	68.5	1	68.5	94,187.5
	장갑	25	15	1.3	31.3	2	15.7	21,587.5
	혁대	21	13	3	63	3	21	28,875.0
	목도리	13	7	0	0	6	0	0.0
딸	양말	197	24	0.5	98.5	1	98.5	135,437.5
	장갑	41	24	5.1	209.9	2	105	144,375.0
	목도리	26	16	4.5	117	6	19.5	26,812.5
가장	구두	40	23	25.6	1025.6	4	256.4	352,550.0
	운동화	44	22	1.5	66	2	33	45,375.0
	슬리퍼	33.5	19	2	67	3	22.3	30,662.5
	장화	3	5	0	0	3	0	0.0
	지하족	1	2	0	0	2	0	0.0
주부	구두	63	31	3	189	4	47.3	65,037.5
	운동화	51	26	5	255	2	127.5	175,312.5
	슬리퍼	32	22	2.5	80	3	26.7	36,712.5
	샌들	28	18	2.3	65.3	3	21.8	29,975.0
아들	운동화	32	15	3	96	2	48	66,000.0
	슬리퍼	14	10	1	14	3	4.7	6,462.5
	샌들	5	5	1.1	5.3	3	1.8	2,475.0

구분	품목	총량	가구 수	개당 가격	지출총액			
					총액	사용 연한	연간 사용액	
							북한 만원	남한 원
말	운동화	47	23	3.5	164.5	2	82.3	113,162.5
	샌들	157	21	5.8	915.8	3	305.3	419,787.5
	슬리퍼	78	20	2.5	195	3	65	89,375.0
	구두	11	7	0	0	4	0	0.0
수선료	구두수선료	12	9	0.5	5.8	3	1.9	2,612.5
	의복수선료	4	4	0.5	1	1	1	1,375.0
	세탁료 숙녀복	0	0	0	0	1	0	0.0
	세탁료 신사복	0	0	0.5	0	1	0	0.0
합계	-	-	-	-	-	-	2011.2	2,765,400.0
1인당	-	-	-	-	-	-	18.0	24,750.0

자료: 저자작성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참여자의 피복 및 신발과 피복신발 서비스와 관련된 인터뷰 내용들이다.

양말은 진짜 많이 썼는데, 하나에 보통 민비로 9원씩 했어요. 한 20개 있었어요. 스타킹은 많이 쓰죠. 여자들 여름에 맨다리 별로 없어요. 한 여름 나자면 보통 20개 이상은 되야 해요. 가격은 재질마다 다르거든요. 저는 한 개에 5000원 이상 짜리만 했으니까... 구두는 150위안짜리 신었어요. (ID 1, 37세, 회령시)

운동화는 안신어요. 슬리퍼도 안신어요. 샌들도 안신어요. 북한에 있을 때는 구두만 신었어요. 여름구두랑 겨울구두. 여름 구두는 70위안 주고 샀어요. 겨울 구두는 300위안이고요. 딸 구두는 겨울 구두는 200위안, 여름거는 40위안 줬어요. 구두는 1년에 한 두 번 수선하는데 한번 수리하면 3위안 줄때도 있고 10위안 줄때도 있고. (ID 31, 54세, 혜산시)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아버지는 허리가 조금 세게 아파하고, 어머니는 움직이지 못해서 옷을 사입은게 없어요. 옷도 형제들이랑 입다가 이렇게 물려주고... 또 어머니가 재봉사를 했어서 동복도 손으로 만들어 입었어요. (ID 33, 26세, 무산군)

조사대상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겹옷을 제외한 피복비 지출 또한 가구의 형편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형편이 어려운 경우, 옷을 집에서 직접 만들어 입은 경우도 있었으며, 신발은 운동화나 샌들, 슬리퍼를 구입해보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상과 같이 피복·신발비를 종합적으로 볼 때, 남한의 최저생계비 비목에 해당하는 겹옷, 와이셔츠·스웨터·속옷, 피복 및 신발, 피복신발 서비스 품목들은 북한 주민도 대부분 소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그 양이 많지는 않았다. 북한주민은 피복과 신발을 많이 소비하고 있지 않으며, 한번 소유하면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성들의 경우에도 의복 지출이 높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의복 소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피복·신발비에 추가되어야 할 품목이 있다. 그것들은 장화와 지하족이다. 물론 지하족을 이용한 가구는 2사례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북한은 도로가 좋지 않아서, 비가 오면 장화가 필수품이다. 또한 북한 남성들은 지하족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지하족이란 북한의 작업용 신발을 의미한다. 장화와 지하족은 북한의 특성을 반영한 조사품목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아직까지 세탁을 집에서 하고 있다. 드라이클리닝(세탁료)를 지불했다고 진술한 가구가 거의 없었다. 해당 품목은 삭제가 필요할 것이다.

바. 보건의료비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경제 약화로 무상치료제의 기능이 손상되었다. 현재 북한주민은 약값과 의료서비스 비용의 상당 부분을 본인이 해결하고 있다. 북한은 형식적으로는 무상치료제이므로, 의료서비스의 공식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 의료부문에서도 시장화가 확산되면서 개인별적으로 의사들에게 찾아가 치료받는 환자들이 늘고 있고, 이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시장가격이 형성되고 있지만 그것을 통계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 공식 서비스가격은 없지만, 의료인들에게 돈이나 물건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의료인들이 미미한 용돈 수준의 월급만 받고 거의 무료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거래가 가능하다.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격과 의사에게 인사차례로 주는 돈의 구분이 명백하지 않다는 특성도 있다.

보건의료서비스 서비스 지출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위생대를 25명 소비하고 있었고, 약값 지불도 25명이 지출하였다. 안경은 17명, 보건의료서비스는 12명, 위생대나이트는 3명이 소비하였다. 1인당 연간지출액은 2.7만원(북한 원), 4천원(남한 원)이었다.

분석결과를 볼 때, 남한의 최저생계비 비목에 해당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북한 주민도 일부 소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무상치료시스템의 약화로 비공식적 지출이 본 연구에서 확인되지 않아, 숫자로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특히 북한주민들은 안경을 많이 착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생대는 도시에서는 대부분 1회용을 사용하지만, 시골에서는 아직 천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8-18〉 보건의료서비스 지출

(단위: 빈도, 북한 만원, 남한 원, 월, 연)

품목	총량/ 총비용	빈도	개당 가격	사용 연한	지출총액	
					북한 만원	남한 원
위생대중형 20패드	23.8	25	0.6	1월	14.28	19,635
약값	547.74	25	-	1년	45.6	62,700
안경	20	17	8.1	1년	13.5	18,562.50
보건의료서비스	288.6	12	-	1년	24.05	33,068.70
위생대나이트	2.9	3	0.9	1월	2.61	3,588.70
월 총 비용	-	-	-	-	100.04	137,554.9
월 가구당 비용	-	-	-	-	2.7	3,712.5

자료: 저자작성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참여자의 보건의료서비스 지출과 관련된 인터뷰 내용들이다.

선글라스가 있었어요. 가을철에 혹시 또 강냉이 따기 동원 나가면, 그때 썼는데 가격은 모르겠어요. 선물 받아서. 위생대는 1달에 기본으로 돈으로 치면.. 개수는 생각 안 나거든요. 10개짜리를 두 개씩 썼으니까, 한 8000원 정도씩 쓴 것 같아요. (ID 1, 37세, 회령시)

약값이 많이 들었어요. 콩팥에 돌이 있다고 들었는데 북한은 의학이 발전 못했으니까 약만 먹었어요. 하루에 3000원 정도 나갔는데 돈이 없어서 못사 먹은 적도 있어요. (ID 7, 57세, 홍원군)

약은 월에 100위안씩 썼어요. 신랑하고 제가 종합병원이어서... 잔잔하게 많이 아파서 많이 들었어요. (ID 18, 55세, 평성시)

생리대는 그냥 중형으로 다 썼어요. 나이트용은 따로 없었어요. 감기 약은 연간 한두 번 밖에 안 사먹었어요.(ID 29, 20세, 보천군)

네 식구 약값은 1년에 7만 원 정도... 중국 정통편이라는 통증을 없애 주는 약을 많이 먹었어요. 우리 할머니는 이렇게 뭐지 그 약이 어떤 약 인지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뭐 그런 아편이 섞여 있는 약이라고 하 더라고요. 그걸 매일 2알씩 드시고... 우리는 감기약으로 정통편을 먹 었어요. (ID 30, 29세, 회령시)

위생대는 따로 안했어요. 약값은 감이약이든가 소화제, 소염제 이런거 다 포함해서 달에 한 20위안 들었어요. (ID 31, 54세, 혜산시)

위생대 같은 경우는 천으로 5장사서 이제 1년 빨아써요. 약값는 1년에 5만원 정도 들었는데 이걸 소화제하고 비타민 먹은거하고 해서 그래 요. (ID 34, 25세, 무산군)

위생대는 어머니들은 빨아서 쓰는 그걸 쓰고, 제가 썼는데 한달에 중 국돈으로 2원 정도 들었어요. 2원이면 20가 정도 살 수 있어요. (ID 35, 26세, 혜산시)

조사대상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보건의료비 중 약값을 많이 지출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아프지만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경우, 장마당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약을 구입해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경우, 위 생대에 대한 진술을 많이 하였는데 가구 형편에 따라 구매하지 않고 집에 있 는 천으로 만들어 쓰거나 장마당에서 중형을 구입해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사. 교육비

북한은 남한에 비해 교육비 지출이 높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교과서 구 입 외에 참고서를 구입하는 학생도 적었다. 교과서도 무상으로 공급하다시 피 해서 돈이 들지 않았다고 한다. 학부모들은 새 학기 시작할 때 학용품

한번 챙겨주면 전부여서 이에 대한 기억이 많지 못했다. 그러므로 학용품 사용에 관한 조사는 직접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교육비 지출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운동회/원족 관련 지출이 11가구로 가장 많았다. 원족(遠族)은 먼 곳까지 걸어가서 놀고 오는 것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야외에서 진행되는 놀이를 겸한 학습을 통칭하는 북한 용어이다. 남한에서의 소풍과 유사한 용어로 이해할 수 있는데,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야외에 다녀오는 행사라는 의미이다. 그 외 교육비 관련 지출로는 샤프와 지우개 소비 경험은 10가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생 1인당 교육비 연간지출액은 54만원(북한 원), 74천원(남한 원)이었다.

분석결과를 볼 때, 남한의 교육비 비목에 해당하는 각종 교육지출을 북한 학생들도 소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교육 시장이 비대한 남한과 비교할 때, 북한 학생들은 그와 관련된 지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표 8-19〉 교육비 지출

(단위: 빈도, 북한 만원, 남한 원, 연)

품목	총량	가구 수	개당 가격	지출총액	
				북한 만원	남한 원
운동회/원족횃수(1년)	27	11	-	296.6	407,825.0
샤프	27	10	-	66.7	91,712.5
지우개	22	10	0.1	0.1	137.5
가위	11	9	0.6	6.6	9,075.0
초등필통	12	9	2.4	0.2	275
초등학생공책	195	9	0.2	39	53,625.0
연필	59	8	0.1	5.9	8,112.5
중등 필통	9	8	0.3	0.2	275
초등학생용줄넘기	12	8	0.5	6	8,250.0
색연필	11	7	2.16	23.8	32,725.0
색종이	8	7	0.4	3.2	4,400.0
샤프심	12	7	0.48	5.8	7,975.0
자	10	7	0.12	0.1	137.5

품목	총량	가구 수	개당 가격	지출총액	
				북한 만원	남한 원
풀	8	7	0.2	1.6	2,200.0
개인과의	12	6	-	37.8	51,975.0
볼펜	18	6	0.552	9.9	13,612.5
칼	6	6	0.9	5.4	7,425.0
교재총교재비	-	5	-	25.1	34,512.5
참고서	12	5	-	18.2	25,025.0
붓	9	5	0.75	6.8	9,350.0
체육기구스케이트 롤러스케이트	4	5	-	45.5	62,562.5
크레파스	5	5	1.44	7.2	9,900.0
공	4	4	4.2	16.8	23,100.0
교육용 악기	1	4	0	196	269,500.0
중학생 공책	65	4	0.3	19.5	26,812.5
중학생 그림물감	4	4	3	0.5	687.5
앨범	5	4	3	15	20,625.0
초등참고서	11	3	-	5.1	7,012.5
초등문제집	4	3	-	6.6	9,075.0
중학참고서	7	3	2	14	19,250.0
중학문제집	4	3	-	6.9	9,487.5
스케치북	3	3	-	0.4	550
초등학생그림물감	3	3	1.44	4.3	5,912.5
교과서	-	2	-	3.4	4,675.0
농촌동원/청년근위대	-	2	-	21.6	29,700.0
사인펜	4	2	-	1.1	1,512.5
답사 견학 야영	-	1	-	48	66,000.0
악기	-	1	-	0	0
초등학생용홀라후프	2	1	0.36	0.7	962.5
초등가정학습지	-	0	-	0	0
중학인터넷강의	-	0	-	0	0
초등수련회	-	0	-	0	0
중등수련회	-	0	-	0	0
인쇄용A4	-	0	-	0	0
형광펜	-	0	-	0	0
합계	-	0	-	971.5	1,335,812.5
학생1인당 연간교육비	-	0	-	54.0	74,250.0
가구당 연간교육비	-	0	-	26.2	36,025.0

자료: 저자작성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참여자의 교육비 지출과 관련된 인터뷰 내용들이다.

초등학생 교과서는 학교에서 다 줬어요. 그래서 교과서 돈은 안들었어요. 그리고 학습장도 민들레 학습장, 민들레 공장에서 나온거 공짜로 줘서 그거로도 충분했습니다. 학교 담임선생님한테는 인사한게 한번에 50불씩 일년에 한 4-5번 줬으니까 200불, 250불 정도 나간거 같아요. 피아노를 사줬는데 그건 외국에서 사온거예요. 3000불짜리 하나 있었어요. (ID 4, 42세, 평양시)

중학생 아들 교과서비는 거의 안썼어요. 최근 연간에 교과서를 비교적 잘 줘요. 참고서는 그저 한 개에 10원씩, 그저 일반적으로 들이니까 일반적으로 40원, 50원 씩 들었어요. 수학기랑 영어 같은거 둘이 각각 사주고 그랬어요. (ID 9, 45세, 혜산시)

초등학교때 교과서 일부는 학교에서 내주거든요. 일부는 내주고. 모자라는 과목만 사는데...한 학기에 얼마 안들어요. 2~3만원 정도 드는거 같아요. 참고서 같은 게 그저 조금씩 필요하긴 해요. 그런 것도 한 2만원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과외비가 한 달에 120위안 정도 들었어요. 학용품 같은 건 100% 자부담이에요. (ID 12, 41세, 혜산시)

교과서는 학교에서 나오는 걸로 다 썼어요. 과외를 시켰는데 피아노 배우는게 200위안이었고, 수학이 150위안 정도해서 두 과목에 350위안 줬어요. 운동회는 한 번 갈때마다 100위안 냈어요. 일년에 봄, 가을 두 번씩 총 4번 정도 있어요. 기타 교육비는 선생한테 매달 인사하러 갈 때 돈주고, 선생님 집 수리한다고 시멘트 3톤 사서 간다고 돈 쓰고 해서 500위안 정도 썼어요. (ID 18, 55세, 평성시)

교과서는 실제 북한에서 돈 드는 건 없어요. 다 무상이에요. 교과서 대

가 1년에 한 번 나가긴 나가는데 생각 안 나오 너무 싸가지고. 참고서는 따로 사준 거 없어요. 과외를 그저 노래를 배웠는데 개인한테서 배웠죠. 개인 과외 성악을 배워가지고 한 달에 그때 한 달에 8만원이었어요. 8만원 해서 석달 배웠어요. 운동회는 1년에 여섯 번 정도 하는데 한 번 가는데 보통 5-6만원 들어요. 선생님께 주는 것 까지. (ID 17, 49세, 단천시)

교육은 그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는데 학교를 다니지 않고 이제 장사를 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아요. (ID 29, 20세, 보천군)

교재비가 많이 들었어요. 제가 장마당가서 샀거든요. 장마당에 애들 공부시키는거 참고서하고 문제집 다 있으니까. 참고서는 국돈 15000 원이고 문제집도 가격은 같았어요. 보충 교육비는 원족할 때 1년에 2 배 정도 하는데 한번에 100원 정도 냈어요. 딸이 아코디언을 배웠는데 아코디언 교사한테 한달에 100위안씩 줬어요. 연필이나 샤프는 모르겠고 볼펜은 5위안이면 6자루 정도 살 수 있어요. 중학생 공책 이거는 1권당 1위안씩. A4용지도 250매짜리 1포장인데 포장당 5위안씩했어요. 16절지인데 흰색이에요. 근데 많이 얇아요. (ID 37, 47세, 혜산시)

개인과외가 48만 정도 합니다. 한 달에 50달러 정도. 50-60달러 정도 내야하거든요. 그게 가장 가격이 싼거거든요. 북한에서. 영어, 화학, 수학 그렇게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집에 오시거나 내가 선생님 집 보내서. (ID 23, 48세, 함흥시)

교육비의 경우,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이 교재비는 거의 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서 또한 장마당에서 비싸지 않은 가격에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비 지출은 오히려 학교에 내는 돈 등이 주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과외를 시키는 경우도 가구 형편 및 과외 과목에 따라 각이하다고 할 수 있다.

아. 교양·오락비

교양·오락비로 서적 및 인쇄물, 교양·오락용품기구, 교양·오락서비스를 조사하였다. 교양·오락비 지출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저장장치와 텔레비전 소비가 23가구로 가장 많았다. 그 외로 컴퓨터/노트북, 성인용 CD, 노트텔, 카세트라디오가 10가구 이상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교양·오락비 연간지출액은 82.4만원(북한 원), 113천원(남한 원)이었다.

분석결과를 볼 때, 남한의 교양·오락비 비목에 해당하는 각종 교양, 오락, 문화를 북한 주민들도 소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인 소비품목과 이용형태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는 없지만, 구체적인 양상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북한은 문화와 관련하여 사회주의 문화를 고수하기 위한 특징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인터넷이 일부 공간만 연결되어 있어 많이 사용하지 않으므로 키보드나 마우스를 구입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 특히 북한은 남한과 달리 DVD플레이어를 많이 소유하고 있고, 이 매체를 통해 문화를 향유한다. 북한은 도서출판량이 매우 적으므로 책 구입비가 매우 적다. 주로 시장에서 유료로 도서를 빌려보고 있다. 영화관람, 문화시설 관람과 같은 교양·오락서비스 지출은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TV의 종류도 일반TV, 액정TV, 노트텔로 구분하여 조사할 필요도 있다.

〈표 8-20〉 최저 교양·오락비 지출

(단위: 빈도, 북한 만원, 남한 원, 연)

품목	총량	가구수	가격	사용연한	지출총액	
					북한 만원	남한 원
저장장치	86.5	23	3.6	6	34.6	47,575.0
텔레비전	23	23	120	10	276.0	379,500.0
컴퓨터/노트북	2	12	165	6	385.0	529,375.0

품목	총량	가구수	가격	사용연한	지출총액	
					북한 만원	남한 원
CD 성인	102	11	0.3	1	30.6	42,075.0
노트텔	13	11	42	6	91.0	125,125.0
카세트라디오	20	10	28	10	56.0	77,000.0
도서(성인)	32	9	2.3	1	73.6	101,200.0
사진현상	167.5	8	0.2	1	33.5	46,062.5
여행 및 문화시설관람 횟수	12.5	6	100	1	1,250.0	1,718,750.0
완구	20	6	7.7	1	154.0	211,750.0
도서(아동)	130	4	2.5	1	325.0	446,875.0
영화관람 성인횟수	16	4	20	1	320.0	440,000.0
컴퓨터소모품마우스	3	4	1.2	0.5	7.2	9,900.0
TV 수신료	37	3	0.3	1개월	3.6	4,950.0
CD 아동	6	2	2	1	12.0	16,500.0
액정텔레비전	2	2	3.3	10	0.7	962.5
컴퓨터소모품키보드	1	2	1.2	6	0.2	275.0
합계	-	-	-	-	3,052.8	4,197,600.0
연간 가구당 지출비	-	-	-	-	82.4	113,300.0

자료: 저자작성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참여자의 교양·오락비 지출과 관련된 인터뷰 내용들이다.

병원에 있다보니 의학 도서는 많이 썼어요. 한해에 저는 한 5권씩 샀는데 그게 진짜 비쌌어요. 민비로 130위안씩 줬었어요. 한권에. 집에 텔레비전은 히다치. 일본거, 액정으로 나오는거 있었어요. 여기처럼 대형은 아니고, 일반 집보다는 조금 큰거예요. 중국 것은 쓰니까 얼마 못가서 잔고장이 많아서. 히다치 쓰니까 잔고장이 없는거예요. 그거는 민비로 그때 당시에 원래 1500위안에 나가는데 저는 장사꾼을 알다보니까 800위안 주고 샀어요. USB는 많았어요. 8개 이상은 됐는데 마지막에 제가 올때는 하나에 민비 50위안 했어요. 컴퓨터가 있었어요. 그

거 700위안에 샀던 것 같아요. 중국 것. 프린터는 없었고요. 티비 수신료는 얼마 안 비쌌어요. 월에 120원인지 했었던 것어요. (ID 1, 37세, 회령시)

난 아이들 책은 많이 사줬단 말입니다. 책 다 합치면 500불 정도 되나. 책은 정말 많이, 있는 책은 다 사줬습니다. 100권 남아 돌겁니다. 우리 성인들은 직장에서 내주는 책들만 봤어요... 평양이라도 극장이나 영화관은 간 적이 없고 유희장에 간 적은 있어요. 하나 탈려면 한 종목당 500원인데 그래서 한 10000원 주면서 표 20장 정도 받아서 놉니다. (ID 4, 42세, 평양시)

집에 노트북 800위안짜리 하나 있었어요. 키보드고 마우스고 이런 다 여기 붙어 있는거니까... USB는 한 대 여섯 개 있었어요. 기가수파라서 20위안부터 30위안 정도 해요. 영화 관람은 못해봤고 극장에 공연은 보러 간적 있어요. 1년에 한 다섯 번 정도? 아이들 에리고 공연 보러갔어요. 한 번 들어가는데 북한돈 인당 500원이에요. 근데 평양에서 이름 있는 악단 공연이 내려오면 더 비싸요. (ID 12, 41세, 혜산시)

노트북이랑 컴퓨터가 한 대씩 있었어요. 두 개 합쳐서 2400위안이에요. USB는 한 5개 정도 있었는데 4기가 8기가 16기가 32기가 짜리까지 있었는데, 32기가짜리를 80원 주고 샀거든요.... 저희는 장사를 하다보니까 돈에 꽂혀가지고 여행은 안다녔어요. 오기 전에 평양에는 가봤어요. 2017년도에. 애가 아파서 병원 갔었는데 그렇게 갔다가 평양 구경하고 왔어요. 그때 저희가 7박 8일인가 그렇게 있었는데, 왔다갔다 여비에 증명서 떼고, 가서 여관에 있고 한게 3500위안 정도 쓴 것 같아요. 적게 썼는데도, 그렇게 들었어요. (ID 18, 55세, 평성시)

집에 텔레비전은 있었는데 14축 짜리가 450위안 주고 샀었어요. 노트북은 2개 있었는데 하나는 450위안, 하나는 400위안. USB는 2개 있었는데 하나는 30위안, 하나는 40위안 주고 샀어요. CD는 한 개, 120

위안 주고 산거예요. (ID 31, 54세, 혜산시)

티비는 있었는데 17인치짜리 중국돈으로 200원에 샀어요. 노트북도 하나 있었는데 그건 250원. USB는 하나가 국돈으로 4만원짜리였어요. 알판은 책방에서 4개를 구매했는데 하나당 3천원에 샀어요. (ID 33, 26세, 무산군)

책은 산적은 없는데 빌려본 적 있어요. 1번 빌려보는데 3일 시간줘요. 국돈 3000원씩 냈어요. 그러니까 중국돈으로는 한 1원 50전씩 낸거 같아요. 제가 책을 좀 많이 빌려봤는데 고저 저녁 시간마다 책을 봐야 되니까, 한 달에 한 3권씩은 빌려봤던거 같아요. 그래서 한달에 5위안 정도는 책 빌려보는데 썼어요. 딸애는 고저 공부를 하니까 도서를 빌려볼 수 없었고요. 집에 TV는 없었어요. 왜 그런가하면 이전에는 있었는데 이때부터는 볼도 안 오고 가전제품도 쓸 수 없으니까. 작은 집에 이사가면서 없이 살았어요. (ID 37, 47세, 혜산시)

교양·오락비의 경우,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의 지출 비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형편이 괜찮은 경우, 도서를 많이 구입하거나 컴퓨터 및 노트북 등도 구매해서 사용했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여행을 하거나 문화시설 및 영화를 관람한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자. 교통·통신비

교통·통신비로 교통비, 통신비 집전화요금, 휴대전화요금, 인터넷요금을 조사하였다. 먼저 교통비 지출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택시 소비가 15가구로 가장 많았다. 그 외로 주부외출, 친지방문 지출에 대한 응답을 13가구가 하였다. 가구당 교통비 월 지출액은 3.3만원(북한 원), 5천원(남한 원)이었다.

분석결과를 볼 때, 남한의 교양·오락비 비목에 해당하는 교통비는 일부 북한 주민들만 소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주민은 교통비를 많이 지출하지 않는다. 주된 교통수단은 자전거이며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니기 때문이다. 대다수 주민들이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내버스 요금은 1,000원(북한 원)으로 매우 싸다. 그러나 타 시·도·군으로 가려면 개인이 운영하는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시장 가격이므로 비싸다. 기차 이용요금도 국가가 운영하는 비용은 싸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므로 비법적으로 표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의 비용은 비싸진다.

향후 품목 구성 시, 도시에서 택시이용비율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한 주민들은 교통수단으로 대부분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자전거를 교통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표 8-21〉 교통비 지출

(단위: 빈도, 북한 만원, 남한 원, 월, 연)

품목	총량/기간	가구 수	가격	품목당 지출총액	
				북한 만원	남한 원
택시	53.5/월	15	0.5	26.8	36850.0
주부외출	107.5'/월	7	0.1	10.8	14850.0
친지방문 등	19.5/년	6	42	68.3	93912.5
가장 출근버스	77.5/월	4	0.1	7.8	10725.0
자녀(초등학생)외출	20/월	3	0.1	2	2750.0
자녀(중학생)외출	70/월	2	0.1	7	9625.0
오토바이	-	1	-	-	-
총액	-	-	-	122.7	131,862.5
가구 당 월 교통비	-	-	-	3.31	4,551.3

자료: 저자작성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참여자의 교통비 지출과 관련된 인터뷰 내용들이다.

버스비는 많이 썼어요. 한번 탈 때 10원이고 왔다갔다 계속 해야하니까. 한 달에 60번은 탄거 같아요. 택시는 한 달에 몇 번 탔는데 남자친구랑 같이 타면 개가 돈을 냈어요. (ID 10, 31세, 평양시)

친척이나 친구들이 다 주변에 살아서 뭐 버스라든지 기차라든지 타보지 않았어요. 걸어서 다녔어요. (ID 29, 20세, 보천군)

출근은 걸어서 다녔어요. 버스는 일(소개 짐)한다고 타고다녔는데 월 20일 탔어요. 갈 때 1000원. 올 때 또 1000원. 한번 타면 왕복 2000원했어요. 택시는 월에 그저 한 두 번이나 탔는데 한 번 탈 때 3000원 내요. (ID 31, 54세, 혜산시)

우린 교통 탈 일이 없어요. 직장이 집에서 10분만 가면 돼서 걸어다녔어요. 그 다음에 좀 먼 사람들은 그 개업소에서 버스를 대주는데 그 통근할 수 있는 걸 내줘요. 그거를 발급받으면 한번에 7천원정도 내면 1년치 통근이라 그 증명서만 통행표만 있으면 버스 거저 타는 거예요... 버스나 기차는 타본적 없어요. 2018년도에 무산에서 연사까지 짐차를 한번 탔어요. 200리 길인데 거기 왕복으로 3만원이에요. (ID 33, 26세, 무산군)

아버지가 일을 할때에는 차장을 하셔서 교통비가 들지 않았어요. 버스를 타든 뭘 하든 간에 근데 이제 주로 밭에 계셔서 탈 일이 없어요. 무산 같은데는 버스가 그닥 없어요. 광산 사람들을 위한 버스는 있는데 그 사람들은 버스비 안내요. 통행증만 있으면. 버스나 택시는 타본적이 없어요. (ID 34, 25세, 무산군)

우리는 택시라기보다 여서 말하는 그 승합차라고 하는데요, 그 로그바라고 말하는데 그 로그바 하나 많이 탔어요. 버스는 사람 많고 내가 이 심장병 환자니까 우리 북한에 버스는 사람이 완전 숨 못 쉴 정도로 탄단 소리입니다. 로그바는 한번에 돈 3000원씩 한 달에 4번 정도씩 탔어요. (ID 36, 57세, 혜산시)

출퇴근할때는 걸어서 다녔어요. 딸애 학교도 도보로 고저 한 10분 정도라 걸어다녔고요. 택시는 우리가 사는데서 시내 구간으로 타는데 1번 타는데 편도로 국돈 5000원이니까 중국돈 4웬 정도. 고저 한달에 극상해야 한 4~5번 정도 탔어요. 매대를 하나까 해산에 가서 물건을 가져올 때 탔어요. 매대 할 거 보충하자면 한번씩 갔다와야해요. (ID 37, 47세, 혜산시)

교통비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가구에서 지출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조사대상자들이 직장 및 장마당과 가까운 곳에서 살며 걸어 다니거나, 집에 있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사를 하거나 부업을 하는 경우, 버스나 택시를 가끔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통신비 지출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휴대폰 구입을 위한 소비가 17가구로 가장 많았다. 그 외로 휴대폰 사용요금 15가구, 전화기 구입비 9가구, 전화기 통화료 3가구였다. 가구당 통신비 월 지출액은 26.8만원(북한 원), 37천원(남한 원)이었다.

분석결과를 볼 때, 남한의 통신비 비목은 일부 북한 주민들만 소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주민의 통신비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북한에서 공식적인 통신비는 높지 않다. 분기 기본요금으로 2,850원(북한 원)을 내면 200분 통화와 문자 20개를 보낼 수 있다. 그러나 기본요금

에 해당하는 통화와 문자를 다 쓰고 나면 추가적으로 구입해야 하는데, 이때의 요금이 매우 비싸진다. 많은 주민들은 기본요금이 허용하는 한계 내에서 전화를 하고, 대신 상대적으로 싼 집 전화를 많이 이용한다. 북한에는 인터넷비용이 없다. 북한주민의 통신비에서 기본은 핸드폰 구입비와 전화설치비이다. 통신비 지출은 가격이 일정치 않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8-22〉 통신비 지출

(단위: 빈도, 북한 만원, 남한 원, 월, 연)

품목	총액	가구수	사용연한	월 지출총액	
				북한 만원	남한 원
휴대폰구입비	14650	17	5년	244.2	335775.0
휴대폰 사용요금 원	15.9	15	0.083	190.8	262350.0
전화기구입비	2561.5	9	4년	53.4	73425.0
전화기 통화료	41.9	3	0.083	502.8	691350.0
합계	-	-	-	488.4	1,289,475.0
연간 가구당 지출액	-	-	-	26.8	36,850.0

자료: 저자작성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참여자의 통신비 지출과 관련된 인터뷰 내용들이다.

저는 핸드폰 안 가지고 있었어요. 시끄러워서. 집 전화기는 있었는데 민비로 1800위안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전화비는 엄마가 돈을 내서 잘 모르겠어요. (ID 1, 37세, 회령시)

집전화는 기본료가 만원이고, 구입비가 8만5천원입니다. 휴대폰 기본 요금은 5년 마다 200 냈어요. 그리고 한 달에 둘이 합쳐서 낸 요금이 한 5달라 돼요. (ID 4, 42세, 평양시)

전화기 설치하는데 1500위안 들었어요. 통화료는 우리가 식당이니까 많이 쓰다나니까 20-30만씩 나갔어요. 북한 돈으로. 손님들이 와서 많이 사용하고. 우린 집집마다 전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러 우리 식당에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ID 12, 41세, 혜산시)

집에 집 전화도 없었고 휴대전화도 없었어요. 인터넷도 없었고요. (ID 29, 20세, 보천군)

집에 전화도 없었고, 휴대전화도 없었어요. 우리 때는 전화가 되지를 알아가지고... (ID 30, 29세, 회령시)

집 전화 있었어요. 요금은 전화 얼마 하는가에 따라서 다 달라요. 제가 있을 때는 그저 한 달에 3만원은 나갔어요. 전화기는 3천위안 주고 했어요. 휴대전화기는 한 대 있었는데 1700위안. 분기마다 3천원씩 냈어요. 1년에 만2천원. (ID 31, 54세, 혜산시)

통신비의 경우, 가구 형편에 따라 집전화도 보유하고 있으면서 휴대폰을 구입해 동시에 사용한 경우가 있었지만, 일부 가구들은 집전화 조차 없었다. 통신비 중 가장 많은 지출은 전화기 구입비와 설치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사용료는 가구 형편 및 상황에 따라 각이하게 나타났다.

차. 기타소비지출

기타소비지출로는 이미용품, 이미용서비스, 장신구, 잡비를 조사하였다. 기타소비지출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머리빗 구입을 위한 소비가 34가구로 가장 많았다. 칫솔, 치약, 비누, 우산, 샴푸 지출은 30가구가 넘었다. 가구당 기타소비지출 연간 지출액은 54.1만원(북한 원), 74천원(남한 원)이었다.

분석결과를 볼 때, 남한의 기타소비지출 비목은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도 다양하게 소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23〉 기타소비지출

(단위: 빈도, 북한 만원, 남한 원)

품목	총량	빈도수	가격	지출총액			
				총액	사용 연한	연간 지출액	
						북한 만원	남한 원
머리빗	73	34	0.1	7.3	5	1.5	2,062.5
치솔	238.5	33	0.1	23.85	4	6.0	8,250.0
치약	118.6	33	0.2	23.72	1	23.7	32,587.5
비누	160.8	32	0.2	32.16	1	32.2	44,275.0
우산	71	32	1	71	3	23.7	32,587.5
샴푸	87	30	2.4	208.8	1	208.8	287,100.0
면도기	44	25	3.6	158.4	1	158.4	217,800.0
손목시계	44	24	10	440	10	44.0	60,500.0
핸드백	40	24	20	800	4	200.0	275,000.0
이발	194	23	0.2	38.8	1	38.8	53,350.0
경조비	85	21	0.5	42.5	1	42.5	58,437.5
목욕비	642.5	21	0.5	321.25	1	321.3	441,787.5
미용	64	21	0.5	32	1	32.0	44,000.0
스킨로션(여성)	40.5	20	2.1	85.05	6	14.2	19,525.0
파운데이션	27.8	20	1.2	33.36	1	33.4	45,925.0
가방	25	19	7	175	3	58.3	80,162.5
손톱깎기	16	17	4	64	5	12.8	17,600.0
립스틱/년	136	15	1.2	163.2	1	163.2	224,400.0
파마 연간	44	15	3	132	1	132.0	181,500.0
친목단체비	44	13	-	150.6	1	150.6	207,075.0
지갑	19	10	1.8	34.2	4	8.6	11,825.0
자녀용돈	398.5	9	-	48	1	48.0	66,000.0
션크림	9	8	3.2	28.8	1	28.8	39,600.0
친지방문비	1190	8	-	157	1	157.0	215,875.0
스킨로션(남성)	6.5	6	1.6	10.4	1	10.4	14,300.0
아동용로션	4	4	2.4	9.6	1	9.6	13,200.0
교제비	30	3	4	120	1	30.0	41,250.0
지갑	31	2	1.8	55.8	4	14.0	19,250.0
합계	-	-	-	-	-	1,989.8	2,735,975.0
연간 가구 당 비용	-	-	-	-	-	54.1	74,387.5

자료: 저자작성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참여자의 기타소비지출과 관련된 인터뷰 내용들이다.

칫솔은 석 달에 한 번씩 갈았고 치약은 1년에 3개는 썼어요. 세수비누는 10장은 쓰죠. 샴푸는 엄청나게 많이 쓰는데 한 달에 하나는 더 쓸거 같아요. 손님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샴푸는 500g 32위안짜리 썼어요. 화장품은 중국 거를 기본으로 쓰는데 로션, 파운데이션, 립스틱 썼어요. 로션은 150g 으로 하면 저는 1년에 한 5-6개 썼던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은 하나면 되고, 좀 비쌌는데 50위안 정도 했어요... 경조사비는 기본적으로 하는데 월급에서 떼요. 사망비는 월급에서 1000원씩 떼요. 그리고 매가별로 1인당 걷는게 5000원부터 만원 사이. 친구집에 갈때면 그게 어떤 친구냐가 중요한데, 보통은 2-3만원 사이고. 자랑 진짜 가까운 친구면 이거는 민비로 왔다갔다 하는데 저는 기본 100위안씩. 큰 돈이거든요. 의사들끼리 모이는건 가모임도 있고, 망년회 하는 거도 있는데 저희는 생일 때마다 해서 1년에 20회는 넘었어요. 한번 가는데 최소한 북한 돈으로 3만원 이상은 들어요. 액수가 높죠. 여기랑 차이가 없어요. 의사들은. 저기 의사들이 의료기구 없을 따름이지 데려다 나오면 사고력은 있잖아요. (ID 1, 37세, 회령시)

목욕은 직장에서 운영하는 목욕탕을 갔는데 1달에 천원 낸단 말입니다. 일주일에 세 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파마는 미용실에서 하는데 6개월에 한번 15만원 들었어요.... 경조사비는 사람마다 다른데요, 가까운 사람은 100불 정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누구 환갑 부조 내라고 하면 5천원 내는 사람 있고, 만원 내는 사람 있고. 평균 만원 냈습니다. (ID 4, 42세, 평양시)

스킨이란게 원래 북한에서 살결물이라고 많이들 쓰거든요. 근데 저는 딱히 안 썼어요. 크림을 되게 많이 썼어요. 1년에 2개 정도를 썼는데, 가격은 한 10원에서 20원 사이예요. 머리도 제가 직접 제 머리를 잘라서 미용실을 안갔어요. (ID 29, 20세, 보천군)

저는 미용실을 갔어요. 1년에 세 번, 네 번 정도 간거 같아요. 아이 같은 경우는 그냥 천원이에요. (ID 30, 29세, 회령시)

목욕은 국돈으로 5천원했어요. 한 달에 한 3번 갔나. 사위 이발은 한 달에 한번 나가는지... 국돈 3천원했어요. 여자들 머리는 1년에 서너번 하는데 국돈 5천원 줘요. 파마하는거요. 남자는 3천원이에요... 경조사비는 1년에 한 60위안 정도 나가죠. 보통 세 번정도 있다고 하면 한 번에 20위안씩 들고 나가니까. (ID 31, 54세, 혜산시)

샴푸는 온가족이 1개로 한 6개월 쓰는거 같아요. 저는 샴푸를 거의 안 써가지고... 어머니는 살결물 이렇게 없었어요. 화장도 안하셨고. (ID 33, 26세, 무산군)

친척 결혼식이면 한 100원 정도줘요. 그런데 친척 결혼식은 이따금씩 있잖아요. 100원은 친척이고 주변 사람들은 10원 정도씩. 1년에 한 다섯 번 정도 준거 같아요. (ID 35, 26세, 혜산시)

살결물 여기같은 스킨은 안썼어요. 고저 북한에서는 크림 하나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파운데이션 그거 해서 크림은 10위안짜리 하나면 3~4달? 6개월은 썼던거 같아요, 아껴써서. 파운데이션도 10위안짜리 하나 사면 고저 거의 1년 썼던거 같아요. 선크림 이런거는 몰랐어요. 립스틱은 하나면 1년 더 쓰죠. (ID 37, 47세, 혜산시)

조사대상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재북 당시 이미용품과 이미용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화장품을 매우 적게 사용하였다. 특히 남자들과 아이들은 로션조차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장신구와 잡비에 지출하는 비용도 많지 않았다. 장신구는 최근에 들어 외부 통제를 완화했으므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나,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카. 비소비지출

비소비지출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인민반 지출 가구가 33개로 가장 많았다. 연간 지출액은 919.3만원(북한 원), 1,264천원(남한 원)이었다. 그 외 직장 19가구, 여맹/직맹/청년동맹 15가구, 학교 14가구, 장세/토지세 8가구였다. 가구당 연간 비소비지출액은 82.2만원(북한 원), 113천원(남한 원)이었다.

분석결과를 볼 때, 남한과 북한의 비소비지출 양상은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은 공식적으로 세금이 없는 국가다. 그리고 사회보험료가 월급에서 나간다고 하나 월급자체가 매우 낮고, 사회보험비율은 공식적으로 생활비(임금)의 1%에 불과하여 생계에 큰 의미가 없다.

대신 북한에는 비공식적인 세외 부담이 있다. 그것들은 직장, 인민반, 여맹, 직맹, 청년동맹,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현금과 현물의 납입과 납품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된다. 나아가 일정 비용을 인민반 등의 기관과 단체에 내고, 행사나 동원에 빠지는 주민들도 있다. 장세와 토지세를 내고 있다는 응답자는 1명밖에 없어, 장세와 토지세를 추가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8-24〉 비소비지출

(단위: 빈도, 북한 만원)

품목	빈도수	연간 지출액	
		북한 만원	남한 원
인민반	33	919.3	1,264,037.5
직장	19	770.5	1,059,437.5
여맹/직맹/청년동맹	15	453.4	623,425.0
학교	14	700.6	963,325.0
장세/토지세	8	196.0	269,500.0
합계	-	2,843.8	4,179,725.0
연간 가구 당 비용	-	82.2	112,965

자료: 저자작성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참여자의 비소비지출과 관련된 인터뷰 내용들이다.

세부담이 많죠. 돈을 한해에 한번, 오기 전에 내가 북한에다 공식적으로 사회생활 얼마나 드냐 봤더니 진짜 적게 잡은게 직장에 북한돈으로 15만원. 인민반도 10만원 가격이 나가요. 못나가면 몸으로 떼우거든요. 청년동맹은 건설장에 안 나가는 전제조건으로 1년에 제가 돈을 50만원씩 냈어요. 토지세는 2000평에 한해서. 그건 국정 가격이니까 공식적인 시가가. 4500원 정도 냈던 것 같아요. (ID 1, 37세, 회령시)

직장에 일년에 5만원 정도 냈습니다. 인민반은 계속 내라고 합니다. 한번에 만원이에요. 일년 다 합치면 15만원 정도 됩니다. 학교에는 조금 냈어요. 일년에 5만원 정도. 컴퓨터 들이라고 해서 컴퓨터도 내고... 선생님들이 요구하는게 달라서 그때 그때 냅니다. (ID 4, 42세, 평양시)

인민반에 1년에 200위안을 내면 나를 아무것도 이렇게 찾지를 않아요. 청소하거나 뭐하거나 하는데서 다 빼줘요. 그리고 건설하고 하는 건 여맹에서 따로 하는데 저는 여맹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저는 이렇게 식당을 경영하니까 거기 직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식당은 혜산 공산대학 소속이었는데 직장에서 좀 내라는 돈이 있고... (ID 12, 41세, 혜산시)

내라는게 많아요. 고사리 2키로 같은 경우는 농촌에서 이제 농장원 위에 이제 바치는 거고.. 그 양강도 있는 그 열매가 있어요. 들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쭉 이제 매것이라는 그런 열매가 있는데 그제 이제 막 6월인가 7월에 한 달 사이에 나오는 열매인데 그것도 이제 외국으로 모든 게 수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계절만 되면 그걸 또 따서 내라는게 있어요. 그때 제가 그걸 다 쓸 수가 없어서 매 계절마다 내라는 게 있어서 평균을 잡아서 이제 매달 20원 정도씩 이렇게 받았거든

요. 한 6개월치는 내야되요. 6개월 정도는 이제 막 그 농사기간이어서... 그 그니까 이 고사리를 내라고 할 때는 이제 시간을 몇 일정도 주거든요. 농장원들을. 일 안 하게 하고. 그래서 하는 건데. 한 6개월 정도만 이제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ID 29, 20세, 보천군)

남편이 동원을 가야되는데 그 동원 대신에 낸 돈이 연간 20만원이에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인민반에 14만원 정도 내요. (ID 30, 29세, 회령시)

인민반에서 동원 대신에 돈 내면 보통 그저 한 달에 20위안 내가요. 1년이면 240위안이죠. (ID 31, 54세, 혜산시)

직장이나 인민반에서 동원 나가는 대신에 돈 내는거는 1년에 중국돈 100위안 정도 내요. 동원을 못나가게되면... 나가는 사람들 후방사업 하자니까 인민반장이 그 돈 자기가 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모아서 나가는 사람들을 후방사업 시키는 걸 돈 내라는거예요. (ID 32, 70세, 혜산시)

우리가 아버지나 저나 동원 한번 걸리게 되면, 한달에 동원 하면 한달 짜리 있고 3달짜리 있는데 안가게되면 1년에 각자가 한 30만원씩 들어요. 그런 부가세가 있고. 인민반 같은 거는 원래는 저희 어머니가 몸이 불편하니 빠져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무작정 무슨 내라는 거예요. 절반만 내는게 1년에 10만원이에요. 그리고 그 하루당 뭐 여맹원들이 뭐 낼 동원 나가고 하는데 하루당 3천원일 때 있고 5천원일 때 있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 일년에 뭐 계산하면... 한달에 고저 6만원 정도. 인민반도 1년에 전 가족이 한 뭐 4-50만원 되는거 같아요. (ID 33, 26세, 무산군)

내라는 돈은 너무 많아요. 무슨 군대 지원도 내고 무슨 한 몇 십 가지가 돼서 잘 생각이 안나요. 1년에 보면 몇십만씩 그제 나가는데 고저 한달에 한 5만원 정도씩 내는거 같기도 하고. 1년치면 한 60만원 나와요.

더 나가면 더 나갔지. 이거는 인민반에서도 내고, 직장에서도 내고, 하는게 너무 많아요. 그니까 어쨌든 직장에 내는게 1년에 한 60만원 돈이고 인민반은 1년에 30만원 돈이에요. 여행이나 직맹 그런게 1년에 한 10만원 정도. 그리고 뭐 대마, 피마, 마대, 그 다음에 심지어 이렇게 쌀 무슨 500g, 순곡 무슨 500g, 너무 많아서. (ID 34, 25세, 무산군)

직장 보다는 인민반에서 내는 돈이 많은데, 한번 안나가면 중국돈으로 5원씩 내야해요. 여행은 중국돈 350원을 1년에 내면 이것은 동원을 안가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저는 동원을 빠짐없이 다녔어요. 그러다가 힘들 때 안다니면 50원 정도 1년에 냈어요. (ID 35, 26세, 혜산시)

음료 매대를 토지, 그러니까 국가 토지를 이용했다 해서, 월 100원을 바쳤어요. 판매한 매대에서 월당 중국돈으로 100원씩 우리가 바쳤어요. 인민반에는 동원 지원 하는데 월 20원. 이렇게 하면 월 20원 내면 일체 아무 일도 안하는 걸로 그렇게 1년에 240원 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매대 가서 하니까 제가 집을 비우고 동원을 못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저 뿐만 아니라 이렇게 혹시 한국에 동지들이 와있는 친구들은 20원씩 내고 동원은 무척 썼어요. 동원을 안 나가느라고. 이렇게 막 비산시 같은 데는 한달에 300원 350원씩 막 냈어요. 그리고 일체 인민반 일을 안 했어요. 보통 인민반 동원은 어떤 동원이었어요, 건설을 많이 진행한다 그러니까, 산지에 건설을 짓든 아파트도 있어야하고, 아파트 동원에 계속 나가야하고... 어쨌든 동원 너무 많아서 나무 심기 동원, 농사철에는 농장에 가서 김매기 동원, 너무도 동원이 나가서 여행이 고저 인민반이고 고저 건설을 너무 많이 벌려놔서 각종 건설을 다 나가야했어요. 그리고 딸애가 학교 나가 선생님한테 이거는 애가 열성자가 한다고 하니까 선생님 생활을 보장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급 반장, 분단 원장 하면 50원씩 바치고, 네, 그 밑에 사상부원장 같은 경우는 30원씩 바쳤어요. 한 6개월에 한번씩 바쳤어요. (ID 37, 47세, 혜산시)

비소비지출의 경우, 거의 모든 조사대상자들이 비공식적인 세외부담을 하나라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직장이나 인민반, 여맹, 학교에 돈을 지불하였으며, 그 내용은 건설이나 물품을 구매하는데 보태거나 아니면 동원과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 빈도나 액수는 각기 다양하였는데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이 이에 대한 지출이 큰 부담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3. 북한 가구당 월 생계비

지금까지 조사한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 비소비지출에 대하여 가구당 월생계비를 추정하였다. 본 조사의 목적이 소비 품목의 탐색이며, 표본의 대표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생계비 추정은 참고자료로만 제시한다. 가격에 대한 정보 역시 지역의 편중과 탈북 시점의 차이가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보기는 어렵다.

가. 조사대상의 평균 월 생계비

가구당 월 생계비를 추정은 본 조사의 평균 가구원 수인 3명으로 가정하고 산출하였다. 이에 1인당 소요액을 산출한 비목들에 대해서 가구원 수인 3명을 곱하여 가구당 비용을 계산하였다.

가구당 월 생계비를 추계한 결과, 조사 가구의 평균 월생계비는 133만원(북한 원), 183천원(남한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번 조사에서 “가족의 월생계비 지출은 총 얼마라고 생각했습니까?”라는 질문에 응답한 평균값 107.1만원(북한 원)에 비해 1.24배 많은 금액임을 유의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생계비 비목별 지출 비율은 참고할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료품 지출 비율이 58.3%로 절반을 상회하였다. 뒤이어 피복·신발비 9.9%, 주거비와 광열·수도비 8.4% 순이었다. 가장 적게 지출한 부문은 교육비 1.7%, 보건의료비 2.0%, 교통·통신비 2.5% 순이었다.

〈표 8-25〉 가구당 월생계비

(단위: 빈도, 북한 만원, 남한 원)

	품목	1인 소요액 *3	가구당	합계		%
				북한 만원	남한 원	
1	식료품비	25.9*3		77.7	106,838	58.3
2	주거비&광열·수도비		11.2	11.2	15,400	8.4
3	가구집기·가사용품비		4.7	4.7	6,463	3.5
4	피복·신발비	4.4*3		13.2	18,150	9.9
5	보건의료비		2.7	2.7	3712.5	2.0
6	교육비		2.21	2.21	3,039	1.7
7	교양·오락비		6.9	6.9	9,488	5.2
8	교통·통신비		3.31	3.31	4,551	2.5
9	기타소비지출		4.5	4.5	6,188	3.4
10	비소비지출		6.85	6.85	9,419	5.1
	합계			133.27	183,248.5	100.0

자료: 저자작성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참여자의 전반적인 소비와 관련된 인터뷰 내용들이다.

저는 엄마랑 둘이 중국 돈 1000위안은 넘어 썼어요. 한 3000위안 정도. 3000위안이면 넉넉하게 쓰는거예요. 평양에 가도 소리치죠. 사람들이 딱딱하게 사는건 500위안이면 먹고 사나. 진짜 밥만 먹고 산다고 할 때는 350위안은 되더라고요. 제가 계산해봤어요. 그게 식구 3인 기

준이었어요. (ID 1, 37세, 회령시)

가족 월 지출은 200불 정도 썼고 넉넉하게 생활하자면 300불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빠듯하게 살면 150불 있으면 될 것 같아요. (ID 4, 42세, 평양시)

저는 딸이 예술학원 다니니까 좀 돈이 남보다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입는 것도 그래. 그런데 500위안이면 우리 동네에서 생활해서는 괜찮은데 평균을 다 놓고 볼때는 좀 아무래도. 1500위안이면 정말 넉넉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빠듯하게 생활하자면 한 200위안이면 되지 않을까. (ID 12, 41세, 해산시)

북한에서 살 때 가족이 한달에 한 800위안 정도 쓴거 같아요. 넉넉하게 살자면 한 1500이면 실컷 먹고 살아요. 빠듯하게 살자면... 뭐 우리 앞집 같은 경우엔 무슨, 비 100원도 없는데 뭐. 그거 먹고 사는 게 완전히 차이가 많죠. (ID 15, 53세, 청진시)

월에 보통 40만원 쓰니까 벌지 못할때는 본전 깎아먹으면서 살죠. 넉넉하게 생활하자면 80만원은 있어야 되고, 빠듯하게는 30만원으로도 살 수 있어요. (ID 17, 49세, 단천시)

북한에 있을때에는 한 달에 못해도 중국돈으로 40은 있어야 살겠다는 그런게 있었던거 같아요. 딱 빠듯하게, 빠듯하게 하면 30원 정도... 그런데 넉넉하게 먹고, 입고, 쓰는 거는 한 달에 300원정도는 있어야 할거 같아요. (ID 29, 20세, 보천군)

한 달에 남편이랑 저랑 생계비가 북한돈으로 한 60만원 정도? 아마 더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 70만원 정도하면 될거 같아요. 이게 좀 넉넉하게 생활하자면 한 10만 더 있으면 될거 같아요. 빠듯하게 생활하자면 한 30만이면 살겠지요. (ID 30, 29세, 회령시)

북한에서 넉넉하게 먹고 싶은 거 먹고 다 사고 하면서 넉넉하게 생활 하자면 300위안은 있어야지. 빠듯하게 생활하자면 100위안 정도 있으면 될거 같아요. (ID 31, 54세, 혜산시)

북한에서 넉넉하게 생활하면 30만원 정도 필요하고 빠듯하게 생활하자면 한 6만원 정도면 살 수 있을거 같아요. (ID 34, 25세, 무산군)

북한에서 먹고싶은거 많이 먹고, 입고 싶은거 입고 좀 넉넉하게 생활 하면 중국돈 1300원 정도 있으면 될거 같아요. 반대로 빠듯하게 허리띠 졸라매서 빠듯하게 생활하면 250원 정도로도 생활할 수 있을거 같아요. (ID 35, 26세, 혜산시)

북한에서 우리 고저 일반주민에서는 2인 가구 해서 우리 산다면 300원이면, 여기서 충분하게 살겠다 이렇게 생각 하겠어요. 빠듯하게, 그러니까 오직 먹는데만 산다 쓴다면 7~80원 정도? (ID 37, 47세, 혜산시)

북한에서 돈을 많이 쓴 달에는 만웬도 쓰더라고요 계산해보면. 그래서 넉넉하게 생활하고 싶으면 만웬정도, 빠듯하게 생활하자면 그냥 천원부터 천오백원이면 생활할 수 있어요. (ID 28, 38세, 혜산시)

북한에서 살 때 한달에 총 나가는 돈이 3000원 정도였는데 그저 내 편안하게 살려면 5000원이 되어야 될거 같아요. 최소로 빠듯하게 사는게 그저 1500원. 아우 너무 힘들어요 1500원은. (ID 24, 51세, 혜산시)

가구당 월생계비의 경우, 조사대상자들의 재북 당시 형편에 따라 각이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주관적 경제수준에 대한 가치판단 질문이었던 “얼마면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 혹은 빠듯하게 생활하자면 얼마의 돈이 필요할지”에 대해서도 일정한 편차를 보였다.

나. 북한 내부 시장 물가

북한 내부 시장의 물가는 현재 공식적으로 집계된 자료는 없다. 일부 북한 관련 민간단체에서 개별적이고, 부분적으로 조사 및 정리되고 있다. 주로 데일리 NK, 아시아프레스, 그리고 탈북지식인연대 등에서 시기별 및 지역별로 정리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자료의 내용과 공개 정도가 한정적이다.

데일리 NK에서는 환율과 함께 곡물, 유가 등 북한 시장 기본 물가를 평양, 신의주, 혜산 지역별로 조사·축적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휴를 통해서만 공유하고 있다. 아시아프레스에서도 북한 시장의 최신 물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환율, 쌀, 옥수수, 휘발유, 디젤유 등으로 매우 한정적이다. 반면, 탈북지식인연대에서는 비교적 다양한 품목에 대해서 지역별로 정리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만 조사 년도가 오래되어 비교자료로 사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공개 내용은 한정적이거나, 시의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데일리 NK와 아시아프레스의 자료와 본 연구 조사 결과를 비교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8-26>와 같다.

비교 결과, 본 조사의 쌀과 옥수수, 돼지고기 가격은 타 기관에서 측정 한 가격과 유사했다. 이는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높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본 조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가장 많이 이용한 식품이었으므로, 다른 품목에 비해 기억이 더 정확해서 유사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다른 품목의 가격은 타 기관에서 제시된 것이 없으므로 비교하지 못하였다.

〈표 8-26〉 북한내부 시장물가 비교(2019년 6월, 헤산시 기준)

(단위: 북한 만원)

구분	품목	데일리 NK	아시아프레스	본 연구
1	쌀 1kg	5,500원	4,518원	5,000원
2	옥수수 1kg	1,700원	1,900원	2,000원
3	돼지고기 1kg	12,000원	-	12,500원
4	휘발유 1kg	10,000원	10,040원	-
5	디젤유 1kg	7,000원	6,275원	-
6	중국 원 환율	1,210원	1,255원	1,200원
7	달러 환율	7,830원	8,659원	8,000원

자료: Daily NK. (2020c). 북한시장 동향.

<https://www.dailynk.com/%E5%8C%97%EC%9E%A5%EB%A7%88%EB%8B%B9-%E8%B8%99%ED%96%A5/> 에서 2020.8.31. 인출; 아시아프레스. (2020). 북한시장최신물가 정보, <https://www.asiapress.org/korean/nk-korea-prices/>에서 2020년 10월 검색하여 인출.

제3절 북한 주민의 소비 품목 탐색

이 절에서는 북한 주민 소비 품목을 탐색적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앞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질적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남한 최저생계비 품목 중 상당한 품목들을 북한 주민들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유지 품목). 동시에 남한 최저생계비 품목 중 소비를 전혀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소비하는 가구가 소수에 불과한 품목들을 확인하였다(제거 품목). 또한 남한 최저생계비 품목에는 없지만, 북한 주민 생활 파악을 위해 필요한 품목들도 검토하였다(추가 품목). 본 절에서는 설문조사 및 질적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북한 주민의 일반적인 소비 품목을 유지, 제거, 추가의 방식으로 선별하고자 한다.

선별의 방식은 남한 최저생계비 품목을 열거하고, 그것을 기본 품목으로 하여 선별하는 방식이다. 추후 북한 표준생계비 모형 개발을 위한 품

목 선별은 본 연구의 분석기준인 남한 최저생계비 품목을 열거하고, 그에 준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선별의 결정은 3가지이며, 3가지 방식은 유지, 제거, 추가이다. 유지, 제거, 추가의 기준은 각 품목들에 대한 조사대상 가구들의 사용 빈도수를 기준으로 한다. 해당 품목을 사용한 가구 빈도가 4가구 이상일 경우 '유지', 3가구 이하일 경우 '제거', 3가구 이상이면서 북한 표준생활 모형 개발을 위해 추가되어야 할 품목은 '추가'로 표시하였다.

1. 주요 소비 품목의 선별

가. 생계비→

생계비에서는 대부분의 품목들이 유지된다. 제거될 품목은 햄, 튀김닭, 유산균발효유, 갈치, 어묵, 참치캔, 도토리묵, 부추, 버터, 케첩, 케이크, 비스킷, 보리차이다. 추가될 품목은 사탕과자이다.

〈표 8-27〉 식료품비

(단위: 빈도)

품목	빈도	결과
곡류 및 식빵		
쌀	37	유지
강냉이	17	유지
잡쌀	20	유지
보리	11	유지
콩	18	유지
팥	10	유지
식빵	7	유지
밀가루	29	유지
국수	30	유지

품목	빈도	결과
라면	13	유지
당면	12	유지
만두	4	유지
육류		
소고기(갈비)	15	유지
돼지고기	35	유지
닭고기	9	유지
소시지	13	유지
햄	2	제거
튀김닭	3	제거
낙농품		
우유	9	유지
유산균발효유	2	제거
달걀	32	유지
어개류		
갈치	0	제거
명태	25	유지
고등어	11	유지
꽂치	15	유지
냉동오징어	22	유지
홍합	5	유지
복어	9	유지
멸치	14	유지
멸치젓	16	유지
새우젓	12	유지
어묵	0	제거
참치캔	0	제거
채소		
배추	37	유지
무우	35	유지
파	31	유지
시금치	29	유지
상추	13	유지
콩나물	32	유지

품목	빈도	결과
감자	35	유지
오이	35	유지
당근	17	유지
풋고추	36	유지
양파	27	유지
호박	26	유지
토마토	26	유지
고구마	24	유지
도라지	11	유지
가지	27	유지
양배추	30	유지
미나리	23	유지
버섯	15	유지
깻잎	11	유지
부추	3	제거
숙주나물	4	유지
단무지	6	유지
두부	35	유지
도토리묵	1	제거
김	14	유지
미역	30	유지
과실		
사과	35	유지
배	28	유지
복숭아	18	유지
포도	16	유지
감	22	유지
감귤	17	유지
참외	5	유지
수박	18	유지
딸기	16	유지
바나나	11	유지
조미식품		
참기름	11	유지

품목	빈도	결과
콩기름	35	유지
버터	0	제거
고춧가루	35	유지
마늘	36	유지
생강	15	유지
후춧가루	14	유지
카레가루	5	유지
설탕	32	유지
소금	34	유지
깨	17	유지
간장	17	유지
된장	20	유지
고추장	24	유지
혼합조미료	17	유지
식초	30	유지
케첩	2	제거
마요네즈	7	유지
물엿	11	유지
빵 및 과자류		
케이크	3	제거
스낵과자	5	유지
비스켓	3	제거
사탕 과자	34	추가
차 음료 및 주류		
커피	7	유지
보리차	1	제거
콜라	6	유지
쥬스	11	유지
소주	20	유지
외식		
외식	13	유지

자료: 저자작성

나. 주거비

주거비에서는 대부분의 품목들이 삭제된다. 유지될 품목은 조달비용과 도배비이다. 제거될 품목은 보증보험료, 인지세, 관리비, 이사비, 부동산 중개수수료이다. 추가될 품목은 없다.

〈표 8-28〉 주거비

(단위: 빈도)

품목	빈도	결과
조달비용(집 가격)	36	유지
보증보험료	0	제거
인지세	0	제거
관리비	0	제거
이사비	1	제거
부동산 중개수수료	2	제거
도배비	15	유지

자료: 저자작성

다. 광열·수도비

광열·수도비에서는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난방 및 취사비를 세분화하여 재구성하였는데, 그 품목들이 모두 추가된다.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난방 및 취사비라는 기본 틀은 유지되지만, 세부 항목들은 추가되는 것이다. 추가될 품목은 공식 전기요금, 불법 전기 비용, 태양광판, 배터리, 공식 상하수도 요금, 실제 상하수도 요금, 난방, 취사이다.

〈표 8-29〉 광열·수도비

(단위: 빈도)

품목	빈도	결과
전기요금		
공식 전기요금	14	추가
불법 전기 비용	13	추가
태양광판	25	추가
배터리	27	추가
상하수도요금		
공식 상하수도 요금	14	추가
실제 상하수도 비용	4	추가
난방 및 취사비		
난방	37	추가
취사	12	추가

라. 가구집기·가사용품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에서는 대부분의 품목들이 유지된다. 제거될 품목은 문갑, 전자레인지, 헤어드라이어, 청소기, 랩, 쿠킹호일, 살충방충제, 가구집기수선료, 쓰레기봉투, 음식물처리비용이다. 추가될 품목은 없다. 한편 기타 일반가구와 기타 가정용가구를 추가하였는데, 해당 빈도가 모두 0이어서 추가할 필요가 없다.

〈표 8-30〉 가구집기·가사용품비

(단위: 빈도)

품목	빈도	결과
일반가구		
장롱	23	유지
서랍장	8	유지
책상	7	유지
의자	6	유지

품목	빈도	결과
벽시계	27	유지
탁상시계	8	유지
화장대(거울)	22	유지
행거	9	유지
문갑	1	제거
기타 일반가구	0	제거
가정용기구		
냉장고	10	유지
전기밥솥	20	유지
가스레인지	14	유지
세탁기	7	유지
다리미	15	유지
선풍기	20	유지
믹서	4	유지
전자레인지	2	제거
헤어드라이어	3	제거
청소기	1	제거
기타 가정용기구	0	제거
식기주방용품		
밥상	30	유지
주발	30	유지
접시	35	유지
컵	34	유지
쟁반	29	유지
냄비	29	유지
주전자	19	유지
후라이팬	18	유지
항아리	22	유지
식도	26	유지
과도	15	유지
도마	34	유지
수저	33	유지
수저통	32	유지
조미료통	33	유지

290 남북 간 사회격차 완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복지체제 구축 방안 연구: 북한 주민의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품목	빈도	결과
반찬통	26	유지
김치통	21	유지
바가지	35	유지
고무통	8	유지
국자	34	유지
대야	28	유지
랩	1	제거
쿠킹호일	0	제거
보온병	17	유지
가사잡화소모품		
드라이버	16	유지
망치	24	유지
못	23	유지
가위	29	유지
건조대	17	유지
빨래판	9	유지
빨래집게	23	유지
방뿔자루	30	유지
쓰레받기	29	유지
휴지통	25	유지
비누통	33	유지
바늘	34	유지
목도장	4	유지
가사소모품		
형광전구	21	유지
LED전구	19	유지
화장지	30	유지
고무장갑	25	유지
빨래비누	29	유지
합성세제	25	유지
부억용세제	28	유지
살충방충제	0	제거
행주	34	유지
수세미	31	유지

품목	빈도	결과
구두솔	19	유지
구두약	20	유지
접착제	12	유지
건전지	25	유지
침구 및 직물제품		
이불	36	유지
요	35	유지
베개	35	유지
타올	31	유지
커튼	29	유지
가구서비스		
가구집기수선료	0	제거
쓰레기봉투	0	제거
음식물처리비용	0	제거

마. 피복·신발비

피복·신발비에서는 대부분의 품목들이 유지된다. 제거될 품목은 세탁료 중 신사복 상하 드라이클리닝과 숙녀복 상하 드라이클리닝이다. 추가될 품목은 장화와 지하족이다

〈표 8-31〉 최저 피복·신발비

(단위: 빈도)

품목	계절/규격	빈도	결과
피복 및 신발			
가장			
신사복	동	18	유지
	춘추	17	유지
오버코트	동	22	유지
잠바	동	15	유지
	춘추	22	유지

품목	계절/규격	빈도	결과
바지	동	22	유지
	춘추	21	유지
반바지	하	24	유지
운동복	동,잠옷겸용	18	유지
	춘추,잠옷겸용	13	유지
주부(세)			
숙녀복	동	19	유지
	춘추	19	유지
오버코트	동	29	유지
잠바	동	22	유지
스커트	춘추, 동	14	유지
바지	동	27	유지
	춘추	28	유지
반바지	하	20	유지
운동복	동,잠옷겸용	16	유지
	춘추,잠옷겸용	13	유지
자녀(남)			
잠바	동	14	유지
	춘추	23	유지
바지	동	22	유지
	춘추	21	유지
반바지	하	19	유지
교복	동	10	유지
	하	7	유지
체육복	동	15	유지
	하	16	유지
자녀(여)			
잠바	동	24	유지
	춘추	13	유지
바지	동	13	유지
	춘추	13	유지
반바지	하	12	유지
스커트	춘추, 동	14	유지
체육복	동	12	유지

품목	계절/규격	빈도	결과
	하	9	유지
스웨터 셔츠			
가장			
와이셔츠	긴팔	23	유지
	반팔	21	유지
셔츠	긴팔	20	유지
	반팔	18	유지
스웨터		10	유지
남방		11	유지
주부			
셔츠	긴팔	24	유지
	반팔	22	유지
스웨터	겨울	24	유지
블라우스		21	유지
자녀(남)			
셔츠	긴팔	15	유지
	반팔	14	유지
스웨터	겨울	10	유지
자녀(여)			
셔츠	긴팔	23	유지
	반팔	21	유지
스웨터	겨울	21	유지
블라우스		13	유지
내의			
가장			
동내의	성인용 상하 순면60's	24	유지
런닝	남자성인용 흰색 순면40's	22	유지
팬티	성인용 흰색 순면	24	유지
주부			
동내의	성인용 상하 순면60's	31	유지
런닝		25	유지

294 남북 간 사회격차 완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복지체제 구축 방안 연구: 북한 주민의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품목	계절/규격	빈도	결과
팬티	성인용 삼각 순면	32	유지
브래지어		28	유지
속치마	양장용	4	유지
자녀(남)			
동내의		14	유지
런닝		13	유지
팬티		13	유지
자녀(여)			
동내의		23	유지
런닝		23	유지
팬티		25	유지
브래지어		16	유지
직물, 실			
실		20	유지
기타피복			
가장			
넥타이		12	유지
장갑	방한용	25	유지
혜대		23	유지
양말	사계절용	26	유지
목도리		15	유지
손수건		14	유지
주부			
스타킹	팬티스타킹 1켄레	14	유지
장갑	방한용	32	유지
혜대		8	유지
양말	사계절용	34	유지
목도리		22	유지
손수건		15	유지
자녀(남)			
장갑	방한용	15	유지
혜대		13	유지
양말	사계절용	15	유지

품목	계절/규격	빈도	결과
목도리		7	유지
자녀(여)			
장갑	방한용	24	유지
양말	사계절용	24	유지
목도리		16	유지
신발			
가장			
구두	인조가죽	23	유지
운동화		22	유지
슬리퍼		19	유지
장화		5	추가
지하족		2	추가
주부			
구두	인조가죽	31	유지
운동화		26	유지
슬리퍼		22	유지
샌들		18	유지
자녀(남)			
운동화		15	유지
슬리퍼		10	유지
샌들		5	유지
자녀(여)			
운동화		23	유지
슬리퍼		20	유지
샌들		21	유지
구두		7	유지
피복 및 신발서비스			
세탁료	신사복 상하 드라이크리닝	0	제거
	숙녀복 상하 드라이크리닝	0	제거
의복수선료	신사복 하의 기장 수선	4	유지
구두수선료	남성용 구두굽 수선료	9	유지

바. 보건의료비

보건의료비에서는 대부분의 품목들이 유지된다. 제거될 품목은 위생대(나이트용)이다. 추가될 품목은 없다.

〈표 8-32〉 보건의료비

(단위: 빈도)

품목	규격	빈도	결과
보건의료용품기구			
안경	중품	17	유지
위생대	생리대 중형 20패드	25	유지
위생대(나이트용)	생리대 중형 20패드	3	제거
보건의료서비스	입원, 외래, 처방약값	12	유지
약값	비처방약값	25	유지
미충족육구			

자료: 저자작성

사. 교육비

교육비에서는 많은 품목들이 제거된다. 교재비 품목을 ‘교재(총교재비)’, ‘교과서’, ‘참고서’로 변경하여 조사하였는데,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충교육비 중 개인과외, 농촌동원/청년근위대, 운동회/원족, 답사/견학/야영을 추가하였다. 원족이 답사/견학/야영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기존의 운동회 품목은 그대로 두고, 별도로 원족(답사/견학/야영)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방구비 품목에서 ‘스케이트/롤러스케이트’와 ‘공’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표 8-33〉 교육비

(단위: 빈도)

품목	규격	빈도	결과
중학생-14세(남)/초등학생-11세(여)			
교재비			
교재(종교재비)		5	유지
교과서		2	제거
참고서		5	유지
초등참고서	1,2학기 전과 각 1인당 1권	3	제거
초등문제집	1,2학기 각 1인당 2권	3	제거
중학 참고서(국어)	1년 1인당 2권	3	제거
중학 문제집(국어)	1년 1인당 2권	3	제거
중학 참고서(영어)	1년 1인당 1권	3	제거
중학 문제집(영어)	1년 1인당 2권	3	제거
중학 참고서(수학)	1년 1인당 1권	3	제거
중학 문제집(수학)	1년 1인당 2권	3	제거
중학 참고서(사회)	1년 1인당 1권	3	제거
중학 문제집(사회)	1년 1인당 1권	3	제거
중학 참고서(과학)	1년 1인당 2권	3	제거
중학 문제집(과학)	1년 1인당 1권	3	제거
보충교육비			
개인과외		12	유지
농촌동원/청년근위대		2	제거
운동회/원족		11	유지
답사/견학/야영		1	제거
초등가정학습지		0	제거
중학 인터넷강의		0	제거
초등 수련회	국내 1박2일 기준(1회/인)	0	제거
중등 수련회	국내 2박3일 기준(1회/인)	0	제거
기타교육비	야외학습 및 특별활동(1회/인)	0	제거
문방구비			
연필	HB보통나무(1타스/인)	8	유지
샤프	제도샤프(1개/1인)	10	유지
샤프심	HB 0.5mm 30본(1개/1인)	7	유지
볼펜	검정3, 파랑2, 빨강1(6자루/인)	6	유지

품목	규격	빈도	결과
싸인펜	수성(2개/인)	2	제거
형광펜	3색(3개/인)	0	제거
색연필	12색(1세트/인)	7	유지
초등학생 공책	초등학생용(10권/인)	9	유지
중학생 공책	중학생용(15권/인)	4	유지
스케치북	공용(2권/인)	3	유지
인쇄용지	A4/250매	0	제거
크레파스	24색(1세트/인)	5	유지
초등학생 그림물감	12색 1세트	3	제거
중학생 그림물감	24색 1세트	4	유지
붓	수채화용 세트	5	유지
지우개	소(2개/인)	10	유지
칼	소형 커터	6	유지
가위	중	9	유지
풀	중간 크기(1개/인)	7	유지
색종이	양면(10개/인)	7	유지
초등학생 필통	초등학생용(1개/인)	9	유지
중학생 필통	중학생용(1개/인)	8	유지
초등학생 자	초등학생용 20cm(1개/인)	7	유지
중학생 자	중학생용 30cm(1개/인)	7	유지
교육용 악기	초등학생용 리코더	1	제거
교육용 체육기구	스케이트/롤러스케이트	5	추가
	공	4	추가
	초등학생용 줄넘기	8	유지
	초등학생용 훌라후프	1	제거
앨범	중품(30매)	4	유지

자료: 저자작성

아. 교양·오락비

교양·오락비에서는 많은 품목들이 유지된다. 본 조사분석의 기준으로 제거될 품목은 프린터, 키보드 및 마우스, 아동/청소년용 CD, 아동/청소년용

년 영화관람, 유선방송이다. 추가될 품목은 DVD플레이어, 노트북, 노트텔이다. 다만 프린터, 키보드 및 마우스 등은 최근 컴퓨터 활용의 경향을 볼 때 향후 북한 내 소비가 일반화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으로 판단된다.

〈표 8-34〉 교양·오락비

(단위: 빈도)

품목	규격	빈도	결과
교양·오락비 서적 및 인쇄물			
도서(성인)	단행본	9	유지
도서(아동)	단행본(아동 2권, 청소년 4권)	4	유지
교양·오락용품기구			
텔레비전	디지털TV(32인치)	23	유지
카세트라디오/DVD플레이어	CD, USB 겸용	10	추가
컴퓨터/노트북	중저가(보급형)/모니터 포함	12	추가
노트텔		11	추가
프린터	잉크젯 중저가(보급형)	0	제거/추후 재검토
컴퓨터소모품	키보드	2	제거/추후 재검토
컴퓨터소모품	마우스	4	제거/추후 재검토
저장장치	USB	23	유지
프린터잉크	재생/호환잉크(리필형)	0	유지
완구	초등학생 장난감(2개/인)	20	유지
CD	성인	11	유지
	아동/청소년	2	제거
교양·오락서비스			
영화관람	성인(2인/2회)	4	유지
	아동, 청소년(2인/2회)	0	제거
TV 수신료	가정용 TV수신료	3	제거
유선방송	기본형(부가세 포함)	0	제거
여행 및 문화시설관람	고궁및박물관(성인2, 아동2)	6	유지
사진촬영 및 현상	증명사진 및 디지털사진현상	8	유지
	학생 증명사진	8	유지
	디지털사진현상	8	유지

자료: 저자작성

자. 교통·통신비

교통·통신비에서는 상당수의 품목이 이번 조사의 기준으로는 제거기준에 해당되었다. 직장교 교통비 품목 중 ‘기타’를 추가하려고 하였으나, 실제 조사된 항목은 없었다. 교통비, 통신비, 휴대전화, 인터넷 관련 품목 중 상당수가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최근 북한 내에서의 교통, 통신 소비의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추후 재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북한 내 통신비용의 부과체계는 좀 더 면밀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표 8-35〉 교통·통신비

(단위: 빈도)

품목	규격	빈도	결과
교통비			
가장 출근	시내버스, 출퇴근 21.725(365/12/7*5)일, 외출 2회(왕복)	4	유지
주부 외출	시내버스, 외출 6회(왕복)	7	유지
자녀(초등학생)외출	시내버스, 외출 3회(왕복)	3	제거
자녀(중학생) 외출	시내버스, 외출 3회(왕복)	2	제거
택시	시내구간	15	유지
친지방문 등	고속버스(일반), 4인X1년 2회X왕복(2번)	6	유지
기타			제거
통신비 집전화요금			
기본료		3	유지/추후 재검토
시내통화료		0	제거
시외통화료		0	제거
이동통신 통화료		0	제거
부가세		0	제거
이전비		0	제거
전화기 구입비	일반유선전화	9	유지
휴대전화요금			

품목	규격	빈도	결과
휴대폰 기본요금	일반(표준)요금	0	제거/추후 재검토
휴대폰 사용요금	3분 기준 (1일 1통화)	15	유지
휴대폰 부가세		0	제거
휴대폰 구입비	5년마다 1회	17	유지
이동통신 가입비		0	제거
인터넷요금			
인터넷 사용요금		0	제거
부가세		0	제거
이전비		0	제거

자료: 저자작성

차. 기타소비지출

기타소비지출은 교제비만이 제거될 필요가 있다. 다른 품목들은 그대로 유지할 만하다.

〈표 8-36〉 기타소비지출

(단위: 빈도)

품목	규격	빈도	결과
기타소비지출 이미용품			
치솔	성인용	33	유지
치약	170g	33	유지
비누	100g	32	유지
샴푸	500ml	30	유지
스킨로션(여성)	150ml	20	유지
스킨로션(남성)	150ml	6	유지
아동용로션	200ml	4	유지
파운데이션	40ml	20	유지
썬크림	70mg	8	유지
립스틱	3.5g	15	유지
손톱깎기	중품	17	유지

품목	규격	빈도	결과
면도기	1회용	25	유지
머리빗	중품 2종	34	유지
이미용서비스			
목욕비	대인 (2월 1회, 4인)	21	유지
이발	남자 대인	23	유지
	남자 대인(중학생)		유지
미용	여자 대인	21	유지
	여자 아동		유지
파마	여자 파마	15	유지
장신구			
핸드백	중품	24	유지
가방	학생가방	19	유지
우산	중품, 3단	32	유지
손목시계	아나로그	24	유지
지갑	중품	10	유지
잡비			
경조비	경사 3회, 조사 3회(1년 6회)	21	유지
교제비	가장(1년 6회)	3	제거
친목단체비	배우자	13	유지
자녀용돈	용돈(1월 1회, 2명)	9	유지
친지방문비	선물(1년 2회)	8	유지

자료: 저자작성

카. 비소비지출

비소비지출에서는 기존의 품목들은 모두 제거될 필요가 있다. 대신 북한 사회의 특징을 반영하여 직장, 인민반, 여맹/직맹/청년동맹, 학교 등에 내는 부담금과, 장세/토지세 품목들을 추가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8-37〉 최저 비소비지출

(단위: 빈도)

품목	규격	빈도	결과
비소비지출 조세			
근로소득세 (소득분지방소득세포함)	최저임금기준(면세점 이하)	0	제거
균등분주민세 (지방교육세포함)	1가구당(세대주에게 부과)	0	제거
재산세(건물과 토지 합산) (지방교육세포함)	주택 비소유	0	제거
사회보장분담금			
국민연금	최저임금기준 월소득액의 4.5%	0	제거
건강보험	최저임금기준월소득액의3.06% +보험료의6.55%의장기요양보험료	0	제거
고용보험	최저임금기준 월소득액의 0.65%	0	제거
부담금			
분류	내용	빈도	결과
직장	각종 부담금	19	추가
인민반	각종 부담금	33	추가
여맹/직맹/청년동맹	각종 부담금	15	추가
학교	각종 부담금	14	추가
장세/토지세		8	추가

자료: 저자작성

2. 남북 간 소비 품목의 차이

본 연구에서 북한 주민의 생활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소비 품목들을 탐색적 차원에서 선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남한 표준생계비 품목을 기준으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 설문조사 및 질적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확인한 남북한 소비 품목의 차이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점을 살펴보자.

첫째, 남한 최저생계비 품목 중 상당한 품목들을 북한 주민들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것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인류의 생활양식은 유

사하며, 그에 기초한 품목들이 이미 남한 최저생계비 품목에 과학적으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남과 북은 반만 년의 역사를 공유해 온 같은 민족인 반면, 현재의 분단체제는 75년에 불과하기에 유사한 소비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남한과의 현격한 차이가 있어 주요하게 추가하여야 할 품목들은 식료품비에서는 강냉이, 사탕 과자, 광열·수도비에서 공식 전기요금, 불법 전기 비용, 태양광판, 배터리, 공식 상하수도 요금, 실제 상하수도 요금, 난방, 취사로의 세분화, 교육비에서 개인과외, 원족(답사/견학/야영), 스케이트/롤러스케이트, 공, 교양·오락비에서는 노트북, 노트텔, 비소비지출에서 직장, 인민반, 여맹/직맹/청년동맹, 학교, 장세/토지세이다. 이러한 품목들이 추가된다면 북한의 생활상을 보다 정교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남한과의 현격한 차이가 있어 주요하게 제거하여야 할 품목들은 생계비에서 햄, 튀김닭, 유산균발효유, 갈치, 어묵, 참치캔, 도토리묵, 부추, 버터, 케첩, 케이크, 비스킷, 보리차, 주거비에서 보증보험료, 인지세, 관리비, 이사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가구집기·가사용품비에서 문갑, 전자레인지, 헤어드라이어, 청소기, 랩, 쿠킹호일, 살충방충제, 가구집기수선료, 쓰레기봉투, 음식물처리비용, 피복·신발비에서 신사복 상하 드라이 크리닝(세탁료)과 숙녀복 상하 드라이크리닝(세탁료), 보건의료비에서 위생대(나이트용), 교육비에서는 교재비·문방구비에서 상당수 항목들, 교양·오락비에서 프린터, 키보드, 아동/청소년용 CD, 아동/청소년 영화관람, 유선방송, 교통·통신비에서 교통비, 통신비, 휴대전화, 인터넷 관련 품목 중 상당수 항목들, 기타소비지출에서 교재비, 비소비지출에서 근로소득세, 균등분주민세, 재산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이다. 이러한 품목들은 북한이 경제적 측면에서 저발전되어 있고, 사회주의식 세외부담을 부과하는 특성과 관련되어 있다.



제9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연구의 주요 결과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제 9 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연구의 주요 결과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이 나아가 남북 주민들의 복지 향상으로 이어지는 이상적인 목표를 평화복지체제로 개념화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방안을 단계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기획의 첫걸음이다. 이 연구를 포함하여 5개년에 걸쳐 평화복지체제 구축 방안 도출에 필요한 이론적 탐색과 실천 가능한 정책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평화복지체제라는 이상적 목표에 대해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현 북한의 생활 실태를 격차 관점에서 분석한다. 그리고 향후 남북 간 사회격차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모형 구축을 위한 탐색을 진행한다. 이를 위한 북한 생활 실태에 대한 문헌 연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양적 연구,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정치·군사적 관점에서 벗어나 남북한 사회통합의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현재의 북한 사회를 '격차(gap)'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평화복지체제는 적극적 평화를 추진하여 한반도 남북 모두에서 주민의 삶의질이 개선되는 궁극적인 이상태(理想態)를 의미한다. 분단에 따른 남북 간의 긴장과 대립의 해소 수준의 평화의 정착은 소극적 평화 상태를 의미한다. 우리의 경우는 그동안 소극적 평화 상태를 염두에 두고 분단을 극복하는 노력을 해온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통일된 한반도를 염두에 두고 적극적 평화를 실현하는 분단 극복을 상상해본다면 분단체제의 극복은 남북 간의 사회통합의 문제와 복지의 문제가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복지와 평화와의 관계를 한국의 상황에서 논의할 때 한반도의 분단체제 또는 분단·전쟁 체제는 한국의 복지국가의 발전을 저해하고 억압하는 힘으로 작용하였다고 여러 학자들이 분석하고 있다.

평화복지국가에 관한 담론에서 주목하는 것은 복지국가들이 평화를 전제하고 발전되어 왔지만, 적극적으로 군사적 활동을 줄이거나 군비를 세계적으로 축소하려는 노력은 사실상 회피되어 왔으며, 오히려 “복지국가가 ‘전쟁-복지국가(warfare-welfare state)’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평화복지국가론은 기존의 복지국가에 단순히 평화를 덧붙이지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이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적극적 노력을 지향하는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보다 확실히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전개되었다. 평화복지체제는 이러한 담론들의 긍정적 측면들을 수용하여 복지와 평화의 공진구조, 즉 선순환관계를 구축하고, 한반도 전체 주민을 고려하여 사회경제적 발전을 추구해나가는 체제로 정의할 수 있다.

동독의 사례를 볼 때 통일 이후 사회부조 수급자는 급격히 증가했으며 지금까지도 동서 지역의 빈곤율 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사례를 살펴보면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이 증가함에 따라, 과거 빈곤 감소의 주된 동력이었던 경제성장이 빈곤 퇴치에 발휘하는 효과가 줄어들고 있다. 최근 10년간 이러한 패턴에 변화가 있었지만, 사실상 지난 30년간의 경제성장은 소득 분배의 최하위층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최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유리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가 남북 통합을 추진해갈 때 유의해야 할 지점을 일깨워준다. 단순히 북한 경제의 총량을 성장시키는 지원이나 교류·협력은 사회적 불평등을 방기하여 더 장기적인 한반도 평화복지체제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주민의 생활은 김정은 체제 이후 주민들의 의식주에 대한 당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경공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개선되고 있는 것

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여전히 국제기구들은 북한 식량안보의 취약성이 곧 북한 국내 빈곤층의 생계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영양 상태는 ‘충분히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지 못하여 영양부족의 악순환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주택의 시장 거래 활성화와 같이 북한 내부의 자본주의적 요소 확산은 북한 계층 간 불평등한 소비 양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는 북한 주민 표준생활에 대한 탐색 결과에서도 나타나는데 남한 최저생계비 품목 중 상당한 품목들을 북한 주민들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질적 조사 결과 북한에서 생활에 필요한 상당수의 물품들을 시장에서 구매하고 있으며, 구매력의 차이에 따라 소비 수준의 차이도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김정은 시기 북한 주민의 의식주 실태와 더불어 건강, 유행, 생활환경 영역에 대한 일상생활 전반 실태를 격차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북한 주민의 생활과 일상을 가까이 접하기 어려운 현실의 제약 속에서 국제기구 통계, 국내 정부 부처 및 연구 기관의 통계, 그리고 연구자의 구술인터뷰라는 세 측면의 자료를 취합하고, 통계를 횡단하는 다양한 북한이탈주민의 경험적 구술을 유의미하게 활용하였다.

그 결과 첫째, 북한 주민들의 식생활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국제기구는 북한의 농업생산 현황을 생산량의 증가와 하락을 반복하면서 거시적으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았지만,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국내 정부 부처 및 연구기관의 통계로는 최근 시기 북한 주민의 식생활 개선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식생활 개선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는 하루 세끼의 식사를 한다는 응답 비중인데 긍정적 응답이 약 90%에 근접하고 있다. 식생활 개선의 이유는 김정은 시기 북한의 경제개혁이 한층 심화하고, 농업개혁의 효과도 반영

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시장화 이후 당국이 쌀값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시장을 통한 자유로운 식량 구매 활동이 주민들의 식생활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적어도 지난 1990년대 경제난 시기와 같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기근과 아사에 이르는 경제적 무방비 상태는 더 이상 겪지 않을 만큼 시장을 통해 자구적 생존을 모색하는 방법은 확실하게 경험적 체득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장의 활성화는 주민들의 식생활 수준을 평준화 하였지만 각 가구별 소득 수준에 따른 식생활의 격차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과일·야채·고기 등 부식물 섭취와 외식의 빈도에서 소득수준의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은 큰 격차를 나타냈으며, 비록 소수이지만 값비싼 외식을 즐기고 향유하며 외식문화를 가족의 여가 문화로 즐기는 소비계층도 생겨나고 있는 현실이다. 국경도시로만 한정해서 보면 소득수준이 하위 계층인 가구는 월 소득 200원(인민폐)인 반면 소득수준이 상위 계층인 가구는 월 3천~5천원(인민폐) 내외이다. 중국 동북지역의 중위 소득 계층 수준의 소비생활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북한 주민들의 의생활 영역에서는 의생활이 다양해지고 화려해졌으며, 의복의 원산지도 북한산, 중국산, 한국산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상태이다. 통계에 의하면 의복구입의 횟수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의복구입에 소요하는 생활자금의 크기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북한의 섬유·방직·피복 산업이 시장의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외 위탁가공 형태로 도입되어 북한 내 의류·가공 산업의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대표적인 것이 ‘평성산’이라 불리는 값비싼 의류제품이며, 평성산 의류는 전국적 명성 속에 북한 주민들이 자부심을 갖는 제품군이 되었다.

또한 의생활 영역에서는 패션과 유행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현상이 두

드러지게 나타났다. 제품의 질적 차이를 반영한 다양한 의복 구입이 가능해지면서 ‘치장하기’, ‘구별짓기’ 등의 의미를 갖는 소득수준 상위계층의 과시적 소비문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의복에 맞춘 헤어스타일, 악세세리, 신발, 화장품까지 동반하여 북한 주민들의 소비생활 영역을 활성화시키고 소비수준의 따른 사회적 격차를 가시화하고 있다. 김정은 시기 평양 소재의 현대화 된 백화점들은 지방 장마당과는 질적으로 다른 소비 계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예이다.

셋째, 북한 주민들의 주거생활 영역은 큰 변화는 더디고, 작은 변화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종합할 수 있다. 이때 큰 변화란 주택매매와 보다 나은 생활 터전으로의 이사 빈도 등을 의미하는데, 이와 같은 변화는 매우 점진적 증가세를 나타내 보인다. 실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험이 있거나, 새 아파트에 입주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었다. 반면 주택의 개보수 및 리모델링의 경험은 거의 모두가 갖고 있을 정도로 광범위한 변화로 나타났다. 현재 북한의 주택 자재 및 마감재, 칠감 등의 부자재 시장은 매우 활성화되어 있으며, 자신들의 주거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은 자유롭게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소득수준이 개선된 계층들은 일차적으로 주택의 개보수 및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반면 소득수준이 상위 계층인 사람들은 이사 및 주택 거래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아간다고 판단할 수 있다. 북한에서 지역 간 거처 이동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지역 안에서도 단독 이동(혼자)은 자유로운 반면, 집단 이동(가족)은 복잡하고 필요한 부가 조건이 많기 때문에 주택교환, 주택 개보수 등의 작은 변화가 더 일상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주거생활을 둘러싼 생활환경의 변화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차적으로 북한의 전기 공급상황이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들은 기존 국가공급에 의존하여 절대적으로 부

죽었던 전기소비 상황에서 벗어났으며, 전기를 팔고 사는 시장의 유통체계 속에서 전기를 상업적으로 소비하고 있다. 소소하게는 각 가정에서 태양열 에너지를 통해 자가 소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민간의 전기요금 납부 체계도 병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적으로는 에너지 생산이 큰 증가를 하지 않았어도 각 개인 생활 영역에서는 소득수준의 차이에 따라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와 전기를 많이 쓰지 못하는 가구로의 격차를 나타 내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전력 상황이 개선되면서 주택의 가전제품 및 전자기기 사용의 빈도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대다수 가정에서 TV 정도만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생활에서 벗어나 녹화기, 밥솥, 냉장고, 일반 전화, 컴퓨터의 순으로 생활가전 및 전자제품 보유현황이 증가하고 있다. 가장 큰 증가세는 손전화기(핸드폰)이며, 교통시설의 미발전으로 인해 자전거와 오토바이가 선호하는 구매 제품의 일순위이다.

결론적으로 볼 때 북한 주민들의 생활수준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소비 생활은 질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그러나 거시적 경제 상황 개선과 수평적 소비생활의 확산이 긍정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생활수준은 심각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장화 이후 주민들의 소득 격차는 단순히 물리적 자본의 크기 차이만이 아니라 주거생활, 문화생활, 여가생활, 가족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격차와 분화를 촉진하고 있다.

다만 주민생활의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식량, 주거, 전기, 수도, 가스 등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에서의 구매를 통해 획득되지만,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그것들이 전인민적 소유의 대상이므로 무상으로 배급되거나 매우 싼 값으로 이용 가능하다. “건강, 교육, 보육, 주거, 연료, 공공 시설 이용 등의 사회서비스는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제공”되

므로(민기채, 2017, p. 463), 관련 소비품목들의 실제 소비액은 과소추정될 수밖에 없다.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사적 소유는 소비와 직결된다. 그런데 자본주의 생산양식에서는 사적 소유의 제한이 약하지만, 사회주의 생산양식에서는 사전 소유의 제한이 엄격하다. 결국 사회주의 소비 품목의 총량과 소비 지출의 총합이 자본주의 그것들과 등가 비교하는 것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남과 북의 소비를 등가시켜 비교하는 ‘숫자’에 대한 해석은 주의를 요한다.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 평화복지체제로 나아가는 길

평화복지체제는 한반도에서 즉, 남북 간에 공히 평화복지국가의 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 궁극적 대안을 포함하는 지향이어야 할 것이다. 앞서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논의에서는 정치적 주체의 형성과 연합 정치, 그리고 시민 참여형 평화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풀뿌리 시민사회의 역할 등을 다양하게 검토한 바 있다(조성은, 2018). 평화복지국가에 대한 담론은 내용에 관한 담론과 주체에 관한 담론으로 전개되어 왔다. 평화복지국가라는 이상적인 지향을 공론화하기 위한 담론과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정치적 조건과 주체에 대한 모색이 논의되고 있는 중이다. 평화복지국가가 무엇이며 그 것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우리 사회의 논의는 통일 논의와 복지 논의를 결합 한 담론이다.

정책적으로 주목해야 하는 점은 평화와 복지가 동시에 추구되어야 하지만, 사회적 국면에서 따라서 어느 하나에 좀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곤 한

다. 즉 시기에 따라 평화 윤리와 복지 윤리의 비대칭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조흥식, 장지연, 2014, p. 59). 최근의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관계의 정상화가 진행된다면 반대로 평화 윤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면, 복지를 통한 분배의 확대에는 지금보다 소극적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평화와 복지의 양자를 어떻게 하나로 인식하도록 할 것인지, 또는 평화와 복지의 동시적인 증진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어디로부터 찾을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협력 확대에 따른 한국 사회의 비용 부담이 복지재정확대에 단기적으로 또는 중기적으로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선택의 상황에서 무엇을 준거로 하여 정책적 판단을 할 것인가?

“민족적 특수성에 함몰돼 분단 체제의 규정성에 우선순위를” 두거나 “남북 간 복지를 통한 사회 통합이 무조건적인 통일이라는 명제에 압도” 될 수도 있고, “분단 체제와 민족적 특수성을 간과한 채, 복지에만 우선순위”를 두어 “분단 체제가 복지국가로 가는 발목을 잡아 복지국가 구축의 시기를 앞당길 수 없”는 것이다(조흥식, 장지연, 2014, p. 217).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 수준에서 양자의 정책을 조율하거나 조율할 수 있도록 섬세하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조성은 2018, p. 146)

남북한의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한 평화복지국가의 실현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하여도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남북한 주민 모두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 평화복지국가라면 평화복지체제를 지향하는 우리의 노력에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은 1990년대 식량 위기 이후 상당기간 동안 전 주민의 기본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위기상황을 경험한 바 있다. 북한의 시장화, 계층화의 진행은 앞으로의 개혁·개방과정에서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는데, 적어도 아직까지는 다 같이 잘살지 않는 북한이, 급속

도로 불평등한 사회로 이행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개선, 북한 체제의 개혁·개방이 저절로 평화복지국가로의 길로 이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대비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조성은, 2018, p. 148).

평화복지국가는 한국을 강력한 군사국가에서 강력한 복지국가로 전환하기 위한 기획이라 할 수 있다. 평화복지국가 담론이 아직은 당위의 차원에서 논의이지만, 이 담론이 현실세계에서 지배담론으로 성장하게 된다면 우리가 직면할 생생한 현실이 될 것이다. 평화복지국가의 가치는 “단지 기존의 문제에 대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좋은 사회를 향한 새로운 전망을 포함”하고 있다(홍성태, 2017, pp. 343-344). 지금과는 구조적으로 다른 사회를 지향하여 “안보국가의 종언과 반공주의·분단체제의 극복”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추구한다. 다만 이를 위해 외재적 조건으로서 남북관계의 정상화(평화체제의 구축)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내부로부터 형성될 수밖에 없고 ‘정치’의 대상인 재분배와 연결되는 복지체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복지담론의 이념적 장애물인 반공주의를 내부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그 자리를 복지국가의 지향으로 대체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는 점이 강조된다(김건우, 2018, pp. 25-30).

정리하자면 권위주의적 반공개발 국가를 대신할 대안체제로서 민주주의적 평화복지국가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대안체제로서 평화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한국사회에서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과정과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공진하는 과정이다. 이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켜나가는 과정이 한국사회에서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한국사회에서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평화를 정착시켜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홍성태, 2017).

분단 체제 극복과 평화 체제 구축, 그리고 복지체제의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과정과 주체세력 형성에 대한 논의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반 조건들을 살피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평화체제의 정착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한 과정이며 매우 포괄적이다. 남북관계의 발전, 북핵문제의 해결, 북한체제의 변화 등 다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평화체제는 그래서 포괄적 관계 개선의 자연스러운 반영일 수 밖에 없으며, 한반도 평화체제는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의 진전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김연철, 2013, pp. 247-250).

평화복지국가체제는 복지 분야에서의 개혁이나 변혁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는 것이다. 한국의 평화복지체제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복지국가체제는 평화와 복지의 깊은 관련성에도 불구하고 복지영역에서의 변화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평화복지체제 담론에서 평화복지체제의 개념은 추상적이어서 구체화하기 위한 어떤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평화복지체제에 대한 합의는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다.

- ① 남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관점에서 복지의 문제를 접근하자는 것이다.
- ② 평화복지체제는 평화와 복지가 선후관계가 아닌 선순환관계에 있고 공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③ 분단체제의 극복을 통한 평화복지체제의 구축에서는 남북한의 노력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합의와 동의, 협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평화체제와 복지체제의 유기적 결합을 통하여 평화복지체제가 완성될 수 있다고 볼 때, 일국의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통제하고 변화 가능한 부분은 평화체제의 구축보다는 복지체제의 변화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제인 사회통합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북한의 복지체제와 수준을 진단하는 일은 한반도 평화복지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 평화복지국가체제의 달성은 복지와 평화에 영역별 부문별 연구 성과가 축적 되고, 복지와 평화의 통합적 사고에 기초한 전략으로 접근할 때에 비로소 한반도 평화복지체제 구축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2. 북한 주민 생활의 문제

현시기 북한을 체제 이행 중인 사회주의 국가로 보았을 때 사회격차의 주요한 원인은 북한 주민의 생산 활동 즉, 직업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했지만 북한 주민들의 소득과 직업, 생산 활동에 대한 북한 당국의 제도적·신분적 제약은 여전히 강고하다. 북한 당국은 한정된 부와 자원을 소수의 독점적 권력층에게 배분하고 있으며, 북한의 시장 상황은 권력과 자본의 결합 크기에 따라 자본의 증식 속도가 배가되는 이행기 상황에 놓여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경제난으로 은폐된 실업을 시장 활동의 허용으로 대체하고 있다. 반면 다수의 일반 북한 주민들은 시장 활동의 자유는 허용하지만 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지 않다. 농장원이 도시민이 될 수 없는 장벽이 존재하고, 도시 부문에서도 노동자가 사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의 창은 열리고 있지 않다. 무엇보다 대외무역 기관에 종사하거나 국가 기관 기업소에 종사함으로써 ‘정치 자본’을 획득할 수 있는 경로는 매우 제한적이다. 정치적 위계가 존재하고 사회적 신분질서가 온존하는 가운데 경제적 부의 획득은 한계가 존재할 수 없다. 설혹 좋은 기회요인을 획득하여 경제적 부를 창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의 성장과 발전에는 장애가 형성되어 있다. 소위 ‘평민 출신 돈주’들이 일시에 일거의 자산몰수를 당하는 사례들이 이를 반증한다.

여기에 북한 김정은 체제의 대내외적 여건은 양호하지 않다. 북한은 핵 보유 선언 이후 촘촘히 가해지고 있는 대북경제제재를 짊어지고 있다. 북한 내 다수의 상공인들이 경제활동을 할 기회를 제한 당하고 있는 반면 소수의 독점적 권력층에게는 오히려 경제적 기회가 한정적으로 제공된다. 2020년 전 세계적으로 난관을 조성하고 있는 COVID-19 방역 상황 또한 북한의 경제적 생산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종합해 보면 현 시기 북한의 대외환경은 개선되어야 하며, 대외환경 개선을 통한 북한 내 기업 생산 활동의 기회가 더 많이 보장되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의 생계수단이 장사활동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업 생산활동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다양하고 창의적인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촉진되어야 할 것이다. 시장화 시기를 거치면서 북한 주민들은 그들의 생산적 양양과 기업가 정신이 매우 고양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향후 남북한의 협력관계 구축은 북한 주민생활 실태 개선뿐 아니라 사회격차 해소에 가장 큰 동력이 될 것이다.

이러한 북한주민 생활문제에 우리는 어떠한 정책적 대응이 요청될 것인가?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주의 하에서 양산되고 있는 소득격차 및 지출격차가 북한에서도 개략적이거나 확인되고 있기에, 소비소의 가구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요청된다. 소비패턴이 다양하지 못하고, 특정 식품을 경험해보지 못한 소비소의 가구가 확인되었다. 또한 전반적으로 가구소득 및 가구지출의 평균값보다 중위값이 낮게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 내에서도 불평등이 일정 수준 목도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소수의 특정 가구는 외식이 잦고, 남한으로 먼저 간 친척으로부터 거액의 송금을 받으며, 문화

향유 수준도 높고, 비싼 주택을 소유하는 등 높은 생활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양강도 출신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북한이탈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평양을 고려할 때, 그 격차는 보다 확대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도 자본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도 장기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고난의 행군 시기와는 질적으로 생활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에 대해 요청하는 기대가 달라졌으며, 탈북의 원인 등 남쪽에 대한 심리와 태도도 달라지게 하는 요인이다. 1인당 식품 지출총액을 볼 때, 채소 및 과일(1만 2천원, 이하 남한 원) > 육류·낙농품·어개류(9천500원) > 조미식품·빵·차·주류·외식(7천 4백원) > 곡류 및 식빵(6천 9백원) 순이다. 북한은 현재 강냉이나 죽으로 생계를 연명했던 시대가 아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와는 질적으로 다른 식생활을 하고 있다. 반면 의식주 지출 비율은 높고, 교육비와 보건의료비 지출은 낮은 저개발국가의 형태 역시 보여준다. 가구 월 생계비 중 식료품 지출 비율이 58.3%로 절반을 상회하고 있다. 다음으로 피복·신발비가 9.9%로 높고, 주거비와 광열·수도비의 합이 8.4% 순이었다. 생활필수품인 의식주 지출의 합이 76.6%로 3/4이나 차지하고 있다. 가장 적게 지출한 부문은 교육비 1.7%였고, 보건의료비 2.0%, 교통·통신비 2.5% 순이었다. 이러한 지출 양상은 서비스형 복지가 강한 사회주의 복지체제의 특성을 반영해주는 측면과 동시에 북한의 경제발전 수준이 낮다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 문제나 북한 주민의 남측에 대한 심리·정서 등을 추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대북정책에서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에 따른 소비 품목의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예를 들어, 난방을 위하여 양강도 지역은 나무, 함경북도는 갈탄, 함경남도, 평안남도 평양은 무연탄을 사용하여 난방을 하고 있다. 겨울철 난방비에 대한 지출은 지역에 따른 사용 재료와 방식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북한 내 생활 격차를 보여주는 한 예로 북한 체제 전반의 위기나 몰락이 아니라 특정 지역 내 주민의 불만 폭증, 북한 당국과의 마찰 등 지역적 갈등도 염두에 둔 대북 정책이 설계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불법은 아니지만 비법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지출되는 소비 품목, 비공식적인 소득원천이 확인된 바 이러한 소득-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북한의 특수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소비에 있어서는 광열·수도의 경우, 전기에서는 불법 전기 비용, 태양광판, 배터리 지출비용, 난방에서는 나무 구입비용, 수도에서는 직접 펌프로 길어다 쓸 때의 지출이 있다. 교통·통신비의 경우, 교통에서는 타 시·도·군 이동을 위한 비법적 개인 버스 또는 기차 요금 지출, 통신에서는 인터넷 연결의 제한으로 공식적 통신비용이 지출되지 않지만, 비공식적 통신비 지출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교양·오락비의 경우, 노트텔과 DVD 플레이어를 통해 시청하는 CD, USB 매체 등도 비공식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소득원천 측면에서 볼 때, 남한과는 다른 사업소득, 송금 등의 소득원천이 있다. 공식경제에서 받는 임금은 시장가치가 너무 낮아 큰 의미가 없는데, 어떻게 북한 주민들은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지 의문을 가져왔던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에서는 비공식경제에서 생계비를 충당해가고 있다고 진단하여 왔다. 본 연구도 동일한 관점 하에서, 비공식경제를 통한 소득원천을 일부 확인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소토지 등을 활용한 비공식적 부업소득과 장마당 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소득은 남한의 경우, 노동자가 근로소득 이외에 벌어들이는 사업소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비공식적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또한 북한 주민 중 일부이며, 북한이탈주민들에

해당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송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37가구 중 11가구가 송금을 받았다고 하였다. 부정기적이지만 그 액수는 전체 자산에서 상당한 비중이다. 북한에서의 송금은 남한과는 다른 독특한 소득 원천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다섯째, 비공식경제의 비대함(informal economy heavy)과 공식경제의 왜소함(formal economy light)을 재확인한 바 이제 북한을 사회주의 공급체제에 의존한 사회가 아니라 일정부분 시장화된 이중 경제 사회로 파악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은 공식적인 계획경제를 통한 소득보다는 장마당을 통한 비공식 경제를 통해 소득을 얻는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득 원천 총액을 기준으로 비율을 보았을 때, 장사가 75.76%로 가장 높고, 송금 17.65%, 직장 5.03%, 부업 1.55%, 수급 0.01%였다. 장사 > 송금 > 직장 > 부업 > 수급(년로보장비)의 순이었다. 직장으로부터 소득을 얻은 가구가 22가구나 되었지만, 실제 비중은 5%에 불과하였다. 전체 주민에 해당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북한이탈주민 대다수는 직장을 통해 번 수입은 극히 적고, 장사나 부업을 통해서 소득을 마련하고 있다. 비공식경제의 비중이 더 커질 경우, 비공식경제를 활용할 능력이 없는 개인들은 점점 더 소비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어, 표준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결국 남북 간 사회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북한의 공식 경제가 약해지고 비공식 경제가 커지고 있다는, 즉 '시장이 계획을 구축'해가는 상황에 대한 사회정책적 대응이 요청됨을 재확인 할 수 있다.



- 구갑우. (2012). 복지국가는 평화국가와 함께 가야 한다. 월간 복지동향, 162, 16-22.
- 권태진. (2018). 북한의 농업부문 시장화 실태와 전망, **시선 집중 GSNJ**, 제249호, 1-14.
- 김건우. (2018.7). 반공주의 이후의 평화복지국가 기획의 과제. **월간 복지동향** 통권237호, 25-30.
- 김경동. (1984). **경제성장과 사회변동**. 서울: 한울.
- 김광명. (2020. 6. 14.). 단정하면서도 소박하게, **로동신문**.
- 김동춘. (2013). 분단·전쟁체제에서 복지국가는 가능한가. **평화복지국가: 분단과 전쟁을 넘어 새로운 복지국가를 상상하다**(pp.29-52). 서울: 이매진, 29-52.
- 김미곤, 여유진, 이상은, 정재훈, 김계연, 양시현, ... 임미진. (2009). **최저생계비 계층방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원.
- 김상균. (1987). **현대사회와 사회정책**.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승재. (2020). **세계의 옷공장, 북한**. 서울: 늘봄플러스.
- 김연철. (2013). 군축의 전환비용과 평화국가 만들기. **평화복지국가: 분단과 전쟁을 넘어 새로운 복지국가를 상상하다**(pp.247-250). 서울: 이매진,
- 김영순. (2013). 복지국가와 평화국가. **평화복지국가: 분단과 전쟁을 넘어 새로운 복지국가를 상상하다**(pp.251-253). 서울: 이매진.
- 김영훈. (2020a). 2020년 북한의 식량공급 전망, **KREI 북한농업동향**, 21(4), 14-17.
- 김영훈. (2020b). 코로나 19와 북한의 식량·농업, **KREI 북한농업동향**, 22(1), 3-15.
- 김정은. (2013.3.18.). 김정은 동지께서 전국경공업대회에서 하신 연설,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2015.1.1.). 신년사. **로동신문**.
- 김지영. (2013.12.25.).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 현장레포트(하) 농민들의 의식개

조와 증산의 실현. **조선신보**.

김철웅. (2020.1.12.). 지적소유권 대상으로서 상표의 기능, **로동신문**.

김태성, 성경룡. (2014). **복지국가론**. 파주: 나남.

김태완, 김문길, 여유진, 김미곤, 김현경, 임완섭, ... 최민정. (2017).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용환. (2016). 한반도에서 독일식 사회보장제도 통합은 가능한가: 통일 환경과 정책선택의 검토. **보건사회연구**, 36(2), 5-32.

다치바나키 도시아키. (2013). **격차사회 : 격차사회,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풀 것인가**. (남기훈 역). 서울: 세움과 비움.

데일리NK. (2020a), “강미진의 북한시장 동향”,

<https://www.dailynk.com/category/> ‘지금-북한은’에서 2020년 10월 1일 검색하여 인출.

데일리NK. (2020b). 북한의 쌀값 추이, <http://www.dailynk.com/> ‘北장마당-동향’에서 2020.5.1. 인출.

데일리NK. (2020c). 북한시장 동향.

<https://www.dailynk.com/%E5%8C%97%EC%9E%A5%EB%A7%88%EB%8B%B9-%EB%8F%99%ED%96%A5/>에서 2020.8.31. 인출.

리기성. (2017).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경제개발**. 조선출판물수출입사

문성휘. (2014.4.1.). 북 ‘분조관리제’ 논란 끊이지 않아. **자유아시아방송**,

http://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nkfarm-04012014095200.html에서 2020.9.30. 인출

문성휘. (2015.3.25.). 북, 농업부문에 ‘포전순환제’ 도입. **자유아시아방송**,

https://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agriculture-03252015095109.html에서 2020.9.30. 인출

민기채. (2017). 북한 사회주의 복지체제와 기본소득의 제도적 친화성에 관한 연구. **입법과 정책**, 9(3), 455-480.

민기채. (2019). 반(半)국적 관점을 넘어 전국적 관점에서의 한반도 평화복지체제를 위한 필요조건 탐색. **비판사회정책**, 62, 93-129.

- 민기채, 조성은, 한경훈, 김아람. (2017). **북한 노후소득보장 제도 및 실태 연구**. 전주: 국민연금연구원.
- 박지환. (2017.7.19.). 文 “대북 인도주의적 대화는 우리가 주도”.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4818021>에서 2020.11.22. 인출.
- 박희진. (2018a). 평양시 현대화: 개혁과 통치의 조응, 이화여대 북한연구회 엮음. **김정은 체제: 변한 것과 변하지 않는 것**(pp. 9-47). 파주: 한올아카데미.
- 박희진. (2018b). 북한의 시장화와 도시공간의 변화 연구: 공적-사적공간과의 관계, **북한학연구**. 14(2). 67-100.
- 박희진. (2020a). 북한 국가건설담론과 ‘내 집 꾸미기’ 현상의 혼성성 연구, **도시인문학연구**. 20(1). 151~184.
- 박희진. (2020b). 북한 도시-농촌의 연결공간과 파생되는 계층들, **문화와 정치**. 7(3). 211-241.
- 본사기자. (2019). 지방특산음식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문제. **조선여성** 2019년 8호.
- 사회과학출판사. (1973). **정치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서사가. (2018). 북한 여성 소비문화의 변화.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동아시아학과. 서울).
- 소성규, 박희진, 장인숙, 정병화, 정은미. (2017). **통일 대비 복지욕구 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신희영, 이해원, 안경수, 최소영, 박샘나, 전유선, 정희인, 강효림. (2019). **북한 보건의료 백서(개정판)**.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 심철룡. (2019). 현시기 농장책임관리제의 경제적 공간리용의 특성. **경제연구** 2019년 4호.
- 아시아프레스. (2020). 북한시장최신물가정보, <https://www.asiapress.org/korean/nk-korea-prices/>에서 2020. 10. 1. 인출.
- 양문수. (2017). 김정은 집권 이후 개정 법령을 통해 본 ‘우리식경제관리방법’,

통일정책연구, 26(2), 81-115.

- 우승명. (2019). 독일 통일과 사회정책의 변화: 공공부조제도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과학논총**, 29(1), 3-34.
- 유범상. (2014). 인천연대로 보는 평화복지국가의 실천 현장. **평화와 복지, 경계를 넘어: 평화복지국가의 정치적 조건과 주제를 찾아**(pp.279-313). 서울: 이매진.
- 윤소윤, 짱칭위, 조서호, 윤지현. (2016). 북한주민의 식생활 실태: 2010년 이후 탈북한 북한이탈여성 면접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식생활학회 2016년도 춘계연합학술대회 학술대회논문집**. 169.
- 윤홍식 편. (2013). **평화복지국가: 분단과 전쟁을 넘어 새로운 복지국가를 상상하다**. 서울: 이매진.
- 윤홍식. (2013). 한국 복지국가 주체형성에 대한 분단체제의 규정성: 문제제기를 위한 탐색. **사회복지정책**. 40(3), 299-320.
- 윤홍식. (2015). 반공개발국가를 넘어 평화복지국가로: 역사와 전망. **시민과 세계**. 27. 57-106.
- 윤홍식. (2016). 한국복지국가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바라보기: 반공개발국가에서 평화복지국가로. **안보개발국가를 넘어 평화복지국가로: 독일의 경험과 한국의 과제**(pp. 91-143).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91-143.
- 이남주. (2014). 연합 정치-평화복지국가를 실현할 정치 전략. **평화와 복지, 경계를 넘어: 평화복지국가의 정치적 조건과 주제를 찾아**(pp. 166-187). 서울: 이매진.
- 이병천, 윤홍식, 구갑우 편. (2016). **안보개발국가를 넘어 평화복지국가로: 독일의 경험과 한국의 과제**. 서울: 사회평론.
- 이승철. (2013). 새로운 평화 복지 동맹의 건설을 위해. **평화복지국가: 분단과 전쟁을 넘어 새로운 복지국가를 상상하다**(pp. 264-269). 서울: 이매진.
- 이유진. (2015). 김정은 체제의 농축산업 어찌 돌아가고 있다, **시선 집중 GSNJ**. 제207호, 1-14.
- 이정우. (2011).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복지국가의 역할. **경상논총**, 29(3), 51-78.

- 이정주. (1991). 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의 유행, **혜전전문대학논문집**, 265-283.
- 이종운. (2017). **북·중 의류 생산네트워크의 형성과 구조적 특성: 대북 위탁가공 거래를 중심으로**, 한국연구재단.
- 이철수, 우해봉, 조성은, 송철중, 정해식, 고혜진, ... 최요한. (2017). **통일 이후 북한 지역 사회보장제도: 통합기 단일체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임동우, 라파엘 루나 편. (2014). **북한 도시 읽기**. 서울: 담다.
- 장원재. (2019.11.). 장원재의 북한요지경: '마약의 나라' 북한 -주민의 30%가 마약 상복, **월간조선**.
<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H&nNewsNumb=201911100048>에서 2020.10.1. 인출
- 정창현. (2014.2.10.). 김정은시대 북한읽기: 김정은 제1위원장의 서한에 나타난 북한 농업정책의 계승과 변화. **통일뉴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980>에서 2000.9.30. 인출.
- 조선가족계획 및 모성유아건강협회. (2019). **2018년 연간보고(Annual Report)**, IPPF East & South East Asia and Oceania Region. 조선판.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살림집법. (2014.7.23.). 살림집법,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https://www.unilaw.go.kr/bbs/selectBoardArticle.do>에서 2020. 9. 30. 인출.
- 조성은. (2018). 평화와 복지, 새로운 미래를 향한 원대한 비전.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4(1). 139-151.
- 조흥식, 장지연 편. (2014). **평화와 복지, 경계를 넘어: 평화복지국가의 정치적 조건과 주제를 찾아**. 서울: 이매진.
- 조흥식. (2014). 평화와 복지의 탈경계 - 풀뿌리 지역사회에서 시작하다. **평화와 복지, 경계를 넘어: 평화복지국가의 정치적 조건과 주제를 찾아**(pp. 214-240). 서울: 이매진.
- 천경효, 강채연, 박상민, 이혜원, 정은미, 임경훈, 조용신. (2020). **북한사회변동**

2019: 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 보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천경효, 김일한, 조성은, 최경희, 임경훈, 조용신. (2019). **북한사회변동 2018:**

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 사회보장.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최상희, 최대식, 이종권, 홍성원. (2015). **북한주택 현황조사·분석.** 대전: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최은경, 조미숙. (2019). 「조선여성」을 통해 본 북한의 식생활 연구-1999~2017년 식생활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34(3), 255-267.

최현숙. (2016). 김정은 체제에서의 북한 의생활 변화 연구,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stume**, 66(6), 122-134.

통계청. (2020). **2020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대전: 통계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19). **2019년 한국노동 표준생계비.** 서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홍성태. (2017). 평화복지국가를 위하여. **경제와 사회**, 114, 339-345.

홍제환, 김석진, 정은미. (2018). **북한 민생 실태 및 협력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Acosta, P. & Velarde, R. (2015). Sa Pantawid, Malapit nang Makatawid (With Pantawid we are closer to getting out of poverty!): An Update on the Philippine Conditional Cash Transfer's Implementation Performance.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Series 104164*, The World Bank. Retrieved from <http://documents1.worldbank.org/curated/en/322971468178773885/pdf/104164-BRI-P082144-P150519-SP-Policy-note-No-8-PUBLIC.pdf>에서 2020. 8. 19. 인출.

ADB(Asian Development Bank). (2014). *Key indicators for Asia and the Pacific 2014*. Tokyo: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Albert, J.R., Dumagan, J., & Martinez, A. (2015). *Inequalities in Income, Labor, and Education: The Challenge of Inclusive Growth*. PIDS Discussion Paper Series No. 2015-01. Retrieved from

- <https://dirp4.pids.gov.ph/webportal/CDN/PUBLICATIONS/pidsdps1501.pdf>에서 2020. 8. 19. 인출.
- Asian Development Bank. (2009). *Poverty in the Philippines: causes, constraints, and opportunities*. Mandaluyong City: Asian Development Bank. Retrieved from <https://www.adb.org/sites/default/files/publication/27529/pove-rtty-philippines-causes-constraints-opportunities.pdf>에서 2020. 6. 15. 인출.
- Balisacan, A. (2007). *Why Does Poverty Persist in the Philippines? Facts, Fancies, and Policies. Agriculture and Development Discussion Paper Series 2007-1*. Southeast Asian Regional Center for Graduate Study and Research in Agriculture. Retrieved from <http://www.searca.org/knowledge-resources/1603-pre-downlo ad?pid=212>에서 2020. 8. 1. 인출.
- Balisacan, A., & Piza, S. (2008). Nature and Causes of Income Inequality in The Philippines. Chapter in Ragayah, H. M. Z. & Krongkaew, M. eds., *Income Distribu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East Asia: A Comparative Analysis* (pp.201-204). Bangi: Penerbit Universiti Kebangsaan.
- Booth, A. (1999). Initial conditions and miraculous growth: Why is South East Asia different from Taiwan and South Korea?. *World Development*, 27(2). 301-321.
- Bulmahn, T. (2000). Vereint auf dem Weg in die gute Gesellschaft. In H. Noll & R. Habich (Eds.), *Vom Zusammenwachsen einer Gesellschaft: Analysen zur Angleichung der Lebensverhältnisse in Deutschland* (pp. 249-269). Frankfurt/New York: Campus Verlag.
- Bundeskabinnett. (2017). *Lebenslagen in Deutschland - Der Funfte Armuts- und Reichtumsbericht der Bundesregierung*.

- <https://www.armuts-und-reichtumsbericht.de/DE/Bericht/Archiv/Der-fuenfte-Bericht/fuenfter-bericht.html>에서 2020. 10. 19. 인출.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2020.05.12). Vor 30 Jahren: Fonds "Deutsche Einheit".
- <https://www.bpb.de/politik/hintergrund-aktuell/309740/fonds-deutsche-einheit>에서 2020. 11. 01. 인출.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2020.08.18). Arbeitslose und Arbeitslosenquote.
- <https://www.bpb.de/nachschlagen/zahlen-und-fakten/soziale-situation-in-deutschland/61718/arbeitslose-und-arbeitslosenquote>에서 2020. 10. 19. 인출.
- Chandy, L. & Seidel, B. (2017). How much do we really know about inequality within countries around the world? Adjusting Gini coefficients for missing top incomes. Brookings Op-ed. Retrieved from <https://www.brookings.edu/opinions/how-much-do-we-really-know-about-inequality-within-countries-around-the-world/>에서 2020.5.15. 인출.
- Chen, S., and M. Ravallion (2001) How did the world's poor fare in the 1990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47(3). 283-300.
- Choe, Yong Nam. (2020. 7. 26.). Tailor shop flourishes with seasonal fashions, *The Pyongyang Times*,
- Citro, C., and R, Michael (eds.) (1995) *Measuring Poverty: A New Approach*.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2009). *DPR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National Report*. Pyongyang DPR Korea.
- Ducanes, G. & Balisacan, A. (2019). Reducing Inequality in the Philippines. Chapter in *Getting Even: Public Policies to Tackle*

- Inequality in Asia* edited by M. Talpur. Bloomsbury India
- Ducanes, G. & Ocampo, D. (2019). The Impact of Basic Education Reform on the Educational Participation of 16 to 17-year-old Youth in the Philippines. *The Philippine Statistician*, 68(2), 111-130.
- Ducanes, G. & Tan. E. (2020). Urgent Need to Address Massive Drop-off in K-12 Enrolment. *Ateneo de Manila University Department of Economics Policy Brief*. No. 2020-22.
<http://ateneo.edu/sites/default/files/downloadable-files/Policy%20Brief%202020-22.pdf>에서 2020.5.1. 인출.
- Ducanes, G., Balisacan, A., & Ramos, V.J. (2020). Market Concentration and Household Inequality: exploring the link in the case of the Philippines. Unpublished manuscript.
- Ducanes. G. (2020). A Closer Look at the Impact of COVID-19 and the Lockdown on Employment and Poverty. *Ateneo de Manila University Department of Economics Policy Brief* No. 2020-20.
<http://ateneo.edu/sites/default/files/downloadable-files/Policy%20Brief%202020-20.pdf>에서 2020.5.1.인출.
- Fabella, R. & Ducanes, G. (2020). Poverty Reduction, the Ranis-Fei Model, and Industry Shares in Employment. Unpublished Manuscript
- FAO/WFP. (2019). *Joint Rapid Food Security Assessment-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ttp://www.fao.org/documents/card/en/c/ca4447en> 에서 2019. 11. 2. 인출
- Frerich, J. & Frey, M. (1996). *Handbuch der Geschichte der Sozialpolitik in Deutschland. Band 2: Sozialpolitik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Oldenbourg: De Gruyter.
- Galtung, Johan. (2000).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이재봉, 강종일, 임성호, 김승채, 정대화 역. 원제 Peace by Peaceful Means). 서울: 들녘.

- Geißler, R. (2013). *Die Sozialstruktur Deutschlands: Die gesellschaftliche Entwicklung vor und nach der Vereinigung*. Wiesbaden: Springer-Verlag.
- Global Hunger Index (GHI). (2019). North Korea.
www.globalhungerindex.org/north-korea.html에서 2019. 12.1. 인출.
- Global Hunger Index (GHI). (2020). North Korea.
www.globalhungerindex.org/north-korea.html에서 2021. 2.15. 인출.
- Goebel, J., Habich, R., & Krause, P. (2009). Zur Angleichung von Einkommen und Lebensqualität im vereinigten Deutschland, *Vierteljahrshefte zur Wirtschaftsforschung*, 78(2), 122-145.
- Haupt, H. (1998). Umbruchsarmut in den neuen Bundesländern?. In R. Lutz & M. Zeng (Eds.), *Armutsforschung und Sozialberichterstattung in den neuen Bundesländern* (pp. 48-67). Wiesbaden: Springer Fachmedien Wiesbaden GmbH.
- Hauser, R. & Becker, I. (2000). Der Einfluss des Steuer- und Transfersystems auf die Einkommensverteilung in den neuen und alten Bundesländern. In H. Noll & R. Habich (Eds.), *Vom Zusammenwachsen einer Gesellschaft* (pp. 63-82). Frankfurt: Campus Verlag.
- Jitsuchon, Somchai, Jiraporn Plangpraphan, and Nanak Kakwani. (2006). Thailand's New Official Poverty Line. Prepared for the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oard and the United National Development Programme.
- Kakwani, Nanak and Medhi Krongkaew. (1998). *Poverty in Thailand: Defining, Measuring and Analyzing*, Working Paper No. 4, Asian Development Bank and Development Evaluation Division and NESDB.
- Kanbur, R., Rhee, C. and Zhuang J. (2014) *Inequality in Asia and the*

- Pacific: Trends, Drivers, and Policy Implication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and Asian Development Bank.
- Klasen, S. (2016). *An Asian Poverty Line? Issues and Options*. ADBI Working Paper 609. Tokyo: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Available: <https://www.adb.org/publications/asian-poverty-line-issues-and-options>에서 2020.8.1. 인출.
- Krause, P. (1994). *Armut im Wohlstand: Betroffenheit und Folgen* (DIW Discussion Papers, No. 88). Berlin: Deutsches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DIW).
- Larano, C. (2013.12.9.). Philippine Poverty Rate Improves Little Despite Economic Growth. *The Wall Street Journal*. <https://www.wsj.com/articles/BL-SEAB-3169>에서 2020.8.15. 인출.
- Leutwein, A. (1954). Die sozialen Leistungen in der sowjetischen Besatzungszone (Bonner Berichte aus Mittel- und Ostdeutschland). Bundesministerium für Gesamtdt.
- Mangahas, M.A. and Ducanes, G. (2020). COVID-19 and Filipino Migrant Workers: Issues and Policies. Ateneo de Manila Department of Economics Policy Brief No. 2020-21. Retrieved from <http://ateneo.edu/sites/default/files/downloadable-files/Policy%20Brief%202020-21.pdf>에서 2020.10.20. 인출
- Manz, G. (1992). Armut in der "DDR"-Bevölkerung: Lebensstandard und Konsumtionsniveau vor und nach der Wende. Maro-Verlag.
- McDoom, O. S., Reyes, C., Mina, C., & Asis, R. (2018). Inequality Between Whom? Patterns, Trends, and Implications of Horizontal Inequality in the Philippin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https://doi.org/10.1007/s11205-018-1867-6>에서 2020.10.20. 인출.

- Meesook, Oey Astra. (1979). Income, Consumption and Poverty in Thailand, 1962/63 to 1975/76. *World Bank Staff Working Paper* No. 364. November 1979.
-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uncil(NESDC). (2020) Report on Poverty and Inequality Situation in Thailand (in Thai).
- National Statistical Coordination Board. (2000). Philippine Poverty Statistics.
<https://psa.gov.ph/sites/default/files/1997%20Philippine%20Poverty%20Statistics.pdf>에서 2020.8.10. 인출.
- Newsbytes.ph. (2020.5.13.). BPO sector reports \$26.3-B revenues, 71,000 new workers in 2019. Newsbytes.ph.
<https://newsbytes.ph/2020/05/13/bpo-sector-reports-26-3-b-r-evenues-71000-new-workers-in-2019/>에서 2020.8.3. 인출.
- Olk, T. & Pabst, S. (1996). Die Wohlfahrtsverbände. In Niedermayer. (Ed.), *Intermediäre Strukturen in Ostdeutschland* (pp. 357-378). Opladen: Leske und Budrich.
- 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PSA). (2018a). Filipino Families Are Most Deprived in Education.
<https://psa.gov.ph/content/filipino-families-are-most-deprived-education-0>에서 2020.5.10.인출.
- 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PSA).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2015, 2018b).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s Survey. [data files and codebooks, Files obtained from the 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 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PSA), (2016). Updated Annual Per Capita Poverty Threshold, Poverty Incidence and Magnitude of Poor Families, by Region and Province - 2005, 2009, 2012 and 2015. [data files].

- <https://psa.gov.ph/sites/default/files/Table%201.%20%20Annual%20Per%20Capita%20Poverty%20Threshold%2C%20Poverty%20Incidence%20and%20Magnitude%20of%20Poor%20Families%2C%20by%20Region%20and%20Province%20%20-%202006%2C%202009%2C%202012%20and%202015.xlsx>에서 2020.5.1. 자료 인출.
- 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PSA). (2017). Merged 2015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s Survey and Labor Force Survey. [data files and codebooks]. Files obtained from the 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 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PSA). (2019). *Technical Notes on the Estimation of the 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 (MPI) based on the Initial Methodology*.
- 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PSA). (2020a), *Annual National Accounts 1998-2019*.
- 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PSA). (2020b). *Updated Annual Per Capita Poverty Threshold, Poverty Incidence and Magnitude of Poor Families with Measures of Precision*.
- 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PSA). (2020c). *Farmers, Fisherfolks, Individuals Residing in Rural Areas and Children Posted the Highest Poverty Incidences among the Basic Sectors in 2018*.
- 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PSA). (n.d.). Official Poverty Statistics of the Philippines Pagtukoy sa mga mahihirap sa Pilipinas. <https://psa.gov.ph/sites/default/files/FAQ%20on%20Poverty%20Statistics%20Methodology%20-%20Filipino.pdf>에서 2020.8.1. 인출.
- Pieper, J. Schneider U., Schroeder W. & Stilling G. (2019). *30 Jahre Mauerfall Ein viergeteiltes Deutschland: Der Paritatische Armutsbericht 2019*. Berlin: Der Paritatische Gesamtverband.
- Pollack, D., Pickel, G. & Jacobs, J. (1998). Wächst zusammen, was zusammengehört? - Subjektive und objektive Komponenten sozialer

- Ungleichheit in Ost- und Westdeutschland. In R. Lutz & M. Zeng (Eds.), *Armutsforschung und Sozialberichterstattung in den neuen Bundesländern* (pp. 9-29). Wiesbaden: Springer Fachmedien Wiesbaden GmbH.
- Pradhan, M., Suryahadi, A., Sumarto, S. & L. Prichett. (2000). Measurements of poverty in Indonesia: 1996, 1999, and beyond.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2438*. The World Bank East Asia and Pacific Region.
- Priller, E. (1994). Armut in den neuen Bundesländern?. In H. Berger & R. Habich (Eds.), *Lebenslagen im Umbruch: zur sozialen Lage privater Haushalte in der osteuropäischen Transformation* (pp. 102-111). Berlin: Wissenschaftszentrum Berlin für Sozialforschung (WZB),
- Ravallion, M. (1994). *Poverty Comparisons, Fundamentals of Pure and Applied Economics*. Switzerland: Harwood Academic Publishers.
- Ravallion, M. (2016). *The Economics of Poverty: History, measurement and Polic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Ravallion, M., G. Datt, and D. van de Walle. (1991). Quantifying Absolute Poverty in the Developing World. *Review of Income and Wealth*. 37(4):345-61.
- Ravallion, M., S. Chen, and P. Sangraula. (2009.) Dollar a Day Revisited. *World Bank Economic Review*. 23(2): 163-184
- Ritter, G. A. (2007). *Der Preis der deutschen Einheit: die Wiedervereinigung und die Krise des Sozialstaats*. München: Verlag CH Beck.
- Ritter, G. A. (2013). The Politics of German Unification. Social, Economic, Financial, Constitutional and International Issues. In M. G. Schmidt & G. A. Ritter (Eds.), *The Rise and Fall of a Socialist Welfare State* (pp. 167-287). Berlin, Heidelberg: Springer.

- Rokkan, S. (1975). Dimensions of state formation and nation building: a possible paradigm for research on variations within Europe, In C. Tilly(ed). *The formation of national states in western Europ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hmidt, M. G. (1999). *Grundzüge der Sozialpolitik in der DDR. (ZeS-Arbeitspapier, 18/99)*. Bremen: Universität Bremen, Zentrum für Sozialpolitik.
- Sen, A. (1983). Poor, relatively speaking. *Oxford Economic Papers*. 35(2): 153-169.
- Son, H. (2008). *Has Inflation Hurt the Poor? Regional Analysis in the Philippines*. ERD Working Paper No 112. Mandaluyong City: Asian Development Bank. Retrieved from <http://hdl.handle.net/11540/1769>
- Sproles, G. B. (1981). Analyzing Fashion Life Cycle: Principles and Perspectives, *Journal of Marketing*, 45(4). 116-124.
- Statistisches Bundesamt(DESTATIS) & Wissenschaftszentrum Berlin für Sozialforschung(WZB). (2018). Datenreport 2018. Ein Sozialbericht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 Statistisches Bundesamt(DESTATIS). (n.d.a). Empfänger von Hilfe zum Lebensunterhalt: Bundesländer, Stichtag, Ort der Leistungserbringung, Geschlecht, Altersgruppen. <https://www-genesis.destatis.de/genesis/online>에서 2020. 10. 19. 인출.
- Statistisches Bundesamt(DESTATIS). (n.d.b). Bevölkerung: Bundesländer, Stichtag, Geschlecht. <https://www-genesis.destatis.de/genesis/online>에서 2020. 10. 19. 인출.

- Statistisches Bundesamt(DESTATIS). (n.d.c). Bruttoausgaben, Einnahmen, Nettoausgaben der Sozialhilfe: Früheres Bundesgebiet / Neue Länder, Jahre, Sozialhilfearten.
<https://www-genesis.destatis.de/genesis//online?operation=table&code=22111-0012&bypass=true&levelindex=1&levelid=1603108240986#abreadcrumb>에서 2020. 10. 19. 인출.
- Struck, O. (2017). *Aufschwung und Unzufriedenheit. Strukturwandel und Lebenssituation in Ostdeutschland* (Working paper No. 19). Universität Bamberg. doi: 10.20378/irbo-50703
- Tuaño, P. & Cruz, J. (2019). Structural Inequality in the Philippines: Oligarchy, (Im)mobility and Economic Transformation. *Journal of Southeast Asian Economies*, 36(3), 304-328.
doi:10.2307/26842378
- Ulrich, B., Herbert, S. B., Huber G., Jutta G., Gerhard H., Cornelia L., ... Uulz S. (2010). *Ostdeutschlands Transformation seit 1990 im Spiegel wirtschaftlicher und sozialer Indikatoren. 2. aktualisierte und verbesserte Auflage* (IWH-Sonderheft, No. 1/2009). Halle (Saale): Leibniz-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Halle (IWH).
- UN OCHA. (2019). *DPR Korea Needs and Priorities 2019.3*.
<https://www.unocha.org/story/dprk-beyond-numbers-human-cost-our-inability-respond-unmeasurable>에서 2020.9.30 인출
- UNFPA, DPRK. (2015).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ocio-Economic Demographic Health Survey 2014*.
<https://www.undp.org/content/undp/en/home/search.html?q=Socio-Economic+Demographic+Health+Survey>에서 2020.9.30. 인출
- UNICEF. (2018). *2017 DPR Korea MICS*. UNICEF.
- Wan, G. and Wang, C. (2018) Poverty and inequality in Asia: 1965-2014. *WIDER Working Paper*, 2018/121. The United Nations University

- World Institute for Development Economics Research.
- WHO. (2019). *Global Tuberculosis Report 2019*.
https://www.who.int/tb/publications/global_report/en/ 에서 2020.
 9. 30. 인출
- Wienand, M. (1997). Sozialhilfe. In Wienand et al. (Eds.). *Fürsorge* (pp. 9-60).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 Willing, M. (2008). *Sozialistische Wohlfahrt*. Tübingen: Mohr Siebeck.
- Willing, M. (2011). *Armutsbekämpfung nach Plan: Die Sozialfürsorge in der SBZ/DDR 1945-1990*. Lambertus.
- Winkler, G. (2018). *Friedliche Revolution und deutsche Vereinigung 1989 bis 2017*. Berlin: trafo Wissenschaftsverlag.
- World Bank. (1980). Income Growth and Poverty Alleviation, *World Bank Country Study*.
- World Bank. (1990). *World Development Report 1990: Pover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World Bank. (1993). *The East Asian Miracle: Economic growth and public policy*. Washington DC: Oxford University Press.
- World Bank. (2017) FAQs about the Pantawid Pamilyang Pilipino Proram (4Ps). Retrieved from
<https://www.worldbank.org/en/country/philippines/brief/faqs-about-the-pantawid-pamilyang-pilipino-program>에서 2020.8.1.
 인출.
- World Bank. (2018). Riding the Wave: An East Asian Miracle for the 21st Century. *World Bank East Asia and Pacific Regional Report*,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 World Bank. (2000a). *World Development Report 2000/01: Attacking Poverty*.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 World Bank. (2020b).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bank.worldbank.org/data/download/WDI_excel.zip에서 2020.8.10. 인출.

World Bank. (2020c).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s://datacatalog.worldbank.org/dataset/world-development-indicators>에서 2020.8.3. 인출.

World Bank. (2020d).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BX.TRF.PWKR.DT.GD.ZS?locations=PH>에서 2020.8.20.인출.

You, Jong-sung. (2014). Land reform, inequality, and corruption: A comparative historical study of Korea, Taiwan, and the Philippines.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12(1): 191-224.

Zander, M. (1998). Frauenarmut (k)ein Thema im Osten?. In R. Lutz & M. Zeng (Eds.), *Armutforschung und Sozialberichterstattung in den neuen Bundesländern* (pp. 69-95). Wiesbaden: Springer Fachmedien Wiesbaden GmbH.

<필리핀 법률>

An Act Providing for a Magna Carta of the Poor. 2019. (Philippines, Republic Act 11291).

<https://www.officialgazette.gov.ph/downloads/2019/04apr/20190412-RA-11291-RRD.pdf>에서 2020.8.20.인출

Social Reform and Poverty Alleviation Act. 1998. (Philippines, Republic Act 8425).

<https://www.officialgazette.gov.ph/2011/10/10/administrative-order-no-21-s-2011/>에서 2020.8.20.인출.



[부록 1] 제2부에 활용된 구술면접자 특성

구술자	나이	성별	거주지역	주요경제활동
구술자 A	50대	여성	혜산시	기업소식당
구술자 B	40대	여성	양강도	금광업
구술자 C	30대	여성	청진시	부양, 출산
구술자 D	30대	남성	양강도	의약품 관련
구술자 E	20대	여성	양강도	간호조무원
구술자 F	50대	여성	양강도	개인식당
구술자 G	20대	여성	함경북도	이발미용
구술자 H	30대	여성	청진시	매탁 의류장사
구술자 I	20대	여성	양강도	편의봉사업
구술자 J	20대	여성	사리원	장사(금, 마약)
구술자 K	30대	남성	평양시	군인
구술자 L	40대	남성	신도군	수산업자
구술자 M	40대	여성	양강도	농장원
구술자 N	30대	여성	혜산시	도시축산
구술자 O	30대	남성	양강도	인테리어
구술자 P	50대	여성	사리원	농장원
구술자 Q	40대	여성	순천시	매탁 의류장사
구술자 R	30대	남성	혜산시	오토바이 판매
구술자 S	30대	남성	양강도	노동자
구술자 T	50대	여성	양강도	개인식당
구술자 U	30대	여성	함흥시	장사(약품, 마약)

주: 2018-2020년 시기 진행된 면접 대상자 중 본문에 인용된 구술자만을 대상으로 함.

간행물 회원제 안내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국제사회보장리뷰」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회원 종류

전체 간행물 회원

120,000원

보건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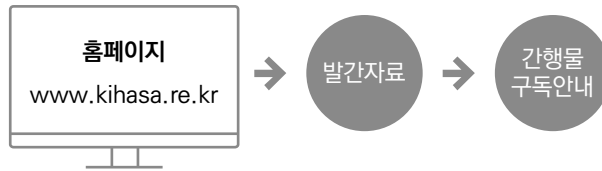
사회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정기 간행물 회원

35,000원

가입방법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한국경제서적(총판) 02-737-7498
- 영풍문고(종로점) 02-399-5600
- Yes24 <http://www.yes24.com>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